

2020
전태일
50



[전태일 50주기 분야별 연속 토론회]

전태일로부터 50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돌아본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전태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한다.
전태일 50주기의 의미를 노동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 청년, 문화, 종교, 문학, 여성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태일이 각 영역에 남긴 흔적을 살펴본다.

주최 |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전태일기념관
주관 |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학술위원회

CONTENTS

발간사 _ 4

- 이수호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상임대표)
- 김진석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학술위원장)

01

청년분야 | 2020. 5. 14. (목) 15시

2020 내가 전태일이다

□ 발표

-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살아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를 기대하며 | 엄창환 _ 9
- 교육, 대학생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포럼 발제문 | 이해지 _ 13
- 일을 막 시작하는 청년기의 노동과 다시 돌아보는 전태일 정신 | 김영민 _ 20
- 50년 전 시대와 닮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 신정웅 _ 24
- 별집에서 원룸까지 | 최지희 _ 27
- “2020년 내가 전태일이다” | 김희경 _ 30

02

노동분야 | 2020. 5. 28. (목) 15시

전태일로부터 50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되돌아본다

□ 발제

- 전태일 항거 이후 50년 노동운동의 궤적 | 이원보 _ 41

□ 토론

- 전태일 항거 50주년, 민주노총은 전태일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 박용석 _ 68
- 전태일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 황선자 _ 72
- 50여년전 전태일 열사가 바라본 봉제노동자, 50년 후에 봉제노동자가 바라본 전태일 열사 | 이정기 _ 77
- 전태일이 배달을 했다면. | 박정훈 _ 79
- 전태일 50주기! 노동운동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 김은선 _ 82

03

문학분야 | 2020. 6. 10. (수) 19시

“창조적 표현자 전태일, 그리고 노동을 쓰기”

□ 발제

- 전태일의 문학과 오늘날의 노동문학 | 정고은 _ 91



04

문화분야 | 2020. 6. 25. (목) 14시

노동문화운동, 전태일에게 묻다

□ 발제

- 노동문화운동의 형성과 전개,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 백원담 _ 105

□ 토론

- 노란 선 너머 세상을 꿈꾸며 | 민정연 _ 138
- 노동자문화를 위한 문화국의 고민과 활동 | 백일자 _ 144
- 오늘날의 사회운동과 노동문화운동 | 홍명교 _ 151
-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문화운동 | 박선봉 _ 155
- 노동문화담론 갱신을 위한 몇 가지 고민들 | 염신규 _ 176

05

여성분야 | 2020. 7. 9. (목) 15시

전태일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 발제

- 통계로 본 여성 노동 50년 | 김난주 _ 189
- 전태일로부터 50년,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 나지현 _ 235

□ 토론

- '전태일로부터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토론회' 토론문 | 박현미 _ 243
- K-여성노동자 | 배진경 _ 259

06

종교분야 | 2020. 11. 05. (목) 18시 30분

한국교회, 전태일을 기억하다

□ 발표

- 노동자의 인간선언과 그 신학적 메아리 | 최형묵 _ 267
- 전태일과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 손승호 _ 282
- 오늘날 청년 노동자와 전태일 정신 | 오세요 _ 298

□ 토론

- 전태일의 마음으로 | 홍윤경 _ 309
- 전태일과 기독교청년: 전태일을 살아낸다는 것 | 하성웅 _ 312

이 수 호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상임대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부터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오후,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 평소 인력시장이 열리던 길거리에 불꽃 하나 타올랐다. 전태일의 인간선언 분신허거의 불꽃이었다.

그로부터 50년, 지난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때로는 조그만 촛불로, 때로는 뜨거운 햇불로, 때로는 도도한 불꽃바다로, 아니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으며 이 불꽃의 오늘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 문학, 문화, 여성, 종교 등 여러 분야 활동가, 연구자들이 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학술위원회로 모였다. 상반기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로 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김진석 위원장(민교협 상임대표)을 비롯한 학술위원회 일꾼들과 각 분야 토론회에 이런저런 역할로 참가해 주신 동지들의 헌신으로 상반기 분야별 토론회가 잘 마무리되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의해 뉴 노멀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무소불위의 신자유자본주의가 용도폐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데도 인류는 국가민족주의의 틀에 스스로 얽매어 누구나 다 아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로 총칼을 휘두르며 무간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하늘 위와 바다 밑으로 갈라지고 민중의 신음소리만 온 땅에 가득하다.

50년 전 전태일도 이런 절망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꿈꾸는 사회는 “어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앓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전태일 유서 일부)였다. 여기서 ‘반지의 무게’는 자본주의를 ‘총칼의 질타’는 국가권력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태일의 꿈은 돈과 권력이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이 주인인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분야별 학술토론에서도 확인 됐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50년 전 전태일 때보다 크게 나아지거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긴 한숨을 뱉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절망의 어둠 속에서 서로 마주보는 동지의 얼굴이 조그만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대가 전태일이 되고 내가 또한 전태일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전태일처럼 스스로 타서 희망이 되는 몇 개의 불꽃이었다.

하반기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상반기 분야별 토론을 다시 한 번 총화하고 우리나라와 노동을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의 노동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절망의 시기에 조그만 희망이 되기 위해서다. 50년 전 전태일이 피워 올렸던 희망의 불꽃을 다시 한 번 피워 올리기 위해서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 전태일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다.

“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못다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김 진 석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학술위원장

올해 전태일 50주기를 맞습니다. 연초부터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휘저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태일들은 그 와중에 가장 대책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모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50년 전 청년 전태일이 몸을 불살라 밝혀놓은 역사적 과제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을 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시대의 전태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때에는 얼굴의 반을 가리고 넌죽히 떨어져 만났고, 형편이 안좋을 때에는 각자의 화면을 통해 만나고 토론했습니다. 전태일 50주기의 의미를 노동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았고, 노동을 포함하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종교, 문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태일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 남긴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더 새겨야 할지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불안함과 아쉬움을 달래며 영역을 관통하여 토론해온 결과물을 책자로 내놓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드문드문 지나치는 거리의 사람들과 웅기중기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눈동자에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감지됩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인간과 자본의 끝모를 탐욕과 생태계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으로부터 기인한 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이제 막 지나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11월 전태일 50주기 행사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01 청년분야

2020 내가 전태일이다

2020. 05. 14 (목) 15시
전태일 기념관 4층 교육실

2020 내가 전태일이다

□ 기조

- 주거, 교육, 노동, 젠더, 참여 등 청년 각 영역에서 전태일과
오늘의 청년이 만나는 지점을 현재적 언어로 기술한다
- 사회구조 속에 객체로서의 청년 전태일이 아닌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오늘의 청년 전태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관점을 사회연대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 형식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각 주제별 10분 내외 길이의 발표
- 전체 발표 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자유토론
- 각 주제별 주토론/질문자 배치

□ 발표 및 진행

- **진행** :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발표**
 - 참여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교육 :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노동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 주거 :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여성 : 김희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살아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를 기대하며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나에겐 잘 가늠되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

48년생 전태일과 84년생 나 사이에는 36년이라는 갭이 존재한다. 만약 살아있다면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사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삶을 마감한 사람, 사실 책으로 접하게 되는 그때 사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체감하기 어렵고, 개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감각하기 어렵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현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세상 많은 것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을까,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었을까. 최근 형성되고 있는 청년활동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당사자성이 강하고 기존관점을 기각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외치는 청년활동에서는 보통 기성 시민사회 혹은 전통적 노동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저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지, 기존 사회의제에 관심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새로운 흐름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실 과거의 것, 혹은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현재나 사회 전반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청년인 전태일 개인이 어떠했는지, 나의 이야기로 좁혀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결해볼만한 지점1 : 무언가 강력하게 이름을 남겨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현장에 있던 사람, 현장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활동가였다는 것이다. 사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 이외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행위가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

한다. 매번 무언가에 막히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 쌓여가던 과정에 대통령 탄원서가 존재했을 것이고 분신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어야 했던 상황은 답답함 그 자체였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조명이 되었던 사회, 현재라고 크게 다를까 싶기도 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 법은 유가족이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법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겨나는 변화,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기억되지 않았을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서울 잠실인근 버스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분신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 부당노동행위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사건이 여전히 내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충격적이었기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서 발생한, 크지 않은 일로 사람들에게 잊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보자마자 서울로 향했고 현장을 다녀왔다. 혼자 그렇게 현장을 다녀온 것은 처음이었는데, 뭐랄까 우려가 사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사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그렇다. OECD국가 자살률 1위,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사회, 하루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잊히고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이 의로운지, 어떤 의지를 보였는지, 단순 신변비관인지는 중요치 않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그것으로 마지막 목소리를 내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기억되지 않았을 이름, 혹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않는 이름. 수많은 전태일이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연결해볼만한 지점2 : 개인을 위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전태일이 활동했던 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학습을 하고 사람과 활동을 조직하고 정부에 민원을 넣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방식은 현재의 활동 방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대표성, 상징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직접 참여와 조금 더 직접민주주의처럼 갈 수 있는 대의제의 보완을 강하게 요구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라는 표현으로 왜곡될 만큼 국가적 의제보다 개인, 소수의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약 2년 전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청년 세대의 반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의 반응을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지만, 나의 관

심사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당사자들의 결론이 국가의 결론에 반영되어 있는지였다. 공정이란 표현을 꼭 써야한다면, 남과 북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안의 결정을 위한 개인과 국가의 논의과정이 공정했는가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평생을 경쟁하고 노력해온 운동선수라는 개인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에서 남북단일팀이라는 대의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많았을 것이라 본다.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 누군가가 말하는 대의를 위해 작은 것(작다고 말하지만 전혀 작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미뤄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지워진다.

세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의제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통일, 경제화, 민주화와 같은 소위 국가적의제로만 사람들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어느정도 그것이 달성이 되었거나, 혹은 문제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놓인 개개인의 위상이 고려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전태일의 대통령 탄원서를 봤을 때 처음 생각이 났던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이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은 사실 멋지고, 그곳에 모두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거나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한 글이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모든 일들이 저곳에 모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보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전보다는 훨씬 개인에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적시적소에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잘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상징이 된 전태일 열사가 아니라 대통령 탄원까지 갈 필요 없이 사회 시스템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사실 서로가 누군지 몰랐을 사람, 어딘가에서 잘살고 있었을 전태일 할아버지이지 않을까.

2020 전태일 정신

현재, 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보는다면 약자, 소수자, 사회에서 조명되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개인, 시민으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행사하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싶다.

여전히 누군가에겐 장벽이 존재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 모두가 각각 조명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고경영권자에게 직접 탄원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도적 절차, 현장까지 가닿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직간접적인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형성되고 있는 청년활동의 맥락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청년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회, 사회의 활력을 위해, 경제 성장을 위해 청년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회, 정작 문제의 복판에 놓인 당사자의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와 제도는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청년들이 택한 방식은 가능한 모두가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아직 많이 부족하다.) 시민으로서 개개인이 드러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대표성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당사자성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이 영향으로 다양한 활동 주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고 있고, 새로운 흐름을 촉발시켰다고 자평해본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포함한 전국의 청년주체들은 청년기본법이라는 유래 없던 입법운동을 시도했고, 청년정책으로 청년문제를 새롭게 진단해야 함을 우리 사회에 알렸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겐 엄청난 일이나,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한줌정도일 이러한 흐름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 모두가 조명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태일보다 나, 나보다는 지역에서 존재하는 청년인 누군가, 우리 사회가 특별한 상황의 누군가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적인 누군가를 잘 조명하는 것이 사회가 굵아 터지기 전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나는 청년활동이라는 당사자 운동을 해왔다 보니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했는지, 숙의의 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소수가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사실 그것이 갖춰져 있다면 활동의 입장이나 방향성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로의 활동이 따로 또 같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자회견 때 발언을 배정해주지 않아도 뒤에서 피켓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연결, 서로가 딛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잘 공유하고 조명할 수 있는 연결일 것 같다.

교육, 대학생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포럼 발제문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전태일 열사가 이야기하던 대학생

전태일 열사가 가장 소원하던 일 중 하나는 대학생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아가던 시기의 대학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전에 나오는 바로는 당시 한자투성이었던 노동법을 쉽게 일러줄 사람,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 - 지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중등교육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전공 수업, 다양한 분야의 교양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시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2020년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대학생의 위치, 정체성, 역할은 당시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열사의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 대학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며 전태일 열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 2020년 대학생: 학생,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

지난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확인해보면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 그리고 2020년의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하루하루를 살아내야하는 대학생들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2019년 시행, 2314명 참여)

대학 내 변화를 위해서 <교육 / 재정 / 민주 / 인권 / 대학생 생활권 · 일자리> 문제 중 가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 (735) : 대학생 생활권 · 일자리 - 취업제도 개선, 대학생 생활지원 제도

1순위에서 2위 (610) : 교육 - 교육정책 학생참여, 수업/학과 구조조정 대응 등

2019년 설문조사 당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대학생 생활권 ·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세부항목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복선택)

: 교통비 등 생활비 문제 해결 - 1645 (71.1%)

: 기숙사 건립, 월세상한제 등 주거문제 해결 - 1623 (70.1%)

대학생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복선택)

: 일자리 질 개선 - 53.6%

: 정부 청년정책 개선 및 확대 - 51.5%

: 일자리 양 늘리기 - 45.7%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중복선택)

: 공공기숙사 확대 1646명

: 월세상한제 1188명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및 소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가 인근의 평균 월세를 제하고 나면 한 달을 버티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O2O플랫폼 '다방'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의 전용 면적 약 10평 이하 원룸으로 등록금된 매물 5천 건을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월세는 5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학생들의 생활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월부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차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경제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18년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

○ 출처	알바몬, 월 평균 생활비 설문조사 (2018.03)	
○ 출처 URL	http://www.nocutnews.co.kr/news/4939701	
(Base: 남녀대학생, n=2,739, 단위: 원)		
구분		평균 생활비(원)
2015년 전체		369,000
2018년 전체		514,000
거주 유형별 구분	본가	446,000
	자취	655,000

○ 출처	알바몬, 생활비(용돈)현황 (2017)	
○ 출처 URL	http://www.jobkorea.co.kr/GoodJob/News/View?News_No=11874&schCtgr=0&schGrpCtgr=100&schTxt=%EC%9A%A9%EB%8F%88&Page=1	

(Base: 남녀대학생, n=496,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응답자 유형별 구분	
		부모님과 거주	자취
식비	77.6	76.5	80.4
교통비	38.1	42.7	26.1
통신비	35.7	40.5	23.2
주거비	32.5	-	65.2
문화생활비	26.4	29.6	18.1
*부모님과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비율은 데이터 없음.			

코로나19 대학가 수업권 침해 사례조사 (2020년 3월 시행, 6261명 참여)

개강 연기 피해 사례

: 개강 연기로 인한 수업 부재 3811 (60.9%)

: 실기 / 실습 / 실험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능한 수업 대안 미비 3719 (59.4%)

: 주거 불안 (기숙사 강제퇴사 및 일자 조정, 불필요한 월세 납부 등) 1920 (30.7%)

: 야간 / 주말 보강 문제 발생 1665 (26.8%)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 (2020년 4월 시행, 21784명 참여)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관련 질문

: 불필요한 월세 / 기숙사비 지출 - 10308 (47.3%)

: 일자리 구직난 - 6700 (30.7%)

: 불필요한 교통비 지출 - 5499 (25.2%)

: 아르바이트 부담해고 3219 (14.8%)

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계열 / 대학유형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여부)에 관계없이 수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2) 우리의 교육, 인권을 위한 대학 운영에의 참여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2019년 시행, 2314명 참여)

대학 내 변화를 위해서 <교육 / 재정 / 민주 / 인권 / 대학생 생활권 · 일자리> 문제 중 가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 (735) : 대학생 생활권 · 일자리 - 취업제도 개선, 대학생 생활지원 제도

1순위에서 2위 (610) : 교육 - 교육정책 학생참여, 수업/학과 구조조정 대응 등

2019년 설문조사 당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대학생 생활권 · 일자리>를 선택했고, 그 다음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2314명의 학생들 중 62.4%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공이 적성에 맞아서”, “원하는 수업과 피드백”,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합니다. 강의계획안이 수강신청 전에도 상당수 미기재 되거나, 각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도 공지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2019년 상하반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권 침해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었는데, ‘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전국의 대학들이 강사 / 수업 구조조정을 일삼으며 많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직선제		간선제	
교원	비교원		
	직원 :교직원노동조합 :의료원노동조합	조교	학생 기타 동문 등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학생들은 대학 운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학생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요 예시로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학 운영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총장선출권>과 관련된 질문에서 ‘교수, 직원, 학생 동수 구성’이 필요하다고 40.3%의 학생들이 응답했고, ‘20%~30%’ 정도의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35.5%의 학생들이 응답했습니다.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립대학교 최초로 학생, 교수, 직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했고, 이러한 흐름들은 전국의 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35개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참여 총장제도>를 위해 대응해왔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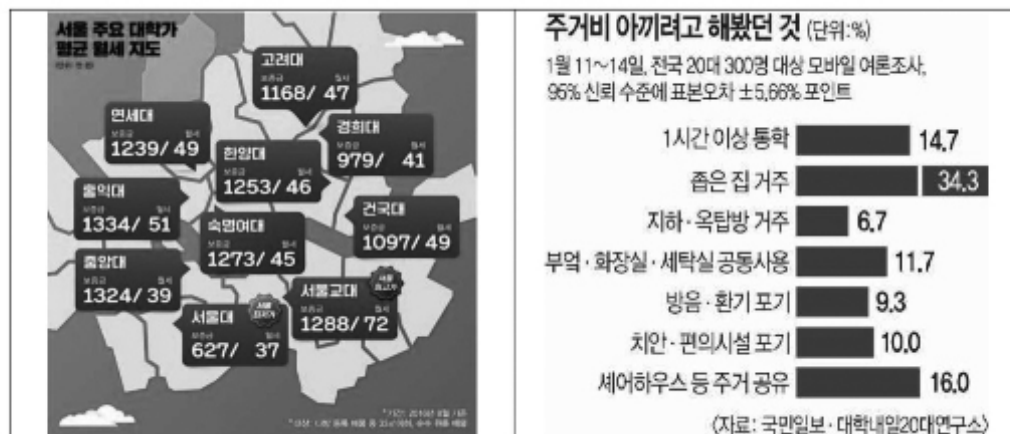
3.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지금 대학생의 정체성은

-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자,
- 각자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
-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수혜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생계를 꾸리는 대학생, 우리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기

전태일 열사가 살아가던 시기의 대학생의 현실은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학생과 사뭇 다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역할과 동시에 하루하루의 삶과 생계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 1163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약 절반에 가까운 9491명 (44.8%)이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만 19-34세 청년 1000명의 우울함의 척도(30점 척도)는 우울 판정 기준인 10점에 가까운 평균 9.76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 9월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했던 것도 하루하루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한 명이 시내버스를 매일 왕복으로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만 2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광역버스를 매일 왕복으로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만 4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인 대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마주한 구직난은 지금 대학생들의 생계 문제를 더욱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 성모씨(26)는 “신입채용 공고가 하도 나오지 않아서 당분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쉽지 않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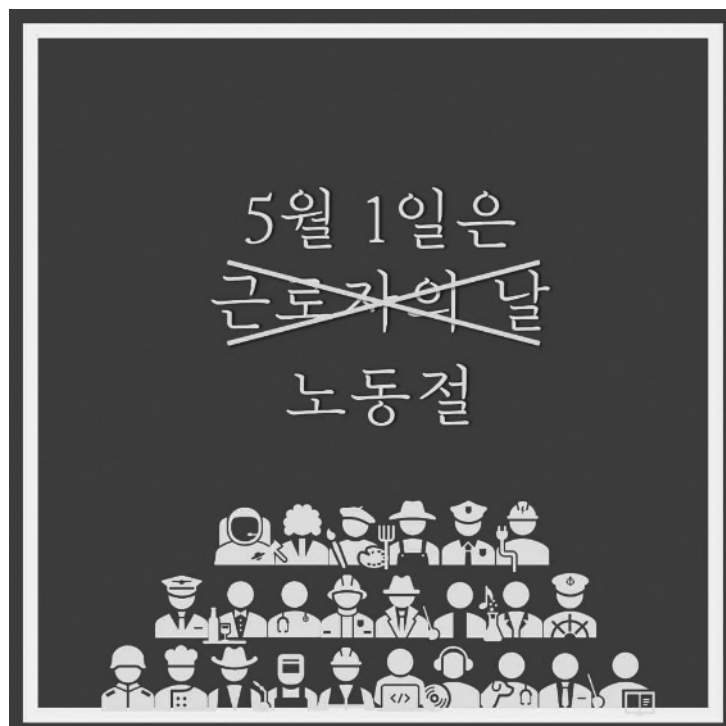
그는 “코로나 사태 직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며 “이후 다른 자리를 계속 지원하는데 공고가 나온 곳에 연락해봐도 지원자가 많은 것인지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한모씨(23)는 “원래 일하던 스파게티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사라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종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아르바이트를 3명 쓰다 코로나로 손님이 급감해 다 줄이고 혼자 일한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114322940626>

지금의 대학생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당시를 살아가던 전태일 열사의 삶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일할 권리 -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회에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노동’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나의 문제’라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보면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노동’이라는 개념이 아직 대학생에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결코 대학생과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학생의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노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일상에 녹여낼지 그 고민을 더 깊게 해야할 시기입니다.



2) 더 나은 대학을 고민하기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모순이 더 심화, 증첩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금 부담은 세계 4위입니다. 2011년, 전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반값등록금 운동 이후, 국가장학금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는 감사원에서조차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한계지점들이 많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수혜받지 못하며, 성적 기준과 소득분위 산정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데, 2019년 강사법 시행을 빌미로 한 강사 구조조정, 대학 내 재정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기대하던만큼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 수강신청에 교수자와 강의계획서 조차 게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복수전공생이 몰리면서 18학점 중 9학점 밖에 신청을 못했어요. 등록금이 아까워 결국 휴학신청을 했습니다.”라는 인터뷰가 나의 모습과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은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등록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부터 개강이 연기되었고, 연기된 기간 동안 준비하겠다고 했던 원격수업의 질은 만족도가 한 자리 수에 머물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9년 2314명이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복선택)에는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 67.5% / 국가장학금 운영 개선 45.8%

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등록금 반환 요구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고, 2020년은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원격 수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두고 마주한 현실이 아무런 문제지적과 고민 없이 해석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누군가의 삶을 바 학생회 - 대학에서 배우는 가치들이 학생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대학이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나은 대학을 위해 무엇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막 시작하는 청년기의 노동과 다시 돌아보는 전태일 정신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풀빵 정신과 여성 청년 노동자

-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기리며,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풀빵 정신’일 것이다. 스스로도 가난한 노동자였으면서도 굶주린 어린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차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주었던 전태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다.
-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을 뜬 것도 평균 18세의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겪은 저임금 고강도의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이었다. 이들이 유독 열악한 노동 조건에 내몰린 것은, 이들이 일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다’였기 때문일 것이다. 어리니까, 여성이니까 작업장의 권력관계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게 된다.
- 시다, 미싱사, 재단사, 공장장으로 이어지는 작업장의 위계 속에서 가장 말단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밥도 챙겨먹지 못한 50년 전 여공들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청년 노동의 모습도 조금은 엿볼 수 있다.

혹독하거나 험값이거나. 일을 시작하는 청년의 노동

-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 하는 유저를 위해서는 튜토리얼이라는 것이 보통은 있다. 게임의 사용법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일터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OJT와 같은 직무교육이고, 개별 일터가 아닌 산업 단위로 본다면 현장실습, 수습, 인턴 등으로 명명되는 과도기 노동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개인이 조직 또는 업종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기 보다는, 마치 성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여겨지거나, 혈값에 사람을 쓸 수 있는 노동으로 여겨진다.

- 특히 장기화되는 청년 실업으로 인해, 이러한 과도기 노동은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 자리 잡으면서 실습, 인턴 등을 하는 동안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현장실습처럼 학교 등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권력관계가 포개지면 그러한 압박은 더욱 심해지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계가 좁은 영역일수록, 평판에 민감할수록 눈 밖에 나는 것은 심한 경우 진로 변경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 지금은 앞만 보고 달려가던 고도성장 시대와는 다르다. 50년 전에는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경제 발전 논리가 사회를 뒤덮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미 1인당 GDP 3만불, 10대 수출국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선진국에 대열에 들어섰다.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람을 쓰고 버리는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구성원에게 조직에서 가장 필요하고 혹독한 노동을 요구하거나, 깨있는 시간의 거의 전부를 할애하고도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혈값으로 다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50년 전의 전태일이 보고 겪었던 청년 노동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점이기도 하겠다.

최첨단 산업 속의 전근대적 조직문화

- 물론 이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불합리는 ‘꼰대’로 지칭되는 등, 청년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지난 10여 년 간 나아지기도 했으나, 개별 현장에서는 업계의 특수성, 영세함 등을 이유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
- 특히 새롭게 등장하여 급격히 성장한 신흥 산업에서는 산업 내의 규칙과 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조직의 운영원리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양육장식의 원리만 남아버리기도 한다. 최첨단 산업에서 전근대적인 군대식 조직문화가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017년에 이한빛PD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방송드라마 현장에 화려한 조명 뒤의 노동 문제가 비로소 드러났다. 드라마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도급과 프리랜서 계약의 남발은 기본이고, 빡빡한 촬영 일정과 돌발적 상황 등에 대처하는 방식을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현장의 문제 해결 방식도 어디까지나 연출자(혹은 방송국)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2018년 온라인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 장민순님의 사건은, 신생 기업의 급격한 성장 신화에 가려진 위계적이고 이중적인 조직문화를 드러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업계 1위에 등극한 이 회사에는 700명이 넘게 일하지만 출퇴근 기록 시스템조차 없으면서, ‘칸막이 없는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며 위계 없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만든다고 하고, 탁구대회·다이어트 대회를 연다고 하고,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복도에 전시해 놓는 이상한 방식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

- 200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영화산업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여러 대형 국제영화제는 공공의 지원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미달과 빈번한 초과근로 등의 실태가 지난 2018년에 드러난 바 있다. 어떤 영화제에서는 근로계약을 제목의 문서에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위법한 내용을 버젓이 적어놓기도 하였다.
- 이제 더 이상 근로기준법이 활자로만 남아있거나 화형식을 해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의 틈새에는, 혹은 새로이 등장하는 일터에는 법질서 자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청년들이다.

교육과 노동의 틈새에서

- 산업 자체가 도제식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새로 진입하는 이를 위한 공공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머나먼 일이다. 우선 도제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당사자가 문제제기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 자체의 영세함이 포개지면 그러한 특성은 지불여력을 이유로 쉽게 무마된다. 2015년에 열정페이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패션디자이너 업계나, 그보다 더 오래 이슈가 되었지만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던 프랜차이즈 미용업계의 현실이 그러한 사례이다.
- 업계 자체가 처한 구조적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고, 설령 그러한 논의가 있다하더라도 새로 진입하는 청년 노동의 이해 대변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작업장 내에서의 교육이나 숙련 형성에 대한 어떠한 규범이나 가이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다보니 결국 교육과 노동의 틈새에서 제도적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떨 때는 교육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노동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왔다.
- 보통 어떤 업종에서 처음 시작하는 노동의 경험은 이후의 진로에도 영향을 준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업·직종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의지를 갖고 새로 뛰어드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노동환경이라면 그런 업종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50년 전과는 다르게, 노동현장이 보다 체계적이고 규칙과 규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게, 지쳐서 나가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고용안정성 등의 일터의 균질성을 기준으로 하는 요구보다도 해당 업·직종에 고용 여부를 넘나드는 포괄적인 노동의 이해대변이 필요하다. 단순히 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노동자에 해당하는 청년 구직자의 목소리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노동의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이를 통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전태일들

-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먼저 청년유니온을 찾아온 수많은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비록 여기서 힘들었지만, 나는 불합리한 이 현장을 견디지 못했지만, 나는 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내가 내는 목소리로 이 업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이었다.
-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전태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일터를, 내 주변을 하나씩 바꿔가고자 고민하고 힘을 보태는 모습이,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같이 일하는, 혹은 일할 수도 있는 이들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전태일이 실천한 풀뿌정신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담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일하는/일할 청년들의 내일을 보다 더 낮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50년 전 시다와 닮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신정웅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시선이 머물던 대상은 ‘시다’라는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입니다. 당시의 시다는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많이 채용되는 노동 형태였기에, 오늘날의 시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의 특징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의 시작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청년 실업,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적절한 해결책과 방향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청년실업과 청년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풀어보려고 하였으나, 수많은 청년의 입장과 상황이 달라 해결방안이 모호합니다. 이런 청년 노동의 문제점들을, 이런 문제점은 노동을 시작할 때 발생하기에, 노동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좁은 문

한국 사회는 장기간 내수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불안으로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 지난달 서울 강북에 아파트 단지 상권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한 분을 채용하는데 400명이 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채용이 급감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명이 줄어들었고, 이는 외환 위기 이후로 최

대 폭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을 뚫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노동조건

앞서 말한 환경 속에서 채용이 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채용공고와 다르게 입사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과 다른, 심지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을 강요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노동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하고 텔레마케팅의 경우는 한 시간 일찍 출근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배달노동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배달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건을 앞서 어려운 취업 관문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가와 차별

좁은문을 뚫고 노동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노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과로 평가

일을 시작하면 나를 보호하는 시간은 일주일 또는 삼일, 하루, 반나절 심지어는 한시간 남짓입니다. 업종에 따라 또는 맡은 일에 따라 이 시간이 지나면 신입이라는 새로왔다는 배려는 사라지고 그 공간내에 모든 노동자는 똑같은 업무량으로 평가받습니다. 단 한번의 교육으로 “이걸 먼저해요.”, “아까 배웠잖아요”, “빨리 해요”, 라는 말들과 함께 시작된 일은 “이것도 못하냐”, “언제 끝낼꺼냐”, “집에 안갈꺼냐” 초보노동자가 초보가 아니어야 하는 강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습이라는 두글자로 받는 급여는 구분되어집니다.

특정 성별로 지정되는 업무 그리고 평가

근로계약서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지만, 일을 시작한 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조금 달라집니다. 남성은 주로 무거운 일을 맡아야 하고, 여성은 과도한 친절을 강요받거나, 그러한 친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에 투입됩니다. 여성이 친절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기대 하에, 손님을 맞아야 하는 서비스직은 많은 경우가 여성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근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근무 메뉴얼이나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과도하게 해석

되어, 원치 않는 성희롱이나 이성적인 접근을 겪기도 합니다.

그 외 나이의 차이, 경험의 차이, 정보의 차이, 임금의 차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서 일을 해본 경험에서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책정된 임금의 차이를 통해서도 일의 성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는 지속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깨닫는 시간이 주어져야 개인이 아닌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에 나열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시작하는 노동자를 평가하는 그도 노동자들과 별다른 시작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 모든 노동자는 모자라는 노동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노동자라는 확신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없는 희망과 무책임한 위기로 포장된 보여주기식 해결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당과 허위를, 그리고 가혹한 시간을 견디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입니다.

별집에서 원룸까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전태일, 노동열사로만 알고 있던 그 이름을 최근에 다시 떠올렸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난 것은 구로구 별집이었다. 한 주택 당 방과 부엌을 합쳐 3~4명 남짓한 공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공중변소’가 밖에 따로 있는 집, 70년대 산업화로 각지에서 올라온 어린 공순이, 공돌이들이 살던 집을 별집이라고 한다. 별집과 원룸이라는 주제로 만난 한 간담회에서 처음 접한 이 공간은 2000년대 초반만 되어도 벽을 터서 넓히는 현상이 나타나며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집, 아니 방 한 칸이 ‘신쪽방’이라는 현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시절 여공들이 살았던, 여전히 존재하는 낡은 별집과 함께,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새 별집’이 펄쩍 떠오른 이유다. 그 간담회에서는 여성 주거문제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좁은 별집에서 동생들과 웅기종기 구겨서 한 잠을 잤다는 이야기,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떴더니 어떤 남성이 창문으로 머리를 이미 다 들이밀고 들어왔는데 같이 자던 동생이 놀랄까봐 ‘대갈통을 탁 치고 다시 잤다’는 이야기, 어느 날인가 근처에서 그 범죄자를 또 만나 쫓아가 잡고 때리고 욕했더니 그제사 빌터라는 타래였다. 요새 말로는 ‘페미전사’의 무용담 같았던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절 여공과 전태일의 이야기기도 했고, 그로부터 살아남은 전태일이 전해주는 이야기기도 했고, 신림동 강간 미수사건과 영화 기생충을 접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이야기기도 했다.

청년주거문제의 당사자라고 하면 흔히 지옥고에 사는, 타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상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고는 특수한 주거 상황이고 그 상황에 처한 주거빈곤 청년은 소수인 것처럼 인식하지만, 사실 지옥고 아닌 ‘원룸’이라고 알고 있는 집들도 용도와 실제 환경이 지옥고와 다르지 않다. 세입자는 집으로 알고 있는 그 공간이 사실은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전입신고도, 대출도 어렵없이 옆방 알람소리가 같이 들리는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의 집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왔다갔다하고, 대기업이 아닌 이상 웬만큼 벌어도 주거비에 등골이 휘고,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턱밑까지 쫓아온 월세를 낼 방법이 없어 꾸역꾸역 다녀야하는 사람들, 그렇게 월세를 버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대학생으로

만 같음할 수 없는 청년 주거의 다양한 얼굴이다. 불법건축물로 임대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열악함이 만연해진 청년들의 방 한 칸, 소득과 상태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집에서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눈부신 성장과 도약의 한국사회를 거치며 모든 세대에서 낮아지고 있는 중에 청년층에서만 홀로 역상승하는 주거빈곤율의 구체적인 장면이다. 처음 별집이라는 존재를 접했을 때 얼핏 ‘어유 그래도 별집보단 원룸이 낫지’라는 든 생각이 실상 그럴까, 다시금 질문을 곱씹게 되는 씁쓸한 현실인 것이다.

그 때의 청년과 지금의 청년은 같은 점도, 다른 점도 많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모범기업을 준비하던 전태일이 여기저기서 무시 받고 성공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요새 청년들에게 유행처럼 권하는 창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생각나 웃고 말았다. 실패도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사회안전망 없는 사회에서 ‘돈 없고 뺨 없는’ 청년들을 열정, 혁신, 도전과 같은 키워드로 어설프게 내모는 것이나,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청년들의 삶과 권리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생, 취직과 같은 조건을 내걸며 보통의 청년에게 2등 시민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제도들은 그냥 웃고 넘기기엔 여전히 아픈 지점이지만 말이다. 일반적인 세입자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유독 청년 세입자들에게만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갑질로 인한 분쟁이 많다.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들을 빈번하게 겪는 바깥에서는 ‘이런 것까지 사회 문제야?’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만연해 그에 젖은 차별과 배제를 겪는 개인에게 그것은 결국 비용과 환경의 문제로도 공고해진다. 그 만연한 부조리를 개인의 힘으로는 깨치기 힘든 것, 그것을 우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부르기에 그 때의 전태일이 겪던 문제를 지금의 우리는 ‘청년 문제’로 이야기한다.

전태일은 미싱하는 시다 여공보다는 재단사라는 지위에서, 어쩌면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내내 맴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면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청년, 조금만 노력하고 지금만 견디면 나아지는 존재인 청년들 주거 문제는 손쉽게 회유와 선정적인 동정의 대상이 됨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전태일의 그 지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공유해내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노동의 여타 문제와 같이, 주거에서도 홈리스, 철거민, 청년, 심지어 집 가진 사람들의 집 걱정이 다 따로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분절적으로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청년 주거 문제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홈리스보다는 형편이 나아서 노력하면 될’ 청년이라는 존재들은 현실과 맞지도 않고 본질도 보지 못하는 그 인식을 거부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로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시다보다 나은 재단사의 시혜나 동정을 베풀어 착하고 대단한 전태일이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인간다움이라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존재로서의 전태일이었기에 어려웠던 그 한 발을 ‘함께’ 떼는 것이리라 동질감을 느껴본다.

쪼개기한 방에 벽지를 새로 칠하고 깔끔해진, 리모델링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서 훨씬 비싸지고 훨씬

교묘해진 착취가 일어나는 청년들의 방 한 칸과 그런 집을 꼭 닮은 사회에서 어쩌면 노동의 가치, 인간적인 삶을 이야기한 전태일을 이야기할 때 그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수단인 땅과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당연한 연결인 것 같다. 월세 버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청년들, 땀 흘려 땀뿔이 일해봤자 부동산 오르는 격차를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청년들, 지금 잠깐 견디는 걸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방 한 칸에서 사실상 일생을 살아야 하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전태일은 과거가 아닌 현재다. 그 때의 전태일이 분신은 그로부터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지만, 그러한 죽음의 무한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신쪽방 원룸촌의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고 모두가 덜 힘들게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온다. 다양한 분야와 세대를 넘나들어 활동을 펼쳐가는 지금의 연대를 다시금 다지는 것, 눈 앞에 당면한 나의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으로부터 다시, 언제나, 수많은 전태일들과 함께한다.

“2020년 내가 전태일이다”

김희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청년 전태일의 탄원서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 여명을 넘는 종업원의 90%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써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일 사후 설립된 노동조합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핵심은 전태일의 동료와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1970년대부터 전투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한 노동조합이다.

열세살 여공의 삶

“나는 1966년부터 ‘7번 시다, 3번 미싱사, 1번 오야’로 불렸다. 내 이름을 다시 찾은 것은 1975년 청계노조에서였다” (열세살 여공의 삶 -신순애 지음- 한겨레출판)

청년 전태일은 재단사로, 마름으로서 일종의 기득권으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외면하지 않은 의로운 청년이었다.

여공들은 전태일 사후에 청계피복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현실 속에서도 주체적 노동자로 거듭나 서로 연대 하며 ‘1일 8시간 노동’ 투쟁에서 성과를 거둔다. 여공들은 70년대 민주 노조 운동의 중심이었다. 이를 이어 받아 현재의 청년 여성 노동자들은 여공이자 청년 전태일로서, 직접 투쟁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존재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이하 여성노조 디콘지회)는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여성 작가들의 노동조합이다. 여성 단위로서 젠더적 관점으로, 다양한 청년 문제 안에서 여성의 취약성을 한번 더 짚고, 청년 여성의 노동 문제와, 피해의 나열을 넘어 주체적으로 직접 타파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청년 여성들의 투쟁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앞서 노동, 교육, 참여, 주거 분야로 나누어 현 시대 문제가 고찰되었다. 다양한 청년의 문제들은 특히 여성 청년에게 잔혹하게 나타한다.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이다.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소득은 곧 주거 불안을 불러온다.

이 불안정 속에서 청년 여성에게 특화된 주거 문제가 발생한다. 여공들의 별집에서 현재의 원룸으로 단장되었지만, 겉보기만 그럴싸할 뿐. 반지하 원룸의 창을 넘어서, 혹은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좁은 원룸의 특성 상 1인 혹은 2인 거주가 흔한데, 1인 여성 가구 주거 침입 성범죄가 매해 300건을 웃도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11.226배라고 한다. 성폭력 외의 범죄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이 더 쉽게 표적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래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이하 총여)가 잇따라 폐지되었다.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한 가교가 붕괴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여성 비율은 11.5%,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OECD 회원

국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총여 폐지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대학생 진학률의 증가로 대학내에서는 더이상 남녀 불평등은 없다는 인식, 여학생 복지사업에 대한 반감 등을 예로 든다. 다른 한편 페미니즘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각된 때에 대학내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니 이를 백래시(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어서 새로운 물결이라는 해석도 따른다. 청년 여성 대학생들은 학생회 기구 형식에서 벗어나 학내에 다양한 여성주의 연대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또한 기대되는 행보이다.

2019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3.8%로 남학생보다 7.9% 포인트 높았다. 2005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아진 이후 13년 동안 남녀 학생의 대학진학률 차이는 갈수록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취업률은 낮다.

성별 임금 격차도 피할 수 없다. 2019년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45만원, 남성의 69% 수준이다. 이러한 임금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시작부터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다. 바로 채용성차별이다. '여자라서 덜 뽑고, 덜 준다'

2018년 금융권 채용성차별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애초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정해 성차별을 두거나, 남성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적정한 사유없이 올려주며, 우수한 성적의 여성 지원자를 성비 유지라는 명목으로 탈락시켰다. 조직 차원에서 다년간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면접 과정에서 용모를 차별하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결혼 의사, 남자친구의 유무, 출산의 의사를 묻고, 배제한다. 여성은 그렇게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린다.

청년 여성들은 이처럼 시작부터 채용성차별을 겪는다. 그렇게 첫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처럼 어긋나 그 이후에도 저임금 노동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저평가되어 소득이 낮은데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승진 누락,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많은 불평등을 겪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통계 그래프를 보면 결혼, 임신,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영향으로 전 연령대 중, 특히 30대 청년기에 일시적으로 M자 형태로 하락하는 추이를 그리는 것도 볼 수 있다.

노동 안의 성차별은 과거의 전태일과 여공들이 그러했듯, 현재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타파하고자 하는 의제이다.

청년 여성들은 스스로의 노동이 성별 임금격차의 출발점이 아닌, 임금격차 타파의 출발이 되도록 단결하여 행동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환경 속에서도 직장, 대학, 가정 등 다양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활동을 전개한다.

성차별은 청년 여성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밀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들은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청년 여성을 비롯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쟁취를 이어가고 있다.

반세기를 이어 달성한 호주제 폐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대학가 반성폭력 운동으로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1999년 군가산점 폐지, 1990년대 온라인 기반의 영페미 활동에 이은 2000년대 영영페미 활동, 2000년대 여성 비정규직 투쟁, 2016년 강남역 살해 사건에 대항하는 집회, 2017년 낙태죄 폐지가 바로 이러한 투쟁의 일환이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항하여 미투 운동으로 결집한 것 또한 빠뜨릴 수 없다.

디지털콘텐츠에 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도 운동을 이어간다. 2, 30대 작가들이 많은 웹툰, 일러스트 분야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도 이 사회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성별 임금 격차

2016년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실시한 문화예술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화·웹툰 : 월 평균 수입은 198만원으로, 여성작가(166만원)에 비해 남성작가(222만원)의 수입이 높았으며 세부 직군별로는 남성 만화가 23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 어시스턴트가 6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일러스트의 경우 월 수입 평균 144만원에서, 여성작가(127만원)에 비해 남성작가(212만원)의 수입이 높았으며 세부 직군 별로는 남성 기타 일러스트레이터가 3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 출판(성인) 일러스트레이터가 112만원으로 가장 낮다.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작가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총수입 범위를 세분화하여 성별에 따른 수입 분포를 보면, 남성 작가의 연간 총 수입 중간값은 3,000만원이며, 3,000만 원 이상 소득 작가가 남성의 54.3%에 해당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소득 작가가 여성의 47.3%로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지회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한 플랫폼에서 경력, 순위가 더 높은 여성작가보다 더 짧은 경력, 낮은 순위의 남성작가 고료가 더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플랫폼 내에서도 실권을 가진 담당자는 주로 남성이다. 이로 인해 남성 작가에게 더 편향적으로 이득을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역시 이 사회의 문제가 그대로 플랫폼 노동 내에서도 일어나는 것인지, 플랫폼 내 성별 임금 격차, 고료 차별에 관한 실태 조사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콘지회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명명에 가려진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성차별

디지털콘텐츠 업계에서 성별 임금 격차 외 또 다른 대표적인 성차별은, 여성주의 물결을 역행하는 게임업계의 이른바 ‘사상검증’ 사태 이다. 주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표적이 된다. 게임업계 그래픽 분야에서 남성은 원화가로서 정규직으로 존재하고, 여성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사항도 간과할 수 없다.

게임업계 사상검증 사태의 발단은 2016년 7월 19일, 게임사 넥슨 코리아 게임 ‘클로저스’ 성우가 SNS상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을 표방 하자, 넥슨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성우의 녹음을 교체한 것이 시작이다. 해당 성우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던 여성 창작자들, 관련 업계 종사자들 대다수는 이를 이유로 현재까지도 업무 배제를 비롯한 심각한 불공정을 겪고 있다.

사상검증 사태의 양상을 보면,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 여성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관련 이슈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여성단체 계정, 페미니스트인 작업자를 팔로우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유저들의 스토킹,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기에 이른다. 가장 큰 문제는 유저들의 불링을 기업이 아무런 여과나 비판 없이 이어받아 작업자의 일러스트, 만화 작업물을 삭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일러스트레이터들 대부분은 국내 수주가 전무하다.

게임업체들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주 고객인 남성 유저의 의견 수용'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사익의 추구가 국가가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남성중심적인 게임업계 내의 고질적인 여성 혐오, 젠더감수성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 자명하다.

2018년에는 사상검증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2018년 11월 1일, 게임업계 사상검증 피해당사자 6인은 사상검증 피해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사항명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로 게임콘텐츠 기업의 일

리스트용역 관련 콘텐츠불공정행위로 신고하였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9년 2월 28일 해당 게임 업체에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성향등의 이유로 용역계약체결 을 거부하거나 다른 일러스트레이터와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는 권고안을 발송 하였다.

동일한 일자인 2018년11월1일 게임업계 사상검증 피해당사자 6인은 사상검증 피해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요청을 넣었으며, 관련 업체가 11개로 조사 중인 상황이다. 당사자들은 인권위의 진정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019년에 이르러 한 업체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용을 언급하였고, 이는 2019년 12월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계기가 된다.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여성혐오의 결과인 사상검증에 맞서 발언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과, 창작하고 정당히 보수를 받고 게재하는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60~70년대의 여공이자 전태일이다.

청년 전태일이 1969년 7월 열악한 노동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듯이, 웹툰 웹소설 불공정 피해 당사자들과, 게임업계 사상검증 피해당사자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함께 모여 지회를 결성하고 처음 이행한 사항은,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서울시 프리랜서 조례를 만들고 있던 서울시 공정경제과와 면담하고 제출한 일이다.

그리고 청년 전태일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보낸 탄원서의 요구사항은 2020년 현재, 우리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들도 여전히 열망하는 사항이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전태일의 탄원서 中)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작가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작가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은 평균 10.8시간, 주중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평균 5.7일 글과 그림을 함께하는 경우와 그림(작화)을 주력으로 하는 경우는 주중 창작 활동 일수가 6일 또는 7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두 명 중 한 명은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한다. 이마저도 어시(보조작가)가 있기에 가능하다.

과도한 노동으로 많은 작가들의 암 등 위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과중 노동에 따르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갑상샘 압 발병이 잦다. 여성작가들은 난소암, 자궁암 발병 사례가 있다. 회당 평균 70컷의 주간 연재, 올 컬러 방식이 노동량, 노동시간 증가의 가장 큰 원흉이다.

“주간 연재에 컬러만화 70컷.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하루를 쉬어요. 13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중간에 담배 좀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것 없이. 그런 시간 다 빼고 12시간, 13시간.” -‘만화라는 노동’을 그리다-일다 기사 중-

노동량과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서 주간이 아닌 월간, 격주간 등 연재 주기의 다양화, 컷 수의 단축, 컬러 외 흑백만화로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정기휴재 제도 등도 좀 더 보편화되길 희망한다.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연재 플랫폼은 다음, 네이버 등 소수 포털에 한하며, 대부분의 군소 플랫폼은 건강검진은 물론 정기휴재일 제도 또한 전무하다. 건강검진 등 플랫폼의 복지제도 또한 병주고 약주고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량,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한 것이다.

전태일의 탄원서에 나오듯이 이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로서,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웹툰 작가의 86.3%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된 경우가 5.0% 수준이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작가들은 극히 드물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웹툰 작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 지원이다. 여성노조 디콘지회는 문화예술노동연대를 통해 예술인고용보험 법제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1960~1970년대에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였으나 일체 준수하지 않았다.

2020년 콘텐츠업계에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은 새롭고 거창해 보이지만, 이전의 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외주화되어 악화된다. 작가들의 계약에서 플랫폼은 본청이 되고 에이전시는 하청이 되어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임금은 사라지고 불합리한 수익 배분만이 남았다.

작품의 유통과정에서 원천 제작자인 작가들의 몫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이고 또 떼인다. 프리랜서로 명명되는 창작노동자들은 노동법을 비롯한 사회 법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례로, 웹툰 작가의 임금은 사라지고 있다. 현재 고료를 지급하는 플랫폼은 다음, 네이버 등 소수 포털에 한하며, 대부분 고료없이 일종의 선인세와 같은 이른바 MG제도를 두고 있다. 최소 개런티를 보장한다는 미

니덤 개런티의 약자인 MG제도¹⁾는 실상 보장 제도라기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당겨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감 과정이 불합리하다. MG는 결국 갚아야하는 빚과 같다.

웹소설 작가는 미리 지급되는 MG마저 없어, 작품 준비기간 동안은 일절의 작업료 없이 자생해야만 한다. 웹소설 작가는 실태조사도 아직 미진하여 보다 상세한 가시화가 절실하다.

이에 디콘지회는 웹소설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노동실태, 불공정을 언론 매체에 제보 하고, 기관 단체에 알리는 등 가시화 및 개선에 힘쓰고 있다.

청년 여성 노동자의 주체적 노동 운동

2018년 12월 12일 결성한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이하 디콘지회)는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디지털 콘텐츠 분야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콘텐츠 분야의 수많은 불공정에 맞서 청년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모여 직접 투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신은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이하 레규연) 여성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연대(이하WFIU)이다. 레규연은 웹소설 사업 줄속종료, 저작권, 웹툰작가 블랙리스트 운용 등, 레진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고 많은 불공정을 바로잡은 연대이며, 그 일원은 99%가 여성이다. WFIU는 게임업계 사상검증에 대항하여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결성한 연대이다.

디콘지회는 2019년에 케이툰의 일방적 계약변경에 대항하여 5월 2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109일간의 일인시위와 두 차례의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꾸준히 단결하였다.

케이툰 투쟁은 조합원간에 협동하여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참여도가 높아, 당사자와 지회가 굳건히 함께한 성공적인 투쟁 활동이었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터뷰는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여론 생성 또한 순조로웠다.

1) MG제도는 2015년도에 레진코믹스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Minimum Guarantee의 약자로 월 최저 2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불공정을 내포하고 있다. 레진의 경우 보통 결제가 플랫폼 내 화폐 단위인 코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레진 코인은 140원이고 그중 50원이 작가 몫이 된다. 3.6:6.4(작가:레진)의 비율이다. 레진 작가는 매출이익이 560만원이 되어야 그중 36%인 작가수익으로 mg 200만원을 채워 유료수익을 받을 수 있다. 레진 외의 경우는 단순히 예를 들자면, 작가와 플랫폼(혹은 에이전시)이 5:5의 비율로 매출을 나누기로 계약하였고, 월에 200의 MG를 받았으며, 해당 월에 작가의 작품이 400만원의 매출 냈다고 가정할 때, 근래에는 보통 후차감이라 하여 400만원을 먼저 5:5의 비율로 나누어 작가의 몫이 200만원이 된다. 그리고 이 200만원에서 미리 지급한 MG 200만원을 회수한다. 결과적으로 작가의 몫은 추가 수익 배분없이 0이 되는 정산이며, 작가가 401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5천원씩 정산받게 되는 것이다. 이 MG제도는 점점 열화되어 월에 지급받은 MG를 차감하지 못하면 이월 되어 누적되는 누적MG, 2차 해의 판매액까지 동원하여 차감해야 하는 통MG등으로 악화된다. 이 모든 차감 방식은 대부분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19년 12월에는 게임업계의 여성혐오가 자아낸 사상검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당시 많은 여성 단위와 노동 단위가 함께하여 공동 주최하였다.

여성노조 디콘지회 뿐 아니라, 다양한 여성 단위가 존재하고 서로 연대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청년 전태일로서, 적극적인 노동 운동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2020년, 내가 전태일이다.

[참고]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 탄원서

2016년 열세살 여공의 삶 신순애 지음, 한겨레출판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집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2016년 통계청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년 여성가족부, 통계청 보고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남녀 당선자 수

2018년 금감원 채용관련검사 결과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그래프

2016년 서울시 공정경제과 문화예술불공정 실태조사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작가실태조사

02 노동분야

전태일로부터 50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되돌아본다

2020. 05. 28 (목) 15시
전태일 기념관 4층 교육실

전태일로부터 50년 전태일의 현재적 의미를 되돌아본다

□ 기조

- 70년대 노동 세계와 2020년 디지털 시대의 노동 세계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전 분신 항거한 전태일을 다시 소환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의미)이 무엇인지 논의함
-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다던 노동운동 세력들에게 ‘전태일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그 활동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되짚어 봄.
- 불평등과 양극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노동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전태일정신은 무엇인지 재구성해보도록 함.

□ 형식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각 주제별 10분 내외 길이의 발표
- 전체 발표 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자유토론
- 각 주제별 주토론/질문자 배치

□ 발표 및 진행

- **진행**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제**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 **발표**
 - 박용석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 황선자 한국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김은선 희망씨 이사
 - 이정기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장

전태일 항거 이후 50년 노동운동의 궤적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1. 들어가는 말¹⁾

올해로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과 전태일재단은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준비하느라 오래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양대 노총 등 노동운동단체들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꼭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11월이 되면 전태일정신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노동운동이 나아갈 길을 힘주어 밝힌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노동단체들은 기회만 되면 전태일을 얘기한다. 그리고 전태일정신을 이어받자고 거듭 다짐한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 짧은 생애를 합하면 72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노동자들은 그를 찾는 것인가?

혹자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할 때와 노동자들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열사의 요구는 무엇이었던가 묻고 그 소박한 조건마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50년전 전태일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꿈꿨다고 분석하고 그 전태일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전태일 열사가 화염 속에서 부르짖은 요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이었다. 그리고,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이었다.

전태일 열사의 삶과 투쟁은 ‘인간선언’으로 집약되었고 그에 일관됐던 생각은 훗날 이렇게 지적되었다(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1983:160). 첫째,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둘째,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사상이다. 셋째, 기존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으로 인하여 완전한 거부, 완전한 부정으로 전환된 사상이다. 넷째, 근본적인 개혁의 사상, 행동의 사상이다. 또 전태일을 표상하는 의미로서 ‘나눔과 배려’, ‘저항의 휴머니즘’,

1) 이 글은 「'87노동자대투쟁 30주년, 노동운동의 현주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민주항쟁10주년 기념학술토론회 :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들고 나아감』(2017)을 수정 보완한 것임.

‘사랑-연대 평화 행동’, ‘인간해방과 인간애’ ‘이타(利他):희생 헌신 배려 연대’, ‘풀빵과 바보회=내가 전태일’, ‘무조건적 사랑’ 등으로 집약되기도 한다(전태일기념관건립 자문회의 2018. 11.27).

이 글은 전태일 열사의 바랐던 꿈과 요구 사상을 돌아보고 그의 저항투쟁 이후 5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정리하려고 한다. 나아가 노동운동에 남겨진 과제와 실천방향을 모색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한국사회 격동 50년 역사의 반추

전태일이 태어날 즈음, 이 나라 민중들은 미국의 세계 냉전지배전략의 최전방에서 민족분단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깊고 참혹한 상처를 치유할 새도 없이 진행된 지독한 배고픔과 반공 친미 독재정치의 암담한 상황은 1960년 3, 4월혁명으로 깨져 나가고 잠시 민주화와 분단극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겨우 1년 만에 박정희 일파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로 참담하게 단절되었다. 그리고 30년 넘게 군부독재정권의 철권통치가 진행되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항거한 1970년은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이 위기에 봉착했던 해이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간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의 1/3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었고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경기도 하강 침체국면에 빠졌다. 노동자 서민대중의 불만은 높아져 갔고 특히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했다. 거기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지탱해주던 미국의 냉전지배전략이 파탄에 직면함으로써 반공주의와 경제성장을 지배전략으로 삼아왔던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전태일의 분신 항거에 충격을 받고 노동정책을 개선하는 듯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동자의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내용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인 1972년에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 파쇼체제를 구축했다. 당연히 반독재 유신철폐투쟁이 벌어졌고 유신독재정권은 2차례의 위수령과 9차례의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민주화운동을 압살하려다가 스스로 몰락했다. 그러나 그후 군사독재권력은 더 잔혹한 폭력으로 1992년까지 유지되었고 그들과의 합작을 통해 이른바 문민정부가 1993년에 들어섰다. 그후 국민의 정부(1998), 참여정부(2003), 이명박정부(2008)가 들어섰고 2013년 집권한 박근혜정부는 촛불항쟁에 부딪혀 2017년 몰락했고 그해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0년 이후 50년 동안 9개의 정권이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했다. 이 사이 우리 사회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엄청나게 변화했다. 군사정권 1인 독재체제는 파탄이 나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중심, 의회 권력체제가 정착되었다. 국가보안법이나 각종 인권억압적 법제가 많이 남아 있으나 국민기본권은 많이 확충되어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신장되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과 2016/17 촛불항쟁은 국민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저항’으로 근래에 드문 정치혁명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는 3224만명에서 5197만명으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은 해마다 6.6%씩 늘어나 273배나 커졌다. 1인당 국민소득도 243달러에서 3만3천달러로 137배나 늘었

다. 수출액 역시 세계7위의 엄청난 규모다. 이같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산업화-민주화’ 발전의 성공사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상의 커다란 변화에 비해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어떤가? 임금 노동자는 378만6천명(1970)에서 2056만명(2019년)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은 최빈국에서 세계 15위권으로 뛰어올라 강소국의 위세를 자랑한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에 항상 크게 밀돌고 실질 임금 상승율은 경제성장율의 한참 밑에서 주춤해 왔다. 국내총소득에 대비한 피용자보수율은 임금노동자수가 급증했음에도 50년 동안 미증에 그쳤고 산업재해 역시 세계 상위권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간단한 통계들은 노동에 대한 배분의 왜곡상과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실상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거니와 전태일이 온몸으로 해결하려던 주변부 노동자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전태일은 묻는다.

“근로기준법은 준수되고 있는가?”

“노동자는 일요일에 쉬고 있는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닌가?”

“노동조합할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기업 경영은 존재하는가?”

“붕어빵을 나누는 연대와 동지애는 노동운동 속에 얼마나 배어 있는가?”

고 조영래 변호사는 흐려져가는 전태일의 기억을 안타까워 하며 오래 전에 이렇게 토로했다.

“그러나 참으로 전태일은 죽었는가? 전태일의 죽음을 뚫는 불꽃은 환상이었던가? 전태일투쟁은 패배하고 끝났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속단이다. 천만에! 전태일은 죽지 않았다. 전태일의 불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전태일 투쟁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며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전태일의 몸을 불사른 불꽃은 ‘인간선언’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불의의 힘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아무리 인간을 짓누르고 무력화하고 파괴하여도, 인간은 끝내 노예일수 없음으로, 그 폭탄적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인간역사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였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이 죽어 모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전태일의 불꽃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착취가 인류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는 한 전태일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조영래, 2009: 322).

3. 1970년대 노동운동 : 노동기본권 봉쇄하의 저항투쟁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1년 여 만에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봉쇄하였다. 이어 1972년 ‘10월유신’으로 민주헌정을 파탄내고 박정희 1인의 종신권력을 위한 유신헌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삼엄한 정치적 조건 하에서 경제는 연평균 10%대에 이르는 고율의 성장을 이룩했고 수출은 연간 100억달러를 돌파하여 ‘한강변의 기적’을 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점자본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재벌체제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저임금

과 장시간 노동을 위한 독재권력의 노동운동 탄압과 재정 금융상의 특혜에 기반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연평균 16% 이상의 물가폭등, 노동생산성 향상의 1/3에 못미치는 실질임금과 생존비 이하의 저임금,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산재왕국으로 표현되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작업조건, 제한없는 인권탄압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 봉쇄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일은 시킨 대로 품삯은 주는 대로”의 무권리상태로 “공장일을 내일처럼 근로자를 가족처럼”이라는 공장새마을 운동의 노사협조 만을 강요당했다. 노동조합운동의 총본산이라는 한국노총은 폭력적인 유신정권과 자본의 억압에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채 무력화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 노동자들은 고도성장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이하의 대우와 ‘공돌이’와 ‘공순이’로 불리는 사회적 냉대 속에 암흑과 같은 삶을 견뎌내. 고도 경제성장의 ‘황금시대’,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는 피와 땀과 눈물로 가득찬 가혹한 인고의 세월이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은 바로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타고 넘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힘들고 기나긴 여정이었다.

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의 인간선언과 함께 새로운 전환을 예고했다. 그의 절규는 경제성장의 허구성과 반인간적 노동상황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대기업 노동자중심의 노동운동의 오류를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무관심한 사회여론에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자각케 함으로써 경제사회정책과 노동운동의 전환을 촉진시킨 역사적 계기이었다. 전태일 노동자의 분신 이후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의 엄혹한 탄압을 뚫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첫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건 극한적인 형태로 저항하였다. 조선훈텔 이상찬의 분신자살 기도(1970.11.15), 아세아자동차 노조분회장의 고압선 향의(1970.12), 한국회관 종업원 김차호의 프로판 가스 폭발위협(1971.2), 조일철강사 최재형의 자살기도(1973.12), 대구 정세달의 사장의 횡포에 대한 자살향의(1972), 1977년 9월 청계피복노조의 목숨을 건 노동교실 회복투쟁(1977.9)을 거쳐 1978년 11월 삼영정밀공업사 노동자 정귀한의 사람다운 대우를 요구한 자결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투쟁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였던 것이었지만,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 저항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둘째, 노동자 서민대중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투쟁을 벌였다. 1971년 광주단지 주민의 대규모 시위,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대한항공(KAL)빌딩 방화 시위, 병원 간호사와 수련의 항의 파업, 1973년 삼립식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 1974년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들의 도급제 반대 시위, 1977년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파견노동자들의 파업시위와 풍천화섬 노동자들의 추석날 시위 등이 그 주요 사례들이다. 요구조건은 주거권 보장, 임금인상, 작업조건 개선, 권리보장 등 다양하게 걸쳐 있었고 투쟁 방식은 법적 제약을 뛰어넘어, 때로는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셋째, 70년대 초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불법화된 유신체제하에서도 매년 100건 이상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전개되었다.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쟁의는 1970년 90건, 1971년 109건이었으나 노사분규는 1970년 165건에서 1971년에는 1,656건으로 폭증했고 1972년에는 24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1974년 655건으로 급증했다. 유신독재체제하인 1973년에 76건이었던 집단분규는 1974년 1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노사 간 분쟁 건수는 1975년의 1,045건에서 매년 늘어, 1979년에는 1,697건을 기록했

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 파업, 농성, 시위 등의 집단행동으로 발전한 것은 1975~79년 연평균 109건에 이르렀다. 이것은 합법적 쟁의가 가능했던 1966~71년 파업 건수 66건의 1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들은 주로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해고 반대, 기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태업, 잔업거부, 중식거부, 리본달기, 시위, 농성, 단식투쟁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였다. 이들 투쟁 가운데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노조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국가권력과 직접 대결하는 매우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그 예로 1972~75년 원풍모방노조의 어용노조 퇴출과 회사정상화 투쟁, 1974년 인천 반도상사에서 민주노조 결성투쟁, 1976~78년의 인천 동일방직 민주노조 수호 투쟁, 그리고 1977년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노동교실 수호투쟁, 1979년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동작전에 맞서 권력기반을 뒤흔들었고 김정숙 노동자의 죽음을 가져온 YH무역 투쟁의 경우 끝내는 79년 10월 유신체제의 정상 박정희의 파멸을 초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의 죽음에서 김정숙의 죽음에 이르는 처절한 저항의 시대”였다. 노동자들은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제반 법률규정들을 거스르는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도 광범하게 일어났다. 이는 급속한 고도성장에도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들의 저항의식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넷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은 1970년의 49만에서 1979년의 11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각급 조직이 신규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밑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만큼 권리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신규조직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싸웠을 뿐 아니라 권력과 상급조직의 횡포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지식인과 종교계의 노동운동 참여가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전태일의 분신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하고 대학연구소들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1974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신문사에 노조가 결성되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지식인들이 현장이나 노동조합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신문사노조들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혹독한 탄압을 당하지만 이에 굴치 않고 언론자유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반유신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은 주로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계몽하고 투쟁을 지원하며 한국노총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강원릉목사의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는 수많은 노조간부들을 의식화하여 민주노조운동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권력으로부터 ‘불순세력’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았다.

여섯째, 민주노조가 등장하여 새로운 노동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민주노조의 출발점은 전태일의 항의 분신 이후 결성된 청계피복노조이었다. 이후 민주노조는 한국(원풍)모방노조, 동일방직처럼 기존노조 내부에서 민주화투쟁을 통해 출현하기도 하였고 반도상사노조, YH노조, 콘트롤 데이터노조처럼 민주노조로 시작한 노조들도 있었으며 이 밖에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한 노동조합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섬유, 전자와 같이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주성 민주성 투

쟁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 노조들은 법률상 금지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감행하여 높은 노동조건을 쟁취하였고 민주적인 노조운영으로 조직력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한국노총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조들은 종교단체와 지식인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운동의 중심은 노동자들이었고 유신반대투쟁과 같은 정치투쟁을 노동문제 노동운동까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감행하였다. 민주노조들은 권력과 자본 및 한국노총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고 치열한 저항투쟁을 벌였다.

〈표 1〉 1970년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추이

(단위 : 개, 명, %)

	노동조합						노사분규 발생건수	노동동향 발생건수
	산별	지부	분회	조합원수	증가율	조직률		
1970	17	418	3,080	469,003	5.5	12.4	165	
1971	17	437	3,022	493,711	5.3	12.5	1,656	
1972	17	432	2,957	504,624	2.2	12.4	346	
1973	17	415	2,891	530,949	5.2	12.6	367	
1974	17	428	3,217	641,561	20.8	14.2	655	
1975	17	483	3,450	712,001	11.0	14.8		1,045(133)
1976	17	511	3,730	823,130	15.6	15.8		754(110)
1977	17	537	4,046	916,135	11.3	15.9		1,064(96)
1978	17	552	4,304	1,016,733	11.0	16.2		1,206(102)
1979	17	553	4,392	1,094,008	7.6	16.8		1,697(105)

주 1) 노동조합 관련은 매년 8월말 현재로 한국노총, 『사업보고』, 1970-1979

2) 노사분규발생건수는 한국노총 『사업보고』(1971-1975)

3) 노동동향 발생건수는 노동청

4) 노동동향발생건수중 ()안은 집단분규 발생건수

일곱째,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이 출현한 것으로 1977년 협신공업사 노동자 민중진의 가스질식사에 항의하여 경인지역노조 간부들이 항의시위를 벌인 사건, 공정방송을 요구하여 여러 개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기독교방송국을 점거한 사건과 서울 여의도 부활절 행사장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1978), YH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주노조들의 투쟁은 법률상 금지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민주노조활동 보장 요구를 제기하여 국가권력과 직접 대결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초보적인 정치투쟁의 장을 열었다. 특히 김경숙이라는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YH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초 회사폐업반대투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유신독재정권과 야당 간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마침내는 유신권력 내부의 암투를 야기시켜 유신정권을 몰락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전태일의 분신으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었던 70년대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의 삼엄한 억압과 한국노총의 왜곡된 운동노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밑으로부터의 치열한 투쟁과 운동지형의 확대라는 발전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조의 등장은 연대조직 틀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투쟁도 경제투쟁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자주성과 민주성투쟁성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고수하여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4. 전두환정권의 폭력적 탄압과 80년대 초중반의 노동운동 : 침체와 새로운 모색

1979년 10월 유신독재체제의 붕괴로 정치적 자유는 회복되었지만 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경기는 급격히 침체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폭등함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의 생활압박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배권력은 1980년 ‘서울의 봄’에 이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고 마침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전두환정권은 유신시대에 이은 광폭한 독재권력을 행사했지만 민중들의 거센 민주화투쟁에 굴복하여 1987년 6.29항복선언을 끝으로 물러가기에 이른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80년 5.17 신군부의 쿠데타 이전의 비조직적 폭발시기와 그 이후 83년말까지의 운동의 전반적 후퇴와 재정비시기, 84년-87년 6월까지에 이르는 운동의 침체극복과 변혁지향노선의 대두시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70년대 노동자계급의 잠재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80년 봄 노동자투쟁은 총2,168건으로 급증하면서 매우 격렬한 양상을 나타냈다.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청산, 어용노조민주화와 노조결성보장, 휴폐업 반대 및 해고자 복직, 기타 노동조건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투쟁은 파업 태업 농성 시위 등 탈법적 형태를 나타냈고 사복 동원탄좌와 노동자들의 파업시위와 경찰과의 직접대결, 지역점거 등 전례없는 격렬한 투쟁도 전개되었다.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은 다른 조건들과 복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와 한국노총에까지 광범하게 확산되었고 휴폐업저지 및 해고반대투쟁은 불항업종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그 격렬성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 성격을 드러냈고 요구내용은 경제적 차원에 머물렀다. 또한 투쟁의 전개도 사업장 단위에 한정되고 산업별 지역별 연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노조민주화투쟁은 5.17 계엄확대에 이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노동탄압과 함께 결실을 얻지 못한채 좌절되었다.

노동운동은 신군부정권의 극심한 탄압조치에 의해 단절되고 운동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군부정권은 신규조직을 금지시키고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등 상급단체의 어용간부들과 민주노조간부를 포함한 191명을 강제 사퇴시킴과 함께 105개의 지역지부를 해산하였다. 이어 정권은 민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순화교육을 보내는가 하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민주노조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였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악하여 노동운동의 발전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80년 12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악된 노동법 주요내용은 ①기업별노조의 강제 ②복수노조 금지조항의 강화 ③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신설 ④유니온 샵조항의 폐지 ⑤노조간부자격의 제한 ⑥단체협약유효기간의 2년 연장 ⑦노동쟁의 냉각기간의 연장 ⑧변형근로시간제의 신설 ⑨노조운영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확대 등 사실상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군부정권의 극심한 탄압아래 한국노총은 여전히 무기력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노동운동은 1983년까지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노동자들은 절박한 생활상의 요구와 노조결성 보장요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노동쟁의(1981년 186건, 1983년 98건)를 제기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신규조직도 확대하였다. 또한

일부 지식인과 현장활동가 사이에서는 광주민중항쟁과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운동이념과 투쟁형태를 고민하면서 전민노련과 같은 비합법적인 조직구성이 모색되기도 했다.

〈표 2〉 80년대 전반기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변화

	노동조합 (개)	조합원수			피용자수 (천명)	조직률 (천명)	노사분규 (건)
		총계	남자	여자			
1979	4,947	1,088,061	723,583	364,478	6,479	16.8	105
1980	2,618	948,134	566,368	381,766	6,464	14.4	407
1981	2,141	966,738	628,259	338,479	6,605	14.6	186
1982	2,194	984,136	633,106	351,030	6,839	14.4	88
1983	2,238	1,009,881	673,411	336,470	7,171	14.1	98
1984	2,365	1,010,522	683,542	326,980	7,632	13.2	113
1985	2,534	1,004,398	691,911	312,487	8,104	12.4	265
1986	2,658	1,035,890	724,566	311,324	8,433	12.3	276
1987	2,725	1,050,201	-	-	8,974	11.7	103

주 1) 1979년 노동조합수는 지부 분회를 합한 것이며 1980-1987년은 중앙조직을 제외한 단위노조수임.

2) 1987년은 6월 30일 현재임

자료 : 노동부, 『노동백서』(1985-1988)

1984년 이후 정치적 유화국면으로의 정세 변화와 함께 노동운동은 재기의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신규노조 결성투쟁과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벌이는 한편 제도개선 요구투쟁을 아울러 전개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83년말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84년 9-10월의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투쟁, 84년 노동법 개정 운동과 ‘위장취업자’의 해고무효 확인투쟁 등이 주요사례들이었다. 이어 84년 5월 대구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인하, 부제완화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와 농성을 전개하여 목표를 관철시키고 전국 대도시로 투쟁을 확산시켰다. 1985년 4월 인천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6월에는 서울 구로공단지역에서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 노동법의 악법조항 철폐, 부당해고자 복직, 임금동결정책 철회,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9개 노조가 동맹파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은 자주적 운동단체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변혁지향적 운동노선을 설정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는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84.3),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85.2),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85.4), 서울노동운동연합(85.8) 등이 그 대표적인 운동단체들이었다. 한편 광주항쟁의 패배이후 지식인들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며 주로 수도권지역 노동현장에 대거 투신하였다. 이들은 노조결성과 어용노조 민주화를 위한 투쟁, 자주적 운동단체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거나 노학연대를 추진하는 일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구로동맹파업 직후 등장한 서울노동연합은 노조와 같은 대중조직과 경제투쟁 보다 정치적 선도투쟁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였고 이와 함께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전략을 둘러싸고 많은 조직과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직면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고 ‘호헌철폐’

폐! 독재타도!’를 내세운 민주항쟁의 열기가 날로 격화하였다. 노동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노동자들을 지원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노동자들은 민주항쟁의 전선에 적극 결합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쳤다. 그런 속에서도 대도시의 금융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은 이른바 넥타이부대라는 이름으로 민주항쟁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처럼 군부독재정권의 완강한 벽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 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총본산이라는 한국노총은 4.13호헌 지지성명을 내는 등 도도한 역사의 전환을 거스르고 있었다.

5.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폭발과 노동운동의 급성장

1987년 6.29선언후 정치권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주춤해져 있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불길을 당기기 시작하였다.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 노조결성과 파업을 기점으로 시작된 노동자투쟁은 지그재그로 각 지역을 9월초순 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투쟁은 주로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직장내의 억압철폐, 어용노조 퇴진 등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요구조건으로 하여 전산업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벌어졌다. 6월 29일 이후 3개월간 투쟁건수는 3,458건이었으며 220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 투쟁은 또한 군부독재정권하의 억압적 법질서를 대중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는 탈법적 전투적인 성격을 띠었다. 노동자들은 법률상의 쟁의절차를 무시하고 우선 현장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병행한 뒤 협상에 임했고 가두 시위와 같은 적극적인 형태도 구사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존의 어용노조를 타도하면서 스스로를 ‘민주노조’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대투쟁은 주로 재벌기업에 속한 조선, 자동차, 기계, 화학, 방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하였다. 대투쟁의 열기는 9월 초순 국가권력이 반격을 가하고 대통령선거 바람이 불면서 가라앉았다.

이와 같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이 형성된 이래 최대규모의 대중적 항쟁으로 그야말로 ‘십년을 하루에 뛰어넘은’ 거대한 대중투쟁의 비약이었다. 대투쟁은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단련시키고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힘과 단결의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사회적 무력감이나 패배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제와 각종제도의 구조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조직적 지도력의 중요성과 연대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거대한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자각을 높이고 스스로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투쟁과정에 개입한 정치권력의 정치적 탄압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투쟁이 총자본과의 계급적 이해 대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에 맡겨진 민족 민주운동에서의 역사적 책무를 낮은 차원에서나마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87년 노동항쟁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투쟁의 조직적 지도력이 취약하여 강고한 투쟁을 벌이고도 그것을 광범한 조직적 역량으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점, 투쟁방식에서 연대투쟁이나 통일투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 투쟁목표에서는 단위 사업장내의 경제적 요구를 전 계급적 제

도적 요구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 민족 민주운동과의 상호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87년 9월 이후 권력 및 자본과의 치열한 대립관계 속에서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해 극복되어가기 시작하였다.

‘87노동항쟁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노동자들은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어용노조를 몰아냈다. 노동조합은 86년의 2,675개에서 89년에는 7,883개로 3배나 불어났고 조합원수는 103만 6천명에서 193만 2천명으로 급증하였다. 조직률은 12.3%에서 18.7%까지 올라갔다. 노동조합은 제조업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전문직·교사 및 교직원·언론·병원·건설 등 전산업에 걸쳐 결성되었고 공공부문에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권력과 자본의 반격에 직면하여 오랫동안 굴종적인 관성에 젖어온 한국노총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스스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조직간 연대들을 만들어나갔다. 노동조합들은 스스로 ‘민주노조’라 규정하고 자체조직의 수호에서부터 노조운영이나 노동조건 개선문제에 이르기까지 상호교류와 지원 협력을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상호교류와 공동대응을 통한 연대들의 형성은 초기에 현실적으로 서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업종·그룹별 및 대기업연대라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고 권력과 자본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빠른 속도로 전국적인 연대와 통일을 이루어 나갔다. 각 공단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87년말부터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를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1990년 1월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하였다. 사무금융·언론·병원·연구·건설·대학·출판·시설관리 노동조합들은 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와 함께 90년 5월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로 결집하였다. 재벌그룹 노조들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과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등을 구성하였고 90년 12월에는 ‘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연대회의)로 발전하였다.

이들 지역·업종·그룹별 연대조직들은 매년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 개정투쟁 등을 전개하고 조직간 연대와 통일을 지지하려는 권력의 잔혹한 탄압에 격렬하게 대항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노조간부들이 해고, 구속, 수배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1988년 11월부터 해마다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상호 연대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다짐하였다. 민주노조진영은 ‘ILO노동법개정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를 차례로 구성,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을 표방하고 기업별 노조체계의 타파와 산업별 단일 노조를 축으로 한 전국중앙조직의 건설을 추진했다.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민주노조진영은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출범시켰다. 민주노총은 861개 노조에 조합원 41만명으로 출발하였고 초대 위원장에는 언론노조 출신인 권영길이가 선출되었다. 민주노총은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이념성 등의 기초를 견지하면서 사회 개혁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경제적 조건의 향상과 민주적 제권리의 확보를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다. 폭발적인 노동쟁의는 1987년-1989년 사이 3,749건-1,616건에서 90년 322건을 고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기간의 장기화나 격렬성 등 완강한 양상을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다양

한 투쟁형태와 전략 전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지배전략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고 정세변화의 중요한 인자로 등장하였다. 먼저 투쟁의 주체가 독점적 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자들과 사무 전문 기술직종 노동자들에서 지하철 한국통신 조폐공사 철도 등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주축들이었고 요구조건도 임금인상을 넘어서서 복지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참가, 해고반대 및 해고자 복직, 현장민주화 등에서부터 언론민주화(방송 신문사), 연구자율성 보장(전문노련), 의료민주화(병원),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대학직원), 교육개혁(전교조) 등으로 광범하게 확장되었다.

〈표 3〉 1987년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추이

	조합원수(조직율)	노동쟁의건수	노동쟁의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1987	1,267,457(13.8)	3,749	1,262,285	6,946,935
1988	1,707,456(17.8)	1,873	293,455	5,400,837
1989	1,932,415(18.6)	1,616	409,134	6,351,443
1990	1,886,884(17.2)	322	133,916	4,487,151
1991	1,803,408(15.8)	234	175,089	3,271,334
1992	1,734,598(14.9)	235	105,034	1,527,612
1993	1,667,373(14.1)	144	108,577	1,308,326
1994	1,659,011(13.5)	121	104,339	1,484,668
1995	1,614,800(12.6)	88	49,717	392,581
1996	1,598,558(12.2)	85	79,495	892,987
1997	1,484,194(11.2)	78	43,991	444,720

또한 투쟁들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투쟁전술을 구사하였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계획성과 규율성을 갖고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투쟁전술도 총파업에서부터 시한부 부분파업 태업 총회 농성 가두시위 준법투쟁 등 각기의 특수한 역량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산업별 그룹별 연대투쟁이 확산되었으며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진전시키면서 전국적 통일투쟁을 확대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적 조직역량의 결집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중앙조직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발전시켜갔다. 이러한 투쟁의 변화 발전은 필연적으로 국가권력과의 대결로 귀결되었다. 국가권력은 기회있을 때마다 악법조항을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며 민주노조들은 실정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현장은 투쟁 - 해고 - 수배 - 구속의 악순환이 이어졌고 구속노동자는 1987년 362명에서 1996년 95 명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무려 2,807명에 이르렀다.

민주노조진영은 반공주의, 경제주의, 국가주의로 집약되는 종래의 낡은 이념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이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1년 전노협이 창립선언문과 각산별연맹의 선언 강령에서 두드러졌다. 전노협은 창립선언문에서 자주적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스스로를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적 비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전노협은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자주화·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투쟁방향을 밝히고 조직적 목표로는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기업별 노조체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운동기조를 바탕으로 민주노조진영은 대정부투쟁, 정책 제도개선투쟁, 민족 민주운동 참여 등을 축으로 이루어졌다. 전노협 탄압에 대한 투쟁, 각 연맹의 합법화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임금억제정책 반대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 민주노조진영이 전개한 투쟁들은 단순히 조직결성과 활동기반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또한 민주노조진영은 민족민주운동에의 참여와 민족통일운동의 추진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전노협, 전교조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참가, 전노대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공동대표 참가 및 농민, 빈민, 진보학계, 각종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이었다. 이것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40년 넘게 한국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해 왔던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개혁의 요구를 강하게 던져주었다. 1988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창조적인 자기혁신’을 강조하였고 1988년 11월에는 “오욕과 굴종의 역사 청산과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전개”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 규탄, 전경련 삼성재벌 규탄, 노동악법 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 등을 제시하며 종래 옥내집회에서 옥외 대중집회와 시위로 전환하였다. 이후 한국노총은 국가권력의 왜곡된 정책과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 실리추구 원칙은 유지하는 한편, 민주노조진영에 대해서는 견제와 경쟁의 태세를 취했다. 1990년 들어 한국노총은 ‘국민대중 속에 뿌리박는 노총’을 강조하고 노사정 합의기구로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를 구성하였다. 한국노총은 1991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1990년대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채택하고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했다. 이어 다양한 이탈조직 흡수 활동을 벌이고 지방자치제 선거에 자체조직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진력하였다. 이런 한편에 정부의 ‘총액임금제’ 실시와 고용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방침, 임금억제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는 투쟁을 대중집회와 단식 철야농성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벌였다.

한국노총의 개혁 추진은 문민정부 하에서 이룬 ‘노총-경총 임금합의’(1993), ‘중앙 노사 임금 및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1994)로 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들 합의에 대해 산하 단위노조에서는 비판과 반발에 이어 조직 이탈이 일어났고 민주노조진영에서는 합의 분쇄를 투쟁목표로 내건 전국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1994년 11월 17일 사회적 합의포기를 선언하면서 조직내부 개혁과 민주노조에 노동계 통합을 제의하는 등 노동운동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시민운동의 확산에 맞추어 사회적 연대 확대와 통일문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5년 한국노총은 1991년의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켜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결성되자 노동계 통합 원칙으로 노동자 대동단결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을 설정하고 민주노총에 대해 1996년 2월 중 통합대회를 갖자고

제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더 큰 하나로 미래로 - 무책임한 노동운동을 비판한다』는 홍보 책자에서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개혁 시도는 88년 위원장의 집권여당인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한데 이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좌절되고 만다.

한국노총의 개혁은 1996년 3월 박인상 위원장이 “현장과 함께 하는 강한 노총 건설”을 강조하면서 재개되었다.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노총의 개혁’과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 통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운동의 분열을 촉진한다는 구실로 개정을 반대해 왔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민주노총과의 연대의 길을 터나갔다.

한국노총의 개혁 시도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처리에 항의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정부와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한국노총도 뒤이어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2단계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은 ‘일대 혁명적’ 변화를 일구어 냈고 ‘자본과 정권에 타협적·협조적’이라는 한국노총의 과거 이미지를 벗고 조합원 중심으로 우뚝 서서 한국노총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한국 노동운동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97년말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연합의 상대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집권 여당만을 줄곧 지지해 왔던 종래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치행로의 변화를 나타냈다.

6. 세계화 공세와 1996/97 총파업

‘87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악법 개정은 노동운동의 우선과제로 등장했고 민주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93년 집권한 문민정부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96.5.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노동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대표로 참여한 노개위에서는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6개월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의제의 중심은 정부와 사용자측의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노동제 도입 등 이른바 고용의 유연화 요구와 노동운동 진영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맞섰다.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로 넘겨졌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에 154명의 의원들을 끌어들여 단 6분만에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12월 26일 기아, 현대자동차 등 85개 노조 142,000여명이 참가한 전국적 총파업은 매일 확대되어 2월 말일까지 3단계로 전개되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3,422개 노조, 387만 8천여명의 노동자 참가했고 한국노총은 2단계에 걸쳐 500만여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30회 이상의 대규모 정부규탄집회와 시위가 열려 연인원 150여만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운집하였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사회운동단체들과 국제노동운동 단체들도 총파업투쟁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96년 11월 20일에 사회운동단체들이 구성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를 위한 범

국민대책위원회'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었고 민변, 민교협, 천주교, 개신교, 여성계 등에서 연이어 항의성명을 내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또한 OECD노조자문위원회, ICFTU를 비롯하여 각국의 노동단체들이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정부는 불법 엄단을 언명하며 위협했지만 총파업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양대노총의 연대 강화로 발전하였다. 양대노총 산하의 금융노련과 사무노련이 연대집회를 열었고 으며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과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만나 연대투쟁을 합의한데 이어 97년 1월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양대노총 공동집회가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처럼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격화하자 김영삼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법재개정을 천명하였으며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26일 날치기 노동법안을 폐지하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은 날치기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했으나 시행은 거둬 연기되었고 정리해고제도 폐지가 아니라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한 것에 불과했다.

96/97 총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투쟁으로 국가권력을 굴복시켰다. 총파업은 또한 87년 이후 노동자계급의 고양된 인식과 노동운동의 발전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쾌거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절박하고 근본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없는 총파업의 한계를 절감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개혁 방침을 실천해가는 한편 98년 지자체 선거 진출 → 98/99년 정당건설 → 2000년 국회 원내진출을 정치세력화의 경로로 설정하고 97년말 대통령선거에는 국민후보전술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운동전선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함께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를 결성하고 대통령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선거 결과는 참담한 패배이었다.

7. 외환위기와 노동운동의 침체

1)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의 대응

1997년 11월, 한국은 돌연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고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위기수습에 나섰고 황급히 외채를 끌어들었다. 그 대가로 한국정부는 국제금융기구(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전면 받아들였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1998년 2월까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시행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리고 양대노총의 동의하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성사시켰다. 합의내용은 노동기본권 보장,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투명성 확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의 법제화 등 광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2월 9일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회협약안을 부결시켰

다. 이후 민주노총은 빈번한 집행부 교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불참, 총파업의 결정과 철회 등 혼란을 거듭한 끝에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최종 의결했다. 1998년 2월 13일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한 이후 노동운동은 극심한 혼란과 시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현장에는 정리해고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증했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무기로 한 양보교섭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은 급격히 하락했다. 대량실업대책으로 추진된 ‘생산적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빗나간채 초보단계에 머물렀다. 노동자의 저항은 격화됐고 정권은 법과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 억압했다. 은행,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등 거대기업 노동조합들을 필두로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처절한 저항 투쟁을 벌이고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매년 전개되었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2003년 들어선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노동기본권의 확충과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사정의 악화와 자본쪽의 반발에 직면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전환한 가운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말 비정규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같은 정책의 변화는 노정간 대립으로 표출되었고 노동현장에는 해고와 구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구속노동자는 892명, 1,042명으로 급증하였다. 누적되어온 노동자들의 불만은 격렬한 저항투쟁으로 분출되었고 목숨을 던지는 극한투쟁이 빈발했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정권은 총선거 승리와 경제살리기 공약을 내세워 대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강행했다. 그러나 집권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연평균 2.9%에 그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였고 국민적 저항은 격화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정부라고 자처한 이명박정권은 노동유연화의 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두 축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했다. 정권은 노동통제를 위해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2011), 노조전임자 폐지와 타임오프제 시행(2010.7), 법과 원칙에 의한 쟁의질서 확립 등을 강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켰다. 정권은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개선명령과 단체협약 해지 등 일련의 억압조치를 강행하고, 쌍용자동차노조의 정리해고반대투쟁과 철도노조의 민영화반대투쟁에 대해 대대적인 공권력투입, 대량해고, 구속 등 잔혹한 제재를 가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2012년 10월말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515명에 이르렀다.(구속노동자후원회, 2012.11.1.)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계정책을 배경으로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파괴가 횡행하였다. 주로 조직력이 강한 민주노조들에 가해진 노조파괴공작에는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복수노조제도가 악용되고 용역강패와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와 같은 강압수단을 동원하여 노조활동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권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공약을 폐기했다. ‘경제활성화’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기조하에 대자본이 양적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박정권은 ‘노동개혁’을 내세워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사유화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확충을 통한 대자본의 이익증대를 추진했다. 박정권은 ‘고용률 70% 달성’을 설정하고 노동의 유연화 확장을 서둘렀

다. 노사관계정책에서는 ‘배제와 포섭’ ‘사탕과 채찍’의 전통적인 분열전략을 구사했다. 대선공약의 파기 이후 박정권은 민주노총을 떠받치고 있는 기간조직원들, 곧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2013년 하반기 불법화하였고 자본가들은 자주적 민주적 노조들을 폭력배를 동원하여 파괴하는가 하면 단체협약의 해지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가압류사태로 노동조합의 숨통을 막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2013년 12월 민영화 반대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난입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은 정규직노조 때문에 노동시장이 왜곡됐다는 내용의 이념공세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개혁 추진이었다.

그 한편에 박 정권은 한국노총에 대해 ‘노동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정권은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노동유연화 확장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 추진을 공식화 했다.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 연장과 일반해고제의 도입,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권 허용 등이 그것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1일 노사정합의안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그럼에도 정권은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제도와 취업규칙 개정을 밀어부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렀고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그리고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세력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잔혹한 탄압을 가했다. 박정권은 2015년 11월 14일 민주노총과 53개 사회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전국민중총궐기대회’에 물대포와 최루액을 대량으로 무차별 살포하였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여 수백명을 연행 조사하고 30명을 구속하였다. 1심 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었다.

이처럼 이명박근혜정권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경제살리기’와 반민주적 억압정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경제성장률은 3% 수준을 넘지못했고 한국 국민의 주요한 삶의 지표들은 OECD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허우적거렸다. 노동조합과 그 연대세력들은 정권의 횡포에 온 힘을 다해 저항했고 2016년 4월의 총선거에서는 야당의 무기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의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술한 비리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거대한 촛불항쟁이 전개되었다. 마침내 박근혜정권은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의결과 다음해 3월 10일 현재의 파면결정으로 파탄나고 5월 10일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권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을 양축으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득권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혼란을 겪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정책의 후퇴와 노동시간 단축의 후퇴,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변질 등은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준비부족을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사회양극화의 해소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배치된 것으로 노동운동 진영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다.

2) 노동운동의 대응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년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였던 노동운동은 97년말 밀어닥친 외환위기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강요 당했다. 총자본의 20년여에 걸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아래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노동운동은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침체양상을 나타냈다.

(1) 조직율과 조직구조의 변화

노동조합 조직규모와 조직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과 중소기업의 몰락, 기업의 해외이전, 기업별노조 체계 등을 배경으로 1989년을 고비로 매년 감소해왔다.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외환 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8년 5560개, 140만 1천명까지 줄어든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11년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170만명 대로 올라서고 2014년 190만 명을 거쳐 2018년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조직률은 1997~2003년 11%대에서 2004~2009년 10% 수준으로 낮아지고 2010, 2011년에는 10% 선마저도 무너졌다. 이는 임금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확대가 부진한 결과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10% 초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조합원수 200만명에 조직률도 11%수준을 넘어섰다. 2018년 현재는 조합원 233만 1천명에 조직률 11.8%로 집계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조직률을 12.5%로 집계하고 있다.

조직구조도 여러가지 변화를 나타냈다. 2018년 현재 조합원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76%를 차지하고 여성은 24%에 지나지 않았고 조직률 역시 남성은 13.7% 인데 비해 여성은 5.6%에 그쳤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은 9.7%에 그쳤고 공공부문 68.4%이었다. 조합원 규모별 사업장수는 300명 이상이 13.7%, 100명 미만이 68.0%이나 조합원수로는 각기 87.5%, 5.0%로 대기업 노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체규모별 조직률도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50.6%로 인데 반해 100~299명은 10.8%, 99~30명은 2.2%,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20.2%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5%이었다.

한편 조직형태별로는 종래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형태로 이어 왔으나 2007년부터는 초기업단위 조합원수가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57.9%까지 증가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은 86.8%가 초기업단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앙조직별로는 민주노총이 367개 조직에 96만 8천여명(41.5%), 한국노총이 2,307개 조직에 93만 3천 여명(40.0%)를 포용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부상하였다. 이 밖에 공공노총이 6개 조직에 3만5천여명(1.5%), 미가맹조직이 3,127개 노조에 37만 4천여명(16.1%)이었다.

이러한 조직규모, 조직률, 조직구조들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곧 조직률 10%는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양대노총의 조직률이 각기 5%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 깊어진다. 여기서 기업별노조체계에 법률적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단체협약 적용률은 조직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조직구조상으로는 남성,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고 여성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대다수가 소외되어 있었다.

노동운동 진영은 매년 조직 확대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책정해 왔다. 그러나 계획적인 조직화사업은 극히 부진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노총은 2000년 이후 전략조직화사업을 추진했다. 2003년~2011년에 25억원을 모금하여 조직화 사업에 투입했고 조합원수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한 이래 조직화는 급진전되었다.

(2) 노동자 저항투쟁의 격화

199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파업건수는 98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462건을 기록하였고 그 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2010년대에는 100건 이하로 까지 낮아졌다가 2012년부터 다시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하루 8시간 이상 파업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로 부분파업, 시한부 파업, 정치 파업 등을 고려하면 투쟁건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파업참가자수나 노동손실일수는 시기별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업지속일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건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겠지만 일단 투쟁에 돌입하면 장기간에 걸쳐 완강하게 전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파업의 원인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 등 경영관련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자들의 결정적인 생존문제가 대두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외환위기 이후 강제된 양보교섭의 결과를 회복하려는 임금인상 투쟁,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장,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그리고 정책 제도개선 투쟁 등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전개된 현대 기아자동차노조의 장기간 파업과 사상 최장기를 기록한 74일간의 철도노조파업, 성과연봉제 철폐를 내세운 공공부문 5개 연맹의 9월 파업 등으로 노동손실일수가 전년보다 355% 증가한 203만 5천일을 기록했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정적인 최후의 무기이지만 대부분 방어적 수세적인 성격에 머물고 있고 정부 자본측의 완강한 저지와 많은 제도적 법률적인 제약, 조직내 준비의 부족 및 조합원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①기업구조조정 저지투쟁 :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대부분의 기간산업,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일어났고 치열함 만큼이나 희생도 많았다. 권력과 자본측은 대량 해고,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전환배치, 손해 배상과 가압류, 노조간부의 구속수배 등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했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대부분 기업별로 분산되어 방어적으로 전개되었고 노조 자체가 약화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가장 상징적이고 격렬했던 투쟁은 쌍용자동차노조 옥쇄파업(2009) 및 한진중공업노조의 정리해고 반대투쟁(2013),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투쟁(2009, 2013) 및 74일에 걸친 성과연봉제 반대투쟁(2016), 자동차산업의 노동시간단축과 사내하청 철폐투쟁, 사내하청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 MBC, KBS, YTN, 국민일보 등 언론계 노동자들의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투쟁(2011), 유성기업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및 노동기본권 확보투쟁(2012~2017),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 노조인정 투쟁(2013) 등이었다.

②비정규직노동자 투쟁 :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투쟁은 2000년말 부터 광범한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요구내용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대부분이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원청회사와의 직접교섭과 정규직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인정 등이 잇따랐다. 이들 투쟁은 농성, 집회, 시위, 점거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분신 등의 극단적 투쟁방식에 호소하는 방식이 자주 나타나는 한편 외부와의 연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조돈문, 2011 : 143-148) 국가권력은 2006년 8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노동자대책을 강구하지만 그 내용은 원인 제거 보다는 차별완화와 같은 사후적인 내용에 그쳤다.

〈표 4〉 1997~2019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추이

연도별	노동조합			파업			
	조합수 (개)	조합원 (천명)	조직률 (%)	발생건수 (건)	참가자수 (천명)	노동손실일수 (천일)	지속일수 (일)
1997	5,733	1,484	11.2	78	44	444	22.7
1998	5,560	1,401	11.5	129	46	1,452	26.1
1999	5,637	1,480	11.8	198	92	1,366	19.2
2000	5,698	1,526	11.6	250	177	1,893	30.0
2001	6,150	1,568	11.8	235	38	1,083	31.7
2002	6,506	1,605	11.3	322	93	1,580	30.2
2003	6,257	1,550	11.0	320	137	1,298	29.0
2004	6,017	1,537	10.6	462	185	1,199	24.7
2005	5,971	1,506	10.3	287	118	848	48.6
2006	5,889	1,559	10.3	138	131	1,201	54.5
2007	5,099	1,688	10.8	115	93	536	33.6
2008	4,886	1,666	10.3	108	114	809	37.0
2009	4,689	1,640	10.0	121	81	627	27.9
2010	4,420	1,643	9.7	86	40	511	36.2
2011	5,120	1,720	9.9	65	33	429	30.6
2012	5,177	1,781	10.1	105	134	933	31.7
2013	5,305	1,848	10.3	72	113	638	16.5
2014	5,445	1,905	10.3	111	133	651	40.5
2015	5,794	1,939	10.0	105	77	447	21.9
2016	6,164	1,966	10.0	120	226	2,035	
2017	6,239	2,088	10.7	101		862	
2018	5,868	2,331	11.8	134		55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 각년도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처절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특히 고용의 안정을 요구했지만 제도적 약점을 빙자한 사용자들의 거부로 번번히 좌절되었고 그 때마다 노동자들은 극렬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은 비정규직철폐,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탄압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고공농성, 단식과 삭발, 노숙농성, 삼보일배 등 극한적이고 처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했고 오랜 고통에 지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빈발했다.

③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 : 1989년 5월 참교육 실현을 목표로 결성된 전교조는 1,527명이 해직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끝에 1994년 3월 문민정부하에서 현장투쟁을 위해 해직교사의 ‘조건부 복직’을 받아들이고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98년 2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드디어 99년 7월 1일 합법조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들은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공

노조)을 출범시켜 공무원노조법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2002년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식 출범한데 이어 11월에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틀간의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304명을 징계하고 그중 22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강경책을 행사했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4년 후인 2006년 1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금지됨으로써 단체교섭권 행사가 형해화되었고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결국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권의 탄압정책으로 인해 2015년 합법성을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다.

④임금인상·노동조건 개선투쟁 : 외환위기 이후 양보교섭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를 감수했던 노동조합들은 2000년부터 회복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산별노조와 대기업들이 주도했다. 산별노조들은 매년 다양한 교섭방식과 시기집중투쟁, 총파업 등을 동원하여 임금인상과 산별협약, 사용자단체 구성 등을 쟁취해냈다. 이명박정권 이래 산별교섭에 대해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를 해체하거나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산별교섭을 형해화하는데 집중했고 정권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개별기업의 투쟁은 공권력 투입,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발동 등 혹독한 제재로 많은 희생을 치루기도 했다. 이들 투쟁 과정에서 몇몇 노동조합들은 복수노조의 약점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파괴의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 등 법원 판결에 따라 제도 정책상에 긍정적 변화들이 기대되었으나 최종 판결의 지체 및 정권과 자본의 방관 및 지연작전으로 실제 효과는 크게 저감되었다.

⑤정책 제도개선 총파업 투쟁 : 민주노총은 1997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부결 이후인 1998년 5월말과 7월초에 IMF재협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이래 2009년 7월 22일까지 29회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였고 총 2,232개 노조, 2,556,731명이 참여했다.(김태현, 2012 : 37) 한국노총은 1999년 6월부터 2003년까지 총 8회의 총파업과 수차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했다.(한국노총, 2003 : 665) 노동조합의 투쟁 목표는 구조조정 중단,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노동유연화 반대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법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총파업은 중앙조직의 결정에 따라 수행된 나머지 현장의 사전 준비없이 진행되었다. 결국 총파업은 노동자 대중을 참여시키지 못했고 국민여론도 동원하지 못한채 현장의 피로도만 높이게 되었다.

민주노총과 산별조직들은 2013년 이후 10여 차례의 총파업으로 박근혜정권에 대항했다. 그 가운데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 21일간의 철도노조 파업과 2015년 11월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대회, 2016년 성과연봉제를 반대한 철도노조의 74일간의 파업 등은 제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이에 대해 정권은 대량 징계와 구속 등 강경한 탄압을 가해왔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은 연대전략을 구사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양대노총 위원장의 면담과 공동 대중집회, 그리고 공공부문과 제조업부문 노동조합의 공동대책 또는 투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그것이었다. 민주노총과 연대조직들은 촛불항쟁

에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제도 정책 개혁을 적극 요구하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개혁의 변질에 대항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맞섰다. 한국노총은 집권여당과 정책연합을 체결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제도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⑥극한투쟁의 빈발 : 노동조합의 저항투쟁에 대해 1998-2002년 공권력 투입건수는 23회나 되었고 자본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0-2003년에 72개 회사에 641억 1,800만원, 가압류 청구액은 63개 회사에 1,236억 3,300만원에 이르렀다.(이주희, 2004.1 : 61) 자본측의 횡포는 2014년 3월 17개사 1691억 6천만원, 2016년 8월 57개사 1521억여원에 이르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손해배상청구액은 24개 업체에 65건, 1867억원에 이르렀으며 가압류액은 180억원이나 되었다(손잡고, 2017. 9.1 기자회견문). 이러한 잔혹한 탄압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항하였다. 그 숫자는 1998~2007년에 12명에 이르렀고 한국노총에서도 2005년 6월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지원중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노총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2009~2012년 사이에 5명, 2015~2016년에 6명의 노동자가 노동탄압에 항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졌고 특히 2013년에는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28번째 죽음에 이어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최중범 노동자의 죽음까지 스스로 목숨을 버린 노동자는 19명에 이르렀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 : 14-15).

이와 아울러 2008년 이후 노동자들이 택한 저항투쟁 방식은 고공농성이었다. 이 투쟁은 2011년 한진중공업노조의 김진숙 지도위원(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타워크레인 농성으로부터 2013년 11건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151일에서 296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굴뚝, 철탑, 종탑 등에서 처절한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후 최근까지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철폐, 노동탄압의 중단, 노동조건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폭염과 혹한에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벌였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단식 삭발투쟁, 노숙투쟁, 3보일배 시위, 장거리 도보시위 등을 감행했다. 이들 극한투쟁은 법률적 제도적으로 조직화하기 어렵고 합법 파업 등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없는 현실조건의 반영이었다.

⑦노동운동 내부의 혼란과 시련 :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잦은 지도부 교체와 정파간 대립 갈등 등으로 거듭 시련을 겪었다. 게다가 조직내부에서 비리가 빈발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더하여 2004년초 사회적 교섭여부를 둘러싸고 대의원대회 단상이 점거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험악한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이 사태는 조합민주주의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노총 내부에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정파간의 갈등이 노골화하여 폭발한 것이었다. 조직의 혼란상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였다. 각종 비리는 예산 유용 및 횡령, 특혜와 뇌물 수취, 부정 취업, 회사와의 담합 등에서 성희롱사건 까지 전국조직에서부터 단위노조에 걸쳐 이루어져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잦은 사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3) 노동운동 혁신의 시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 나머지 극도의 침체양상을 보였고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팽배했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은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위기상황은 치유되기보다는 갈수록 더욱 심화됐다.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둘러싸고 구조적인 한계나 노동운동의 원리에 근거한 분석도 나타났다. 노동운동의 중심축인 노동조합의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구조적인 것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성은 항상 갖고 있다는 주장,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연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 노동조합이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휩쓸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점에서 자주성, 민주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침체 양상이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원리가 노동현장에서부터 무너짐으로써 더욱 가중됐다고 보고 있었다. 민주성은 각종 정파들 사이의 갈등과 패권주의의 이전투구 속에 실종됐고, 이로 인해 현장 조합원의 불신과 냉소는 갈수록 심화 확대됐다. 투쟁성에 대한 지적은 당위적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 성격이 짙고 판에 박은 듯 되풀이되는 집회와 시위가 조합원들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지치게 만들어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일상적 노무관리 체계 아래서 노조간부들과 대의원들은 담합관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자주성은 약화되거나 상실됐고, 자주성의 상실은 자본이 용납하지 않은 연대투쟁, 정치투쟁 참가를 꺼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기업테두리 안에 가둠으로써 운동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대성은 정규직노조원들이 고용안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를 배제하는 데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정규직 내에서도 자기 이해를 앞세워 상생을 위한 배치전환이나 일감나누기마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김태현, 2012: 18~19)

한국노총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상황 변화 앞에서 총체적인 위기로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운동이 노조간부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한 자주성 및 도덕성의 위기, 조합민주주의 관료주의화와 민주적 집중의 한계로 인한 민주성의 위기, 노조조직물 하락과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에 의한 대표성의 위기, 남성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과 노동자 간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연대성의 위기, 현장조직 동원력 및 총파업 위력의 약화로 인한 운동성의 위기, 이념 대안 전략의 부재로 나타난 정체성의 위기, 인적자원의 이탈과 부족에 의한 재생산의 위기 등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었다(한국노총, 2006: 60~71)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진영은 심화한 운동의 침체 내지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조직운동의 혁신을 도모했다. 그 중심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이른바 ‘양날개’ 전략과 조직운영의 혁신이었다.

- ①산별노조 건설운동 : 1997년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방침 제출 이후 1998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2001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한국노총 진영에서는 전국금융노조연맹이 2000년 3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으로 재편됐다. 이후 이어진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결과로 1998년 14만

4천여명(10.3%)에 불과했던 초기업단위 조합원수는 2010년말 현재 88만 8천여명(54.1%)로 급증했고 2018년에는 134만 9천여명(57.9%)에 이르렀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는 전체 조합원의 87.6%가 30여 개 산업·업종별 조직에 분포돼 있었다.

산별노조들은 단체교섭권의 중앙 이양, 조직 자원의 집중·활용, 사용자 단체의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당초의 계획에 비해 부진했으며 해당산업 노동자 대부분을 포용하지 못했고 기업별 관성을 혁파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2012년 이후에는 보수정권의 비호 아래 사용자단체의 해체나 사용자들의 산업별교섭의 기피로 어려움을 겪었다.

②노동자 정치세력화 :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29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출범시켰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4월 총선거에서 1.2%의 정당득표율을 확보한지 4년만인 2004년 4월 총선거에서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리고 2012년 4월 총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11.4%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과 2012년 부정선거문제로 내홍을 겪은 나머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결국 통합진보당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 당하였다. 진보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2016년 정의당으로 결집하여 의회진출을 이루었으나 전체 통합을 못이룬채 민중당, 노동당, 변혁사회당, 녹색당 등으로 분산되었다. 이후 진보진영에서 활동했던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민주개혁을 표방한 보수정당에 투신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20년 총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거대 보수양당의 왜곡과 변질로 참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이 ‘노동자 중심성과 주도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정책연대와 독자정당 건설이라는 두 경로로 전개되었다. 정책연대는 1997년에 새정치국민회의, 2002-2012년 한나라당, 2013년 이후 민주당과 이루어졌다. 이 사이에 한국노총은 2002년 11월 한국사회민주당(이후 녹색사민당으로 개명)을 결성하여 2004년 총선거에 나섰으나 0.5% 득표에 그쳐 해산되고 말았다. 한편 노동조합의 사회세력화는 민주노총이 민중운동진영의 중심축으로서 전선운동의 확대 강화를 추진한데 비해 한국노총은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확충하고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중도적 시민단체영역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③노동운동 이념의 재정립 :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새세기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양대노총은 새로운 운동이념과 노선 또는 운동기조의 정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00년 1월 각각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와 ‘21세기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의 ‘위원회’는 1년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노동운동발전전략보고서 요지’를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에 자료로 게재했다. 민주노총은 이 보고서에서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높은 가치들을 실현하는” ‘평등사회’라고 규정했다(민주노총, 2000.10). 그리고 평등사회의 원리와 평등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정치 연대 통일전략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조직발전 전략과 함께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대의

원대회나 현장에서의 토의를 거쳐 채택되지 못한채 자료로만 남겨졌다. 한국노총은 2001년 인본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반신자유주의적 연대’를 전략개념으로 하는 운동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2006년에는 ‘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동조합주의’를 채택했고 2007년에는 ‘참여와 연대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운동이념으로 내세웠다(한국노총, 2006:24-29).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혁 보다는 사회구조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운동기조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이 양대노총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닌 운동이념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념은 대중적 토론과 검증을 거쳐 정립되거나 구체적 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곧 밑으로부터의 실천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조직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노선이라기 보다는 상층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로부터 ‘고안된 담론’(invented discourse)이라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었다(박준식, 2007 : 25). 또한 민주노총은 2001년 이후 운동이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과 7개항의 강령, 20개항의 기본과제로 대신하고 있었다.

④조직운영의 혁신 : 양대노총과 산업별 지역별 노조들은 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동의 현상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민주노총은 2009년 이후 총파업을 자제하고 내부 조직 혁신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은 2009년 3월 노동운동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 노총’(2008)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2010)을 다짐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직혁신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2007년의 임원직선제 결정이었다. 직선제란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중앙과 현장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에서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을 주체로 나서게 하고 조직을 바닥에서부터 재조직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극에 달한 정파간의 갈등과 선거 부작용을 막자는 것도 한 이유였다. 임원직선제는 노동조합 조직원리나 역할 등과 관련하여 반론이 분분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및 취합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2009년과 2012년에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가 2014년과 2017년의 12월 임원 직선제 투표를 실시한 끝에 한상균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 중심의 집행부를 선출했다.

직선제 1기 집행부는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곧바로 총파업 조직화에 나섰다. 그러나 2015년 4월과 6~7월, 9월 총파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에 이르러 박근혜정권 등장 후 최대규모의 대중집회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집회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지도력은 급속도로 약화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2016년 총선거 정치방침의 혼란, 8월 정책대의원대회의 파행을 겪었던데 비해 가을에 최대규모, 최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투쟁이 위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거대한 촛불항쟁의 파고 속에서 11월 30일 총파업을 단행했고 정권퇴진투쟁의 한 중심 축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복수의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또 다시 혼선을 빚었고 6월 총파업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는 했으나 위력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문재인 촛불정부의 우호적인 새로운 조건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를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자본을

배경으로 한 수구보수세력의 저항으로 혼란에 직면한 문재인정부에 저항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총파업투쟁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전술이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직선제 선택 이후에도 조직혁신방안의 목표로 삼았던 조합원 직접민주주의를 증진시키거나 조직원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 집행부의 정세판단과 총파업 등 전략수립은 대중적 토론을 거쳐 대중의 주체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결정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아울러 연이은 정치방침이나 정책참여 결정의 파행, 혼란 등은 지도력 확립 필요성을 다시한번 조직혁신의 과제로 확인시켰다.

8. 결론 : 노동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이후 50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궤적을 압축해서 살펴보았다. 노동자들은, 침체와 고양, 패배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노동운동사의 합법칙성을 확인하면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최근 20여년의 상황은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할 만큼 침체와 시련의 시기이었다. 다행히 최근 노동현장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 왔다. 예컨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 판결,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 등 제도 정책상에 변화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수의 양적 증가나 조직률의 유지 또는 상승, 초기업단위 노조비중의 증가, 신규조직화의 진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단체교섭의 진전, 희망버스와 같은 시민 사회운동세력의 지원, 노동쟁의의 증가와 투쟁의 완강성, 양대노총의 연대 지속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노동운동의 위기와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며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스스로 지향하는 사람다운 세상, 전태일이 절규했던 인간선언을 어디까지 실현하였는지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제도 정책의 개선은 자본가들의 완강한 거부로 쉽사리 발전되지 못했다. 또한 노동운동상의 변화한 현상들은 운동정세를 변화시키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규정하는 조직체계는 초기업노조의 증가라는 통계상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별 노조체계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노동운동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여 여전히 방어적 수세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일 것이다.

촛불항쟁의 민중적 요구를 받아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 하에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례에 드문 노동존중의 실현을 내세우고 심지어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침체를 빌미로 한 반평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확장이라는 자본의 위협적인 공세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운동이 기나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기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는 실천되는 경우도 있다.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기조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변혁적 이념 정립과 현장 조직력 복원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있다. 지도력의 확립, 조직간 소통과 위상 역할의 재정립, 운영방식 사업관행의 개혁, 선거제도 상의 승자독식구조의 극복도 제시되어 왔다.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사

회연대노조운동으로 가야 하고 끼리끼리 제 이익챙기기로 변질된 정파운동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그런 한편에 기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운동은 더 이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상황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운동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희망버스운동과 같이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도모하는 예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운동이 비슷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일은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 노동운동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제대로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올바른 전략수립과 운동이념 또는 기조의 정확한 설정은 운동의 방향타로서 조직 투쟁 운영 등 운동의 기본적 요소들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직단위별로 광범한 현장토론 대중토의 등을 통해 전략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천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대중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여 보다 확고한 발전적 전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지난 날 노동운동의 ‘양날개 전략’으로 지칭되었던 산별노조체제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유효한 조직적 전략목표다. 산별노조체제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확대, 이념 노선의 확립, 전반적인 사회개혁과 정책 제도의 개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유력한 조직적 경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산별노조운동의 경험을 엄밀히 분석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산별노조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 역시 광범한 대중토론을 통해 과거 역사를 평가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진보세력들을 통합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은 확고한 단일의 진보정당을 갈망하고 있다”는 지적은 많은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물론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위한 조직적 과제 해결, 진보정당 내부의 정파간 갈등과 투쟁의 해소, 정당활동과 대중투쟁의 결합, 사회적 정치세력화 확충 강화 등의 기본방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및 이주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조직화 결단도 중요한 숙제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전략적 조직화 추진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노총은 최근 조직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또 계획적인 조직화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삼성그룹 노동자의 조직화 경험에서 시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조직에 대한 배척이나 이로 인한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정책 제도개혁투쟁의 중요성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자본의 경영합리화 위력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을 향한 도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책 제도개혁투쟁의 성격을 정리한 토대 위에서 정책참가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참가방식의 모색과 투쟁의 병행,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 관성으로 흐른 투쟁노선의 재정비와 위로부터의 간부중심 결정, 내리쬘기식 투쟁, 관료주의적 운영과 패권주의적 분파분쟁 등 비민주적 조직운영의 혁신, 조직강화와 교육 등 노동조합 일상활동의 확충 등도 운동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과업이며 특히 광범한 노동대중의 현장토론과 교육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의 압박과 운동의 침체에 눌려 있는 간부들의 용기와 자세를 가다듬는 일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구속노동자후원회(2012), 『구속노동자』 73호
- 국회환경노동위원회(2013), 『2013 노사관계평가와 법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 13-4
-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1, 도서출판 당대
- 김금수 (1995),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울 과학과 사상사
- (2004), 『한국노동운동사-민주화이행기의 노동운동』, 서울 지식마당
- 김유선 (1998),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2000),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진 (2012),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11/12월호
- 김태현 (2012가),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그 의미와 과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현재적 의미와 과제』
- 김태현 (2012나),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 87년 노동자대투쟁기념 심포지엄 종합토론회 자료집』
- 노동부(1988),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평가보고서』
- 노진귀(2007), 『8.15 해방이후의 한국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민주노총(1997-2012), 『사업보고』
- (2009),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평가토론회 자료집』
- (2011), 『산별노조시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 (2012), 「산별노조운동 평가와 제2산별노조 발전전략」, 민주노총,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기념심포지움 의제별 토론회자료 5』
- 박준식 (2007),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민주화시대의 노조운동과 미래의 선택」, 한국노총, 『한국노총토론회 자료집』
- 이원보 (2004), 『한국노동운동사⑤-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지식마당
- (2013), 『한국노동운동사-100년의 기록』(증보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7), 「'87노동자대투쟁 30주년, 노동운동의 현주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10주년 기념학술토론회 :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
- 이주희 (2004), 「노사관계 2003년 평가와 2004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1월호
- 전노대 (1993), 『사업보고』
- 전태일기념관립준비위원회(1983),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돌베개
- 조돈문 (2011),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 조영래 (2009), 『전태일평전』, 아름다운전태일
- 한국노동연구원(2019), 『KLI노동통계』
- 한국노총(1998), 『1996~97, 그해 겨울 -총파업에서 정책연합으로』
- 한국노총(2006), 『다시 힘찬 발걸음! 한국노총의 운동이념, 운동기조, 발전전략』
- (2007). 『사업보고』

전태일 항거 50주년, 민주노총은 전태일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²⁾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1.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의 뿌리

1) 2020년의 의미

- 2020년은 전태일열사 50주기이자,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음. 한편으로, 실패한 역사로 남아있는 민주노동당의 창당 20주년을 맞는 해임.
- 전태일정신은 민주노총의 역사적 뿌리이자 사상이념적 지향의 근간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에서 지역·업종별로 들불처럼 타오른 민주노조운동에 힘입어, 1988년 11월 전태일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해방정국 이후 최초로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주노조 전국중앙조직 건설의 필요성('노총민주화론'후퇴)이 제기됨.
- 이후,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을 토대로, ILO전국공대위(1992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1993년)를 거쳐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창립되기에 이름(창립 당시 46만명). 전노협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이어져온 지난 30여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이념노선(자주성·민주성·투쟁성)은 전태일정신의 계승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2) 전태일 분신 항거 당시의 시대상황과 민주노조운동 뿌리

2) 본 토론문 내용은 민주노총의 입장과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견해임.

- 전태일 분신 항거는, 억압과 차별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잡았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맹위를 떨치며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시행, 노동자 연대를 위한 노동운동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후진국 시절의 몸부림이었음.
- △살인적인 노동 환경 △군대(병영) 수준의 노동 통제 △정치권력과 자본에 포섭된 노동조합 운동의 조건 속에 전태일은 항거했고, 전태일의 항거 정신은 이후 70년대의 억압체제(유신정권)에서 청계피복 · 원풍모방 · 동일방직 · 반도상사 · YH무역 등의 치절한 투쟁으로 이어지며, 해방정국 이후 20여년 이상 거세되었던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뿌리로 자리잡음.
- 1980년대 전반기까지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열린 공간을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이 곧바로 계승하면서 사상이념적, 조직적 투쟁의 성과로서 오늘의 민주노총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임. 발제문(이원보 전 이사장님)에서 전반적으로 적시한 노동운동 역사(성과 및 한계)는 대부분 민주노총 운동 역사를 반영하고 있음.
- 전노협 건설 당시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혁 전망(억압 · 굴종의 세상 → 해방 · 평등의 세상)을 제시했고, 이를 계승한 민주노총은 자주 · 민주 · 통일의 변혁 전망, 산별노조운동(기업별 체제 극복) 및 독자 정치세력화(보수정치 극복)의 운동 전략으로 이후 25년의 역사를 밝아옴.

2. 현재의 민주노조운동 상태 및 민주노총의 운동전략

1) 2020년 현재의 경제 · 노동 · 사회의 조건

- 전태일 항거 50주기가 흐른 2020년 현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올라있는 우리나라는 GDP(286\$ → 27,200\$), 노동자수(850만 → 2,500만), 조직 노동자수(47만 → 250만) 등에서 엄청난 양적 성장을 했고, 노동소득분배율(40% → 60%)도 외견상 상당 수준 개선되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제 · 노동 · 사회의 조건은 그 양적 성장 수준에 걸맞는 질적 발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경제구조는 전태일 항거 당시의 재벌 독점구조가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 속의 후진적 사회 지표(자살율 · 노인빈곤율 1위, 소득격차 확대)는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자본 · 이윤에 종속된 후진적 노동체제 역시 쉽사리 변화하고 있지 않음.
- 전태일 항거 이후 지난 50년간 노동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열사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면서 후진적 노동체제에 저항을 계속해옴.
-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현실은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2018년 기준으로 1차 노동시장(고임금, 복지 양호한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 · 금융기관 정규직으로 24.7%)과 2차 노동시장(저임금, 복지 미흡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 · 특수고용노동자 76.6%)간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배규식, 2019)에서,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제조업은 50.6%, 전산업은 56.9%에 불과한 상황임(황선웅, 2020). 게다가, 중소기업 · 특수고용노동자 490만명

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이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는 가운데, 디지털화 및 혁신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플랫폼노동 등 불안전 노동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 노조 조직률 간에도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55.1%에 달하고 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를 점하면서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처한 30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함으로써, 노조 조직률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태일 항거 당시에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시행, 노동자 연대를 위한 노동운동이 이제는 분명히 자리잡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및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전태일정신이 시대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2) 민주노조운동의 상태 및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

- 전태일정신을 역사적 뿌리로 가진 민주노총은 과연 2020년 현재 전태일의 분신 항거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해 냉정한 성찰이 필요할 듯함.
- 2015년 이후 민주노총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 및 2016~17년의 촛불항쟁의 전국적 확산에 힘입어, 2018년 노조 조직 통계를 기준으로 민주노총은 출범 23년만에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하는 성과를 거두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 있음. 그러나, 내재적 관점에서 민주노총을 성찰해보면 여러 한계 요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이념노선(자주성·민주성·투쟁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때 시기마다 제출해온 운동전략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은 그런대로 견지되고 있으나, 민주적 운영 및 투쟁 흐름은 분명한 한계 지점이 존재하고 있음.
- 민주성 측면에서, 20여년 이상 계속되는 혁신 논의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정파운동의 벽 앞에 민주집중적 의사결정이나 직선제 취지에 걸맞는 대중적 사업방식이 조직 내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교섭과 투쟁 전략을 놓고 정작 직선으로 선출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도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음.
- 투쟁성 측면에서, 기업 단위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전투적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산업·업종·부문별 연대나 전체 노동자계급 연대 전망이 담보되지 못 한 채 계속되는 총파업투쟁 전술이 남발(소위 ‘뺑파업’)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의식은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음.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지난 20년간 민주노총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음.
- 기업 단위 정규직 중심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의제가 당면 실천 과제에서 빗겨나 있는 가운데,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투쟁은 고립되는 경향이 높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연대운동으로 접근해야 할 여성·청년부문 노동운동은 조직내에서 제대로 된 운동방향조차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민주노총이 주요한 운동 전략으로 제시한 산별노조운동 및 독자 정치세력화는 아직도 전체 대중운동 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산별노조운동은 외견상 금속·공공·보건·사무 등에서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별 한계(기업임금·복지) 극복 및 노동계급운동 이념·노선의 발전으로 자리잡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독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거듭된 실패 속에 최근 2020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전반의 후퇴 현실을 체감할 수밖에 없음.
- 민주노총은 △2000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통한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 전략 △2010년 <노동운동혁신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산별운동'전략 수립 △ 2018년 정책대대를 통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정치·조직화전략 등 굵직굵직한 조직 혁신 및 운동 전략에 대한 기획을 계속했지만, 조직내 동의 및 대중적 실천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 실천(사회연대운동전략)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촛불항쟁의 시대정신(불공정·불평등 극복)을 한국사회 변혁의 계기로 자리잡도록 민주노총의 중심 역할이 필요함이 제기되었으나, 조직 내부에서 과거 관성에 묶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
-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운동전략의 대중적 실천이 계속 지체되면서, 불평등·양극화 시대를 극복하는 노동계급 연대운동에 대한 전략도 계속 구두선(口頭禪)에 머물고 있고, 출범 당시 강령으로 한국사회의 변혁 전망(자주-민주-통일)을 설정해왔지만 △재벌독점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변혁운동 전망을 대중운동의 공간으로 이끌어내고 있지 못함.

3. 결론 : 2020년의 전태일정신 소환

- 50년전 노동자 연대를 위한 노동운동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현재에도 충분히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노총은 목도하고 있는 것임.
- 50년 전에도, 지금도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음.
-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상황도 아직은 질적으로 크게 되지 않음. 물론, 군사 독재 하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못했던 50년 전의 상황은 외견상 개선되었으나, 노동체제를 둘러싼 경제사회 구조는 50년전(병영국가)에 비해 현재도(시장국가) 질적으로 발전되지 못한채 주요 모순(분단-재벌독점-양극화)은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후진적 노동체제 및 경제사회 모순구조는 결국 전태일정신을 역사적 뿌리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노조운동의 변혁 전망 및 시대정신을 운동전략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데 한계를 보인 민주노총에게 가장 큰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즉, 2020년 오늘의 전태일정신은 노동시장 양극화 및 후진적 노동 체제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있는 운동전략 설정과, 이를 근거로 한 전조직적 실천일 것임.

전태일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노동조합의 과제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1. 노동조합운동과 전태일 정신의 현재적 의미

- 전태일의 분신 항거 이후 50년간 노동운동의 궤적을 통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향후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전태일의 분신 항거가 있었던 1970년과 비교하여 2020년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구성과 노동환경 등 노동의 세계는 크게 변화했음. 그 동안 노동조합운동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발제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노조체계 하의 낮은 단체협약 적용률, 그리고 남성,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여성,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절대 다수가 소외되어 있는 조직구조는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자주성, 민주성, 대표성, 연대성 등 여러 부문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조직노동의 측면에서 전태일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대표성과 연대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노동조합 조직률이 12.3%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 조합원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대다수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1970년 조직노동은 청년노동자 전태일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했던 전태일은 재단보조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 등 부당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해고가 되었고, 결국 분신항거하기에 이르렀음.
 -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간 고용·임금·복지 등에 있어 격차가 큰 상황임. 노동조합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별 교섭체계 하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충격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노동자 내부의 큰 격차는 노동자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조차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2. 노동시장의 격차 현황

-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 고용형태 · 성별 등에 따라 고용 및 임금, 사회복지 등에 있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상층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과 정책은 전통적 노사관계와 기업별 교섭에 기초하여 기존 취업자와 조합원의 현재 임금인상 및 고용유지에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2019년 기준 전체 노조조직률은 12.3%이고, 300명 이상 기업이 33.5%인데 비해 300명 미만은 9.2%에 불과하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음.
- 기업규모별 상대임금을 살펴보면, 300명 이상 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405만원)을 100으로 했을 때 300명 미만 기업 노동자의 임금(243만원)은 60.2%로 나타남.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큼(〈표 1〉 참조).

〈표 1〉 기업규모별 월평균임금과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규모

(단위: 만원, %, 명)

구분	월평균임금		노조조직률	조합원	
	액수	300인 이상 대비 임금비		규모	비율
1-4명	169.9	42.0	1.3	47,461	1.9
5-9명	216.8	53.6	2.4	87,775	3.5
10-29명	250.8	62.0	7.4	340,563	13.5
30-99명	289.3	71.5	16.9	658,178	26.0
100-299명	324.8	80.3	25.3	503,972	19.9
300명 이상	404.6	100.0	33.5	892,554	35.3
300명 미만	243.4	60.2	9.2	1,637,948	64.7
전체	264.3	65.3	12.3	2,530,50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9.8 원자료

- 고용형태별 노조조직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19.3%(232만명)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5%(21만명)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91.7%가 정규직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월 평균임금이 비정규직(171만원)은 정규직(331만원)의 51.8%에 불과함. 그리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가입률의 절반 이하 수준임(〈표 2〉 참조).

〈표 2〉 정규직 · 비정규직의 임금 · 사회보험 · 노조조직률 현황

(단위: 만원, %, 명)

구분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합	
	월 평균임금	격차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조합원 수	조직률
정규직	331	100.0	94.9	98.8	84.0	2,320	19.3
비정규직	171	51.8	33.8	43.3	40.2	210	2.5
전체	264	79.9	69.5	75.7	65.8	2,530	1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9.8 원자료

- 성별 노조조직률을 살펴보면, 남성 14.8%(169만명), 여성 9.2%(85만명)이고, 조합원의 66.9%가 남성임. 월 평균임금이 여성(202만원)은 남성(315만원)의 64.1%로 나타남. OECD에서 성별 임금격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임.
- 모든 규모에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조합원의 월 평균임금이 높고, 임금격차가 적음(〈표 3〉 참조).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조합원들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단체교섭을 적용받지 못하는 동일한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노조의 영향력이 점차 제한되고 있지만, 노조는 여전히 사업장에서 ‘정의의 칼’로서 역할하고 있음. 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보다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

〈표 3〉 기업규모별·조합원 여부별 월평균임금

(단위: 만원, %, 명)

구분	임금수준		300인 이상 대비 임금비		비조합원/ 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	
1-4명	168.4	286.10	41.9	69.9	58.9
5-9명	213.6	347.92	53.1	85.0	61.4
10-29명	243.7	339.51	60.6	82.9	71.8
30-99명	280.1	334.70	69.7	81.7	83.7
100-299명	320.1	338.45	79.6	82.7	94.6
300명 이상	402.1	409.48	100.0	100.0	98.2
300명 미만	234.1	336.2	58.2	82.1	69.6
전체	250.5	362.0	62.3	88.4	6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9.8 원자료

3.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시기 전태일정신과 노동조합의 과제

- 2020년 조직노동이 전태일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주로 남성,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미조직 취약노동계층과 연대하고 조직화하여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경제 · 사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노동소득의 증대, 자본소득 과세의 강화 등을 통한 노동과 자본 간의 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연결되어 있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제 및 교섭구조 하에서 이의 축소를 위해 노사관계가 중요하며 노동조합의 역할이 요구됨.
- 노동자간 격차 축소를 위해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기업단위의 이해를 뛰어 취약계층의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는 산별노조 등 초기기업별 노조와 교섭 체계를 통한 산업·업종 등 초기기업단위의 교섭과 협의, 조정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고용 및 임금, 복지 등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국차원의 제도개선 노력뿐 아니라 일터 현장인 기업(사업장), 산업,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충격이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되고 있고, 이들 대다수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넘어 연대하고 이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는 조직노동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함. 이 위기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탄탄하며 공정한 경제·사회구조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참여해야 할 것임.

-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외국의 유행병위기 이후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재난 이후 예외없이 불평등이 증가하였음. 이는 재난시기 취약노동계층의 대다수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고, 이천물류 창고 산업재해와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이유로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 기업별 노조 및 교섭 체계 하에서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응하여왔음. 이는 대기업 조직부문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에 기여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비정규직과 하청 중소기업 등 외부에 전가된 측면이 존재함.
- 위기의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위기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며, 위기극복의 혜택은 소수 대기업 등 자본과 고소득층에게 돌아갔음. 노동자와 자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노동자간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더 나은 고용 및 소득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연대와 타협에 기초하여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 및 소득연대, 세금 등을 통한 복지연대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노동조합은 노동자간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제도로서 역할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조직노동은 무엇보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등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소득 및 일자리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시장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하한을 올리는 최저

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노력과 함께 기업 및 산업차원에서 연대임금을 실천하는 노동조합들이 증가하고 있음. 정액임금인상, 정규직보다 높게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 조정,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복지 지원을 위한 기업, 산업, 지역 차원에서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의 연대기금 조성, 공제조합 설립, 원하청 노동자 간 상생협약 등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연대, 기간제, 파견노동자와 하청기업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연대가 요구됨.

- 노동조합은 두터운 사회안전망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통합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요구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 및 소득이 안정적인 대기업, 공공부문(공무원·공기업·교사·교수 등) 정규직의 보험료 또는 세금에 대한 기여 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 연대가 필요함.

50여년전 전태일 열사가 바라본 봉제노동자, 50년 후에 봉제노동자가 바라본 전태일 열사

이정기 서울봉제인지회 지회장

50여년 전 전태일 열사가 봉제노동자를 바라보고 품었던 어린 여공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키려 품었던 꿈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열사와 같은 시대를 하고 미상을 하며 재단사였던 봉제노동자가 열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볼까 합니다.

당시 전태일 열사도 여느 봉제노동자와 같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싱사가 되어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좀더 편안하게 돌보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어린 시대 여공들을 보며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인간사랑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싱사가 되어 돈벌이에 몰두할 수 있었음에도 미싱사 월급보다 훨씬 적은 재단보조가 되어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재단사 위치가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재단사가 된 전태일 열사.

어려운 환경속에서 보고 느끼고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이 재단사가 되어 더 불붙어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열사의 정신을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재단사 위치는 봉제 노동자의 꼭대기에 위치한 관리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음에도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초심을 잃지 않는 행동이 인간사랑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34년전 제가 몸담았을 당시 봉제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떠했을지 청계피복합법성 농성 당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988년 온갖 이슈가 88올림픽으로 쏠려있을 때 3월 25일 안양의 그린힐이라는 무허가(당시 대다수 봉제공장은 무허가였음) 봉제공장에서 불이나 22명의 어린 봉제여공들이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죽음으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단속에 두려워 무허가를 숨기려고 공장 안에 있던 기숙사 밖에서 퇴근하며 철문을 잠가 불이 나도 대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공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많은 여공들이 화장실 창살 아래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공들이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여공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기숙사 밖에서 문을 잠근 비인간적인 행위로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어린 만 13세 어린 여공 장례식에서 생애 처음으로

평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이전에 물류창고 화재로 수 십명의 노동자가 죽고 2017년 기준으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800명이 훌쩍 넘고 여기에 영세 사업장은 산재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들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사내 하청 일용직 소위 밑바닥 노동자들의 희생이 대다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준수되고 있는가?

노동자는 일요일에 쉬고 있는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조합 할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가?

붕어빵을 나누는 연대와 동지애는 노동운동 속에 얼마나 배어있는가?

이 모든 의문과 물음에 전 단호하게 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서울 봉제 노동자 포함 재화 주얼리 인세 40만 서울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며 노동운동에 전태일의 인간사랑 실천정신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산을 팔며 느꼈던 모멸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받았던 평등한 세상을 원했던 정신이 전태일 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졌지만 대공장위주의 노동운동은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400만이 넘는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에도 계급이 존재하고 경비 노동자, 사내하청, 봉제, 재화, 라이더 등 각종 비정규직 영세 종사자들이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제가 봉제현장을 다니다보면 소위 운동권에 대한 반감을 격하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노동운동도 나와 상관없는 기득권이라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전태일 열사 이후 수많은 전태일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불안한 고용 장시간노동 저임금 이 모든 환경을 집약해놓은 대표적인 봉제노동자가 있습니다 50여년전 이들을 보고 품었던 인간사랑 정신운동에 전태일 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에 전태일 정신이란 교섭 상대조차 없는 고통 받고 소외 받은 400만이 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고 나누는데서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지키는 운동을 버리고 사회에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대변하고 조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전태일이 배달을 했다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열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산자들의 이야기다. 전태일정신은 지금 처해있는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계승된다. 전태일 열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고,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있다. ‘열사정신’과 ‘계승’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다.

전태일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취업을 하고 세상에 눈을 뜨고, 동료들과 함께 소모임을 만들고 집회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속고, 절망에 빠지고, 다시 살기위한 결단을 하는 과정자체다. 공교롭게도 라이더유니온을 처음 만들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전태일’과 ‘분신하지마라’였다. 노동운동하면 전태일과 ‘분신’을 떠올리는 그들에게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 이 고민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살아있는 동료로서의 전태일을 소환하고 싶다.

1. 자본의 변화 - 전태일과 플랫폼자본의 시대

1) 전태일시대의 자본

- : 인력의 모집: 전봇대 / 농촌에서 올라온 도시빈민, 여성 노동자
- : 업무환경: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대량생산, 환풍기도 없는 공장 집단적 노동
- : 생산수단 소유하면 소사장이 될 수 있음.
- : 사장의 지휘감독
- : 사장 - 악덕사장

2) 플랫폼자본의 시대

- : 인력의 모집: 플랫폼 / 도시의 실업자들 / 여가시간
- : 업무환경: 시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그때그때 필요한 노동, 디지털세계와 개별적 노동
- : 생산수단 소유해야 로그인할 수 있음.
- : 자기착취
- : 사장 - 청바지와 흰티를 입은 혁신가, 혁신가와 계약을 맺은 동네의 악덕사장

2. 노동운동, 변화의 모색

1) 전태일 시대

- : 배경 - 군사정권, 민주노총의 부재. 국가주도 성장, 반공이데올로기.
- : 모임 - 야유회, 바보회, 야학
- : 연대 - 풀빵연대의 정신, 노학연대
- : 법과 제도 - 근로기준법준수, 노동청의 근로감독, 노조설립이 과제

2) 플랫폼 시대

- : 배경 - 민주화정권, 양대 노총의 성장, 4차 산업혁명, 혁신이데올로기
- : 모임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밴드, 병개
- : 연대 - 랜선 연대, 학은 없음.
- : 법과 제도 - 근로기준법의 형해화, 국가의 방조, 노조가 가능한가부터 과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의 화형식을 진행했으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화형시키려고 함.

3. 저항의 수단: 분신과 오토바이 행진

1. 분신, 살기 위한 죽음 - 지식인들을 자극. 이후 조직노동운동의 밑알.
2. 오토바이행진과 퍼포먼스 - 대중들을 자극. 미디어 전략. 노동운동의 스타트업

마치며: 변화하는 세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태일이 있다면, 내면의 감정.

자본주의의 모습도, 공장의 모습도, 노동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당연히도 노동운동의 모습도 변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가 홀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인간적 고뇌들은 시대가 변하고 오늘날 새롭게 노동조합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태일 열사가 위인전이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직장동료와 만나 노조이야기를 꺼낼려는 사람,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1인 시위 피켓을 들려는 사람의 두근거림 속에 살아있기를 바란다.

전태일 50주기! 노동운동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김은선 사단법인 희망씨 상임이사

1. 사단법인 희망씨 소개

1) 희망씨 설립

사단법인 희망씨는 노동자중심의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3일 설립 되었다. 희망씨는 설립초기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국내위기 아동지원사업 네팔아동지원사업 노동인권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씨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변화를 꿈꾸었던 희망연대노동조합이 2011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두 번째 큰 실험이었다.

2) 희망씨 사업 내용

사단법인 희망씨(이하 희망씨)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나눔사업, 소통사업, 인권사업을 주요 줄기로 진행하고 있다. 나눔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희망울타리’, ‘네팔아동학교보내기’,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진행하는 ‘과일나눔’, ‘집수리’사업이 있다. 희망울타리사업은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노동자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교복지원(신입학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리대 지원(장애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네팔아동학교보내기 사업은 ‘포카라지역의 학교 짓기 및 운영지원’, ‘뽕뽕지역의 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을 위한 저금통 모금사업’, ‘뽕뽕지역 아동들의 자매

결연, '네팔나눔연대여행'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통사업으로는 가족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가족캠프', '아버지학교'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권사업으로는 '지역사회노동인권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역단위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과정'등을 진행하고 있다.



5월 23일 진행된 광진 집수리



2019년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촉구 1인시위



희망연대노조와 희망씨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네팔 포카라학교의 교실



코로나 상황으로 기아의 위기에 놓인 뽀삿지역 쿠스마시에서
직접 요청을 해서, 쌀 25kg 115 가마니 긴급지원

2. 노동운동의 현재 : 불편한 진실, 짚고 넘어가야 할 현재

1) 노동조합의 실리주의 조합주의 경향 : 노동자간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 시대, 시대 변화에 둔감하였고 자본의 분할 지배 통제 전략에 대응하지 못했다. 대공장 · 정규직 · 남성 · 조직노동자 중심의 관성적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중심의 임단협-작업장 투쟁은 다수의 미조직, 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와 분리되었다. 노동자 간 차별과 격차는 커지고, 취약한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2) 민주노총의 전략과제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위기

민주노총 조합원 중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으나, 대다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 노조에 기초한 입단협-고용안정 투쟁에 머무르면서, 사회·정치적 의제를 던지고 사회연대투쟁을 조직하는 활동에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전략과제로 내걸었으나, 진보정당의 계속된 내홍과 분열속에 진보세력의 통합된 정치세력화의 그림을 그려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 일부 인사들의 보수정당 투신 등이 더해져,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직도 유효한 전략인지 의구심을 넘어 유실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3) 노동운동의 장기적 전망의 부재, 다소 관성화된 투쟁

신자유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힌 일터에서 다양한 노동형태가 양산되고 있고, 노동자간 불평등과 괴리가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노동운동은 장기적 전망과 대중적이고 대안적인 실천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점점 더 현장과는 멀어지는 일회성 관성화된 투쟁지침을 내리고, 또한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서로 상처를 내는 풍토와 구조를 내재화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다.

4) 자판기 노조로 전략하고 있는 현장!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이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의 고용이 보장된다면 싸움에 나서길 꺼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신의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용인하거나 같은 사업장에서도 라인 별로 물량 확보를 위해 다툼을 벌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노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아프다.

5) 비정규 투쟁의 한계

비정규직 조직화는 기존 노조운동을 넘어 새로운 주체, 노동자계급 형성으로 주목받았으나 노동조합 생존만으로도 절박하고 치열한 투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운동과 결합된 실천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작업장 생존권 투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존 노조운동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민주노총의 위기와 변화에 대한 요구

전망 상실, 거둬들인 패배와 비정규직 확산(조합원의 고령화), 작업장 중심 운동(생활문화-재생산영역에서는 자본에 포섭), 실리주의 확산 등으로 조직은 활력을 잃어갔다. 조직력은 약화되었다. 지침, 동원 중심의

활동방식은 조합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약화시켰다. 활동가와 현장간부, 간부와 조합원 간에 생각과 정서는 점차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너진 현장, 활력을 상실한 현장을 복원시키는 것은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큰 과제이다.

3. 전태일 50주기! 노동운동의 시선은 어디로?

50년전 전태일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버젓한 미싱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어린 시다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재단보조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굶고 일하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에게 주고, 또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 밤 새워 걸어 다니며 아낀 차비를 털어 그들에게 풀빵을 사주었다. 전태일은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했다. 삼동친목회를 조직하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갖 실천을 다 해보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현실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전태일의 시선은 낮은 곳에 있었고, 전태일의 실천은 구체적이었다.

오늘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청소년·고령·이주노동자들은 더욱더 취약한 노동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아파트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자신도 투신자살하는 빈곤자살자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노동조합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한국 노동운동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태일 동지가 그렇게 실천했듯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남성노동자는 여성노동자와, 대기업노조는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노동자들과 그리고 내국인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앞날의 희망을 함께 해야 한다.

사업장내 비정규직들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넘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투쟁, 상박하후의 평등임금 실현 투쟁, 지역사회내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연대투쟁까지 민주노조운동은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4. 희망연대노동조합! 간접고용 투쟁과 사회연대 함께 하다!

2009년 노동조합 결성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초기 대다수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계적 정규직화 자회사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정규직화를 진행하였고, 성과급제를 줄이고 정액제 임금인상을 실현하는 등 상박하후의원칙으로 임금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쟁해 왔다. 동시에 사회연대 활동 역

시 끊임없이 전개해 오고 있다. 2012년부터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사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과일나눔 집수리봉사, 반찬 나눔 등 조합원들의 자발적 나눔활동 역시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노동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동인권 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 다양한 연대투쟁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과 만나고 연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다음 기회에 소개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사례만 예를 들어 소개하겠다. 현재 2019년 희망연대노동조합으로 조직된 CJ헬로비전설치수리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단협을 진행하는 과정에 LG에 회사가 인수합병되었다. 노동조합 건설과 동시에 매각 투쟁도 함께 병행하며, 민주노조 사수와 임단협 쟁취, 그리고 고용안정 쟁취까지 현안도 산적할뿐더러, 전국적으로 산개되어 있는 조직이기에 조직사업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총파업, 부분파업, 원청앞 거리 농성 등 안해 본 것 없는 이 노동자들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잠시 숨돌리기를 진행한지 얼마 안되어 다시금 상암동 LG헬로 본사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1년가까이 전개된 임단협 투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절박한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한번 하면 임금 소실이 엄청난, 노동조합 회의 한번 할라치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하고 노동조합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나눔'사업을 또한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강서지역의 취약한 아이들 가정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의정부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하고, 저 멀리 네팔 오지의 아동 학교를 보내기 위한 자매결연을 한다. 그야말로 전태일의 풀빵 정신을 온몸으로 펼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닐 수 없다.

〈2020.5.21 LG헬로비전 연대발언〉

저는 의정부 정의로운 노동인권 네트워크, 줄여서 의정로넷 코디 최승환입니다.

의정로넷은 의정부지역의 인권단체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의정부지역 사회공헌사업단입니다. 우리 의정로넷은 지난해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장애평등사업, 먹거리정의사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준비했던 사업을 즉각 변경하여,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마스크 나눔 사업, 학교에서 먹던 친환경급식이 떨어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간식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적은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그 어떤 사업보다 효과적, 즉각적·직접적인 사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마스크를 못 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는 마실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경쾌한 발걸음을, 집에서 매일 같은 반찬을 먹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음식의 향을 전달해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받은 분에게 우리지역 케이블 방송은 당신의 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는 눈을 가졌고 당신을 지켜주는 손도 함께 한다는, 시민에게 지역방송케이블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역 방송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분명 매번 봤던 지역방송차량을 보더라도 아무개 차에서 우리를 위한 차가 지나간다고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활동하는 저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협력사와 경총이 사회공헌사업을 노조가

기금을 받아 조합원에게 나눠준다는 왜곡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스크를 사고 마스크를 모은 캠페인을 통해 진정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지역케이블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사회공헌기금은 얼마 얼마 하면서 돈만 넘겨주고 스스로 잘했다고 자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들이 내 눈코입발이 되어준다." "양복입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구두신사가 아니라 조끼입고 내 손잡아주는 우리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조가 움직이고 기업이 좋은 이미지 갖고 노사가 함께 만드는 진정 사회공헌 여기 있습니다. 엘지헬로비전은 마스크를 써야 할 시국에 거짓스피커 쓰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눈에 뒤집어 쓰지 말고 나눔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 사는 노사가 되어서 악재 아닌 호재 만들어갑시다.
시민들이 보고있다! 엘지헬로비전은 호재를 결단하라!
감사합니다.

-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투쟁해결을 촉구하는 방송통신공대위 기자회견 발언문 中

5. 전태일 정신 이어받아 ‘사회연대’실천하자!

희망씨는 국내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대한 지원과정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하길 소망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내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연대하는 과정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숭한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내 사업장의 민주화와 근로조건 개선 만으로 해결 해결되지 않는 이들의 생존권은 재벌개혁, 복지증세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님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함께 살기 위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작은 연대를 실현하며, 같이 손잡고 정부를 향해, 재벌들을 향해, 외칠 때, 그 구호는 힘을 발휘 할 것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시선은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나들어, 제 3세계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자본이 보이는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국에서는 더 이상 생존 할 수 없어, 타국으로 이주노동을 택하는 노동자에서부터,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사실상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공장으로 인해, 수탈당하는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이야기 하러 노조들을 방문했을 때, 몇몇 노조 임원들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심지어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저에게), 아직도 컷볼이 후끈 거린다.

“우리는 해마다, 보육원에 후원금을 지원해요.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여기저기 후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보육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매번 후원하는 보육원을 가보니까 시설이 매우 훌륭하더라구요~ 우리가 이런 데를 왜 지원하나 싶었다니까??”

“아이구.. 좋은 일 하시게 생기셨네”

뻗속 깊이 새겨져 있는 ‘시혜적’관점과 ‘성차별적 언어’가 그대로 녹아있는 말들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대면하고 있었구나...!’

좀 많이 아픈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출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최근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서 취약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실천으로 지역속에 살아 숨쉬었으면 한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현재적의미를 되짚어 보는 지금, 노동조합 안으로는 상박하후 정액제 임금 인상등으로 연대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노동자 신규채용 등의 고용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노동조합 밖으로는 노사 기금연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꾀하고, 생활문화연대를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 스스로가 경쟁이 아닌 더불어사는 삶의 지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03 문학분야

“창조적 표현자 전태일,
그리고 노동을 쓰기”

2020. 06. 10 (수) 19시
전태일재단 2층 + 온라인

“창조적 표현자 전태일, 그리고 노동을 쓰기”

□ 기조

노동 현실에 눈 뜨는 와중에 전태일은 자본주의의 모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 그래서 차츰 희생의 각오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소신(燒身)을 결심하는 날이 오는지 말수는 줄어들지만 ‘열사’ 또는 예언자적 존재로서의 면모는 점층적으로 깊어진다.

그런데 기실 그의 일기장의 글쓰기에 나타난 것은 ‘전태일스러운’ 영성만은 아니었다. 전태일은 ‘좋은 삶’과 ‘좋은 삶’을 갈구하는 발랄하고 생명력 넘치는 청년이었다. 그 일기에 나타난 독서의 경험이나 문학작품(시) 옮겨 쓰기는 자신의 처지를 초극하고 더불어 좋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 자체다. 근로기준법에서부터 괴테·예이츠에 이르는 그 다양한 글쓰기의 목록은 한국 현대 민중사와 지성사의 중대한 한 장면이며, 민중의 자기계몽의 역사와 오롯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동을 쓰기’는 민중운동의 역사에서도 맥을 이루어 1970년대부터 이어졌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불평등과 노동의 곤핍함이 깊어진 21세기 한국에서 다시 전태일의 후예들은 노동을 글로 쓴다. 세대를 넘어 전태일의 글쓰기와 오늘날의 노동현실에서 써지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 형식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각 주제별 10분 내외 길이의 발표
- 전체 발표 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자유토론
- 각 주제별 주토론/질문자 배치

□ 발표 및 진행

- **진행** : 천정환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 **발제** : 정고는 “전태일의 문학과 오늘날의 노동 문학”
- **이야기 패널**
 - 희정 : 기록 노동자,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노동자, 쓰러지다』 등
 -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전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전태일의 문학과 오늘날의 노동문학

정고은

1. 전태일의 글쓰기와 1970~80년대 노동문학

전태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¹⁾이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감독 박광수, 1995)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운동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분신을 선택하거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를 이 시대의 전태일로 호명한다.²⁾ 노동문제를 논할 때 전태일은 빠지지 않고 소환되는 존재로,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의 의미로 매년 11월 13일을 전후하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전태일은 한국사회의 노동자·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렇듯 전태일은 7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노동운동에 대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만, 오늘의 발표는 ‘글을 쓰는’ 노동자로서의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한다. 전태일은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 후 제대로 누울 새도 없이 다시 일을 하러 나와야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수기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회상하고, 서울에 온 뒤에도 옷을 팔아 ‘연합 중고등 통신강의록’을 살만큼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 근로기준법 책을 어렵게 마련하여 독학하기도 했다. 일기에 김소월의 시를 필사해두기도 하고, 자신을 모델로 한 소설을 구상하기도 했다. “낙산동에서 밤이면 시집을 찾아놓고 왜롭고 고독으로 가득찬 마음을 마음껏 왜롭

1) 조영래가 쓴 평전은 1978년 일본에서 먼저 출판되었고, 한국에서는 83년 저자의 이름을 넣지 않고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전태일 평전-』(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 돌베개)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91년이 되어서 개정판을 내며 저자가 조영래임을 밝혔다.

2) 물론 이러한 호명은 대부분 남성노동자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노동자를 전태일과 동일시하여 호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 만들어서 어떤 한구석에 왜로움을 즐기는 취미”³⁾를 가지고 있는 ‘청년’ 전태일은 가난한 유년시절에서부터 동대문에서 일하기까지 자신의 생애를 수기 속에서 여러 번 재구성하기도 하고, 소설을 구상하기도 하는 ‘작가적’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일기, 편지, 수기, 소설 등 전태일이 남긴 글이 가지는 ‘문학(문화)적’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의 삶과 글이 계속해서 다른 읽기·쓰기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다. 전태일의 분신은 7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 세력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현장 투신을 목표로 하는 학생운동가들이 늘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노동운동가들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전태일의 글을 읽고 영향을 받은 경험을 말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⁴⁾ 이러한 독서는 대학생-운동가들의 것만은 아니었다. 당대의 노동자들도 전태일의 글을 읽고 그의 삶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신과 동료가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스스로 바꿀 것을 결심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 노동자의 ‘전태일 읽기’는 안재성의 「파업」과 같은 당대의 노동소설에도 반영되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전태일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고, 또 당대의 ‘노동열사’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그려진다.

2011년에 출간된 김진숙의 「소금꽃나무」에서도 관련한 일화가 등장한다. 학교에 가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진숙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떼기 위해 근로과에 갔다가 조롱을 당한다. 그녀는 84년쯤에 근로야학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만난 강학이 건네준 책이 바로 「전태일 평전」이었다. “니체나 이상, 그리고 김춘수나 김남조는 책꽂이에 소중하게 꽂아 놓고 있었지만, 그따위 책은 그렇게 취급해도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⁵⁾던 김진숙은, 어느 날 무심하게 이 책을 꺼내어 읽고 난 후의 감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뭘까. 그의 삶에 비한다면 내 삶은 뭘까. (중략)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같이 뒹굴며 그러나 끝내 내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이 되지도 못한 채 흘러갔던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뒹구는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욕을 달아야만 말이 되는 이 아저씨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내가 곧 그들이라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도 치욕스럽지도 않았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 내가 달라져야 그들이 달라진다는 생각. 그들이 딛고 선 땅이 변해야 내가 딛고 선 땅도 변한다는 생각.⁶⁾

3) 전태일,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88, 86쪽.

4) 예를 들어 77학번이었던 한 운동가는 사회과학 학습뿐만 아니라 르포를 통해 노동현실을 알게 되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청계천 헌책방들에서 『신동아』의 르포라든지, 또 『대화』, 『다리』, 70년대 잡지들을 구해 보면서…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든지, 전태일이라든지… 『불타는 눈물』(동일방직노동자 석정남의 현장수기-인용자)인가? 나도 읽었지만 다른 애들한테 많이 읽히고. 그러면서 노동문제, 농민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민중의 고통을 보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먼저 있었던 거고 (하략)”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학출활동가와 변혁운동』, 봄날의박씨, 2015, 188-189쪽.

5) 김진숙, 『소금꽃나무』, 후마니타스, 2011, 46-47쪽.

6) 위의 책, 47-48쪽.

전태일과 김진숙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에 대한 글을 썼다. 노동자들은 피폐한 하루 속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책을 읽고 ‘학습’했으며,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 나아가 동료가 겪는 부당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평등한 세계에 대해 사유했다.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형성사, 1982),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창작과비평사, 1984) 등 당시 ‘여공’들의 수기에는 가난한 유년시절, 상경하여 공장에 취직한 후 겪게 되는 착취, ‘여공’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 ‘문학’과 배움에 대한 갈망, 미래의 꿈 등 다양한 사건과 내면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전적 글쓰기 행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성하는 행위이자 자신에 대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행위”⁷⁾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글쓰기가 운동의 지평 위에서 펼쳐지게 된 것은 80년대 중후반으로, 특히 박노해와 같은 ‘노동자 작가’의 등장을 기점으로 지식인 중심의 문학(론)에 대한 자기반성이 제출되면서, 시나 소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학’ 범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쓴 일기, 수기, 생활글, 선언문, 추모시 등을 ‘문학’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는 변혁운동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현장성’과 ‘운동성’을 가진 문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동소설 등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소설로 꼽히는 정화진의 「씻물처럼」(「문학예술운동」 1, 풀빛, 1987), 방현석의 「내딛는 첫발은」(「실천문학」 9, 실천문학사, 1988.3), 안재성의 「파업」(세계, 1989) 등은 모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발표된 작품들로, 이때 활동한 많은 작가들이 노동자이자 노동열사와 함께 일한 동료로서 시와 소설을 썼다. 2020년 올해 28회를 맞이하는 ‘전태일문학상’도 88년 5월 27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계급이 영웅으로까지 불리던 고양 국면에서, 각종 의례와 문화행사를 통해 노동운동에서 전태일이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전태일을 호명하고 추념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다.⁸⁾

그러나 폭발적이었던 노동문학에 대한 관심은 ‘9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사그라져, 주류 문학장에서 더 이상 노동문학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평단은 다시 ‘문학성’과 같은 기준으로 노동문학이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단의 행보와는 별개로, 노동자들에 의한 글쓰기는 이전보다는 축소된 형태라 할지라도 지속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말에 만들어졌던 여러 지역노동자문학회 활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되었고, 전태일문학상도 부침이 있는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⁹⁾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또 현실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의 삶과 노동에 대해 직접 쓰고 말해

7)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여공 수기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37, 한국근대문학회, 2018, 10 쪽.

8) 관련한 내용은 정고은, 『‘전태일’의 이름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1980년대 전태일문학상의 주체와 양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 참조.

9)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참조.

왔다. 싸우는 노동자들 곁에서 투쟁을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온 사람들도 있다.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도 인간이다’와 같은 선언은 굉장히 새삼스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 어떤 존재들에게 노동을 하며 인간적인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외침이 5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2020년이다. 오늘 발표의 주제가 50년이라는 긴 시기를 지시하고 있는 만큼 한 지면으로 다 정리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전태일의 글쓰기와 70~80년대의 노동문학 이후, ‘노동을 쓰기’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것을 이 발표의 의의로 삼으려 한다.

2. 노동조합 이야기

주로 고발이나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로 쓰이는 르포는, 80년대 중후반에 들어 점차 사라졌다가 200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잘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의 차별 경험, 트라우마와 고통을 다루며 다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¹⁰⁾ 예를 들어 ‘삶이 보이는 창’과 같은 출판사에서는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활동하는 저자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쓴 글을 묶은 「말해요, 찬드라」(이란주, 2003),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다룬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배성훈, 2003), 간병인·주유소 아르바이트생·학습지 교사·이주노동자 등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부서진 미래」(김순천 외, 2006), 삼성 SDI 해고노동자 아내의 이야기인 「들꽃은 꺾이지 않는다」(박미경, 2007) 등의 르포를 꾸준히 출간해왔다.

그중에서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슬픔과 기쁨」은 최근의 르포문학을 논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책이다. 「르포르타주 에세이」로 이름 붙여진 이 책은 2009년 파업에 참여했던 ‘선도투’ 중 스물여섯 명의 구술을 바탕으로 쓰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당시, 해고자는 ‘죽은 자’로, 해고를 면한 노동자는 ‘산 자’로 (희망퇴직자는 ‘존엄사 자’로) 불렸다. 이것은 단지 비유만은 아니게 되었는데, 쌍용차 사태는 많은 노동자와 노동자가족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들과 사회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책이 쓰였을 때 스물네 명의 노동자와 노동자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회사가 약속한 복직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2018년에는 서른 번째 죽음이 발생했다.¹¹⁾

쌍용자동차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승인 하에 특공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자살특공대’, ‘무기공장’, 쌍용차의 영업손실액 등 전형적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폄하하고 파업을 회사의 손실 문제로 환원하여 왜곡했다. 그 중 한 포토뉴스에서 온전히 보전된 생산설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왜 그렇게 시설들이 보존될 수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10) 김원, 「서발턴의 재림-2000년대 르포에 나타난 99%의 현실」, 『실천문학』 105, 실천문학사, 2012.2, 193-194쪽.

11) 「쌍용차 30번째 사망자,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한겨레』, 2018.06.29. 2020년 5월 4일, 마지막 복직자들이 약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 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파업 도중에 불도 났는데 파업 후 일주일 만에 차가 나왔어요. 그만큼 생산 시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파업 도중에 단전·단수가 있어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우리 동료들이 자가 발전기를 고쳐 가지고 도장 공장을 지켰습니다. 도장 공장은 페인트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는데, (평상시 도로가 굳지 않게 가동하는)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설이 망가집니다. (중략) 이 공장에서 차가 한 대 한 대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술밥 먹었던 기억들의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버티게 했던 힘이었습니다.¹²⁾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증언은 잘 보도되지 않고, 기사화 되더라도 강성노조 정규직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댓글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댓글세계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정규직 노동자를 향하는데, 정리해고 이후 가장 먼저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때문이에요. ‘뭐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지? 왜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지? 경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경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 전가 안 하려면, 특히 노동자만 책임지고 경영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이 스물넷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¹³⁾

르포라는 장르가 “사회현상 혹은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이 아닌, 보고자(reporter)가 자신의 해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해 독자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을 목적”¹⁴⁾으로 한다면, 무엇보다 이 르포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는 노동조합이 ‘노동귀족’, ‘기득권’, ‘적폐’가 되어 버린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파업이나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묻고는다는 데 있다.

한편 6년째 부당해고에 맞서고 있는 아사히 비정규직지회의 「들꽃, 공단에 피다」는 노조를 만든지 한 달 만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이들 중에는 과거에 정규직이었다가 위험한 환경과 초과근무에 시달려 그만둔 이후 비정규직이 되어 일하게 된 사람도 있고,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다. 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하는 것은 비정규직은 어딜 가도 똑같은 것, 20분의 점심시간, 초 단위로 체크하는 생산시간, 노예와 기계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정혜윤, 『그의 슬픔과 기쁨』, 후마니타스, 2014, 44-45쪽.

13) 위의 책, 255-256쪽.

14) 김원, 앞의 글, 116쪽.

아사히 비정규직지회는 구미공단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노조이다. 구미공단은 60-70년대에 개발되어 섬유·전자산업 공장들이 대거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재편되었다. 구미지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데, 간부들은 여당(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구미시는 특혜를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¹⁵⁾ 게다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가 그랬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조는 만들어지는 순간 원청의 계약해지를 빌미로 손쉽게 해고당한다.

싸우는 과정은 지난하다. 그러나 끝을 알 수도 없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농성장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과 동료의 재능·개성을 알아보게 된다. 또한 회사와 싸우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이 알게 되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대’이다. 이발사였던 경험을 살려 ‘이발 연대’를 하러 다니는 조합원 조남달은 연대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오로지 우리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런데 연대라는 것이 정말 위대하더라. 내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하다 보니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더 많더라. 내가 알리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리게 되더라.”¹⁶⁾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퍼센트 대에 그치는데, 그나마 ‘촛불 이후’ 2018년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8퍼센트로 올랐다.¹⁷⁾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2.8퍼센트에 불과하다.¹⁸⁾ 그럼에도 민주노조 만들기, 노조를 탄압하는 구사대와 경찰의 폭력에 맞선 싸움, 노동자의 죽음은 70~80년대부터 지금까지 르포의 주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 이야기가 중단된 시기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인데, 이는 힘없는 노동자 개인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한 순간부터 국가권력이나 자본은 언제나 이를 방해하거나 와해해 왔으며, 또 그러한 폭력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2000년대 여성노동자 구술과 자기재현

2000년대 이후의 노동문학을 논할 때 여성노동자들의 구술 기록과 자기재현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전보다 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여성’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독자적

15)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들꽃, 공단에 피다-세상을 바꾸는 투쟁,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이야기』, 한티재, 2017의 3부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아사히 투쟁의 사회적 의미’ 참조.

16) 위의 책, 147쪽.

17) 「노조조직률 2000년 이후 최고... 처음으로 '제1노총' 된 민주노총」, 『한겨레』, 2019.12.25.

18) 「[보도자료] 2019 민주노총 조직확대 현황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홈페이지 참조.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세 개의 여성노조가 연이어 출범한 것도 1999년의 일이었다.¹⁹⁾ 2000년대 말, 몇 백일에서부터 길게는 1000일을 넘겨서까지 장기투쟁을 이어간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실 70년대부터 여성노동자들은 항상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87년 대투쟁 이후 남성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재편되고 노동자문화나 노동자의 표현양식에 있어서도 남성노동자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부차적인 것 또는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이러한 남성-대공장-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과 '진보'를 자칭하던 운동권 내부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여성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게 된다.²⁰⁾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전환은 운동계, 학계, 대중문화의 영역 등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가령 IMF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여성노동자 관련 다큐멘터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 들어서 「카트」(부지영, 2014), 「위로공단」(임홍순, 2014),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안국진, 2015) 등의 여성노동영화들이 연이어 상영되기도 했다.²¹⁾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직장의 신」(2013)에 등장하는 3개월 계약직 '미스 김'의 이야기도 2007년이라는 시간으로 부터 출발한다.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역사나 노동(자)서사 쓰기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다.²²⁾ 이랜드 노동자 인터뷰집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후마니타스, 200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인터뷰와 자기역사쓰기를 기록한 「나, 여성노동자2」(그린비, 2011), 8인의 여성노동자를 인터뷰한 「여자, 노동을 말하다」(이학사, 2013),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이 펴낸 「기록되지 않은 노동」(삶창, 2016),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우리가 옳다!」(숨쉬는책공장, 2020) 등은 모두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그녀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기존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결합하여 연대한 이랜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

19) 1999년에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총 세 개의 여성노조가 출범한다.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 조합 내의 가부장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여성의 문제가 외면당하면서,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밥, 꽃, 양□(임인애, 2001)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1998년 민주노총 현대자동차노조의 여성노동자 해고 합의나, 1999년 한국노총 농협노조의 '사내부부 우선 해고' 대상의 90퍼센트가 여성이었던 사건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나지현, 「여성독자노동조합과 여성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전국여성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학위논문, 2018 참조.

20) 주조은의 「현대가족 이야기」(이가서, 2004)는 기존의 노동(운동)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남성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아내-여성의 경험을 들고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노동자문화 내부의 가정중심성과 남성중심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한편 운동권 내부의 가부장적 질서, 위계적 성별분업, '여성(성)'에 대한 편파, 남성네트워크 등에 대한 비판,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폭로한 '100인위 사건' 등을 다룬 책으로는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08을 참조할 수 있다.

21) 이 논문에 의하면 1960년 「하녀」에서부터 1989년 「구로아리랑」까지 17편의 여성노동자 관련 영화가 제작(한국영상자료원에 등록된 영화에 한정)되었다면, 99년부터 그 편수가 꾸준히 증가한다. IMF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여성노동자 관련 다큐멘터리의 제작이 급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서 해고된 다양한 비정규직-마트 판매원, 대기업 식당종업원, 경비보조원, 경찰청고용직 공무원 등-의 목소리를 담는 것에서부터 이주노동자, 성노동자, 88만원 세대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YH여공사건을 비롯해 여성 노동 운동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박유희,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노동자 재현의 지형」, 『여성문화연구』 38, 한국여성문화학회, 2016, 108-111쪽.

22) 김원, 「이제, 귀 기울일 시간이다」, 『작가들』 70, 인천작가회의, 2019, 120쪽.

은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에서, 한 조합원은 96년 입사 당시에 대해 2000년대 초반에 들어 베이커리와 샐러드 바의 순서로, 그 이후에는 수산 코너 안에서도 각 분야를 세분화하여 외주화 되었고, 이후 회사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 실행하지 않았던 계산원까지 외주화 되었다고 말한다.²³⁾ 소비자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공간에서 아주 세세하게 외주화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갑질’ 문제가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들—수납, 청소, 경비 노동—도 원래는 모두 ‘당연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아니었다.

파견법이 통과되고 외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여성들은 ‘멀치 아줌마’, ‘장어 아줌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립스틱과 머리모양까지 규제 당한다. 또한 여성은 절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임금도 같은 시기에 입사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3-4단계 더 오른다. 노동현장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과 자괴감도 감당해야 한다. 섹슈얼리티의 통제 역시 남성노동자의 경험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한 여성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쓰자, 이후 그것을 빌미로 미혼 여성은 6개월 신희은 3개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으면 1년을 계약하면서 그 책임을 출산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벌어진다.²⁴⁾ 여성노동자가 비혼모임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는 더욱 쉽게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⁵⁾

한편 노동조합 안에서도 여성들은 조합원이 남성지부장을 원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책을 맡게 되거나, 남성사업장이니 조직부장은 남성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여성은 조직화에 대한 능력이나 열정과와는 무관하게 총무부장을 하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여성노동자들의 구술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투쟁을 위해 가정 밖으로 나온 여성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싸움에 대한 자신감과 의미를 찾게 된다.

‘니 자리만 높지, 우리 간병분회, 너희가 보기에는 별볼일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똥똥 뭉치면, 우리도 큰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서로가 믿고, 따라주고, 이렇게 서로 결속력도 있고 이런거 보면, 너저보다 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도 생기고, 내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니다. (중략)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병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일이, 교수님들, 의사선생님들보다 하나도 못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파업하고 하루만 일 안하면 엉망입니다. 교수들 저

23) 삶이보이는창 르포문학모임,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분회지원대책위 기획,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이랜드 노동자 이야기』, 후마니타스, 2008, 99-100쪽.

24) 김소연(금속노조 기동전자 분회 분회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유경순 엮음, 『나, 여성노동자2-2000년대 오늘 비정규직 삶을 말한다』, 그린비 출판사, 2011, 229쪽.

25) 안미선, 「비혼모에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까?-싱글맘 수진과 혜진을 만나다」,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기록되지 않은 노동-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삶창, 2016, 206-221쪽 참조.

거 뭐, 해회학회 가고 며칠씩 안 와도 병원이 다 돌아갑니다.”²⁶⁾

이렇게 여성의 노동 경험이 가시화되면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노동’의 문제로는 잘 인식되지 않았던 돌봄노동, 감정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형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²⁷⁾ 「나, 여성노동자」, 「기록되지 않은 노동」에서 여성들은 청소노동자, 간병인, 산모도우미, 행사도우미, 돌봄교실 교사, 요양보호사, 호텔 룸메이드 등, 각종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필자들의 말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일을 해왔으므로 당연히 있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 일은 ‘노동’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잘 불리지 않는다.”²⁸⁾ 그러므로 여성노동자 구술 작업은 그녀들의 일에 ‘노동’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된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처럼 성소수자의 노동 경험을 듣고자 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을 이야기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은 이성애자인 것으로 상상된다. 이 책은 다양한 성적체성을 가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패싱’해야 하는 차별적 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비정규직 차별, 맹목적인 능력주의와 같은 문제와도 얽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그러한 ‘패싱’의 경험이 이들을 단지 ‘피해자’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²⁹⁾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여성노동자의 경험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2010년 중후반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시키면서 다시금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와 같은 오랜 문제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26) 석명옥(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본부 간병분회 분회장), 「79일 밥투쟁으로 세운 경북대 간병인 노조」, 유경순 엮음, 앞의 책, 318-319쪽.

27) 실비아 페데리치는 90년대 중반 새로운 노동 형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감정노동(affective labor)’ 개념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감정노동이 포스트포드주의 시대의 노동의 일반적 특징을 의미하기보다는 특히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노동통제에 직면하여 육체적·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착취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트리스, 소매업노동자, 베이비시터, 간호사·조무사 등으로 대표되는 감정노동(자)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는 엄격한 노동 통제, 경쟁, 감정적 상호작용, 노동자의 파면화, 규율의 내면화 등은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조건과 만나 더욱 강화되며, 이들의 노동에서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과 달리 노동자에게는 노동소외를 유발하는 ‘기계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에 관하여」,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갈무리, 2013, 272-273쪽.

28)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앞의 책, 9쪽.

29) 자신의 노동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말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일터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차별받아온 성소수자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각이 내게 있었기에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루카/게이)”, “퀴어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정한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이기에, 노동 영역에서도 경계를 더 자유롭게 넘나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퀴어인 교육노동자라면 지금껏 관성적으로 반복해온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노동이 세상을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성연/퀴스처너리)” 최정,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당신이 모르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오월의 봄, 2019, 224-226쪽.

이슈,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갑질’,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동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노동문학은 이러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구술, 자기서사 쓰기, 르포, 소설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제들, 언론 보도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주로 르포와 같은 논픽션 글쓰기가 많이 쓰였다면, 2010년대 중 후반에 들어 노동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한 것도 변화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2010년대의 노동소설이 가진 시각은 이전 시기의 노동소설이나 논픽션 글쓰기의 시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아주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논픽션 글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반면, 소설은 ‘을과 을’의 경쟁, 정당성을 잃어가는 노동조합, 점차 인간성과 존엄을 상실해 가는 노동자의 모습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³⁰⁾

한편 최근 몇 년간 ‘386세대’ 비판 등의 세대론이 화제가 되면서, 윗세대 정규직 대 아랫세대 비정규직 청년 간의 불평등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론 논의는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을 (50대이든 20대이든) 대학을 나온 남성으로 삼는다.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이야기되고 노동·착취·계급 문제는 간과될 때,³¹⁾ 고 김용균과 같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구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³²⁾

그런 점에서 「임계장 이야기」는 어느 경비노동자의 자살 이후에나 드러나기 시작한,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삶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³³⁾ 많은 사람들을 분노를 샀던 경비노동자의 자살 사건에서 내가 잊을 수 없었던 이미지 중 하나는, 뻘뻘한 맞춤법이 틀린 채로 남겨진 메모들이었다. 그는 틀린 맞춤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라는 행위가 결국 경험을 나누는 것이며 그러한 나눔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야기 하는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희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³⁴⁾ 누군가의 노동에 대해 읽고 쓴다는 것은 결국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며, 이야기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실천과 땀 수

30) 장강명의 『산 자들』(민음사, 2019), 김해진의 「9번의 일」(한겨레출판, 2019), 배지영의 『근린생활자』(한겨레출판, 2019)와 같은 소설들을 주목해볼 수 있겠다.

31) 정우준, 「취업준비생에서 청년노동자로-2000년대 이후의 청년노동」, 『문화/과학』 98, 문화과학사, 2019.6, 68쪽.

32) 2019년 11월 21일의 경향신문 1면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의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으로 뼈곡히 채워졌다. 황경상,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2019.11.21.

33) 조정진, 『임계장 이야기-63세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노동 일지』, 후마니타스, 2020.

34) 피터 브룩스, 박인성 역, 『정신분석과 이야기 행위』, 문학과학사, 2017, 122-149쪽.

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러한 실천이 바로 이야기가 만들어 내는 ‘차이’일 것이다. 앞선 내용에서 강조했듯, 노동자의 삶이 계속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것을 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의 노동문학도 그러한 마음과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태일의 글에서부터 어제에 이르는 노동문학이 말해주고 있다.

04 문화분야

노동문화운동, 전태일에게 묻다

2020. 06. 25 (목) 14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

주최 :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전태일기념관

주관 :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학술위원회,
문화사회연구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노동문화운동, 전태일에게 묻다

□ 기조

- 전태일50주기를 맞아 노동문화운동의 전개와 현재에 대한 탐색
- 전태일과 노동문화운동의 현재성에 대한 토론
- 노동문화운동을 고민하는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들의 만남과 토론
- 노동문화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한 고민의 시작

□ 형식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각 주제별 10분 내외 길이의 발표
- 전체 발표 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자유토론
- 각 주제별 주토론/질문자 배치

□ 발표 및 진행

- **기조발제**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 **소발제 및 토론**
 - 노동문화운동 현장 이야기(문화단체 및 개인) : 민정연(꽃다지)
 - 노동조합 문화담당자 이야기 : 백일자(금속노조)
 - 청년문화활동가 이야기 : 홍명교(플랫폼C)
 - 노조운동과 노동문화운동 : 박선봉(전 민주노총 문화국장)
 - 문화연구와 노동문화운동 :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 플로어 토론 : 신민준(예술대학생네트워크), 김재상(문화연대), 박이현(문화연대) 등
 - 사회자 : 최준영(문화연대)

노동문화운동의 형성과 전개,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전태일]



전태일 기념상 제막식



청계피복노동조합

[전태일 淸溪被服工人 全泰一]



전태일 일상 이미지 더보기



해부학 '새벽출정', 서울대 교문 1981



서울 노원동 '개만조노주민', 전태일 노원국립 1988



전태일공공벽화 '해부학 벽화', 전태일공공 1988



부산매출운동연구소 '우리 노동조합', 부산 매출운동 1988



[전태일과 풀빵]

“전태일 풀빵·모범업체 정신 실천하자”

50주기 범국민행사위 출범

2020-05-08 12:26:31 게재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71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행사위)가 7일 출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전태일이 손잡았던 시다(보조)·미상사는 (오늘날) 비정규직·허청노동·영세상인·청년구직자·특성화고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외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운동을 노동자·시민 속으로 펼쳐려 한다”면서 “전태일의 아름다운 풀빵정신과 모범업체정신을 사회에 불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더 낮은 곳을 향한 전태일의 아름다운 손, 새카맣게 타버린 전태일의 손을 움켜잡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연대사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정규직 임금동결이 전태일정신이라니?

[기고] 비정규직이 바라는 것은 정규직의 시혜와 떡고물이 아니다

정기전(사무금융연맹) 2020.06.16 08:22



기사공유!    

요즘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을 앞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혹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노동운동 일부 활동가들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사회연대 운운하며 노동자 양보론을 꾸준히 설파해서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결국 이들의 주장이 자본가계급의 논리와 결과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

‘공격적 방어’ 혹은 ‘떠밀려 양보하기 전에 선제적 통 큰 양보’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쓴 채 자본가계급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 글쓴이를 모른 채 읽으면 이게 정부의 주장인지 경총 등 자본가 단체의 주장인지 헷갈릴 정도다. 노동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정권과 자본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니 이들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를까 싶다.

차례

1. 노동문화운동이란 무엇인가
2. 한국노동문화운동의 역사적 전개
 - 1) 해방공간의 노동자와 노동문화운동
 - 2) 195-60년대 노동문화운동
 - 3)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노동문화운동
 - 4) 1980년대 현장노동운동과 노동문화운동
 - 5) 1990년대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운동과 노동문화운동
3. 한국 노동문화운동의 장소들
4. 문화의 세계화 시대 노동문화운동의 방향과 수행주체
5. 정동적 전환과 새로운 정치사회의 형성

한국 문화운동과 노동문화운동의 의미망

1.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사회운동의 포문을 연 의미
2. 문화 자체로서의 문화운동 (사상, 제도, 일상-심미) 와 미적 가치창조로서의 문화생산
3. 수동적 존재에서 실천적 주체로 대중에서 계급으로 민중을 재형성해가는 문화혁명
4. 계급적 문화운동의 형성과 전개

[문제의 지점]

1. 노동문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순수한 노동자계급 문화’의 생산과 노동자계급 집단에 전적으로 속하는 고유의 문화 존속/발전의 메커니즘?
- 노동자문화는 이전의 민중문화 혹은 공동체적 문화와의 연속성(톰슨)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의 재현과 창조적 재생산?
- 지배문화의 낯설게 하기? 노동자 문화패/전통음악의요소를 노동자계급 혹은 하층계급에 전유된 고립된 문화실천
- 노동자계급의 문화권, 자본주의지배문화와는 다른 문화공간을 육체적 저항에 근거한 문화적 실천으로 창출하는 기획과 운동
-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 투쟁; 다른 노동윤리와 인정투쟁에서 대안적 정치사회의 형성

2. 노동문화/노동문화운동 최근 논의

- ; 신병현, 〈통치의 장소에서 정치의 장소로:민주노조운동과 새로운 문화정치〉 (2008)
- ; 박해광, 〈한국노동자문화의 성격: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8)
- ; 조정환, 사회주의와 코뮌주의의 대립 속에서 코뮌주의의 회복-오래된 미래의 주체성을 포착하는 유물론적 (재)구성의 관점/ (2001)
- ; 강내희, 심광현, 〈문화사회론〉/『문화과학』 (2008)
- ; 고병권,이진경, 〈코뮌주의 선언〉/ (2009)
- ; 유경순, 〈한국 변혁적 노동의 형성과 분화〉, 2017
- ; 백원담, 〈87 혁명, 그후 20년의 역사화 혹은 문화화〉, 2007
- ; 서동진, 〈창의적 일로서의 미디어 노동? 미디어 노동의 문화경제 분석을 위한 시론〉, 2012
- ; 김예란, 〈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2015)
- ; 유범상, 〈인정투쟁: 한국노동운동과 경계에 선 사람들〉, 2017

3. 한국 노동문화운동의 역사화 문제

4. 한국 노동문화운동의 방향과 수행주체 문제

5. 한국 노동문화운동의 조건과 전망

[전후 세계사의 재편과 한반도]

1. 해방과 분단의 동시 전개의 문제

We Korean never had foreseen to occur the situation that national liberation and division would occur at the same time. we were could not be "well adapted" the situation of cold war system in Korea and the divided territory.

2. 전후 아시아에서 냉전종주국들의 경쟁은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건설과정에 계급문화와 같은 내적 모순을 격화시켰다.

The competition for their hegemony in Asia had made a rod to intensify inner contradiction as like class conflict over nation stat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문화냉전과 한국전쟁]

1. 문화냉전과 아메리카나이제이션

1) 한반도에서 문화는 정치투쟁의 강력한 부지

Cultural Cold War and Americanization ; realm of culture as strong site of political struggle in Korean Peninsula(Asia)

2)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남한에서의 근대적 국민국가형성과 근대화 추동.

Americanization penetrates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and Nation State building in South Korea

2. 북한에서의 소비에타나이제이션과 대비

compared with Sovietanization in North Korea

3. 한국전쟁

세계사적 냉전의 결절점.

유럽의 냉전 종식에도 정전 상태의 한반도 혹은 최근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사안보 및 역사적 영토적 갈등과 긴장이 첨예화, 아시아에서 냉전은 현재진행형. 한반도 정전체제(판문점체제)와 냉전 아시아의 탄생. 그것이 지속되는 세계사적 구조

[해방과 분단체제 Liberation and Division system]

1. 1945. 8.15 해방과 분단국가 Liberation & Nation-State Building

- The old established colonial order would collapse and be replaced by a new structure. It was to be a time of all-out contests between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forces regarding the precise extent of the abandonment of colonial mores and feudal legacies, an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tate in the new order.
- Immediately after the cessation of colonial rule, the proces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gave way to a progressive state led by left wing forces which, generally speaking, based their agendas on the interests and the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가) 건국준비위원회 'Committees Preparing for the Restoration of Statehood' and 'National Administration Committees'.

나)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

Howev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MG) was the external power imposed on Korea after liberation, and it became an instrument for pressing on Korea policies which serve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AMG violently repressed and then totally destroyed the nascent state being formed by Koreans and replaced it with the 'cold war, division-defined, anti-communist' model alluded to above.

[준비된 해방과 분단 Prepared Liberation and Division]

가) 건국준비위원회 'Committees Preparing for the Restoration of Statehood' and 'National Administration Committees'.

나) 인민위원회 People's Committee

다) 전남, 광주지역 59개 건설

	Total North and South	South of 38th Parallel	North of 38th Parallel
Township (myŏn)	2,244	1,667 (no PC in 13 townships)	564
Village (ŭp)	103	75	28
Island	2	2	0
County (kun)	218	148	70
City	21	12	9
Province	14	7	7

(People's Committees in Korea as of November 1945)^[6]

[해방공간의 노동운동]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 공장 자주관리운동

- 1945년 11월5일 결성
- 금속 · 철도 · 교통 · 토건 · 어업 · 전기 · 통신 · 섬유 · 광업 · 조선 등 16개 산업별노동조합 지부의 수가 총 1,194개
- 조선공산당 주도로 전국 각지 대의원 505인 대의원 결성.
- 조선민주청년동맹(朝鮮民主靑年同盟)의 청년조직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의 양대세력
- 1946년 9월의 총파업/ 경성철도공장 대우개선 요구, 부산과 서울의 동조파업
-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에의 참가〉 〈민족자본의 양심적인 부분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건설〉 〈노동자의 이익옹호〉를 실천요강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제 실시〉 〈8시간 노동제 실시〉 〈공장 폐쇄 반대〉 등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16개 산별노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11개 지방평의회와 주요지방에 지부를 두는 방식으로 지역적 성격을 결합시켰고, 북한에는 전평 북조선 총국을 별도로 두었는데, 북조선 총국은 46년 5월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전환

[해방과 문화운동]

1. 조선문학건설본부(이하 문건)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 중심 1945년 해방된 다음날(1945.8.16) 바로 이전의 친일문학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가 있던 종로에 조선문학건설본부 을 세웠다. 『문화전선』이라는 기관지 발행, 자신들의 문학 적 입장을 개진해나가고 문학운동을 전개해나갔다.

2.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이하 문협)

이틀 뒤 조직 확장. 미술, 영화, 음악분야를 끌어들여 문화운동을 주도.

이들은 당시 변혁단계를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단계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문학운동의 이념을 ‘인민의 문학’으로 설정한다.

3.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한설야, 이기영, 한효 등 중심, 1945년 9월17일, 1935년 해산된 카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이하 프로문맹)을 건설하고, 9월30일에는 역시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다른 분

야를 흡수, 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예술운동』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들 역시 변혁의 과제를 부르조아프로레타리아혁명으로 설정하였으나, 문학운동의 이념으로서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의 건설을 주창

4. 조선문학동맹

1945년 12월 민족적 현실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두 단체는 통합논의를 진행, 12월13일 조선문학동맹을 결성시킨다. 이들은 이후 金泰準·權煥·韓效·이태준·김남천·김기림 등을 준비위원으로 하여 전국문학자대회 개최(1946.2.8-9)



[1960년대와 노동운동]

1. 1960-1961: 4.19혁명과 노동운동

- 1) 노동쟁의의 비약적 증가(1959 95건 49,813에서 1960년 227건과 64,335명)와 가두시위 형식의 투쟁양식,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과 노동조합결성
- 2) 어용노조간부 규탄하는 노조민주화운동과 신규노조결성의 급증 (1960.3 589개에서 1960.12 904개)
- 3) 정신노동자인 교원, 언론인,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투쟁
- 4) 노동법 대상이 되지 않는 실업자구호대책문제를 제기한 '전국실업자구호대책투쟁위원회' 결성

- 5) 교원노조운동의 활기; 대한교련에 반대, 한국교원노조연합회(1960.5.22) 결성
- 6) 언론인 노조운동과 금융노조

2. 정치조직화의 한계

3. 혁명의 잔여들

“1961년 8월 31일 재조직된 한국노총은 4월 혁명기 고양된 노동운동의 새로운 움직임과 발전의 역동성을 거스르는 유턴의 출발이 되었다. 군부쿠데타 세력에 의해 노동조직은 한국노총으로 재조직되었고,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한국노총이 주도한다. 한국노총으로의 재조직과정에서 김말룡 중심의 전국노협·한국노련계 인사들은 거의 부분 배제되었다. 이러한 노동계 상황은 이후 계엄령 해제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는 시기를 전후로 한국노총에 대한 한국노련계의 저항과 도전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 한국노총 전직 임원들을 중심으로 노우회가 결성되어 한국노총에 저항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었다…。 1960년 내내 한국노총 양분부와 산별노조와의 분열·대립, 산별노조 내부의 분열·대립 등이 연이어 발생하다.”

(임송자, <1960년 한국노총의 분열·갈등과 민주노조 운동을 향한 변화상>, 2011)

4. 1962-1969: 제3세계 근대화와 지성의 시대

산업화와 권력/지식관계의 형성, 교양인에 의한 문화의 발견, 제도로서의 교양

[1970년대와 노동운동]

1.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불안과 위기심화

;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에 차관, 합작투자, 기술및 상표 도입 자본유착과 매판적 관료독점자본주의 발전

2. 박정희정권의 정치적 안정과 국가독점자본주의

; 3선 개헌,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재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과 마산수출자유지역 설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1971) 입법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제한, 10월 유신(1972)

; 조국근대화의 산실 공단 형성,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 석유값 인상에 의한 물가양등의 노동자 등 기층민중 전가와 노동탄압

3. 노동자 등 기층민중의 비약적 성장과 항거,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및 학생운동

- ; 노동자 1970년 49만명에서 1979년 109만명, 노조 비약 증가
- ; 전태일분신, 광주대단지폭동, 파월한진노동자 KAL 빌딩 사건, 신규노조결성투쟁, 노조민주화운동, 기존노조 임금인상투쟁, 긴급조치와 학생운동 고양

[1970년대 운동의 양상과 한계]

1. 이념의 빈곤과 재구성

- ; 1970년대 운동의 전반적 흐름은 일정한 운동이념 및 실천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야세력 및 일부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심정적 성격이 강함.
- ;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지식인 중심의 민중지향적 운동풍토 부각. 프랑크푸르트학과중심의 비판사회학 서적 등을 통해 개량주의, 수정주의를 접하는 정도.

2. 민족주의적 성격의 강화

- ; 변혁운동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슬라브주의와 같은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게 부각되고 공동체성을 근거로 문화적 전화를 이루는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cf. 중국의 <문화열> 등
- ; 제3세계 후진자본주의국가의 변혁운동에서 과학적 이념에 입각한 운동의 전개에 앞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즉자적 대응 대두. 민족공동체 강조로 과거회귀적(봉건시대로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화.

3. 광범위한 민족문화운동의 대두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전개

- ;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탈춤운동, 민속극운동, 민족문학운동 등
- ;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광범한 전개

4. 민주노조운동의 경제투쟁과 노조결성투쟁



새마을정신의생활화

1976. 12. 10.

대통령 박정희

총력안보

1972년 임자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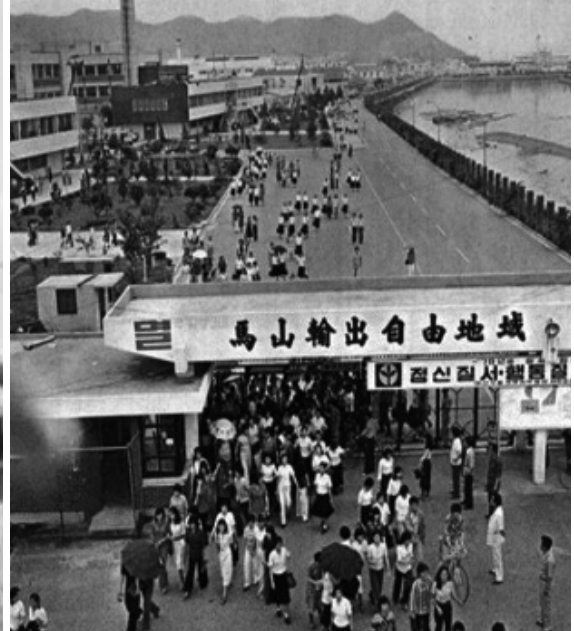
대통령 박정희

有備無患

一九七二年壬子新年

文化領 朴正熙

[한국 공업단지와 노동자]



[수출역군과 공순이/ 공장과 일상]



[한국에서 문화운동의 역사]

1. 1945-1948; 해방공간의 문화운동 ; 탈식민화의 다양한 기획과 그 각축
2. 1948-1950; 냉전분단국가체제의 형성과 미국화
3. 1950-1953: 한국전쟁과 미국화
4. 1953-1959: 불연속성의 시대 an age of discontinuity
5. 1960-1961: 4.19혁명과 혁명의 잔여들
6. 1962-1969: 제3세계 근대화와 지성의 시대
 산업화와 권력/지식관계의 형성, 교양인에 의한 문화의 발명 제도로서의 교양
7. 1970- 1973; 조국근대화의 산실 공단과 전태일분신/경공업 노동자의 민주노조운동
8. 1974-1979; 개발도상국가의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주체적 문화 만들기
 - 전통의 발견, 정체성찾기, 민족사의 부흥
 - 기독교의 우산 아래 문화운동과 민중운동의 절합
 - 긍정적 아메리카나이제이션
 - 포크음악, 청년문화, 민주화와 자유의 갈망
 ; 문화운동의 귀결과 전화점으로서의 “공장의 불빛”; 미국화의 체화 속에서 근대적 문화기획을 가시화하는 김민기의 전환
 ; 저항과 창조의 공간이자 체제로서의 대학과 학생조직

[공장의 불빛과 노동문화운동]



[<공장의 불빛>과 노동문화운동]

.. 1978년 제작된 "공장의 불빛"은 서울대 탈출반 출신들의 모임이었던 '한두레'의 작업의 한 부분으로 기획된 것으로 애초부터 공연물로 구상되었고 그 구성에 있어 상당부분 공동창작이 이루어졌다. 한국교회사회선교협회의 후원으로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 보급되고 그후 79년 2월 제일교회에서 채희완의 안무로 무대에 올려져 "공장의 불빛"은 공연물로서보다는 카세트테이프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작품은 70년대 후반의 공연작품들이 대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알레고리적인 상황설정으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비해, 동일방직사건이라는 70년대 후반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례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것은 민중현실로 접근하려는 김민기의 70년대 후반 작품 경향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특히 카세트 테이프라는 대중확산력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고 뒷면에 반주음악을 실음으로써 대중적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공장의 불빛"은 매우 전형적인 사건 전개를 가지고 노동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 악곡과 가사의 강렬함, 그리고 카세트테이프가 가진 놀랄만한 대중적 확산력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고 그후의 여러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0. 김민기 인사말

1. 편지

2. 교대 / 사고

3. 작업장

4. 야근

5. 공장의 불빛

<공장의 불빛>

예쁘게 빛나던 불빛 공장의 불빛 온데 간데 없고 희뿌연 작업등만 이대론 못돌아가지 그리운 고향마을
쫓고 지친 밤 여기는 또 다른 고향....

6. 음모 / 선거

7. 두어라 가자

8. 이 세상 어딘가에1

9. 아침바람

10. 이 세상 어딘가에2

[80년대 광주민중항쟁 이후 운동의 민중화와 문화운동]

문화적 나로드니키, 브나로드운동, Cultural Narodniki, Vnarod

- 출판 운동 Publication Movement
- 급진이론의 수입과 맑스 정전 강독 Imports of Radical Theory and Reading of Marxist Canons
- 현장으로, 계급이전 go to field, transformation of class identity, from student to laborer
- 1987, 제한적 민주주의와 계급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의 고양과 조직화 we accomplished the restrictive democracy, at the same time we met spontaneous uprising of class subjects as like labor, peasant and the p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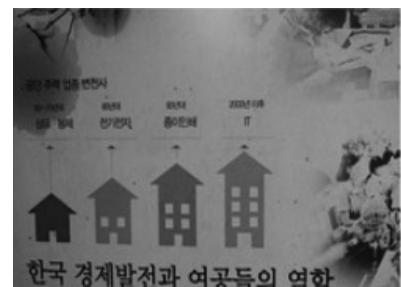
[80년대 중반 이후]

- 기층민중의 다양한 지역적 전국적 조직화
; 뜬배 운동의 확대와 심화, 다양한 대중전선의 형성
- 기층민중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운동의 영역의 확장과 심화
; 문화운동의 지역화와 장르화
- 변혁사상의 구축
; 문화운동의 이념과 노선 정립
- 사회구성체 논쟁 Social Structure Controversy
- 문화냉전의 최후 국면;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 프레임

[민중권력의 상상: 경공업 지역/ 코문]

구로, 성남, 성수, 영등포, 마산, 부산, 구미 등

- 현장 진입(위장취업)/ 장단기간 투입/ 계급 이전 /현장 지도력
- 노조설립과 경제투쟁
- 동일 업종의 조직화와 주거지역사회의 주민운동과 연계
- 문화공간, 노동상담소 등 외곽조직 구축, 다양한 취미모임, 야학, 대중교육, 성교육 등 자존감과 계급정체성 형성을 기초로 생활밀착형 조직
- 공단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층위의 관계 조직화



[민중권력의 상상: 중공업 지역/ 소비에트(Soviet)]

인천, 울산, 마창, 포항, 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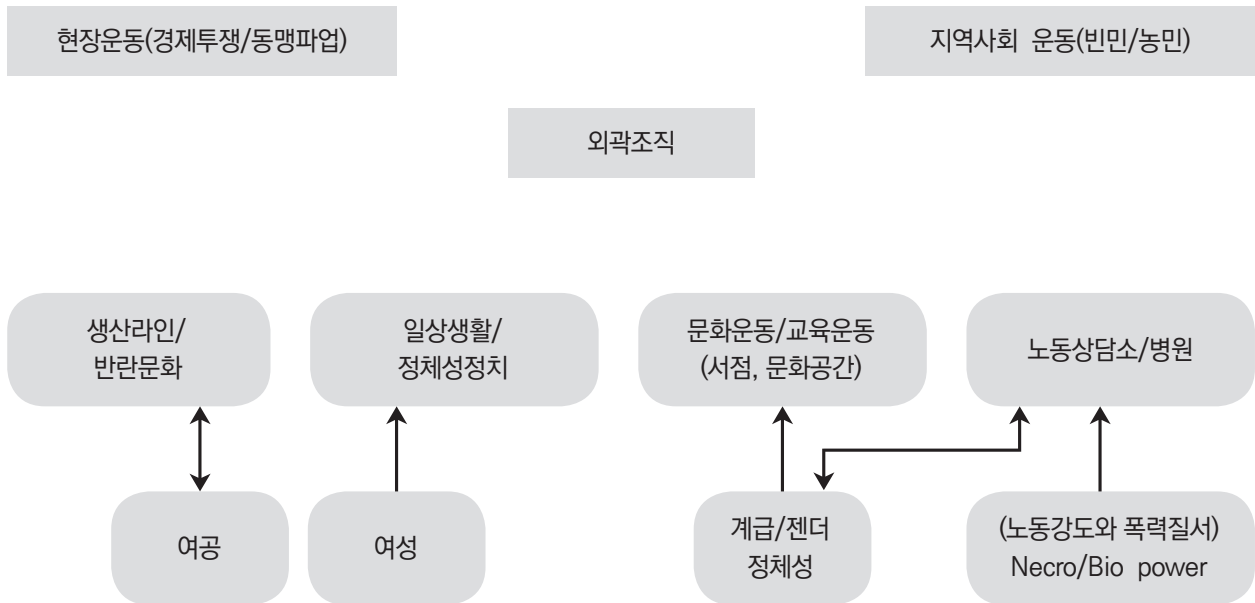
- 《조선, 철강, 자동차, 무기》:
- 현장 진입/ 장기간 투입/ 계급 이전 /현장 지도력
- 조직사업/대중조직과 선진노동자
- 투쟁사업/ 임금 투쟁과 근로조건 개선, 노동시간 등 경제투쟁
- 노동조합 간부를 중심으로 선진노동자 의식화를 통해 훈련된 현장 기반과 공장자주관리 등 정치투쟁화와 소비에트 권력구조 창출
- 산별노조(금속연맹, 화학연맹 등)의 연대틀, 지역협의회 구조
-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조직화



[구로동맹파업과 계급문화생산]



[소박한 코뮌 권력의 프레임 1; 경공업지역]



[87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운동의 세력화]

- 노동계급의 세력화는 노동권의 확보와 전국적 조직화로 귀결.
 -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권력만큼 권리도 확보하였다. 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조정법의 전반적인 변화.
 - 1990년 전노협 결성과 노동자의 지역적 전국적 조직화
 - 1995년 민주노총 창립
- 1996년 총파업;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금지 등의 노동자들의 존재를 속박하는 주요 악법들 개정
- 민주노총과 사회권 요구;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기치 하에 사회개혁투쟁 제기. 노사관계개혁 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의 노사정 협의구조의 정착, 노동운동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에 대한 논의로까지 영역 확장.
- 정치화; 진보정당의 창당 적극적 주도, 대선후보

[21세기 노동운동의 발전과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정치화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노동운동은 진보정당에 대한 물질·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승리 21이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유사한 이념을 갖고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해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은 사회권을 정치의 아젠다로 제기했다. 진보정당은 제도정치에서 사회권이라는 아젠다 형성을 주도해 나갔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은 1970년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1987년과 1996년 총파업을 거쳐 조직화되어 노동정치와 제도정치에서 노동권과 사회권을 제기하고 획득하였다. 노동운동의 인정투쟁은 법적·제도적 권리로 귀결된 것이다. 이후 노동 정치는 해마다 상반기에는 임단투를 하반기에는 노동법개정 투쟁을 전개했고, 제도 정치영역에서는 세력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유범상, <인정투쟁:한국 노동운동과 경계에 선 사람들>, 2017)

[자본의 전지구화와 노동문제]

-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자본의 바깥은 없는 광역화
- 자유무역과 탈규제,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광역화는 또다른 자본의 위기적 공간화실천으로서 다수의 경제적 풍요나 분배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 노동의 유연화, 소득 양극화, 가계 및 국가부채, 공동체 파괴, 생물다양성 파괴, 지구온난화, 난민 등 오늘날의 세계는 심대한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 그리하여 현재 자본의 전지구화 체제는 곳곳에서 급속한 균열과 이완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중무역전쟁 또한 그 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노동운동 내부의 균열과 경제주의]

노동운동의 약화와 이익집단으로의 전락

① 외재적 원인: 이른바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문제

“민주 IMF 위기는 모든 아젠다를 극단적인 시장중심적 발전으로 바꾸었다.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김대중·노무현정부도 성장과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경제정책을 계도하는 유일한 가치와 이념으로 삼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정책을 포기하였다”(최장집, 2012: 131):

② 노동운동 자체 내부의 균열: 전투적 경제주의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 독점화와 정치 자유화에 경제투쟁으로 대응한 유일한 노동운동이다. 머리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든, 언론에 어떤 요구 사항을 내걸든 1980년 이래 모든 쟁의(쟁의 발생 신고 기준)의 95%~99%는 단위 기업 노동조합원들의 경제이익 확대 여부에 의해서만 마무리되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조합원의 임금이 대기업 조합원의 41%로 떨어지는 과정은 기업 노조 경제투쟁의 20년 축적과 같은 궤적을 그린다(이재영, 2013a: 272).

[노동문화운동과 문화노동자]

- 21세기 새로운 노동정체성 담론과 신화
- 노동의 존재양식 변화; 창의노동(creative work), 문화노동(cultural labor), 미디어 노동(media work)
- 노동자 정체성 구성의 새로운 맥락:
 - ① 자신의 노동 생산물에 한 권리
 - ② 노동과정에 한 참여와 통제
 - ③ 고용과 보상의 안정을 위해 자신을 노동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 역시 증대. 계급적 각성과 구별.

새로운 노동문화운동의 쟁점들

1. 노동자문화인가 노동문화인가; 개념구성적 질문들

- 노동자되기의 문화적 과정은 그 사회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환경 반영(박해광, 2003)
- 계급의 정체성 형성과정
 - ① 경제구조, 생활방식, 성향, 집합행위 등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층위의 '경합'을 통해 구성되는 집단적 정체성, 역사적 산물이자 공간적 산물
 - ② 이데올로기적 과정, 다양한 문화적 실천, 곧 의미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적 과정(박해광, 2003)
 - ③ 지배문화와 노동자 계급문화의 생산과정과 일상공간에서의 경합과 재구성, '협상된 지배체제'로의 귀결과 전치(轉置)의 과정

[노동계급형성과 노동자문화정체성]

2. 노동자의 일상과 문화적 수용

- ①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주체적 선택과 반성적 차이
- ② 울산이라는 기업도시에서 노동자 정체성형성의 문제: 공간의 재구조화와 지역사회관리, 노동자 계급의식의 순치, 노동계급의 도전과 저항을 지역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주도의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노동자 주택문제의 기업주도적 해결, 지역의 집합적 소비 공급, 계급 특유의 공론장의 형성과 궤멸

3. 신자유주의의 위기적 공간화실천과 노동계급문화정체성의 곤경

- ① 자본의 전지구화란 자본의 전지구적 재편이라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변동의 차원에서 경제주의적 규정력
- ② 그 자본의 탈경계적 자유로운 이동과 확장이라는 광폭한 공간화실천이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상응적 과정

[포스트 지구화: 모순의 중첩 Post-Globalization: Overlaid Contradictions]



[포스트지구화(post-globalization) 1]

포스트지구화로 탈경제적 세계의 중층적 시간성의 포착

- (1) 식민-냉전-지구화로 연속된 역사적 시간성이 현재적 시간성을 부단히 추동하고 구성하는 것
- ① ‘북핵 위기’에서 ‘남북 평화와 화해’로 급선회한 한반도: 냉전의 유산 / 포스트냉전의 현실
 -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징용·징병 등 역사문제가 경제전쟁으로 전화, 식민의 유산의 현재적 개진
 - ③ 사드 배치에 이어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한중갈등은 지구화 시대에 밀월관계였던 한중관계가 새로운 국면
- ⇒ 새로운 시간성을 형성하는 포스트지구화의 복잡한 자장(磁場) 위의 노동의 일국적 과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탈경제적 삶을 대안적으로 재구성하는 잠재력과 동력을 모색하고 현실화할 필요

[포스트 지구화와 새로운 정동의 정치]

지구화의 경제주의적 규정력에 대응한 다양한 초국적 초지역적 유대들의 사회적 실천의 대두, 탈경제적 노동의 이동 속에서 새로운 노동의 공간화 실천. 모순의 중첩 속에서 이데올로기·담론·언어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탈경제적 신체와 정동의 정치 포착.

- 아이화 웅(Aihwa Ong)은 아시아 도시들이 2008년 미국발 금융폭풍 이후 싱가포르나 두바이가 금융시장을 주도하며 상하이 호화지구화의 기준을 바꾸면서 새로운 도회주의를 실현하는 독특한 경관을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방식과 기술을 ‘월딩 시티(worlding cities)’로 개념화하며 해명.
- 웅은 글로벌리즘과 포스트 콜로니즘의 도시화담론들이 아시아 도시의 경험을 위계화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아시아 도시들의 구성이 모델링(urban modelling), 상호참조(inter-referencing), 새로운 연대(the forming of new solidarities)라는 월딩의 전략적 실천형태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기

[코뮌과 정치의 장소들]

사유의 지점들

1. 국가와 제국/ 외부가 없는 제국의 문제/외부의 창출 스펙타클 사회 /중성화국가론(야오양)
2. 국가와 사회/사회국가론
3. 사회적 제 관계의 재사유
 - 1) 도래하는 공동체(조르쥬 아감벤)/ 개인 윤리학의 총합으로서 공동체의 윤리학 형성의 문제인가

임의성의 스스로 그리함과 自然(道家)

2) 자본주의/제국 안의 섬들; 생활공동체 혹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체

3) 새로운 결연의 열린 가능성,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선들

4. 역사적 경험의 맥락화와 사상전통(사회주의, 종교 등의 역사적 관통 이후

5. 생명정치의 장소들과의 대면과 대응한 대안적 결연의 경로

[노동문화운동의 장소들:트랜스내셔널 시티(Transnational Cities)]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적 도시이론 (마이클 피터 스미스 Michael Peter Smith)과 새로운 공간화의 문화실천기획

; 지구화를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변동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좌우를 막론한 글로벌리즘담론들에 문제 제기

; ‘지구화’를 ‘지구적’ 경제공간의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네트워크(物流, 人流, 文流)의 재구조화와 확장의 문제 그리고 그 흐름 네트워크를 다양한 규모를 가진 ‘지역적 공간’과 연결짓고 위치시키는 (locating) 문제

; 초지역적 연결과 초국적 유대의 사회적 구성이 유지되는 방식에 주목

“사람들의 배후에서 작동해 우리의 미래를 냉혹하게 결정하기 위한 구조적 힘이라기 보다는 정치적·문화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실천의 끝나지 않는 산물”(2011)

; 스미스는 글로벌 시티를 트랜스내셔널 시티(Transnational Cities)이론으로 전복.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와 존 프르그먼(John Friedmann)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 등 주요한 도시이론가들의 이론주제들의 경제주의적 경도, 지구와 지역에 대한 이분법적 분리와 물화,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배타적·적대적 관계설정, ‘아래로부터의’ 무수히 많은 지역적·초국적 실천들에 대한 관점의 부재 등 한계 비판. 전 지구적 경제 재구조화에 의해 어떤 새로운 대항적 공간이 열리는 데에 집중

[포스트 지구화시대 인터 아시아적 시공간]

- 아이화 옹이나 피터 스미스의 경우 ‘아시아성’이나 ‘트랜스내셔널리티’라는 지역/초국가 범주가 전지구화의 과정에서 설정

- ‘포스트 지구화’와 ‘인터 아시아’라는 시공간적 문제설정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전화 양상에서 폭력적으로 대상화되었던 주변의 시각에서 그 대안적 지역성이나 그것이 수행되는 도시라는 장소들은 식민-냉

전-전지구화라는 각 단계 모순의 점철과정에서도 반제민족해방운동과 탈냉전 비동맹운동, 반지구화운동 등 부단한 극복대응의 항쟁을 지속해왔다.

- 그 자본주의의 구성적 외부에서도 복수성의 정치가 개진되어 옴에 따라 전지구적 지역화의 추세가 가능
- 아시아에서 탈식민 민족해방운동과 탈냉전의 지역주의의 대두와 전개, 그것이 대다수 아시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존재의 구성과정을 추동했던 복수성 정치의 과정이 오늘의 아시아를 구성해왔다
- 서구의 탈구조주의 입장에서 서구와 아시아, 전지구화와 국가, 경제와 정치 등 각종 이분법의 해체는 문제의 발본적 해결을 위한 정치력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포스트 지구화 3; 도시화]

1. 한국에서 도시화과정과 광주의 도시화

1) 식민지시대 도시화

식민정부의 도시계획: 조선시가지계획령 朝鮮市街地計劃令 Planning Town ” (1934년)“ ;‘용도지역지구제’(주거, 상업, 공업, 녹지 및 혼합)과 4개의 용도지구(풍치, 미관, 방화, 풍기). 대한민국 근대 도시계획의 핵심정책수단

2) 냉전분단체제시대 도시화

조국근대화 도시화: 압축적 근대화와 유희노동력의 창출

; 1962년 도시계획법(‘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목적)

; 197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도시의 건설 · 정비 · 개량’(1968년 일본의 도시계획법 제정이 한국의 1971년 법 제정에 영향

위 양 법 모두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이라는 성격 수용, 법의 우선순위로 볼 때, 도시의 ‘정비나 개량’보다 ‘건설’ 측면 부각.

; 1971년법 개정도 도시계획을 ‘시설의 계획’,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

; 도시화와 제조업 축성 산업단지

- 지구화시대 Globalization

: 아시아 금융폭풍

: 산업의 구조조정과 첨단산업/문화산업

전통적 제조업의 후퇴와 정보화산업, 문화의 경제화

: 공장 이전

- 포스트 지구화시대 Post Globalization

: Smart Cities

: 이주와 정주의 탈경제적 변형

: 지구적 재구성

: 노동의 재구성과 새로운 공간화 실천들

구로공단	1960년대 제조업의 중심지 1970년대 중화학중심으로 국가정책이 이동 1980년대 정체가 돌입, 낙후화. 그러나 작은 제조기업들은 여전히 존재. → 구로공단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정책) 장소성 무시, 재영토화 과정, 산업젠트리피케이션
전체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 된 봉제마을 1970년대 봉제공장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DDP 건축(봉제산업과 무관) 창신동의 봉제, 종로의 귀금속, 을지로의 조명·도기 DDP이후 DRP탄생, 젊은 예술가들 유입 예술가들의 공동체, 그러나 주민들과의 연대는 없는 상태 도시재생 정책의 강제성(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 관광자원화와 봉제산업의 활성화의 우선순위 경합)

[Asia in Mobility & New Affiliation]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 一掃而除的 政治場所]

－ 노선논쟁의 소멸

； 반신자유주의전선을 견인해온 진보진영의 노선이 현실정치를 모르는 ‘추상적인’ 것으로 비판되고 배제되는 가운데 노선논쟁이 사라진 것

－ 경제중심주의의 심화로 정치투쟁전선의 무력화

； 시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논리가 여타 사회관계의 우위에서 사회를 조직·운영하는 원리이자 규범적 준거가 되어 모든 정치투쟁전선자체를 무력화

－ 정치적 접근과 진단의 한계

； 강렬한 정치투쟁의 부지(site)로서의 문화

[계급 형성과 정치의 장소들]

계급형성의 관점과 공간

- 동일한 계급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이 계급의 공동이익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집합체로서 행동하게 되는 과정 혹은 그 결과, 계급의식을 상황의존적인 역사적 산물
- 경제구조, 생활방식, 성향, 집합행위 등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층위의 ‘경합’을 통해 구성되는 집단적 정체성
- 노동계급 형성의 변이를 설명하는 변수들: 산업화 패턴, 정치적 시민권의 개방성, 노동시장의 분절구조, 전통사회의 습속과 규범, 문화와 정치담론, 도시공간이나 노동계급 거주지같은 지리적 요인
- 공간은 계급형성이 일어나는 무대가 아니라 계급형성의 과정에 개입하는 핵심적 요인, 계급을 역사적 산물이자 공간적 산물로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적 계급분석은 목적론적 관점에서 생산관계 상의 구조적 계급위치로부터 계급의식의 선형적 산물 성장

[전지구적 지역화와 아시아 도시들의 전환]

- 전지구적 지역화에 따라 아시아 도시들은 매우 역동적 변화
-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같은 발전국가들의 글로벌 도시들은 물론이고 급속한 도시화가 국가 주도의 대

규모 개발기획 속에서 추동

- 그것이 아시아적 도시화의 지배적 형태
- 아시아에서는 신흥공업국들의 도저한 경제발전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미국주도 금융폭풍, 이후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거대한 산업구조조정과 문화의 산업화
- 한국은 IT산업과 함께 아시아적 문화산업을 주도하며,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메커니즘 구비
-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체 주도로 ‘도시재생’의 문화적 전환
- 대개 해당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각하고 새로운 문화창의산업으로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방식
-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예향’ 등.

광주의 공간 전환

- ‘오래된 도심의 역사적 보존과 문화창의산업을 동원한 도심의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남루한 역사적 지구에 대한 재가치화(revalorisation)’
- 그 역사적 시간성과 남루함의 내용에서 차이가 일어난다.
- 광주는 아시아에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성지
 - 5.18의 공간적 재해석은 단순히 오래된 도시의 남루를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다.
 - .18이라는 역사적 사태를 어떻게 기억·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오늘의 문제에 대응하는 비판적 역사전통이자 미래지향을 열어가는 사상자원으로 삼을 것인가하는 가까운 역사의 시간성에 대한 치열한 공간적 전현의 문제
 - 그 공간화실천은 광주 현지의 역사적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다.
 - 현실 광주는 지방광역도시로서의 존립문제

[5.18 광주]

Gwangju citizens confronted with the special airborne troops in front of Catholic Center on the Geumnam Road, they desperately shouted the abolition of martial law.

Militia were touring the downtown. Citizens were passionately cheering.



[Films]



〈26년 26 Year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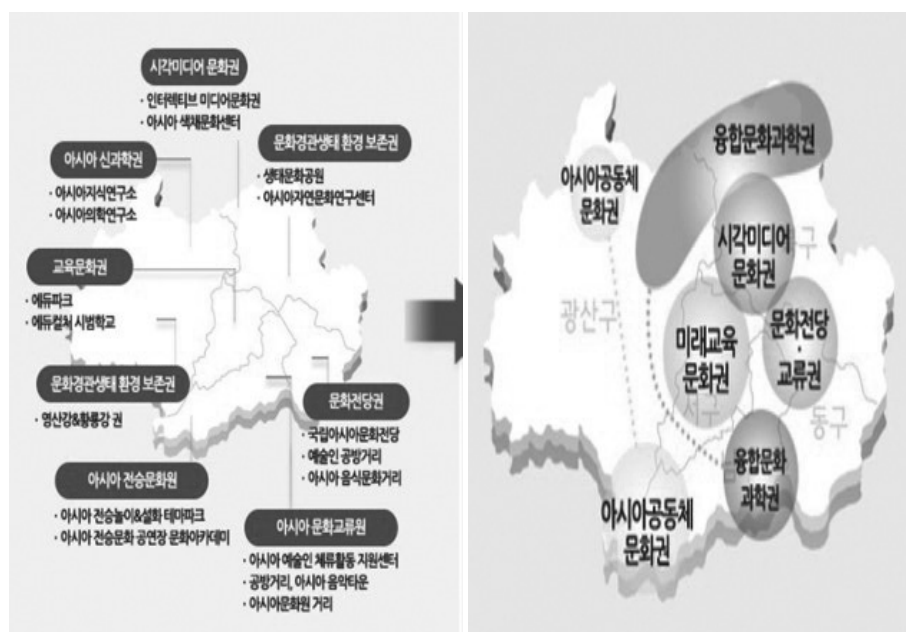


〈화려한 휴가 May 18〉, 2007

[광주의 공간 전환; Inter Asia, Worlding Asia]

-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으로 문화 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도심 지역에 투자 진흥 지구를 지정·조성, 산·학·관·연의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산업 집적지 육성 및 민자 유치 계획
- 이를 통해 도심 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교류·창조·연구·교육 기능과 연계한 관련 기업의 집적화로 자생적인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 유도, 고용·생산·소득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가동
-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계획이 광주라는 특정도시에 문화중심’이라는 의미 부여
 - 그것이 아시아적 정체성을 갖는 다른 도회주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 광주 내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형성과 경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광주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한 재정향문제는 이미 제출
 - 광주는 외부아시아를 향한 문화중심도시를 표방
 - 그러나 아시아를 내재화
 - 광주공단들의 산단으로의 변모와 그 노동시장의 변화와 산단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이주공간들
 - 광주가 인터 아시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자본의 전지구화에 대한 새로운 공간화 실천
 - 내부적 ‘소통’의 수행주체는 단지 광주시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주노동과 결혼이주를 감행한 새로운 ‘월딩 아시아’의 주역들을 내포로 재범주화하여 역동적 광주의 굴기를 예기할 필요

[광주문화도시 ; 아시아 문화중심 Culture Zone in Gwangju]



[광주의 산단들과 탈경계적 주거공간]

① 본촌산단	시	'79. 6	'83.12
② 송암산단	시	'79. 6	'83.12
③ 하남산단	시	'81. 1	'91. 3
④ 소촌산단	구	'81.12	'83. 5
⑤ 소촌농공	시 구	'87.12	'88.12
⑥ 평 동 산 단 [1차,2차]	시	93. 3	'10.11
일반산단	시	93. 3	'10.11
월건외투	시	93. 3	'10.11
⑦⑧첨단과학 산단	국가	92. 4	'12.12
[1단계]	국가	92. 4	'03.12
[2단계]	국가	'07. 10	'13. 9
⑨진곡산단	시	07. 3	'16. 3
소 계 (조성중)	국가1/도첨1/일반2	학 공 (지구지정)	준 공 예정일
⑩빛그린산단	국가	'09. 09	'19.12
⑪도시첨단	도첨	'16. 12	'19.12
⑫에너지밸리	시	'18. 08	'21.12
⑬평동산단(3차)	시	'17. 03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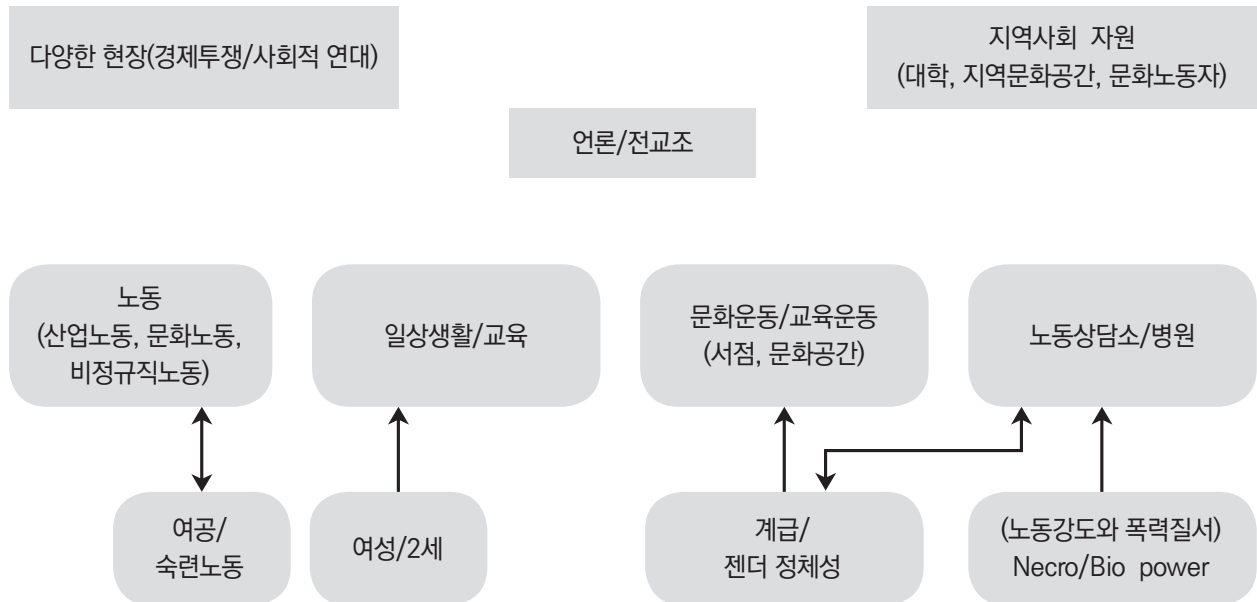
[광주의 새로운 계급구성과 공간 전환; Inter Asia, Worlding Asia]

- 문화운동의 로컬리티 새로운 구성'
- '혁명광주'의 월딩 아시아의 현재를 새로운 계급 형성과 노동자되기, 생산문화의 공간화로 추동
- 그것은 탈정치화가 아닌 새로운 지역문화의 생산과 계급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사회를 여기저기에 만들어가는 문화정치의 기획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욕망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전후체제의 재편을 통한 새로운 다원평등한 공존의 문명세상을 열어갈 통로로 전화

소박한 코뮌 권력의 프레임 2:

노동문화운동의 새로운 로칼리티와 지역문화정치의 공간화 실천

구로 우등불공연예술놀이터



노란 선 너머 세상을 꿈꾸며

민정연 꽃다지 기획자

“우리 집회에서는 민중가요만 틀니다. 내가 꽃다지를 잘 아는데
이건 꽃다지 노래가 아닙니다.”

“아직도 꽃다지가 활동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1997년에 꽃다지에 들어온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 첫 번째 말은 1999년에 꽃다지 3집을 발표한 직후, 한 집회장에서 있었던 일화이다. 한 기획자가 꽃다지 3집을 틀었더니 주최 측의 한 분이 한달음에 달려와 노발대발하며 음반을 튼 기획자를 향해 던졌던 말이다. 꽃다지의 새 노래임을 확인한 다음 반응은 “꽃다지가 변했다. 다른 꿈을 꾸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두 번째 말은 인터뷰할 때마다 기자들이 묻곤 하는 질문이다.

돌이켜보면 꽃다지를 비롯한 노동문화 활동은 저 두 마디 말로 대변되는 고정관념 혹은 관성에 맞선 노래의 길 찾기이고, '이 선을 넘지 마라'와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다.

세상에는 참 많은 선이 그어져 있다. 자본과 권력이 그어놓은 선이 있고 그에 맞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어놓은 선이 있다. ‘너희는 이 선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자본과 권력이 쳐놓은 바깥의 선이야 이미 명확히 인식한 채 지금까지 넘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 오늘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늘은 우리 안에서 넘어야 할 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말랑말랑한 꽃다지, 실망이야

먼저 꽃다지가 넘고 싶은 선은 ‘너희의 노래는 힘차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중가요 혹은 노동가요가 장르를 일컫는 말이 아님에도 언제부터인가 형식적 규정을 하고 재단을 하며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곤 한다. “꽃다지 노래답지 않다. 이건 민중가요가 아니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특히 노동가요는 힘차게 팔뚝질하며 부를 수 있는 네 박자의 행진곡 풍(혹자는 군가 풍이라고도 한다.)이나 장엄한 단조의 노래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고 요즘도 집회에서는 주로 그런 노래를 요구하곤 한다. 꽃다지 활동 초기에 발표한 많은 노래가 위에서 말한 형식의 노래였고, 덕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팀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진 노래들은 발표 직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돌이켜보면 꽃다지는 음반을 발표할 때마다 “꽃다지가 변했다. 애들 다른 꿈을 꾸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콘서트 할 때마다 “싸움이 한창인데 공연장 콘서트가 웬 말이나? 투쟁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야지.”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민중가요의 대표곡이라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 ‘전화카드 한 장’을 발표했을 때는 대중가요 어법을 따르는 말랑말랑한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너무 관념적인 노래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또 ‘반격’은 박력이 떨어진다고, ‘호각’은 추모곡에 열사의 뜻을 따르자는 내용이 없다고 비난받았다. 모던락을 시도한 꽃다지 3집 음반 <진주>는 “이건 꽃다지 음악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부정을 당해야 했다.

2004년, 기존의 꽃다지 음악으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노래의 길을 찾아 나선 이후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요즘 꽃다지 노래가 깊이 있어지고 음악성이 좋아졌다. 그런데 집회에서는 신이 나고 힘찬 노래를 해야 하지 않나? 너무 힘이 없다.”라는 우려섞인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2010년 가을, MR(녹음된 반주 음악)을 버리고 기타 한 대 들고 무대에 섰을 때는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여러 관계자가 나를 찾아와 “설마 기타연주로만 노래하는 건 아니지! 집회에서는 뽕뽕한 MR에 맞춰 노래해야지.”라고 걱정했다.

대중들이 정한 ‘노동가요의 선’을 넘는 것도 힘들었지만, 꽃다지 구성원 스스로 만든 ‘꽃다지의 선’을 넘는 건 더 힘들었다. 달라지자고 다짐을 했지만 너무 더딘 변화의 발걸음에 불안해져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밝고 힘찬 노래에 길든 목소리는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울림을 어찌 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참담했고, 옛 노래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음악색깔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니, 아무리 더디더라도 가야만 했다. 그 새로운 노래의 길의 끝에 서서, 판단이 틀렸다고 자책하는 순간이 온다 해도 가봐야 했다.

2020년 지금, 발표 직후 부정당했던 저 노래들은 꽃다지의 대표곡으로 소개된다. 기타와 피아니카를 직접 연주하며 하는 집회 공연은 참여자들과 좀 더 소통하고자 하는 꽃다지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요는’으로 시작하는 비판과 비난은 여전하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한계를 넘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비난은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될 일이니 별로 억울할 건 없다. 이런 규정이 꽃다지만을 향한 것이라면 말이다. 굳이 옛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꽃다지를 향한 편협한 시선이 노동문화 전반에 걸쳐 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편협한 시선이 어느새 원칙 아닌 원칙이 되어 판단의 잣대로 작용하면서 노동문화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노동문화생태계를 위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꽃다지는 까다로워

가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음향은 하늘이고 음향엔지니어는 신이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 같은 몸상태로 똑같이 노래해도 음향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는 게 노래이다. 열악한 음향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음향은 부르는 자의 책임이 아니나 듣는 이들은 음향도 부르는 자의 실력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때로는 노래를 통한 소통과 감동은 커녕 소음이나 양산하는 ‘노래 못하는 가수’라는 비난을 듣곤 한다. 자연스레 이어지는 ‘노동가요는 음악적으로 별로다. 후지다.’라는 비아냥은 노동문화는 집회 때나 보고 듣는 문화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 가면 화려한 대중문화의 바다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을 맡겨버린다. 아닌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걸 부정할 수 있을까?

공연하는 당사자도 재미없기는 매한가지이다. 시스템으로 인해 애쓴 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소통에도 실패했다는 아쉬움에 속상하고 화난다. 그럴 때마다 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한 걸까?’

꽃다지 활동 24년간 두어 번 현장에서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음향이 너무 안 좋아서 리허설 시간이 길어지자 초청자가 유별나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에 공연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동가수들은 웬만하면 음향 타박을 하지 않는다. 열악한 현장 상황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음향이 여의치 않아 음향 없이 노래한 적도 있지만 이런 태도 앞에서는 못들은 척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일일까?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인정하는 한편, 정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고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여건을 준비하길 바라는 것이 과한 요구인가? ‘오늘 음향은 공연하는 데 너무 힘들었다.’는 말이 까다로운 가수의 불평이 아니라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조언으로 들리기를 바라는 건 욕심일까? 지나친 이해와 불편한 침묵이 서로의 발전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투쟁에 복무하지 않는 노동문화는 유죄?

꽃다지에 들어와서 접하게 된 많은 것 중에 가장 설레었던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였고 다른 하나는 노동문화의 삼주체인 노동조합 문화국, 문화패, 문화단체의 긴밀한 횡적·능동적 소통을 통한 노동문화 만들기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노동자 문화패가 생겨났고 전문적으로 노동문화운동을 하는 전국적 조직과 문화단체가 만들어졌다. 각자의 활동을 중심축에 두고 장르를 넘어선 문화 단체 간의 교류도 활발했다. 90년대 중반부터 개별 활동에 집중하던 노동문화단체들은 97년에 ‘전국노동자문화단체대표자회의’를 결성하여 연대사업을 논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을 통해 노동자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확보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노동문화운동의 네트워크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0년 1월, 노동문화의 삼주체가 모여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이하 노문센터)’를 만들었다. 노문센터 설립을 위해 노동문화활동가 100여 명이 1백만원씩 출자하고 1,000여 명이 1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씩 출자하여 약 2억여 원의 재정을 모았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상근자가 활동하면서 네트워킹을 통한 노동문화 활동가들의 교류와 사업, 노동문화 정책 수립,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노문센터를 통해 모인 활동가들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동문화가 공유하던 화두는 ‘일상’이었다. 노동운동의 도구로써 문선투쟁 중심이었던 노동문화가 노동자 자신의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확장·변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노동자의 계급성이 투쟁의 현장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작용해야만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진단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즉, 집회나 현장같이 주어진 투쟁의 장에서 자기 매체를 중심으로 한 문선공연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스스로 조직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일상의 모든 것과 싸워라.’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일상의 모든 것과 싸워라.’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가 아닌 상품화된 사물의 관계와 같이 물신화되어 인식되는 노동물신주의, 노동자 조직의 가부장적 관계, 가족주의 및 유사가족주의를 공통의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야만 제대로 된 노동운동, 노동문화운동이라는 진단에 기반을 두어, 은연중에 이런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있는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매체를 넘어 노동문화 일반을 아우르는 가치관과 문화관을 세우자는 노동문화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대부분 노동현장에서 거부당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관심했다. 그나마 귀 기울여 들은 현장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지금 노동현장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데 양성평등, 성 소수자, 장애인, 생태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꼬집어내서 일상의 모든 것과 싸우라고 하면, 노동은 희석되고 노동계 현안 싸움조차도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투쟁에서 문선대로서의 활동도 버거운데 더 확장된 활동을 어찌하느냐?”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삶이 자본문화에 방치될 때,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내는 노동시간단축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므로 노동자의 일상적인 삶을 자본으로부터 바꾸어내자는 새로운 모색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2005년에 ‘전국노동자문화단체대표자회의’가 해소됐고, 2006년 4월에 ‘노문센터’가 해산했다. ‘노문센터’의 해산은 단순히 한 단체의 해산이라는 의미를 넘어 노동문화 3주체의 유기적 관계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2005년 노동문화일꾼캠프는 노동문화의 3주체가 공동으로 만든 마지막 전국 사업이었다. 그 후로 십수년간 문화국은 문화담당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이 없으니 중장기 문화정책과 기획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당장 해야 하는 집회 등의 사업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패의 활동은 기존의 활동방식에 머물렀고 단체나 개인활동가들은 각자 활동에 매진했으나 다들 경제적 어려움과 창작의 고통에 시달렸다. 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은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노동문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3주체 모두 재생산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절치부심하는 현실이다.

2020년 현재, 노동문화는 존재하는가?

노동문화는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존재하지도 않는다.

2005년 1월에 진행한 노동문화일꾼 캠프를 마지막으로 노동문화활동가들의 전국적인 교류와 만남의 자리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정책 생산, 노동문화사업의 체계 구축과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가치관과 문화적 동질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패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활동가와 전업 문화활동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문화의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각개전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의 가치관과 행동이 없으니 파편화된 노동문화만 존재하는 것이다. 한때 화려하게 꽃피우는 것 같던 노동문화는 없다. 있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명하는 수준이다. 혹시 고사 직전의 상태는 아닐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활동했다. 꽤 치열히 활동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또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함께 만드는 소통 그 자체인 노동문화를 만들자던 노동문화 3주체의 유기적인 관계는 와해하였고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전의 아름다웠던 문화공동체의 가치는 더 채우고 깊어져야 했지만, 불행히도 그나마도 잊히거나 사라졌다. 노동문화, 공동체문화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다만 그 가치를 채울 내용과 형식, 소통방식은 새로 찾아야만 한다. 과제만을 던지고 있을 뿐 묘수를 제안하지 못한 채여서 부끄럽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느 순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만의 세상에 갇힌 꼴이었던 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어쩌면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나를 막았던 여러 선들에 대한 원망보다 내가 스스로 쳐놓고 넘지 못한 선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이 아닐까?

그래도 가고 싶은 길

꽃다지 기획자로 수많은 현장에서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노동자들을 만났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가슴으로 노래하고 싶었다. 그렇게 노래하다 보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으나,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쫓겨나 무간지옥이나 다름없는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피 터지게 싸우는 우리 곁을 지나는 무심한 사람들, 그들은 왜 우리와 같이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 때로는 무기력감이, 때로는 스스로 깨어있다는 시민들에 대한 미움이, 때로는 우리는 그만 노래해야하는 구닥다리는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 그래서 포기하자니 아직은 ‘꿈’이 있다. 어디엔가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 속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화두가 ‘일상의 모든 것과 싸워라’이다. 노동문화가 투쟁의 현장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삶 속에서 무심코 함께 하며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꽃다지의 노래가 옛날보다 목청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박함과 간절함이 줄어든 건 아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가슴으로 노래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거리로 나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희망가이길 바란다. 또한, 멀찌감치 서서 변화를 기대하며 관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두드려 이 미친 세상과 싸우게 하는 선동가이길 바란다. 사랑과 혁명의 노래이길 원한다.

노동자문화를 위한 문화국의 고민과 활동

- 금속노조 문화국 사례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노동자문화의 특성에서 시작하다

노동자문화는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반영해 존재해왔다. 필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문화라고 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60년대 말 세계적 차원의 공황과 한국의 공업발전의 결과로 70년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은 필연이 되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기폭제로 작용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문화와 문화예술 역시 부흥기를 가져왔다. 민주노조운동은 전노협부터 시작해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고, 양적인 확대를 꾸준히 이어 왔다. 그 속에서 노동자문화도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투쟁과 조직력의 고저에 따라 부흥과 정체를 겪어왔다.

노동자문화는 ‘노동자계급의 존재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계급성과 투쟁성, 생잔의 주체이기에 갖는 창조성, 현사회의 모순을 투쟁으로 바꿔내며 새로운 사회를 가져올 주역이기에 갖는 변혁지향성,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 성의 특성’ 갖는다. 금속노조 문화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문화의 특성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가의 고민에서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담당자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게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문화담당자 현황

구 분	16개 산별	16개 지역 본부
문화국장	금속, 전교조(전임) 대학노조(비전임)	x
문화겸임	공공, 공무원, 서비스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전남, 광주, 울산, 경남

민주노총 문화국장까지 포함한다면 가맹산하조직 중에 문화국장으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10%, 겸임까지 포함하면 40%가 본조(본부)에 담당자를 두고 있다. 겸임은 중앙의 조직국장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쟁의와 관련한 것으로 문화담당자의 업무를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가맹산하 조직 중에 문화국활동이 활발한 금속노조의 경우도 산하 지부에 문화담당자 비율은 절반 정도다. 현재 금속노조는 20개 지부가 있는데, 이중 문화담당(팀장, 부장)이 있는 곳은 4개 지부, 겸직하며 활동하는 지부는 6개 지부다. 지회단위 중 문화(체육)부장의 비율은 약 6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문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문화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단위에 문화패가 없는 경우 문화(체육)부장의 역할은 문화보다는 체육 쪽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집회시위에서의 문화담당자 역할조차 전임을 맡고 있는 간부에게 이관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¹⁾

2014년 금속노조 문화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골간체계의 복구가 시급했다. 산별노조 중앙-지부-지회 단위의 문화사업 공문전달조차 지부 담당자 부재로 무너진 상태였다. 지부단위 문화담당자 회의를 했을 때 5명 정도가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지부문화담당자가 부재한 속에서 문화패들은 고군분투하는 조건이었고, 문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몇몇 간부들을 제외하면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었다.

먼저 지부문화사업 담당자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부 임원을 설득하고, 지부 내 문화패 및 지회문화부장들 간담회를 진행해 가면서, 담당자가 필요함을 설득했다. 동시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 중앙과 지부 주최의 교육수련회에 공동체프로그램, 노래운동교육, 집회시위기획, 소통관련 프로그램 등 문화교육을 배치했다.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간부들은, 현장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 갔다.

지부단위의 문화담당자(문체부장 및 문화패장)와의 주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배치하도록 조직하며, 년 1회 전국의 문화(체육)부장 교육수련회를 통해 노동자문화교육과 중앙과 지회의 문화사업 사례를 공유했다. 체육부서 역할을 주로 하는 현실도 고려하여, 그 활동에서 노동자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년 1회 문화역량강화 교육으로 공동체활동 진행자훈련수련회를 진행하며, 교육 및 파업프로그램, 단합대회 때 진행할 수 있는 놀이문화 진행자 훈련을 한다.

이런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료축적과 사례전파, 교안마련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자 문화길찾기라는 책자를 두 번 발행했다. (2년의 집행부 임기마다 지속적인 책자 발간을 계획중이다.) 노동자문화가 무엇인지, 투쟁 속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1) 이것은 노동조합 내에서 타임오프 이후 전임간부 수가 줄면서, 부서의 업무들이 통폐합된 결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규지회에서는 문화사업을 간부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하는지를 담았다. 이를 다시 문화담당자, 문화패 교육에 활용하고, 간부들의 인식 확장을 위해 간부교육에 까지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²⁾

문화담당자와 조직담당자들의 교육에서는 금속노조의 집회시위 문화를 함께 돌아보고, 어떻게 조합원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사례도 공유해보고 있다.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점검과 토론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에서 조합원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투쟁의 공간이며, 가장 계급성이 집약되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모와 활동 편차로 인해 지부별 문화담당자회의가 진행되는 곳은 20-25%정도다. 2년마다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지회와 지부 문화담당자들이 교체되어 새로운 임기 때마다 새로운 담당자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 담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전체가 좌지우지 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조직적으로 자료가 축적되고, 사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결과로 남기고, 평가를 조직 내에서 소통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문화부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뀌가며, 문화사업을 확장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패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금속문화패 현황, 2020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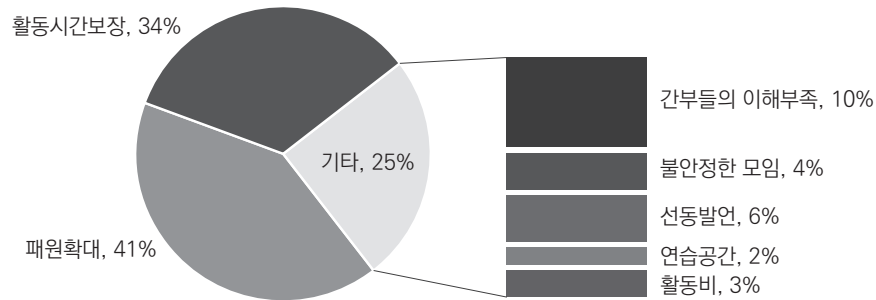
매 체	기업지부(22)	지역지부(23)
풍물	현대차지부2, 기아차지부4, 한국지엠지부1, 현중지부1	충남지부1, 광전지부2, 부양지부1(3개지회),
노래	현대차지부4, 기아차지부2, 한국지엠지부1, 현중지부1	인천지부1, 충남지부1, 광전지부 1, 경주지부 1(5개지회)
몸짓	기아차지부1, 현중지부1	경기지부 4, 충남지부 6, 대충지부1, 광전지부1(3개지회), 경남지부1(4개지회) 구미지부 2, 경주지부 1, 대구지부1,
그외	기아차지부 밴드1, 극패1 현중지부 반주패1, 극패1	

활동하는 문화패 중 금속노조 문화패교육이나 금속노조 문선대에 최근 5년 동안 한번이상 결합한 단위. 지회나 지부의 문화사업비로 활동비를 받고, 지회/지부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위. 문화예술동아리는 제외함. (설문응답 23개 패장, 114문화패원)

2) 문화연구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져서 문화정책이나 노동자문화교육이 현장과 더 활발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패 활동은 조사 시점마다 약간의 성원 차이가 보이는 바 현재 금속노조에서 현장문화패로서 활동하는 인원은 250~28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문화패들은 신규조직화 자체도 어려웠지만, 어렵게 조직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유지하는 게 어려운 조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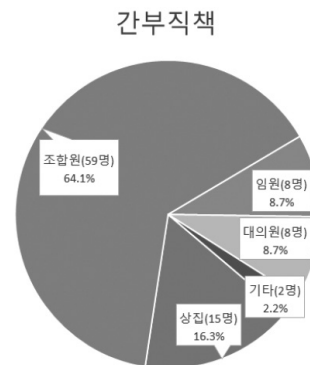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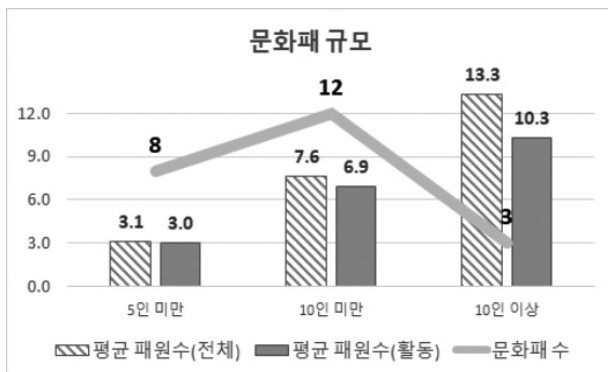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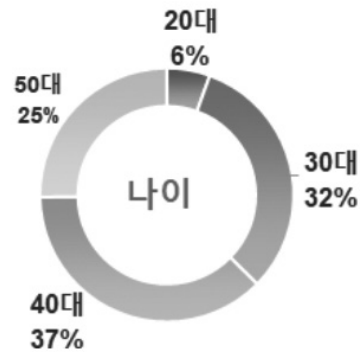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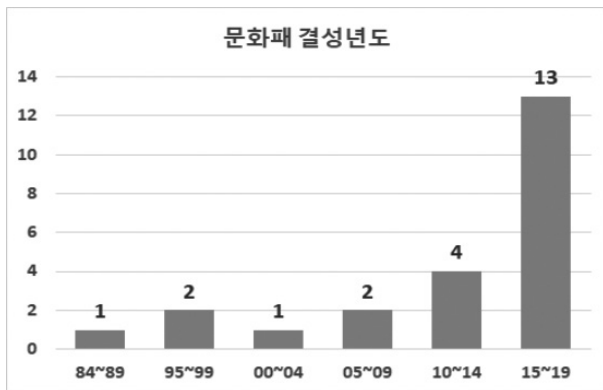


문화패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화에 집중했다. 신규지회와 투쟁사업장에 결합하면서 문화패 조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신설 문화패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의 교육지원, 지회/지부의 지원 체계를 함께 모색했다. 이를 위해 지부별 문화패수련회 교육배치와 지부/지회 문화패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 년 1회 금속현장문화패수련회를 진행하고, 지부와 중앙 집회 때는 문선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문선대가 운영되도록 문화패 일상 강습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매체별 문선대 교육을 지원했다. 이런 활동이 조직 내에서 소통될 수 있게, 금속노동자 신문에 문화패 활동에 대한 연재와 문화사업에 대해 기사로 알려졌다.

다각도로 문화패 활성화를 위한 체계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자 정체됐었던 문화패 조직화의 성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매년 4~5개의 신규문화패 단위현장에서 조직되고 있다. 문화패가 활성화되면서, 이는 역으로 지부 문화담당자를 세워내고 지부단위의 독자적인 문화사업을 견인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문화국에서 2019년과 2020년 문화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패 동지들은 문화패의 주요한 임무에 대해 1순위로 문화선동을 꼽았고, 2순위로 노동자문화의 발전으로 답했다. 문화패의 활동 중에서 여전히 문화선동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노동자문화의 변별성을 주는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집회시위라는 투쟁의 공간속에서 참여한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데 중요한 기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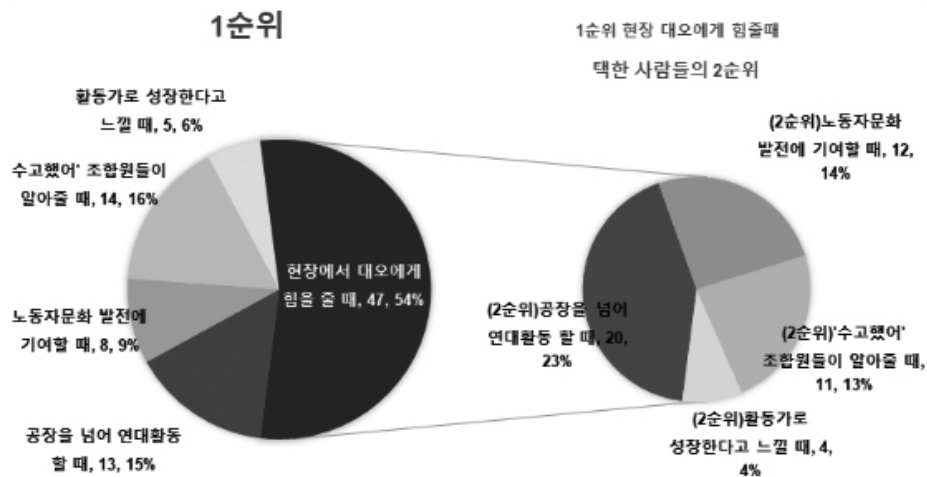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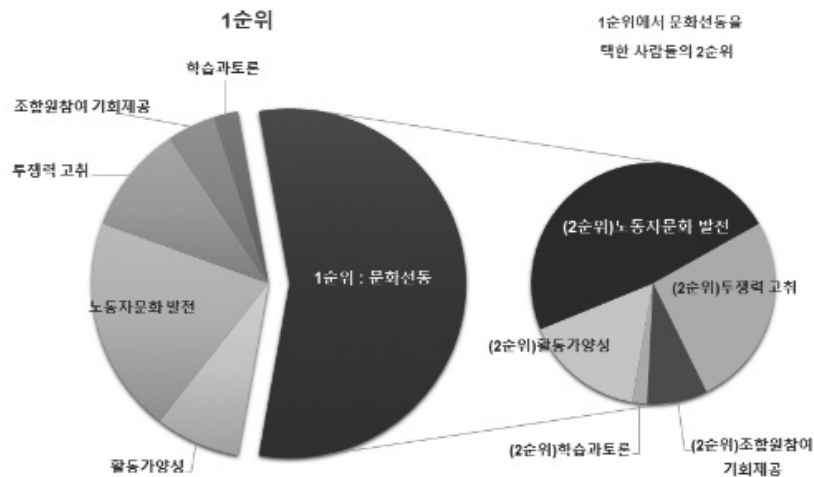
문화패 동지들이 문화패 활동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일은 1순위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준다고 느낄 때를 꼽았고, 공장을 넘어 연대활동을 할 때와 노동자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라고 답했다. 여전히 문화패는 선동과 연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을 활동가로 단련하는 창구였다.³⁾

문화패 조직 확대는 문화패동지들이 가장 어려운 일로 꼽고 있지만, 노래/품물/몸짓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들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활동에 전문문예일꾼들이 다양하게 결합을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현재 금속 문화국에서는 문화패 동지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 중이다. 매체별 창작수련회를 개최하고, 문화패수련회 때 창작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시도해 보고 있다. 직접 창작한 것들은 다시 공연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노조 안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⁴⁾

3) 또한 지회의 민주성이 높고, 일상적인 토론이 활발한 곳이거나 투쟁 중인 단위의 신규문화패들이 조직화가 활발했고, 결성된 문화패는 빠르게 활동의 안정을 찾아갔다.

4) 한편으로는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래와 몸짓을 만드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투쟁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고 몸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주체들의 투쟁에 큰 힘을 준다.



다시 노동조합 '공동체 힘'에 주목하며 소통과 토론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의 복원을 향해

2020년 금속노조 문화국은 '1) 노조 문화사업 체계 구축 및 강화 2) 현장문화패 활성화 3) 문화 교육 · 파업프로그램 발굴 4) 소통하는 조직문화 및 노동자심리치유사업 확장 5) 노동자문화 발전 추동'이라는 다섯 가지의 큰 목표아래 사업들을 전개 중이다.

이중 소통하는 조직문화 및 노동자심리치유사업이 문화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좀 특색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정신건강이나 심리치유사업의 경우 노동안전 분야의 사업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금속노조의 경우 이것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복원하는 것에 주목하여 문화사업의 영역으로 설정해들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됐던 많은 것들을 복원할 수는 없을까?'라는, 노동조합이 가져왔던

‘공동체의 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지지와 공감, 집단적인 공동체힘은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장점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이후 노동조합 안에서도 노동자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금속노조는 2010년부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이를 좀 더 체계화해서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간부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이 일환으로 2019년에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과 마음돌봄 수련회’를 진행했다. 노조라는 공동체의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해나가며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하고자 하는 게 목표다.

부서별 업무가 구분되어야 있는 노동조합에서 문화국의 사업영역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국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건강한 조직문화의 확대재생산으로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단결은 계급성에 기반 한 공동체 성에서 나온다.’ 금속 내에서 문화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계급성과 공동체성은 민주노조의 힘인 ‘학습과 토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노동조합 내의 모든 골간 조직에서 재구축 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조직의 풍토를 만드는 것은 다시 문화국의 역할과 임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문화국은 교육과 활발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문화의 영역과 의미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을 바꾸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까지 변화 발전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사회운동과 노동문화운동

홍명교 플랫폼C

노동문화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대안 문화·공동체 문화·저항 문화다. 노래·미술·연극·문학·춤·풍물·영상 등 문화예술 장르와 대중조직의 집단적 문화 실천을 총칭한다. 80년대를 통과한 이후 일군의 문예 활동가들은 기존의 생활문화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운동과 문화예술운동의 결합을 시도하면서, 노동자 문예운동의 상을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1989년 9월 출범한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은 강령에서 남한 노동자계급의 문예운동은 “날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신식민지적 착취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물질적, 정신적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노동자계급의 자연성장적 운동”에 대해 “노동자계급 의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대중 및 전민중에 대한 노동해방 사상의 선전선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한다. 즉, 문예운동은 “노동자계급과 전민중을 정치의식화시키는 무기”이자, “노동해방 사상의 선전선동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그 때문에 ‘노동해방 문예’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토대, 노동해방 사상, 당파성(토대와 사상을 매개하는 원리)을 계기로 삼아야 하고, 다시 민중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미학적 방법론으로서, ‘당파적인 리얼리즘’을 창작방법으로 삼아야 함을 견지하면서, 이때 창작자는 “장르 고유의 예술언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리얼리즘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창작물에서 ‘특수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창작 역시 조직화”되어야 하고, “조직창작은 개인창작과 공동창작 모두에 적용되는 창작의 원칙”이 된다.

여기까지가 1990년 당시 출범한 노문연의 문제의식(사회변혁의 지향과 목표를 담지하고, 그것을 형식

적·내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변혁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아주 한정된 수준에서만 유지된다. 노동자운동의 변혁적 지향이 점차 축소되었고, 동시에 노동문화운동의 이론적 부위가 정부 정책이나 대중문화 비평으로 쏠리면서 담론의 지형이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운동은 대안적인 문화 양식을 거의 상실한지 오래다. 사회운동의 문화운동 양식이 소비주의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에 휩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전유’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방향이 고양기 대중운동 전략으로서 적합할지라도, 대중운동의 소강기에는 자기 역할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노동자운동이 세대적인 단절을 겪은 이후에는 ‘아름다웠던 30여 년 전’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조직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단, 운동의 소강기라고 해서 오늘날 사회변혁 운동의 정치적 비전이 덜 중요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라는 객관적 정세에 반해 과소결정된 주체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예술의 도전이 필요함을 재확인시켜준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정치·사회적 위기가 폭발하는 오늘날 상황은 어느 때보다 정치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운동은 과거의 전선 운동과 같은 형태가 아닌, 도심에서의 폭발적인 광장 시위와 다양한 부문 운동의 요구가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진폭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도심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홍콩 항쟁, 미국 BLM, 프랑스 노란조끼 등), 한국에서도 6~8년에 한 번씩 대규모 광장 시위(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에 항의한 촛불 시위, 2008년 광우병 시위,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등)가 일어난다. 거리의 시민들은 과거와 같이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기도 SNS를 통해 모여 느슨하게 결집하고, 이내 다시 흩어진다.

이와 같은 광장 시위가 벌어졌을 때에는 다양한 양식의 자생적인 문화 행동이 터져나온다. 대중문화를 다룬 방식으로 전유하거나 비트는 창작물, 행진 과정에서의 흥을 돋구는 리듬 연주나 노가바 폐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충분히 대중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한데 그러다보니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선전선동이나 삶과 일터의 문제(노동 착취 등)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과소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원포인트로 집중된 정치 쟁점만이 부상한다. 통치자에 대한 조롱과 현 체제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공유되며, 그게 아니면 행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명나게 이어갈 수 있는 리듬이 있을 뿐이다. 가령 문화예술적 실천이 꽃처럼 만발한 홍콩 항쟁에서도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 대한 조롱과 풍자만 존재할 뿐, 홍콩 사회에 내재한 경제·사회적 모순에 대한 선전선동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통치자에 대한 조롱에 집중하는 문화 행동이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에서 문화예술 양식은 충분히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모든 공연이나 창작물이 ‘항상’ 심오한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다만, 조롱과 풍자를 넘어, 경제적 착취 현실에 대한 모사가 보이지 않고, ‘현재’를 넘어선 대안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즉, 오늘날 사회운동의 주요한 양태 중 하나인 광

장 시위에 ‘노동문화운동’의 뾰족함이 없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운동과 노동문화운동의 관계는 서로 단절되어 있다. 사회운동 안에는 노동문화운동이 없고, 노동문화운동은 사회적으로 표현될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대중문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중문화의 일부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사회 질서 혼돈과 체제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형식적으로 간취해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 콘텐츠는 대개 그 형식만을 모사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조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런가? 우선 사회변혁 운동의 이념과 사상, 실천이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데 이는 선후 관계로서의 위상을 갖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단절을 가리킨다. 둘은 단순히 문화운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 적대’를 어떻게 표면화할 것인가의 문제, 즉 이념·노선의 문제 설정과 맞닿아 있다. 오늘날 사회운동은 한편으로는 지배/피지배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며, 피해-군중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싸움 안에 갇혀 있는데, 노동문화운동의 결락도 이 문제를 우회하지 않는다. 즉, 노동문화운동에 있어서 ‘내용의 공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이는 동시에 ‘노동문화운동’의 곤란을 가리키기도 한다. 노동문화운동은 저항 양식이고 대안 체제라는 지표를 갖지만, 그것이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통해 대중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가로지르고, 대중의 ‘마음’을 획득하려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문화 양식도 가로질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노동자운동)는 노래·연극·영상·미술 등의 실천에 있어서 대중들의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균열을 겪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면, 운동 바깥의 영역에서 보다 빈번한 실험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좀처럼 교차하지 않는다. 요컨대 노동자운동은 ‘사상의 분단’을 겪고 있다. 형식은 형식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협소해졌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정치)과 노동문화운동(예술)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변혁적인 문예운동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실천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어떤 분석도 허망한 일이다. 따라서 일종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설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에서의 실천을 도모하자는 의미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짧게 말해, 오늘날 사회변혁 문예로서의 노동문화운동을 사회운동과 연결해 사고할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층위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며, 다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 사회변혁운동이 명확한 활로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문화운동과 사회운동의 조우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이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다층의 방향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문화운동의 내용은 변혁적이고 정세적인 기준을 갖되, 형식적으로는 더욱 다양하게 실험되어야 한다. 노동문화운동은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 불평등과 부동산 세습, 노동 착취 등의 모순으로 인해 ‘이미’ 분노해 있는 청년의 정치적 실천의 전망으로서, 정치적 상상력(예술)을 발휘하여, ‘문예적 실천’을 발

굴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노동문화운동의 정치적 상상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가령 민주노총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 사업을 펼칠 때, 그저 ‘세련됨’을 가미해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촌스럽냐, 얼마나 세련됐냐는 형식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중 선전 전술에 노동문화운동의 과제가 없지 않다.

셋째, 조직된 운동 바깥에서 정치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것을 고민하고 개별적으로 실험하는 문화기획자나 예술가들(인디뮤지션, 사회비판적 현대무용가, 독립영화인 등)과 더 잦은 조우를 시도해야 한다. 청년 대중의 현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의 흐름과 의미하는 바를 파악·이해하는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현존하는 ‘대안 문화들’과 사회운동을 연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 조직 운동 바깥의 주체들을 호명하는 실천(전략조직화 사업, 미디어를 통한 선전 사업 등)에 대한 노동문화운동의 고민이 연결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도 심화되어야 한다. 미조직된 노동자계급을 향한 조직화 사업으로서의 문화운동 기획이 필요하다. 기존의 미디어나 문화 양식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가 담지 못하는 정치화된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고 ‘발화’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시켜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문화운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세에서는 이런 노력 없이는 의미효과를 만들 수 없다. 노동문화운동의 한 전략으로서 이 사회의 ‘바깥’을 드러내고, 균열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교란시키고, 나아가 조직함으로써 정세적인 계기를 포착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정치(사회운동)가 새로운 실험을 경유하지 않으면, 노동문화운동은 형식과 교리로만 남을 뿐이다. 반면, 현실과 정세에 대한 망각에 빠져 형식적 과잉,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의 논리에 사로잡혀도 마찬가지로 기만에 빠진다.

루마니아 출신의 철학자 에밀 시오랑(Emil Cioran)은 그의 저서 『독설의 광세』에서 ‘미적 언어의 기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평범한 슬픔을 기이하게 표현한다. 사소한 불행을 미화한다. 공허를 치장한다. 한숨 혹은 빈정거림을 미사여구로 꾸며서, ‘언어를 통해서’ 존재한다.” 나는 이것이 예술의 탈정치화, 사회운동과의 거리두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문화운동

- 전노협과 민주노총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박선봉 전 민주노총 문화국장

1) 1980년대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 과정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문화가 지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김창남, 2005: 68). 노동자문화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도 1980년대 이후이다. 노동자문화운동은 학생운동과 지식인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운동권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탄압과 감시를 피하고 학생 대중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하여 문화서클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였다. 문화서클은 한편에서는 탈춤, 풍물, 민요, 춤, 노래 등 해당 매체에 대한 강습, 시기별 전수, 공연 등을 통해 기량을 쌓고, 다른 편에서는 철학, 노동, 경제, 역사 등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미래의 활동가들을 양성했다. 이렇게 양성된 미래의 활동가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세 달의 공장활동(factory training, 일명 FT)을 거쳐 일부는 공장으로 투입됐고, 일부는 공단 외곽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강습을 하거나 문화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학생운동을 비롯한 전체 운동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두려움, 패배감, 죄책감, 절망감,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반격을 모색해야 했다. 학생운동에서는 학생들만의 자족적이고 관념적인, 계급적인 바탕 없이 공허하기만 한 운동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을 조직하고 연대하여 계급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공장과 농촌으로의 대거 진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운동 역시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해야 했다. 광주의 너무나 놀라운 상황에 우선 급한 대로 사실을 알린 각종 유인물들은 그것이 바로 시(詩)에 다름 아니었다. 다른 형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작속도가 빠른 것도 시의 장점이었다. 시의 응축된 서정성을 음악으로 담아내면서 급격히 부상한 양식은 노래였고, 대중의 힘을 조직화해낼 수 있는 문화적 기법으로 ‘공동체 놀이’, 시민들의 직접 참여 프로그램으로 ‘판화 교실’ 등이 개발됐다(박인배, 1993: 3~4).

당시 지배권력에게는 5.18 광주민중항쟁은 진상을 은폐해야 할 핵심 사안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권력의 취약한 정당성을 은폐하기 위해 폭력적 통제와 교묘한 의식 조작을 뒤섞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구사했다(김성일, 2017).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방송심의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통제 체제를 확대하였으며, 문화공보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납본 필증 교부를 통하여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였으며, 반정부적인 각종 공연에 대하여는 공 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저지하였다(구광모, 1998: 6).

문화운동의 시초가 탈춤부흥운동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왜 하필 탈춤이었을까? 외래 문화에 대항한다는 의미로서의 민족적 정서가 깔려있으면서 그 취향은 다분히 민중지향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신독재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도 자칫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언제 정보기관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빼돌려진 탈을 쓰고 고개만이라도 꼬덕이며 ‘얼췌’를 외치는 것은 ‘은밀한 풍자’의 즐거움을 전해주었고, 마당판의 열린 형식은 암울한 시대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버릴 수 있었기 때문(박인배, 1993: 3)이며, 민중적인 미의식을 탈춤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민중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운동은 65년 서울대문리대에서 최초로 조직된 ‘민속극연구회 말뚝이’를 시발로 하여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의 각 대학에서 조직된 탈반과 그 연대들(소위 ‘연합탈춤반’)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었다(전망과 건설2, 1989: 44).

탈춤부흥운동은 연극, 음악, 미술 등 다른 장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악에서는 민중의 삶을 노래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났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민기였는데, 당시의 그의 노래는 서구 포크송류의 노래였다. 그러나 소위 ‘민족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발굴작업이 거의 모든 문화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김민기는 초기 포크송류의 노래에서 나중에 〈뱃노래〉 등과 같은 민요풍의 노래를 창작하게 되었고, 이런 류의 노래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 한 예가 김영동의 〈어디로 갈꺼냐〉이다. 84년에는 ‘민요연구회’가 발족되었다.(전망과 건설2, 1989: 54) 민요풍이 아닌 가요풍의 노래는 대학 내의 노래반을 중심으로 하여 굵은 줄기를 형성하며 진행되었고, 이것은 다시 83년에 창립된 노래소집단 ‘새벽’으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광주의 ‘친구’, 인천의 ‘산하’, 대구의 ‘노래야 나오너라’ 등의 소집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다 대중적인 집단으로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85년에 창립되었으며 ‘민족음악연구소 준비위원회’가 88년 10월에 발족되었다(전망과 건설2, 1989: 55).

문학의 경우는 60년대에 선구적인 작가가 나타났지만 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민중문학은 꽃을 피워나가기 시작했다. 1974년 창립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문학적인 욕구는 노동자에 대한 수탈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을 때 기존의 문학 장르를 무시하고 쏟아져 나왔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수많은 수기, 일기들(예컨대 석정남의 『불타는 눈물』,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기존 작가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모방할 수 없었던 노동자의 문예물에 기존 문학계는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의 박노해의 등장에는 아연해지고 말았다. 진보적인 전문문학활동가 일각에서는 노동자가 주체인 문학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동자문학반 혹은 노동자글쓰기반을 조직하며 노동운동 주변으로 포진해 들어갔다.(전망과 건설2, 1989: 55~56).

진보적인 미술운동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0년대의 10여년간 김윤수와 원동석의 비판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비평활동을 토대로 하여 80년 11월 ‘현실과 발언’ 창립전이 개최됐다. ‘현실과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미술계 내의 활동과 함께 젊은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83년에 ‘두렁’, ‘땅’ 동인이 결성되었다(전망과 건설2, 1989: 56). 김봉준 등이 중심이 된 ‘두렁’은 전시장 중심의 기존 미술 행태를 벗어나 민중, 대중과 직접 만나기를 원했고 미술 작업 자체도 탈 제작, 만화, 민화, 불화, 걸개그림 등 새로운 장르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들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조직들과 연계하면서 미술 자체뿐만 아니라 미술운동이라는 문화운동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나갔다. ‘한국 미술 20대 힘전’은 젊은 작가들이 강력한 현실 비판과 운동성을 표출하고자 시도했던 기획이었는데, 이 전시가 좌경용공으로 몰려 탄압을 받게 되면서, 미술운동권은 당국의 탄압에 맞서 방어력을 키우고 또 전국적인 미술 운동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결실로 그해(1985년) 11월 22일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이 탄생한다(김종기, 2012: 15~17). 민미협 성원들은 1987년 초봄의 임금인상투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용기를 북돋는 노동 포스터 및 전단에 응용할 수 있는 판화를 구로공단 및 인천공단에 보급했다. 그리고 구로공단 현장 조직과 결합하여 새로이 창간되는 노동자만화신문(기독교노동자총연맹 발행)을 제작하기도 했다. 노동자만화신문은 87년 5월부터 88년 2월까지 발행되었는데, 노동운동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라원식, 1992: 5~7).

진보적 연극운동과 노래운동이 대학 내 동아리의 활동에서 싹터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운동의 움직임 역시 1979년 서울대 영화동아리인 알라성영화연구회(이하 ‘알라성’)의 결성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알라성’은 1980년 봄에 초보적인 기록 활동을 하며 진보적 문화운동으로 발을 디뎠고, 이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면서 1982년 서울영화집단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영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단체의 이름으로 두 편의 단행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학민사, 1983), 『영화운동론』(화다, 1985)을 엮어 출간하면서 서울영화집단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내놓았고, 1980년대 전반에만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가 결성되어 영화운동의 예비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서울영화집단은 서울지역 다른 소규모 영화운동 단체들을 통합하여 1986년에 서울영상집단을 발전시키는 등 양적·질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의 영화운동은 주로 비디오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장편 극화를 제작하여 노동조합과 대학 등에서 집단 관람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16밀리 필름이 사용됐다. 영화운동 최초의 16밀리 장편 극영화인 광주항쟁 소재의 <오! 꿈의 나라>(홍기선 감독, 장산꽃매, 1988)가 대표적이며, 노동운동 소재의 극영화 <파업전야>(이은·이재구·장윤현·장동홍 감독, 장산꽃매, 1990), <달힌 교문을 열며>(이재구·최호·김숙·김건·강경환·황길재 감독, 장산꽃매, 1992)로 이어졌다(이영미, 2012b: 18~23).

1987년 한국사회를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역사적 주체 선언이었다. 또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던 노동자문화가 수면위로 떠오른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관리자들에겐 주눅이 들어 꿈쩍도 못하던 노동자들이 우연한 계기에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농성에 돌입하게 되면서, 거북등처럼 견고했던 공돌이, 공순이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확인한, 쪽수로 밀어붙여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 그 무서웠던 관리자들, 사장이 자기들에게 꿈쩍도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가 들어선 이후 관리자들은 아무도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반말을 하려고 하면 당장에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고 먹살을 잡힌 관리자들도 허다했다. 단결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예도 근로자도 아니었다.”(김진숙, 2012)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자연발생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투쟁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 문화활동을 했던 일군의 대학생들이 대거 현장으로 이전을 해서 노동자들을 소모임으로 조직하고,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전개했으며, 공장 밖에서 문화소모임을 결성했고, 노동문제연구소나 상담소 등을 설치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원했다. 그런 성과들이 자본과 노동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현장노동자들의 자각과 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성과로 열려진 공간에서 표출되게 된 것이다.

변화는 노동자들의 의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문화운동의 발전에도 기폭제가 되었다.

“정식으로 노동자문화운동단체를 표방한 단체들은 87년 이후에 생겼다. 극단 ‘현장’, ‘서노문협’, ‘전노문연’, ‘노문연’ 등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끝나자마자 생겼고, ‘노동자뉴스제작단’ 등 영상운동 단체, 민족미술협의회 산하 노동미술위원회도 얼마 후에 생겼다. ‘노동해방도’를 그린 최병수도 현대중공업 투쟁을 보면서 걸개를 제작하게 됐다. 노동자 노래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김호철을 필두로 유인혁, 조남혁 등이 노동가요를 만들었고, ‘노동자노래단’, ‘예울림’ 등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탄생했다. 노동자들의 억눌려있던 문화적 욕구가 표출된 매체가 풍물이다. 당장에 파업투쟁에 쓸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냄비와 솔뚜껑을 두드리다, 공장 담을 넘어 풍물 악기가 들어가고, 현장에서 풍물 강습이 이루어졌다. 투쟁의 공간, 열려진 공간, 해방의 공간에 가장 걸맞은 것이 풍물이었던 것이다. 집단성, 현장성, 공동체성, 신명성, 투쟁의 힘을 북돋는 데는 풍물이 최고였다.”(신재걸 인터뷰)

“87년 7,8,9월 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시위, 집회장이나 노조의 모임에서 급격히 노래들이 많이 불리어졌고, 때맞추어 88년 중반부터는 〈파업가〉, 〈노동조합가〉, 〈팔달아 일어나라〉, 〈단결투쟁가〉, 〈동지여 내가 있다〉 등의 노래가 만들어져 대학과는 구별되는 비교적 독자적인 노동자노래문화가 형성되었다. 학생운동의 정서가 아닌 노동자라는 확실한 물적토대에 기초한 튼튼하고 건강한 운동적 정서, 노동자적 낙관성, 일상적 정서에 바탕을 둔 투쟁정서 등에 있어서 그 이전 대학과 지식인들의 노래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이영미, 1989: 6).

풍물과 노래만이 아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 문학물들이 등장했고, 노동자집회가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 대형화되고 공공연해지면서 노동미술 쪽에서도 대형 걸개그림이나 깃발그림 또는 다량인쇄가 가능한 선전 포스터(벽보그림) 제작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노동조합 소식지 및 노조 투쟁속보 제작에 필요한 만평, 4단 만화, 삽화, 사진 등을 노동자 스스로 생산, 편집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고, 지역노동자문화제 때 걸개그림을 공동 창작하여 지역노동자대중 앞에 선보이며 지역 노동운동의 활기를 북돋기도 하였다(라원식: 1992)

투쟁과정에서 획득된 인식의 확장·발전(계급의식의 보편화)을 위해 교육이나 문화적 향상을 위한 조건도

창출되었다. 단위조합 내 문화부(품물패, 탈춤반, 연극반 등) 활동의 활발한 전개, 지역노조협의회 산하의 연합문화동아리 조직, 보다 전문적으로는 문화학교, 노동교실, 노동학교, 노동자 정치학교 등이 등장했다. 또한 각 지역·업종별 노조협의회마다 문화선봉대가 노조 문화부 주도로 꾸려져 집회·시위, 단위 현장 투쟁에 앞장섰다.(백원담, 2007: 8)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변혁적 노동운동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많은 정치조직들이 87년을 전후하여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정치조직들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혁혁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기도 했다. 초기 정치조직운동에서는 사상적 기반과 주체역량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조직을 건설하려는 ‘조급성과 관념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정치조직을 이념과 노선만을 가지고 형성하려 했다. 정치조직 간에는 자신들의 이론과 노선의 타당성을 실천 속에서 검증해내려기 보다는, 실천적 경험을 담보하지 않는 ‘논쟁’의 영역에서 우열을 가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다른 정치이론과 정치세력을 배타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동실천 또는 상호검증의 구조를 모색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는 심지어 다른 정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났다(유경순, 2017).

노동운동 내에서 벌어진 이론과 사상의 대립, 실천 방안의 차이는 노동자문화운동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노동현장 활동과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지식인 문화예술운동과 노동운동과의 연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노동자문화운동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인식했다. 전자의 입장을 가진 ‘민중문화운동연합’(이하 민문연)은 발전적 해체 과정을 거쳐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문연)(1989.9)을 결성했고, 후자의 입장을 가진 쪽은 지역의 노동자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노동자문화사업단과 지역 노동자로 구성된 문예소집단을 하나로 포괄하여 1988년 11월에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협의회’(이하 전노문협)를 결성했다(김창남, 1989: 14).

전노문협은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건강한 민중주체 민족문화의 창조를 통해 노동운동 나아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노동자 문화창조, 1989. 8)로 놀이터 ‘마당명석’(거제), 노동자문화패 ‘일꾼마당’(광주), 노동자문화패 ‘신명’(구미), 놀이패 ‘베꾸마당’(마산), 놀이패 ‘일터’(부산),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준비위’(서울), ‘노동자문화마당’(성남), ‘울산문화운동연합’(울산)이 참여했다. 전노문협은 기관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제 문화운동은 이른바 지식인 중심의 관념적 사상, 예술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근로민중의 자주적 생활양식 창조운동으로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일상적 확대재생산 운동으로 변화 발전해가야 한다. 사상, 예술 행위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어야 진정한 시대정신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중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문화운동은 인간의 ‘집단의식성’과 ‘자주, 민주성’, ‘창조 투쟁성’을 확대 발전시키는 인간 해방운동에 있어 전형적 ‘대중운동풍토’를 창조하는 것이라 하겠다”(노동자 문화창조, 1989:96). “노동자문화는 열사들의 사진, 우리 민족적인 그림을 걸어 논다고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부터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외세 문화인 청바지, 커피, 콜라 등을 거부하고 대동단결·대동투쟁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끝내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민족문화는 건강하게 창조될 것이다”(노동자 문화창조, 1989: 123). 이처럼 전노문협은 지식인 중심의 관념적 문화운동을 극복하고, 외세문화를 청산하여 건강한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생활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문연은 “과학적 전망을 지닌 공고한 문화운동 조직만이 현 단계가 요구하는 민중적 민족문화의 건설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비판과 파괴에 머물지 않고 창조하고 건설하며,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선 온갖 형태의 문화를 배격, 극복한다. 우리는 고여있는 대중의 수준, 지배권력에 의해 왜곡, 매도된 대중의 수준, 관념에 갇힌 활동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대중의 정태적, 평균적 수준에 민중운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미래를 향한 전진적 문화를 대중에 제시하고, 다시 대중 그 자신에 의해 비판적으로 검증되고 재창조된 문화에 의해 고여 썩는 가능성이 움직이는 가능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동적인 민중성으로 발전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창조적 민중성을 체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전망과 건설 1, 1988: 391)라고 강령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노문협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민문연에서 비롯된 노문연에서도 “노문연은 그간 남한 문예운동을 주도해오던 소부르주아적 세계관과 그 아류적 경향들을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확고하게 뿌리박은 과학적 문예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토대를 마련”(노동자문화통신 창간호, 1990: 14)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밝히면서 전노문협의 활동 방식이 소부르주아적이고 아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1989년 7월 23일 15시, 영등포산업선교회 강당에서는 ‘서울노동자문화예술단체협의회’(이하 서노문협)가 창립됐다. 서노문협은 1988년 약 1년 동안 서울 남부지역에서 노동자문화 활동을 전개해오던 남부지역 노동자문화 ‘공동실천위원회’와 1989년 상반기 임투를 맞이하여 전문문예단체들이 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임투문예준비위’가 ‘서울노동자문화예술활동위원회’(서노문위)로 모아지면서 구성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노민문연(전노문협의 전신)은 1988년 남부공실위 활동 때 조직대상 및 활동대상과 관련해 실천의 장을 달리하였고, 민문연(노문연의 전신)은 서노문위와 서노문협 결성논의에까지는 함께 참여하였으나 노동자문예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이론화의 길을 택하여 그해 9월 노문연을 결성함에 따라 서노문협에의 참여를 중단하였다(박인배, 1993: 9). 서노문협은 “변혁적 관점에서 노동자 문화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의 인간해방과 노동해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약에 명시했고, 사업으로 ①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문화선전 활동 ② 노동자 문화학교 등의 노동자 문화교육 활동 ③ 노동자의 관점에 선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교육 ④ 노동운동, 사회운동, 예술운동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설정하고 있다(서노문협 창립보고대회 자료집, 1989). 극단 ‘현장’, ‘노동자노래단’, ‘노동자 문화공간’, 놀이패 ‘한두레’, ‘동부민주노동자연합 문화부’, ‘민요연구회’, ‘민족미술협의회 민중미술실천위원회 노동미술부’, ‘민족영화연구소’, ‘민중문화운동연합 노동자문화국’,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문화부’, ‘터울림’이 창립 단체로 참여했다.

2) 전노협 시대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 과정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이하 마창노련)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모아 전국의 각 지노협들 중 가장 빠른 1987년 12월 14일에 결성되었다. 마산, 창원의 노동자대투쟁은 울산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창지역의 대공장으로 확산되면서 불붙기 시작하여 8월초 (주)통일의 투쟁으로 그 정점에 이르렀다.

(주)통일 노동자들이 공단 전체의 투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8월 중순을 전후하여 삼성그룹 계열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창원지역 전체가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어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확산된 투쟁은 8월 17일부터는 임금인상투쟁으로 발전했다. 투쟁의 양상도 격렬해져 8월 말 이후 정부의 개입이 노골화되자 국가권력과 직접 맞서서 항의시위와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따라서 국가권력과 자본의 탄압공세가 강화되자 힘만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해졌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 연대를 추구하기 시작했다.”(전노협백서01: 434)

마창노련의 결성을 필두로 해서 1998년 5월 29일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서노협’)'가 출범하고, 뒤이어 인노협이 1988년 6월 18일, 경기노련은 1988년 12월 28일 결성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1월 22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전국 20만 조합원과 14개 지역노조협의회, 2개 업종노조협의회를 대표하는 8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 창립됐다.

전노협은 강령 8트머리인 9조에 “우리는 퇴폐적인 외래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민중문화를 확립한다.”(전노협백서02: 479)는 조항을 넣었다. 서노협, 인노협, 부노협, 대구노련, 부양노련 등의 지노협 강령에는 문화관련 조항이 아예 없고, 구미노협과 진주지역노동조합연합이 전노협의 조항을 글자 하나 바꾸자 않고 그대로 넣었다. 전노협은 규약 총칙 7번 항에 교육, 선전, 문화, 복지후생 등 목적 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전노협백02: 486)이 들어있고, 사무총국 산하에 문화국을 두고 있다. 지노협도 대부분 전노협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지노협은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서노협 등), “회원의 동지에 고양과 건전한 노동자문화 확립을 위한 제반 문화사업”(인노협 등) 등의 조항이 있고, 이런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문화국이 설치됐다.

3당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과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전노협은 정권과의 한판대결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전노협의 초기 문화사업은 이러한 투쟁에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 “전노협은 민자당 일당독재, 장기집권 음모를 민중연대를 축으로 돌파해나가기 위해 범민주세력의 연대기구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투쟁하기로 하였고, 1990년 임금인상 및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위해 강력한 전국적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 지역, 업종별로 ‘임금인상 및 노동운동탄압 분쇄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에는 ‘임금인상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적인 투쟁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반기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노협 문화국에서는 2월 13일 제1차 문화단체 간담회(노문연, 서노문협, 노준위 참가)를 갖고, 범민주진영의 문화집회 개최, 5월 1일 노동절 문화예술제 기획, 임금인상 투쟁 및 노동운동탄압 분쇄 투쟁에 대한 지원 등을 협의하였다.”(전노협백서03: 67)

“1990년 문화사업은 전노협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문화선전·선동투쟁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문화사업의 집행체계를 건설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문화국-문화패-문화단체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의 외부적 연대활동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골간체계건설에 어느 정도 성공함으로써 문화사업의 집행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노협의 조직기반을 다졌다. 한편 문화사업은 각종 투쟁과 행사에 힘있게 결합하여 대회의 의미를 증폭시키고 노동자 문예활동의 새장을 열어나갔다. 특히 임금인상 투쟁 문화사업 연구단 구성, 전노협 문화학교 강사단 구성, 노동절 기념사업, 전태일 20주기 기념사업 등을 통해 문화단체

와의 연대사업을 강화했고, 각 지역과 업종협, 대공장 문화패들이 총결집한 문화선전·선동대를 꾸린 것은 문화사업의 최대 성과였다.”(전노협백서03: 382) 이러한 문화사업을 위해 전노협은 절대적인 재정과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2명의 상근자를 배치했다.

전노협은 창립 2년째인 1991년부터 문화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문화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상근자도 1명이 추가되어 3명으로 늘어났다. 1991년 전노협 문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목표로 ① 문화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전국적 문화사업 및 집행에 있어서 지도력을 강화한다. ② 전국문화국장단회의의 심의기능과 기획, 집행역량을 강화한다. ③ 문화패의 지역적, 전국적 연대활동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노협의 하층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④ 지역적, 전국적 공동사업을 통하여 업종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대공장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속에서 대공장 노조와의 연대의 질을 높인다. ⑤ 노조문화사업의 내용적 질을 높이는 각종 연구 및 자료 발간사업을 추진한다. ⑥ 노동자의 정서와 요구, 지향에 조응하는 각종 문예물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하여 노동자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조합원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의식향상에 기여한다. ⑦ 91년의 중심투쟁에 요구되는 전국적 문화선전을 수행한다.⁵⁾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사업으로는 전국문화국장단회의의 심의, 집행역량 강화, 권역별 문화국회의의 정례화 및 지역별 간담회의 지속적인 추진, 신설 문화국 및 취약지역 지원, 업종 문화국과의 연대활동 강화, 대공장 문화활동 지원, 전국적, 지역·업종별 문화선전선동대 조직, 문화패의 지역적 연대활동 추진 및 전국적 조직화의 기초마련, 전국노동자문화패 수련대회 추진, 문화위원회 및 임투문화선전위원회 설치 등을, 교육사업으로는 전노협 문화학교의 지속적인 추진, 제2차 품물 교실 개최, 매체별 문화패 강습교안 통일 및 배포, 문화패 활동 교본집 발간, 문화패 교육에 관한 간담회 조직, 문화국(부) 활동지침서 발간, 선전·홍보사업으로는 91 임투문화선전사업 지역·업종 및 대공장 임투지원체계 구성, 91 임투시 문화활동 지침서 발간, 91 임투시 문화활동 교본집(소품집) 발간, 전국적 문화공연추진(전국순회 검토), 지역문선대의 문화선전사업 지원, 세계노동절 102주년 기념 문화사업(총파업 1주년 기념 문화사업), 전태일 21주기 기념 문화사업, 전노협 창립2주년 기념 문화사업, 각 지역·업종협 문화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 지도, 각 지역·업종 임투문화제, 각 지역·업종 가을문화제 개최, 조사연구 및 보급사업으로는 노동자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문화활동 현황파악, 분석, 노동자 문화강좌 개설 추진, 각종 프로그램, 문화형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문화매체 제작 및 보급, 노래테이프, 91 전노협 노래책 ‘철의 노동자’, 비디오, 영화 등 각종 매체물 제작 보급, 다양한 규모의 공연기획 및 보급, 문화캠페인의 전개 및 연대사업 등의 방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소실되거나, 기약없이 뒤로 미뤄지거나, 희망 사항으로 끝나거나, 부분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91년 전노협 문화국 상반기 활동평가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사업의 측면으로는 상반기 조직사업은 2월의 권역별 문화국회의와 4월10~11일

5) 이 글에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모든 자료는 전노협 문화국장이었던 신재걸의 파일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7차 전국문화국장단회의 정도만을 수행하였다. 이는 4월26일 강경대군 타살사건 이후 정세의 변화와 5월 투쟁과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투쟁의 조직 및 수행으로 인하여 각 지역 간담회, 권역회의를 통하여 지역투본사업에 밀착한 지원·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선대 조직에 대하여는 상반기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임투문선대의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점이다. 이것은 현시기 민주노조운동의 객관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또한 문화사업의 현재 지점과 발전방향을 웅변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교육, 선전사업의 측면에서는 선전선동내용의 전국적통일이 담보되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며, 임투전선의 전반적인 이완과 각 지역간의 편차로 말미암아 각 지역 문선대의 실천내용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역실천에 요구되는 다양한 실천방안의 제시와 사례연구는 매우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반기 주요사업으로서 연구사업이 설정되었으나 문화단체의 여건과 지노협 문화국의 여건상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87년 이후 승승장구하던 문화조직들이 91년을 경과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 문화부의 경우 1년반 내지 2년의 주기로 문화부장이 바뀌고 있었다. 즉, 노조문화부의 사업과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노조 문화사업의 주무 책임부서인 문화부의 사업 기획역량이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 문화부와 노동자 문화패의 관계와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와 당면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문화활동에 문화패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시켜내지 못했다. 풍물패의 경우 노동자 풍물패운동의 전망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풍물패의 주요 실천인 풍물판공의 창작문제에서 한계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대중조직으로서 풍물패의 유효성은 높으나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단사 문화패, 지역연합문화패의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름만 있고 활동은 없는 경우까지 보였다. 또한 지역 노동자 문화패연합 조직화사업은 89~91년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남긴 채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이런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는 문화정책생산에 집중하게 된다.

93년의 문화국 사업 계획을 살펴보자. 사업목표는 ① 지노협 문화국의 강화를 통하여 지노협의 전반적인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문화국 차원에서는 제반의 정책력을 강화하여 지노협 문화국 사업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노협 차원의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지도,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성과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지역의 문화국 사업에 대한 지원 지도를 강화하여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문화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② 92년 하반기에 제출되고 9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별노련 건설사업을 문화사업의 측면에서 즉각 추진해야 한다. 즉, 대기업노조 문화부를 중심으로한 업종별 문화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업종별 문화사업의 중심을 형성해내고, 각사업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업종별 문화사업을 효과적이고 성과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지노협 문화국의 강화와 업종별 문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문화국의 정책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적이다. 즉, 문화사업의 방향과 전망을 시의적절하게 정립해내기 위해서는 문화사업의 기초이론 연구와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이는 특수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차후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현시기의 시급한 이론적인 정리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노조문화정책을 수립해내는 것은 향후의 노조 문화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④ 그밖에 전노협 사업에서 요구되는 각종 문화사업 즉, 전국적 투쟁시의 문선사업 및 각 사업별 투쟁에 대한 문화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문화매체의 제작과 보급사업 및 각종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평가를 보면 조직사업으로 문화국 회의는 16차 전국문화국장단회의(2월 2일~2월3 일 9개지역 20명 참석), 17차 전국문화국장단회의(5월 19일 4개 지역 6명 참석, 18차 전국문화국장단회의(9월 4일~5일 4개 지역 6명 참석), 19차 전국문화국장단회의(10월 14일 4개 지역 7명 참석), 20차 전국문화국장단회의(11월 26일 4개 지역 6명 참석)를 개최해서 그런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 취약지역과 미가입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순회를 통한 집중적이고 직접적 결합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자료나 공연지원 등 부분적인 지원에 한정됐다. 교육사업은 매년 2회 실시되던 문화학교가 추진되지 못했다. 임투문화활동 지침서를 발간(93임투종합지침서에 포함)했고, 영상촬영 교육도 진행했다. 선전·홍보사업으로는 93 임투시 문화선전사업으로 중소규모 문화선전선동공연의 전국순회를 지원했다. 세계노동절 104주년, 전태일열사 23주기 문화사업도 조직했다.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한 노래판권 꽃다지 전국순회 공연은 서울을 비롯 전국 8개도시(마창, 경주, 대구, 부산, 포항, 경기, 거제)에 순회공연했으며, 노동법개정을 위한 사진만화공모전 및 순회전시회도 진행했다.

연구,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문화생활실태조사(12월 말 보고서 발간)를 실시하여 나름의 성과를 도출했다. “전노협은 노동자들의 여가시간과 현재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의 향유 정도를 파악하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문화의 접촉 정도와 노동자들의 이에 대한 평가, 노동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전노협의 문화사업 확대와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원 문화생활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1994년 2월에 발간하였다. 조사기간은 1993년 4월 말~6월 중순이었다.”(전노협 백서06: 484). 조합원 문화생활 실태조사와 결과분석은 노조의 문화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마련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와 실제 단사문화사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매체 이론, 노조문화사업론 등에 대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자문예정책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민예총 노동예술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94년 문화국 사업은 첫째,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에 있어서 노조 문화조직의 강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문화조직의 강화는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 정책연구를 통한 내용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조직 전체,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의 내용으로 정착시키고, 둘째 민주노총의 건설과정에서 필히 제기될 문화조직의 확대와 체계정비를 대비하여 문화국의 연대사업 체계를 정비함으로서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중 문화국의 정책내용을 강화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내용마련의 중요성과 관심을 높여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문화운동을 필두로한 자본층의 문화적 공세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 방향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점은 이후 노동조합 문화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동조합 전체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낸 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대응 방안에 대한 현장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응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이는 95년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할 점

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가 노동조합 내 문화조직의 조직발전 전망을 정립하는 문제이다. 문화국 조직체계의 확대된 구성을 둘러싼 체계 정비와 내용의 마련, 그리고 문화패 조직의 조직발전 전망 즉 단위 사업장 문화패를 골간으로 하여 지역문화패 연합으로 발전하는 문제와 전국 차원에서 문화패의 연합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 조성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94년의 사업에서는 문화패의 기초단위를 내용적, 조직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역조직으로의 발전 문제는 9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게 되었다.

95년은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업이 전개됐다. 95년 문화사업방향으로 ① 지노협 문화국을 내용적으로 강화하여 확대된 지역 문화국 건설을 지원 지도하고,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산별·업종별 문화국, 지역문화국, 그룹문화국의 연대사업체계를 건설하며, 요구되는 문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② 노동자 문화론의 정리, 기업문화운동에의 대응방안, 문화조직의 발전전망 연구 등 문화국(부)를 내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벌인다. ③ 95년 임단투, 노동법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 노동자의 제반 투쟁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④ 문화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와 자본측의 문화정책 시행과 문화적 공세에 대응한 정책개발 및 문화제도 개선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⑤ 새로운 문화매체의 개발 및 보급, 영상사업의 활성화, 노동가요, 각 매체활동을 위한 자료집 등 문화패 조직의 내용강화 및 조합원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을 확대한다. 노동조합 문화부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로 정책 및 기획부서로서의 역할, 조직강화 사업의 골간 부서로서의 역할, 조합원의 의식(이데올로기) 교육 부서로서의 역할, 조합원과 가족, 지역주민 차원으로 확대되는 문화사업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체계도 재편했다. “1995년 전노협의 실·국 회의활동은 문화국과 산업안전보건국에서 진행되었다. 문화국의 경우 전노협 문화국장단 회의를 전국노동조합 문화국 연대회의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문화국 연대회의’를 구성하였고 민주노총의 건설과정에 맞추어 ‘민주노총 건설 문화기획팀’ 산하 ‘전국 노동조합 문화국 회의’로 전환하였다.”(전노협백서08: 261) 또한 문화정책과 문화적 대안 마련을 위해 1월 10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1995년 문화사업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고, 문화단체와의 일상적인 연대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전노협백서08: 277)

한편 전노협 문화국은 6년 활동을 정리하며 전노협 문화국의 위상을 민주노조진영 문화사업의 전국적 집행기관(체계), 조합원을 중심으로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문화정책 생산기관, 노동자 문화 건설주체의 한 축으로서 노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노동자 문화를 보급하고 향상시키는 기관, 전국적 노동문화교육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3) 민주노총 시대 노동자문화운동의 전개 과정

민주노총 교선실(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넘어오면서 문화국의 위상은 크게 하락하여 사업담당자는 3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교육선전실 내에 문화부로 편성됐다)은 1995년 12월 12일자로 제1차 문화담당자회의 공문을 발송했다. 안건은 민주노총 96년 사업 계획, 민주노총 문화사업 방향과 계획(96년 임단투 시 문화사

업 계획 포함), 문화국 집행체계 구축에 대하여, 기타 안건으로 명시돼 있다. 96년 문화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방향으로 ①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을 망라한 문화사업 집행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며, 87년 이후 민주노조의 발전과 함께 정립되어온 노동자문화를 전조합원에게 보급하여 조합원의 문화생활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노동자문화론의 정리, 기업문화운동에의 대응방안, 문화조직의 발전전망 연구 등 문화사업을 내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 연구사업 활발하게 벌인다. ③ 96년 임단투, 노동법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및 기타 사안별투쟁 등 노동자의 제반 투쟁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④ 문화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와 자본층의 문화정책 시행과 문화적 공세에 대응한 정책개발 및 문화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한다. ⑤ 새로운 문화매체의 개발 및 보급, 영상사업의 활성화, 노동조합 문화부/패 일상활동을 위한 자료집 제작, 전국노동자문화제 개최 등 문화부/문화패의 활동내용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을 전개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계획 중 조직사업으로는 전국문화담당자회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화사업 집행체계를 확립한다. 가맹·산하조직 문화국 조직사업을 지원·지도하며, 취약조직 문화국 안정화를 지원한다. 가맹·산하조직 문화국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조직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지도대책을 마련한다. 문화패 조직의 조직정비 및 조직발전 전망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문화패조직의 경우 문화패연합으로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사업으로는 제1차 전국노동조합 문화담당자 수련회 개최(96년 2/29~3/2), '96 문화활동 방침 및 임투문화활동방침 수립을 위한 수련회, 전국노동조합 문화부장단 수련회 개최(96년 9/14~16), 노래, 풍물, 극, 영상, 사진 등 각 매체별 전국교육을 개최한다.

선전·홍보사업으로는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8월 노동자통일한마당, 전태일열사 26주기 기념사업, 민주노총 창립 1주년 기념사업,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박창수열사 5주기 추모제 지원 등 전국차원의 집회, 행사를 조직하고, 가맹·산하조직 차원의 문화행사를 지원한다. 그리고 산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문화사업을 전개한다(민주노총 중앙의 전체사업계획에 따른다). 미조직노동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한 문화사업을 전개한다.

연구·조사사업 및 보급사업으로 조합원 문화생활 및 문화의식 실태조사(96년 7월 중순 ~ 9월 중순), 노동조합문화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자 문화론, 문화조직의 발전전망, 기업문화운동에의 대응방안, 새로운 매체개발 등 노동자의 문화의식 향상과 활동대안 마련을 위한 각종의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국(부) 차원에서 노동조합 문화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문화정책이 정립될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 문화부 일상활동 교재 출판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한다. 자료수집 및 교재발간을 위한 준비작업, 영상사업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보급과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사내유선방송, CATV 에 대한 대응방안과 뉴미디어에 대한 노조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제반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작업을 영상단체와 연대하여 추진한다.

연대사업으로 문화정책과 문화적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의 개최를 위한 문화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영상법 개악반대투쟁 등 문화제도 개선투쟁을 연대하여 추진한다.

96년 민주노총 문화부 사업보고 및 평가를 보면, 민주노총 문화사업은 산업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그

그룹조직을 씨줄과 날줄로 엮는 일사불란한 문화사업 집행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민주노총 창립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첫해인 96년 문화사업의 중점은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을 망라한 문화사업 집행체계를 강고하게 구축하여 민주노총의 장기적인 문화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사업 집행체계의 구축은 조직적 훈련과 조직을 활발하게 가동할 수 있는 내용 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노총문화담당자회의, 각 연맹별 문화국회의, 지역/그룹 문화국회의를 통하여 사업의 공유와 조직적 결집력을 높여나가며, 상반기 임단투 사업 속에서 문선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조직적 훈련과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에서의 문선활동을 통한 전국적인 교류와 조직적 훈련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리고 집행체계의 사업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 노동자 문화론 정리, 기업문화운동에의 대응방안, 문화조직의 발전전망 연구 등 문화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전국의 단위노조 문화조직에게 문화사업의 제반 정책적 내용을 보급하려 하였다.

조직사업으로는 전국문화담당자회의의 5회 개최, 가맹·산하조직 문화국 지원·지도사업은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중 아직까지 문화국(부)가 없는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국의 신설을 독려하고 있으나 해당조직의 여건 상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사업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문화국(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조직에 대한 지원과 사업 독려에 주력하였다. 가맹·산하조직 문화국 조직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지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조직 문화국(부)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려하였으나 중앙사업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각 조직 문화교육 시에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문화패 조직의 조직정비 및 조직발전 전망 특히 문화패조직의 경우 문화패연합으로 신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문화담당자회의를 통하여 문화국(부) 집행체계 정비와 아울러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맹 문화국(부) 체계 정비가 충분치 못하여 논의의 진척정도는 미약하다.

교육사업으로는 제1차 전국노동조합 문화담당자 수련회 개최, '96 문화활동 방침 및 임투문화활동방침 수립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다. 각 매체별 교육의 일환으로 96년 8/31~9/2에 종합매체교실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한 문화부장단 수련회를 당겨서 실시하는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의 위상에 걸맞는 미조직노동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한 문화사업이 문화담당자회의에서 제안되어 노동법개정투쟁 사업과정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중앙사업으로 추진하려하였으나 중앙의 기획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고, 조합원 문화생활 및 문화의식 실태조사, 노동조합문화정책토론회, 문화정책연구사업도 추진하지 못했다.

96년 문화사업의 중점이 전국적인 문화사업 집행체계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내는 것이었으나, 산업별 연맹이 연맹 내 문화국(부) 집행체계를 구축에 주력하면서 연맹 체계의 가시적 성과가 미약한 상황에서 산업별연맹 체계와 지역본부 체계의 문화사업 구조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노총 문화사업체계 즉 연맹과 지역본부, 그룹문화국(부) 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체계에 대하여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하였다. 단, 전국문화담당자회의에서 당면 문화사업의 집행과 평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국적 문화사업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연맹의 문화사업 집행체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보다 확고한 전국적인 문화사업체계를 세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화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문화부, 문화패 조직현황과 활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연맹과 지역, 그룹의 일상사업

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조사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중앙 문화부의 상근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의 문화사업(집회 및 행사의 준비등...)과 가맹·산하조직의 문화사업 및 지원/지도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내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고, 연맹/그룹/지역본부 문화국(부)의 상황도 아직까지 문화국(부)가 공식인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화사업 집행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문화사업 집행체계를 정책적·내용적으로 뒷받침하여주는 문화정책연구사업(노동자 문화론 정리, 기업문화운동에의 대응방안, 문화조직의 발전전망 연구 등)에 있어서도 연구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96년에는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정책토론회 등 문화정책연구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97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노총 문화사업 2년차인 97년 사업 중점은 첫째,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문화국(부)를 연결하는 문화사업 체계 정비를 완료하여 중장기적으로 노동조합 문화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다지는 것, 둘째 문화정책 연구사업을 진척시켜 노동조합 문화활동의 내용적 기초를 다지며, 셋째 전국노동자문화제 개최를 통하여 노동자문화패의 성과를 결집하고 문화패의 교류와 발표의 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노총 문화사업의 조직적 조건은 96년과 비교할 때 그리 개선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주어지는 중앙사업(주로 집회 및 행사)은 내용있는 문화사업을 진척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정책연구사업 역시 문화담당자회의를 통하여 연구기획팀을 금속연맹 문화부, 병원노련 문화국 그리고 문화단체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연구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단체의 내부적인 연구내용 축적과정과 문화국의 역량 충원 또는 역량강화, 그리고 문화연구자의 발굴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당분간 정책연구사업은 문화국 내부에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7년 문화사업의 가장 특기할 사항은 10월 12일 전국노동자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된 문화제였지만 전국노동자 문화패의 독자적인 발표와 성과를 집약할 수 있는 장을 개설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98년 이후 문화제를 정례화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98년 사업에서는 중앙의 투쟁일정과 민주노총 중앙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국노동자 문화일꾼 여름 캠프와 전국노동자 문화제 사업, 민주노총 노래테이프 사업, 전국 순회간담회사업 등 중앙조직으로서의 전국적인 문화사업이 연기 또는 집행되지 못하였다. 98년 문화국 교육사업의 성과는 현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많은 문화활동가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문화조직과 문화사업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문화활동가 교육(11월말 1기 1차교육)을 실시한 점이다. 중앙 문화국은 수많은 집회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일의 하중이 있지만, 5월에 문화차장이 충원되어 집회와 투쟁 시의 역할분담 속에서 하중이 덜어질 수 있었고, 문화교육과 중앙 문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문화정책 연구와 문화활동 방안 연구사업은 민주노총의 재정과 연구팀 구성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 문화국 사업방향은 ① 생존권 쟁취와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및 임단투, 기타 사안별 투쟁 등 노동자의 제반 투쟁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② 문화담당자가 없는 지역과 연맹에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노동자문화가 조합원 대중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다. ④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힘쓴다. ⑤ 문화패들의 전국 조직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⑥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수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매체 개발 및 기존 매체의 활성화(특히 연극)에 힘쓴다. ⑦ 노동조합 임원과 간부들의 잘못된 문화관을 올바른 노동문화관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실질적인 의식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⑧ 문화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사업(연구팀 구성이나 프로젝트 발주)을 통해서 장기적인 노동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

교육사업은 크게 3가지로 계획했다. 첫째는 노동자 문화일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캠프다. 1999년 1월에 개최했던 전국 노동자 문화일꾼 겨울캠프를 보다 날씨조건이 좋은 여름으로 개최 시기를 옮겼다. 여름캠프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일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힘을 확인하는 축제와 교류,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전국 노동조합 문화활동가 교육은 1기(19명)와 2기(11명)를 합쳐 통합교육으로 3회 정도 계획됐다. 지역과 연맹의 문화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을 새롭게 시도했다. 지역과 연맹의 문화담당자들은 각종 집회와 행사 준비 및 진행, 회의, 토론회, 기타 잡무에 시달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 계발을 위한 학습과 재충전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담당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00년 사업평가를 보면, 총연맹의 문화국은 지역과 연맹 전체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문화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입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자본문화에 대항하여 노동문화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내야 하는 책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집회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하중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11월 1차 민중대회를 끝으로 문화국장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고 현재 총연맹의 문화국은 문화부장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2000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 투쟁 때문에 상반기 내내 거리에서 헤매야 했고 이어진 아셈반대 투쟁으로 정신을 차리기 힘든 한 해였다. 계획했던 문화담당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5차까지 진행되었던 문화담당자회의 참가인원수를 보면 1차 7명(중앙1, 지역2, 연맹4), 2차 6명(중앙1, 연맹5), 3차 11명(중앙1, 지역5, 연맹5), 4차 8명(중앙1, 지역2, 연맹5), 5차 4명(중앙1, 연맹3)이다. 이것을 보면 연맹 문화담당자들은 비교적 고르게 참가를 한 반면 지역 문화담당자들의 참가는 다소 들쭉날쭉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연맹은 금속산업연맹이 1.5명에서 2명으로 문화담당자가 늘어났고, 공공연맹과 사무금융노련에도 신입 담당자가 충원되었으며, 병원노련에도 공식적인 문화담당자가 곧 채워질 예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문화담당자가 계속 해서 충원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사업의 집행이 가능해진 반면 지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담당자회의는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문화담당자회의가 한해의 민주노총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2000-전국노동문화일꾼 여름캠프는 ‘일상의 모든 것과 싸워라’라는 기치 하에 전북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8월 26일(토)부터 28일(월)까지 300명 정도의 문화일꾼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민주노총과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 대표자회의, 2000-전국노동문화일꾼 여름캠프를 위한 전

국노동자문화패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2000-전국노동문화일꾼 여름캠프 기획단이 주관을 하였다. 이번 여름캠프의 주요한 성과는 캠프에 참가한 노동문화일꾼들이 자율적인 두레생활 속에서 싸워야 할 일상들을 고민하고 토론하여 캠프 기간 동안 실천해 봄으로써 이후 일터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결의했던 일상과의 투쟁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는 것, 노동과 놀이가 어떻게 일체화될 수 있는가를 영산줄다리기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체득해 보았으며, 고정적인 교육의 장인 수련회 형태가 아닌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형태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화활동가 교육은 1기 4차 / 2기 2차 통합교육을 <TV를 정복하면 세상이 보인다>는 기치로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1회 진행하였고, 2기 3차 교육(노래)을 5월에 진행하였으며, 2기 4차 교육(영화)을 12월 16일(토)부터 18일(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드는 문화활동가 교육은 기수별로 대표와 총무가 있어 스스로 교육을 조직하고 있으며, 중요한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문화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수박 겉 핥기 식의 주입식,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문화활동가들에게 올바른 노동문화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지금까지의 노동문화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매체에 대한 안목을 심화시킬 수는 문화활동가 교육은 계속해서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과 연맹의 문화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이 새롭게 시도됐다. 지역과 연맹의 문화담당자들은 각종 집회와 행사준비, 회의, 토론회, 수련회, 기타 잡무 등에 시달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 계발을 위한 학습과 재충전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화담당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려 했으나 마땅한 교육 주제 선정과 강사 섭외, 서로가 바쁜 조건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 보아야 할 지점은 과연 민주노총 문화국이 노동문화운동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많은 문화패들이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선뜻 이것이 길이니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일상의 모든 것과 싸워라’라는 명제가 하나의 모토가 되어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문화패들에게 제대로 인식, 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고 불분명하다.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에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 어떤 분과에서도 이를 받지 못했다. 연구자가 없고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토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은 다시 문화담당자들에게 되돌아 왔지만 단체도, 문화국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문화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만들어지고, 문화일꾼들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문화운동의 앞길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001년에는 어떤 형태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실마리가 마련되어야 할뿐더러 적극적인 투자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의 문화사업 평가는 전반적으로 암울하다. 민주노총 문화담당자 회의는 연 5회 진행이 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실제로는 결합력도 떨어졌고, 집행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 부분 저하된 감이 없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화담당자들의 2중 3중에 걸친 과중한 업무와 구속, 수배, 병가 등 주체적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한창 뜨고 있는 율동패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문화패는 답보 또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

래패가 새롭게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들어 본지 오래며, 풍물패는 전국노동자대회 같은 큰 행사를 치르기에 힘에 부치는 실정이다. 문화패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새내기 문화일꾼 수련회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제외하곤 다른 사업들은 사업 자체가 유실되었거나 아예 계획도 세워보지 못하고 말았다.

노동자문화를 둘러싼 지형들이 변하고 있다. 예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매체 중심의 문화패 활동이 이미 한계 상황을 맞고 있고, 대중매체를 선봉에 세워 노동자문화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자본문화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문화운동 진영의 대응도 이제는 분명 예전의 수공업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대항 전선을 구축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의 체계가 점점 산별체제로 바뀌고 있고 또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의 대세이고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노동자문화운동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주5일근무제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자본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불리고, 자본의 이데올로기로 더욱더 흡수하기 위한 모든 안배를 끝낸 상태인 반면, 우리 노동 진영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동조합운동에만 목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예에서 문화로 노동자문화운동의 방향 전환을 외치고 실천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있다. 일상의 모든 것과 싸우자는 모토를 세운지도 2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제는 과연 일상의 모든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싸울 것인지, 그 속에서 매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매체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패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현재의 문화패는 해체하고 새롭게 일상과 싸울 전투부대를 조직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부원을 조직해서 싸움을 해야 하는지, 노조 지도부의 비문화적인 사고와 인식은 어떻게 깰 것이며, 점점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가는 조합원들의 의식은 어떻게 해체시키고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무장하도록 이끌어 내야 하는지 등등 이상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문화패들이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사업방향으로는 ① 노동자의 제반 투쟁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임과 동시에 문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쓴다. ② 문화일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르게 체계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본문화 및 노동조합 내에 침투해 있는 자본문화적인 요소와의 문화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한 조사·연구에 힘쓴다. ④ 가맹·산하조직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문화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⑤ 민주노총 문화센터 건설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한다.

사업 평가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는 근근이 격월 1회 문화담당자회의를 진행하였으나 2003년에는 기껏 3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여전히 문화국은 찬밥 신세인지라, 지역과 연맹의 문화담당자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부서의 차지가 되고, 말아 이제는 2개월에 한 번인 문화담당자회의마저 힘들어져 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래, 율동, 영상 등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소통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으나, 풍물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전국노동자문화학교를 통해서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만들려고 했으나 학교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그나마 전국노동자문화학교 준비를 계기로 각 매체 교육자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행인 듯 싶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각 매체의 문화패들 간에 최소한의 소통구조

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민주노총 문화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만큼 중요한 것이 문화소비이다. 건강한 노동자문화를 주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동아리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보려 하였으나, 총연맹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져가긴 한계가 있고, 연맹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진 못한 것 같고, 문화교육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에만 그쳤다.

2003년 사업 중에 가장 심혈을 쏟았던 것은 교육사업이었다. 그래서 새내기 문화일꾼 수련회, 전국 노동조합 문화활동가 교육, 노래창작교실, 전국 노동문화일꾼 문예학교, 전문 문화활동가 교육수련회 등을 배치했었다. 새내기 문화일꾼 수련회는 2년 전에 40여명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그 성과를 이어 받으려 했으나, 전반적인 문화패의 침체로 인한 새내기 문화일꾼의 부재, 상반기 투쟁으로 인한 조직의 피로, 실질적으로 조직을 담당해야 할 문화담당자들의 악조건 등으로 참여인원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체를 폐기해야 했다. 노래창작교실은 1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참가자 중 많은 수가 문화단체에서 창작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 단위사업장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패 수가 적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국 노동문화일꾼 문예학교는 전국노동자문화학교 형태로 준비를 했으나 학교의 상,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있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되어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국 노동조합 문화활동가 교육은 참가자 숫자, 열성도, 교육내용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되었던 집회문화의 문제점(조합원과 지도부의 괴리와 단절, 참가자가 대상화되는 문제, 쌍방향 소통의 단절, 지루한 연설, 틀에 박힌 순서,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함, 참가자의 무관심, 다양성의 부재 등)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민주노총 조직담당자회의에서 2번에 걸쳐 집회문화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2003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비록 기획만으로 끝나긴 했지만 원형무대가 시도되었고, 조합원 현장발언이 실현되기도 했다.

투쟁문화제도 무난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전국노동자가요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순회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보려 하였으나, 긴박한 투쟁 상황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본문화와의 투쟁, 노동조합운동 내의 자본문화적 요소와의 투쟁, 우리의 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편견과의 투쟁, 현장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투쟁, 일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기관지 등 언론 매체에 투고 등의 사업을 하여 분위기 형성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듯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문화단체들과 함께 의욕적으로 펼쳤던 사업은 ‘차별철폐를 위한 100일 문화행진’이었다. 준비과정에서 너무 소모적이지 않은가? 버스투어로 해서 선전선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제기와 의혹의 시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00일 걷기’로 한 것은 여러 모로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차별의 문제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었고, 걷기를 통해서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와의 투쟁을 할 수 있었으며, 일상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정하게 된 것 같다.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자 문화생활 실태 조사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심층분석과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

로 문화사업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생산되기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다. 홈페이지의 노동문화 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문화상품이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성과는 미흡하다. 노동자의 일상영역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과 그 변화를 형성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건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 노동자의 삶을 규정하는 조건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전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의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 연구하고 그 결과를 3/27(목) 19:00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노동자 문화 실태 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외국의 노동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4/2(수)~19(토) 해외문화탐방을 했다. 해외문화탐방은 외국의 노동자 밀집지역 문화 실태,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적 공간(소극장, 공연장, 집회장 등) 탐방, 지역노동문화센터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각국 노동조직의 노동자 문화정책 조사, 집회, 행진, 축제, 각종 공연 관람 및 분석 등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단위사업장 문화패, 총연맹과 연맹의 문화담당자, 문화단체 성원 등 9명이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을 돌고 왔다. 그러나 이번 유럽 문화탐방에서 애초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했다. 준비기간이 짧았고, 사전 지식이 부족했고, 언어의 장벽을 넘기도 버거웠으며,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노동자문화를 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그 흔적을 찾기도 힘들었다는 것이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 흔한 투쟁가요 하나 제대로 없었고, 노동자 문화패가 조직되어 있는 곳도 한 곳도 없었다. 기껏해야 크리스마스 때 공연하기 위한 합창단 정도가 전부였다.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노동자 연극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었고,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나름대로의 노동자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계승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동조합의 역사와 그 운명을 같이 했다는 것이 결론이 아닌가 싶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 나라 모두 노동조합운동이 체제내화 되는 운명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문화도 함께 체제내화 되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정권에 빼앗겨 버리거나 헌납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전쟁미치광이 부시 덕분에 세 나라의 반전집회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외문화탐방의 결과를 객관화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 대중조직에서 노동자문화운동의 전망 수립을 위하여

‘문화연구’라는 학문을 최초로 만든 영국의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은 “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적극적이고 일차적이며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의미에서 문화는 단연코 정치적이다. 특히 대중문화는 단순히 노동계급을 우롱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데 쓰이는 자본주의의 도구가 아니다. 대중이 자본의 꼭두각시가 아닌 것처럼 대중문화 역시 지배이데올로기

의 확성기 노릇만 하지 않는다. 대중문화는 협상과 저항이 동시에 일어나는, 따라서 끊임없이 투쟁이 필요한 살아 있는 정치적 공간이다. 따라서 모름지기 ‘좌파’라면 새로운 대중적 형식들에 단순히 등을 돌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대중문화가 지금 현재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화는 극히 편향적이다. 문화적 텍스트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회적 대립에서 한 편을 지지하게 된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는 영향을 주지 않는 예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텍스트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이라고 했다.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관념들의 집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실천행위로 봐야한다는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는 바닷가의 휴가나 크리스마스 축제는 즐거움을 주고 사회질서의 일상적인 요구에서 해방시켜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음번 공식적인 휴가 때까지 힘을 되찾아 착취와 억압에 견뎌나가도록 본래의 질서 속으로 되돌려놓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적 상황과 경제적 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취향taste’마저 이데올로기적인 범주로 판단했다. 문화의 소비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계급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적 작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배치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문화사업을 분석해보면,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필요로 했으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노동자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정책 연구와 생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연구자들과의 결합과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소통의 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현장의 문화담당자, 문화활동가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연구자들은 이미 1992년에 하고 있었다.

“우리가 ‘문화과학’의 이름으로 진보의 기획에 동참하는 것은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단계 지배세력은 독점자본주의체제의 구축으로 사회의 전영역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그 지배구조를 변혁하고자 한다. 오늘날 문화가 이 재생산과 변혁에 대해 가지는 역할은 아주 크다. 문화는 재생산에 지대한 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 작동의 중심 영역이면서 또한 변혁의 꿈이 마련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현단계 지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의 하나이며 지배구조의 변혁을 위한 한 단초를 여는 일이다. 우리 『문화과학』은 문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보를 통해 변혁에 기여할 것을 창간취지로 삼는다.”(『문화과학』 발간사 중에서)

같은 책에 실린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 모색」에서 이성욱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화라는 심급을 생산, 조직하는 물질적 과정이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유물론적 천착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화운동도 가능치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은 오로지 과학적 문화론의 정초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문예중심의 문화운동에서 명실상부한 ‘문화운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168)

연구자들과 현장 문화활동가들간의 원활한 소통만이 대중조직의 문화사업이 발전하는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중조직의 문화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자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요원하고 불가능

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연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와 노동자, 문화와 정치, 문화와 이데올로기, 생산현장과 문화코뮨, 노동자의 재구성과 문화문제(이주노동자, 문화노동자, 청년들의 보수화, 젠더문제, 성소수자문제, 디아스포라 등등), 미디어와 노동자(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사회적 소통), 문화노동과 문화노동자(한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상 및 문화노동자의 양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정동(Affect)의 변화와 노동자(세대, 청년), 사회적 혐오현상과 노동자(현장의 젠더문제와 사회적 혐오),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도시화가 95%에 육박하는 한국에서 공단 및 공장지구의 해체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와 대응), 노동자의 입장에서 국가 및 지역의 문화 정책 생산 문제, 동아시아 문화의 생산과 조절(문화의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생산과 조절, 노동과 결혼에 의한 이주 속에서 새로운 문화생태계의 탈경계적인 구성의 이해) 등 연구해야할 과제는 무궁무진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상품이 어떻게 생산, 유통, 소비되는지, 그런 것들이 노동자계급에게는 어떻게 소비되는지, 노동자들의 의식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에 대비해서 노동자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운동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분석을 해야 한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문화사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교육사업이다.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문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화활동가들의 문화생산 역량 및 정치적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문화의 산업화시대에 대중문화를 해석, 비판하고 창조적인 문화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의식에 젖어있는 대중조직의 간부들과 이제는 노골적으로 관성화되고 관료화되고 있는 정규조합원들에게도 건강한 노동자계급의식을 되찾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전노협과 민주노총 문화사업 평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문화사업의 소실과 부족한 상근역량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 내에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총 문화국은 조직실 산하에 편성돼 있다. 문화업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생산하기도 힘들고, 과학적인 문화교육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무망하다. 대중조직에서는 1년에 몇 백 번의 집회와 행사를 한다. 문화담당자는 그것만 하기도 벅차다. 이제 그 정도는 조직실의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행사와 집회 기획, 문화패 관리 등은 조직실에서 담당하고, 문화담당자는 정책실에 소속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문화패와 문화활동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이 또한 연구자들과 공동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문화담론 갱신을 위한 몇 가지 고민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20년 전의 풍경

20년 전인 2000년, 서노문협, 노문교협 등으로 이어지던 노동문화운동단체는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이하 “노문센터”)를 출범시키며 노동문화의 새로운 확산을 모색했다. 출범에 앞서 1999년 1년여 간의 지난한 준비과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희미해진 기억이지만 노문센터는 출범 당시 그 이전까지의 투쟁과 사업장 중심의 노동문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방향모색을 제기했다. 바로 노동자의 일상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노문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건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87년 대투쟁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에서 그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어 냈던 것은 바로 노동문화였다. 노동문화는 노동자의 삶과 투쟁 속에서 그 뿌리를 내리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 (중략) 노동문화일꾼들이 일구어온 노동자 자신의 문화를 종합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노동문화운동은 노동(노조)운동과 함께 연대하여 서로의 발전을 일구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노동문화운동의 성과가 있음에도 노동문화는 집회 때만 있는 것, 노동가요는 투쟁할 때만 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 폭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화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사실 당장 필요한 정치적, 도구적 선전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를 문화생활 향유와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부문에 대한 자본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의 문화공세는 구조적으로, 총체적인 것으로 노동자의 일상 생활 속까지 이미 파

고들어 가고 있으며, 노동문화운동은 10여년의 눈부신 성과를 넘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노동자의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며 - 노동문화정책정책센터(준)을 발족하며〉, 장기호, 「현장에서 미래를 45」, 1999.4.

이 문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20세기가 마무리 될 무렵 노동문화운동그룹이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성장했던 노동문화운동의 성과에 대한 자평과 낙관적 기대감 놓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한가지는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의식이다.(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를 문화생활 향유와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부문에 대한 자본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요) 이것이 외부로부터 강제되어온 위기의 국면이라면 노동문화운동 내부에 존재해온 잠재적 위기도 진단하고 있다. 바로 다른 아닌 노동문화운동이 노동자(노동계급)의 일상에까지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다. 노동문화운동이 일상의 문화를 포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도구적, 기능적 활동에 대한 문예활동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성찰과 문제제기는 이미 90년대 초중반부터 꾸준히 있었왔음에 확인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노문센터의 활동은 노동문화운동의 일상성 강화에 무엇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이런 갈급함은 다음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문화'라는 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자신의 문화로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 아닌가.=사실 그걸 부인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문화적으로 크게 소외돼 있다. 문제는 자신의 문화가 없는 계급은 지배계급의 문화에 동화돼 결국 자신의 계급성을 서서히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문화를 만들고 가꿔 자신의 생활과 의식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현장 밖에서도 노동자를 하나로 이어주는 양식과 내용이 중요해질 텐데, 노동문화가 그 중심적 위치로 떠오를 것이다.△그렇다면 노동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문선대, 문화패, 전문문화단체의 활동이 곧 노동문화의 모든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동문화는 노동예술 뿐만 아니라 노동자적인 문화양식과 내용, 의식 모두를 아우른다. 곧 노동과정과 생활, 투쟁 속에서 노동자의 의식과 정서를 담아낸 것이 바로 노동문화다. 그러려면 문화패와 문화단체의 활동이 현장노동자와 튼튼한 교감을 이뤄 정서와 맞닿아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스스로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며 만들어내야 한다.

- 〈"생활 속에 노동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터" - 신재걸 노문센터 대표〉, 참세상89호, 2000.1.

노동문화운동이 진영이 20세기와 21세기의 접점에서 바라보고 있던 문제의식에서 노동자들은 문화에서 소외된 존재로 규정하며 그렇게 때문에 문화의 세기란 말이 유행하던 당시의 주류 문화의 확대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항하는 논리로서 노동문화가 총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면 타당한 정세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문화’에 대한 전통적이거나 협소한 해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인터뷰에서 지적되고 노동자의 문화부재는 기실 매튜 아놀드나 리비스주의 등 영국 초기 문화연구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시민적 교양으로서의 문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폭넓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문화의 계층적 위계화가 갖고 있는 허위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문화 부재라는 시각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노동문화운동, 혹은 노동문화담론이 노동자문화를 주류문화에 포섭시키는 것을 목표로하지 않고 있으며 계급의 생활감각에 기반한 자생성을 지키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위의 지적도 일면적인 측면이 있지만 역시나 문화를 어떤 단수적인 향으로 협소화하며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좌파 리비스주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리처드 호가트의 문화론과 맥이 닿아있는 면이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와 여기에 기반한 소비지향의 대량생산문화가 문화를 타락(오염)시키는 측면을 비판하며 전통적 노동계급의 미학과 생활감각이 지닌 공동체성과 건강성을 이상화시켜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호가트는 1950년대의 대량생산된 오락의 즐거움들은 ‘무책임’하고 ‘대리(만족)’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오래되고 건강한 문화구조마저 파괴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량문화는 그것이 대체하는 소박한 문화보다 본질적으로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상적인, “풍요롭고 충만한 삶”이라 지칭하는 것은 1930년대의 강한 공동체기반의 노동계급의식을 기반으로 한 민중문화다. 이는 (이제는 과거가 되었지만)당대의 노동자들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을 비판적으로 개괄하는 데는 일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새로운 노동문화론을 상상하기에는 복고적인 태도일뿐만 아니라 추상적 당위론으로 흐를 수 있는 약점을 담고 있다.

노동자문화담론의 현재적 고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20여년 전을 복기해보는 것은 노동문화담론이 이 당시의 문제의식과 고투에서 더 깊이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라도 조금은 진전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서이다. 노동문화담론에서 일상의 영토 안에 내려앉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절실한 현재형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노동사회의 형성과 담론장에서의 노동문화 정체성 연구

노동자계급(혹은 집단)의 문화, 이른바 노동자문화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19세기 노동운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서 지칭되는 ‘노동자문화’란 흔히 교양 있는 문화계층으로 여겨지는 시민계급문화(브르주아 문화)로부터 노동자 대중을 분리, 그들이 노동자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마지막으로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자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적 해방을 앞당기

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즉 이른바 시민의 문화, 브르주와 문화에 비하여 자기의식적이며 반문화적인 것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문화’나 ‘사회민주주의적 반문화’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한다. 이는 이 것이 노동운동을 통해 주체화되고 조직된, 계급적으로 각성된 일부 노동자들의 서브컬처라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문화의 일부분을 형성할 뿐이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문화운동에서 표상했던 노동문화란 서구의 노동자문화와 마찬가지로 운동으로서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이념적으로 각성된 특정 노동자 그룹의 문화적 활동을 지칭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동(자)문화의 개념화는 한국 사회의 근대사적 특성에서 노동문화를 추상화시키거나 협소화시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형성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불안정한 측면 때문이다. 후발 산업국가이자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한국의 근대/산업화는 국가 주도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계급의 자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국가와 소수 파워엘리트들이 근대적 산업화의 주체로 자리잡았다. 관료와 재벌을 중심으로 사회의 주도층이 형성되고 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 대중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힘은 매우 비대칭적으로 약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유사하게 엘리트 중심의 산업화를 이룩했던 독일이나 일본에 비교했을 때 식민지 지배와 한국 전쟁이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배계층, 즉 귀족(양반)이나 대지주들의 몰락이 함께 이뤄진 것은 차별적인 지점이다. 한국 사회는 자의적이거나 자체적인 내부동력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는 않지만 폭력적인 외부질서로 인해 기존의 지배질서를 상당부분 해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던 셈이다.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사회의 계급 해체는 해방 이후 산업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계급간 이동의 유연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 양상 중 대표적인 것은 학문을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전통적인(유교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해방 이후 늘 문제가 되는 과열된 교육열과 입시경쟁의 원인은 그것이 계급 이동의 주요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꾸준히 고위 관료와 같은 파워엘리트 계층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고위공직자 임용을 통한 출세가 많은 대중들의 목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상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업가의 신화였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의 친기업적 성격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꽤 많은 창업신화가 쓰여졌다. 하지만 이런 창업을 통한 계급상승의 신화는 90년대 후반 구제금융기를 맞아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이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벤처창업이나 청년창업의 신화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재료가 되고있기도 하다. 이렇듯 계급이동의 유연성과 역동성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은 한국 노동자집단이 계급적 단일성을 인지하거나 문화적 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에 한계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왔다고 보여진다.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도 같이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의식이 만들어지기 힘든 조건이었기 때문이다.(실제 서구사회에는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동자계급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 이동에 대한 열린 가능성과 욕망은 한국 사회 주류 욕망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제3공화국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대적 산업화의 출발은 일제강점기, 나아가서는 조선왕조 후기부터라고 확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1960년대 이전의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외부적 압력에 의해 진행된 조선의 근대적 산업화는 또한 일본제국의 영토적 확장과 연결되어 진척되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의 진전이 일본 본토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식량 공급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으로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변화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데 한국의 1차 산업의 인구 비중은 1961년 78.9%에 이르며 같은 시기 2차 산업은 4.9%, 3차 산업은 15.3%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제2공화국 시기까지의 한국의 산업은 농업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본격적 산업화 시기는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 이후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뤄진 농촌의 해체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 2차 산업(공업) 중심의 산업 재편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80%에 육박하던 1차 산업 인구 비중은 약 20년이 흐른 1983년에 이르면 29.7%로 떨어지며 1988년에는 20.6%, 1992년에는 15.9%로 급격히 감소해갔다. 반면에 같은 시기 2차 산업의 비중은 23.6%(1983년), 28.4%(1988년), 25.5%(1992년)으로 성장했고 3차 산업은 46.9%(1983년), 50.8%(1988년), 58.4%(1992년)으로 증가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업분야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영세자영업 내의 저소득 취업인구 또는 잠재실업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공업 중심의 북한과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으로 국토 분단을 겪게 된 데다, 기본적으로 자원과 자본, 기술축적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경제개발계획 기간의 초기(1962~1973)에는 수입대체산업 부문과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부문의 급속한 확대·개편을 성취시켰으나 그 이후 실시된 중화학공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국제적으로 오일쇼크의 대두로 인한 원료가격의 앙등,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후퇴, 국내적으로는 소비재산업의 미성숙으로 인한 초과수요인플레이션 구조, 전통적 부문과 현대적 부문의 불균형발전에 기인한 이중구조의 심화, 그에 따른 저급노동력의 과잉공급과 고급노동력의 과소공급현상 등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사회를 구축해온 토대라 할 수 있고 노동(자)문화가 형성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급격하게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밟아온 한국의 노동계급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자면 강력한 국가주의적 호명의 과정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자계급의 형성〉(구해근)에서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열전과 냉전을 오가는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체의 좌파적 입장들은 오랫동안 금기시되고 반공주의적 정부가 통치하며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강력한 국가주의적 지배질서(유신체제)가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국가주의적 지배질서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농촌의 이탈하여 새롭게 노동자 계급으로 형성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지배적인 언어는 민족주의, 가족주의, 화합, 국가안보 등 국가적 목표와 관점에서 국익을 신장하는 프로젝트로 정의되었다. 노동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원적 성격인 가치와 재화의 창조와 이를 통한 생계의 유지가 아닌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산업역군”이라는 표현으로 표상되는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우파 매체나 관점에서 자율적 노동자 활동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되었고 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거치며 다소 해소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런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국가주의적인 억압의 일상화와 내면화는 징병제를 골간으로 한 한국의 병영 시스템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 사회는 남북 대치를 명분 삼아 세계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도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역병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로 이어지는 군대에 기반한 강력한 국민 동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가 다시 시작되는 1968년이란 시간적 배경이 국가주의의 강화(유신 체제)가 준비되고 있던 시점이란 점을 감안할 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증가 못지 않게 남한 사회 내부의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것의 일환이었다는 측면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런 군사주의적 사회 질서의 내면화는 한국인들의 학교문화, 직장문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노동자 계층의 문화적 측면에 미친 영향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MF사태와 노동시장유연화에 의한 비정규직 급증이 이뤄지며 표면화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대기업노동자와 하청업체노동자, 중공업사업장과 경공업사업장 간의 위계적 질서와 이에 따른 노동 사회 내부의 갈등과 지배/피지배의 구조가 단지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환경과 업종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아닌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침윤해있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국가주의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재해석될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문화’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것을 확장시켜 한국 노동자 계층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난 보편적 노동자들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왔다.

구해근은 한국의 노동자 계급 운동에는 적대적인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이 “노동자들의 정체성 발달을 가로막았”음을 제기했다.⁶⁾ 그런 원인에 대하여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초기 유럽과 비교할 때, “공동체문화도, 장인적 자긍심도”, “자율성과 독자성을 중시하는 문화도” 없었고, “가족이나 친족 이외의 집단적 정체감을 결여한 채 산업노동에 입문하였”을 지적하며 또한 반공주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같은 냉전적 환경은 노동계급 형성에 비우호적이었고, ‘민족주의 · 가족주의 · 화합 · 국가안보 등 국가에 의해서’ ‘한국의 노동자들 자신들의 산업경험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지배적인 언어가 제공되었’으며, ‘조국근대화’라는 국가적 목표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부지런한 노동과 희생을 애국적인 행위로 칭송했고’, 공장노동자들은 “산업전사, 산업의 역군, 수출의 기수”로 호명되었다는 것이다.⁷⁾ 그리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을 경멸하는 문화적 이미지와 국가가 강제한 산업전사라는 타의적 정체성을 극복하고 노동

6)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2001.

7) 구해근, 같은 책

자로서 자신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게 되었느냐는 라는 질문에 대해 한(恨)과 사회정의에 민감한 정서에 기반한 연대감, 70-80년대 교회나 학생운동과 연계된 야학이나 소모임 활동으로부터 영향 받은 ‘노동자 정체성’의 발달, 80년대 민중운동의 영향에서 촉발된 민중적 지식인들의 〈반헤게모니 담론〉으로 표현되는 목적의식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노동자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인이 되었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런 연구는 노동자 계급형성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는데 큰 성과를 남기고 있으며 그 이전의 노동문화운동론이 노정하고 있던 선협적인 당위론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운동가들이나, 노동문화운동가들, 연구자들이 유사한 관점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화정체성을 보려고 한다는 점이다.⁸⁾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해근의 노동자문화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논쟁의 지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병현은 첫째, ‘노동자들의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이 과연 어떤 성격의 정체성인지, 6,70년대부터 노동자들이 형성해 왔던 사회적 정체성과 질적으로 차이를 갖는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즉 현 시기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집합적 정체성과 노동자 문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질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헤게모니적 담론이었던 근대화 프로젝트 혹은 근대화 담론구성체나 가부장적 가족주의 담론구성체에 의해 대체적으로 결정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구해근의 연구는 역시나 과거의 당위론적 노동문화운동론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활동가들이나 선진노동자에 보다 적절할 것이므로 다소 제한된 〈노동운동〉 담론으로 다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중적 지식인들의 〈반 헤게모니〉 담론이 노동문화활동가나 노동조합운동에 투신한 사람들 이외에 일반 노동자들의 자기 인식과 표현을 위한 언어나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던 지배적인 담론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자 정체성 형성에서 두 담론의 관계는 어떤 성격을 띠며, 과연 6, 70년대의 지식인 담론이 과연 당시의 헤게모니적 담론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 질문은 당시의 교회, 학생, 재야 등 비판적 지식인들의 ‘인간주의적’ 〈노동 혹은 민중〉 담론이 과연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근대화 및 가부장적 가족주의 담론구성체와의 관계는 어떠했고, 자체의 실천과정에서 당시의 노동자들의 정체성에 미친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쟁과정 속에서 반공 담론과 국가 장치를 통한 폭력 등에 의한 대항 담론의 제약은 민족주의적 발전 경로에 관한 논쟁을 내재화시켰고, 당시의 지배적인 담론구성체인 근대화 담론구성체와 가족주의 담론구성체에 닫혀 있었기 때문이란 반론이다.⁹⁾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해근의 연구가 노동운동과 이에 동반한 노동문화운동의 성장기에 있어서 내재적 동력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사태와 이에 수반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이후의 노동운동의 위축과 노동문화운동의 고립 원인의 분석을 설

8) 신병현, 『노동자 정체성은 있는가? : 재현과 가부장체제』, 액티비즘, 2017.

9) 신병현 같은 책

명하는데 있어서는 뚜렷한 설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¹⁰⁾ 이런 지점에 대해 이후 주로 역사적 담론구성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의 노동자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구해근의 연구가 “성장하는 노동계급”이라는 다소 단순한 도식을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열린 가능성으로서의 반론도 존재했다. 김준은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모범근로자’들의 수기 내용 분석을 통해 조명한바 있는데(“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의식,” 『역사연구』, 10호, 2002) 그는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에 대한 선망과 신분상승 욕구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모범근로자 수기’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을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원수 같은 가난’에서 찾으려 하며, 현재의 노동자로서의 삶은 돈을 벌음으로써 벗어나야 할 과도적 시기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나 회사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위해 ‘산업역군’, ‘수출역군’, ‘새마을 아가씨’ 등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불렀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정체성 연구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지식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의식화된 글쓰기를 보이는 노조민주화 담론과는 구별되는 노동자들로, 회사에 실제적으로 동의하는 층과 경제적, 실용적으로 회사 주장을 수용하는 층의 담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기 때문이다. 물신화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회사 및 국가에 의해 유포되는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에 동의하는 이 층에 대한 연구는 노동자 문화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인 체제지향성에 대한 분석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의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이 두드러진 전해진의 연구에서는(“미혼 공장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2003)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사이의 초기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산업구조와 노동공간의 변화 속에서, 대규모 제조업 공장으로 흡수되었던 미혼 여성공장노동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 동안 여성공장노동자들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의 ‘희생자’에 불과한 나약하고 수동적이며 정태적인 존재로만 바라보거나 70년대 후반 일어난 여성노조운동의 거룩한 순교자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인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의 근대적 여성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여성공장노동자들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한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장노동자출신 여성의 이후 삶들은 하층 계급으로 비참하게 머무른 것만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의 과정들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10) 구해근 역시 1990년대 후반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위기 국면을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기로로 설명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인하는 성숙한 노동계급으로의 성장이라는 낙관론과 협소한 노동조합주의에 빠져 내부적으로는 분열되고 외부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비관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전망의 원인을 “한국의 노동계급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투쟁성과 전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약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계급”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계급의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피상적이고 모호한 계급의식, 조직화된 정치조직의 부재, 대안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의 부재를 들고 있으며 강점으로는 강한 저항정신,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첨예한 인식, 강한 연대의식과 정치적 자신감을 들고 있다.

상향이동을 경험하게 되어 지금의 중산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 우리 나라 중산층 중년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규범이나 여성성의 기준을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노동자의 진로에 대해 지나치게 도식화된 시선으로 다루어진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생존전략으로서 결혼을 선택지로 택했다는 논의의 전개에서 논리의 비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구체적 논증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산업화 시기의 여성노동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서술이 없이 뭉뚱그려 다루어진 측면도 있으며 경공업 노동에 집중되었던 일반적 여성노동자들에게 결혼과 사무직 노동자 여성들의 결혼이 동일한 위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논리 전개에서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구해근의 연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성)노동자들이 행한 기념비적인 역할에 대한 존경을 담보한 구해근의 연구가 에드워드 톰슨의 방법론을 통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신화’ 만들기”작업임을 비판한 김원의 논의가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 즉 여공(노동)문화가 지속적으로 ‘저항적’이었다는 이해는 여공(노동) 문화 내부의 균열과 모순 그리고 지배적 담론과 타협하는 과정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칠게 살폈지만, 구해근의 연구에서 시작된 노동자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노동문화담론이 기존에 갖고 있는 목적의식적 하위문화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동자 사회의 일상과 문화를 의식과 무의식, 혹은 전의식에서 좌우하고 있는 계급적 문화정체성의 성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던져주고 있다.

노동문화담론의 정체국면을 넘어가기 위하여

주로 학계에서 이루어진 노동자문화담론, 혹은 노동자문화정체성 연구에 관하여 다소 지루하게 개괄한 것은 바로 20년 전의 노동문화운동에서의 일상성 강화라는 것이 한국 노동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해석과 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학자들의 담론적 연구를 바로 어떤 문화운동의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당한 부분에서의 실천적 성찰을 수반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동문화라는 담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현실대응적 활동이 갖는 한계 지점도 분명하며 이것이 자꾸 노동문화활동이 일상의 문화환경에 개입하지 못한 채 도구적, 기능적으로 주변화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일상과 연계된 노동문화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상당수의 활동방식들은 “노동자”를 “시민”으로 바꾼 채 제도권의 문화정책사업으로 포섭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테면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문화부의 주된 문화정책사업이 되어버린 생활문화진흥정책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내용이나 지향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적인 형식에서는 20여년 전 노동문화진영이 내놓았던 일상 공동체의 문화적 재구조화와 상당한 부분 닮아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20여 년간 문화 영향력에 있어서 국가와 자본의 전능함이 점점 더 막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적 소비재로서의 문화는 첨단기술과 막대한 시장장악 능력을 중심으로 자본이 독식하는 구

조이고 그 이외의 공공적인 영역은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의 사업이 온통 다 좌우하는 구조가 되어있다. 이런 문화 환경은 현실에 반성적이거나 균열을 내고자하는 자율적 활동 전반에 있어서 매우 위축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 과거의 다양하게 존재하던 활동, 활동가, 창작자들이 어느 순간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문화사업의 수동적 수행자가 되어있는 현실은 그런 측면의 일각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데 앞서 언급했던 노동자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예외없이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란 점에서 담론장의 형성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50년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은 단편적으로는 당대의 노동현실의 모순적 상황에 대한 폭로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대로서의 노동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것은 또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물으며 국가등 주류지배질서에서 호명된 산업역군, 근로자가 아닌, 연대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노동자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각성하는 일련의 계기이기도 했다. 요컨대 전태일 이후 갱신되었던 노동운동은 그 출발부터 문화운동의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고 그것이 노동자 정치 운동의 근간이기도 했다. 21세기 이후의 노동문화담론의 오랜 정체와 외소화는 단지 노동문화운동의 퇴조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중심에 둔 정치운동 전반의 퇴조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의 한국 정치를 둘러싼 담론장이 친미노선&친중노선, 정상(국민)국가의 완성, 반일 & 친일 등과 같이 주로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소 봉튼 논쟁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침예한 현실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노동 의제를 전면화한 사회적 지향에 대한 담론장이 주류 정치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거칠게 얘기해서 신자유주의 지배 20년(1997체제)이 지속되면 국가운영원리(신공공관리행정)나 노동과 취업, 그리고 상징 체계(이데올로기, 문화)에 까지 노동의 자리는 아래로부터 무너져버린 셈이다.

당장에 이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담론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야만 하는 것을 몇 가지 제안하며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우선 첫째 노동자문화 정체성 연구의 지속과 갱신이다. 1960년대 이후 전통적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이탈하여 도시로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는 노동자 계급의 원형을 형성했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주체로서의 호명과 형성과정에 대하여 자기 서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이 단일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비균질적인 조건과 생활 지평, 태도, 방향성이 존재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존재했던 다양한 노동과 생활 공간에서 발생했던 서로간의 연결, 형성되었던 제도, 개인적 혹은 집단적 사고, 행위표본 등을 총괄한 노동자 대중의 일상생활의 재구성과 여기서 나타나는 문화적 활동의 추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텍스트와 사회적 컨텍스트,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 산업화 시대 이후 노동문화담론의 대해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유형화를 통해 기존의 노동운동담론에서 다루어왔던 “각성하는 선진 노동자” 서사와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가는 ‘도시 중산층 서사’를 대립적 관점이 아닌 내재적인 동일성의 측면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자문화운동을 “역사화”하는 작업이다. 시간적으로 특정하여 1970년대 중반에서 민

주노조운동이 본격화되는 1990년대에 이르는 민주노조운동시기의 문화 운동과 실천에 관해 꼼꼼하게 역사적 맥락에서의 분석과 함께 한국의 근대화담론, 특히 박정희 체제 이후 지속되었던 이데올로기적 프로파간다 속에서의 국민 만들기, 자유주의적 진영이 지향했던 시민 지향성,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향에 상응하는 노동문화의 실천과 서사화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 시기 이후 노동문화운동이 통치로서의 주류 문화담론이 노동자들의 일상 조건들을 재구성했던 재현방식과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며 어떻게 저항문화적 경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생산할 수 있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의 노동문화담론의 장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지배기의 노동사회 변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편으로는 노동의제 속에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젠더, 소수자, 세대, 생태 등 전복적 정치의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노동문화담론을 갱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와 실천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05 여성분야

전태일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2020. 07. 09 (목) 15시
인권재단 사람 회의실

전태일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 기초

1970년 당시의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2020년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통계를 통해 비교하고 현재의 과제를 찾는다.

□ 형식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각 주제별 10분 내외 길이의 발표
- 전체 발표 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자유토론
- 각 주제별 주토론/질문자 배치

□ 발표 및 진행

- **진행**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1**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통계로 본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변화 : 임금, 고용율, 산업, 노조 조직률 등
- **발제2**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세력화 - 조직화, 대표성, 지위 등
- **토론1**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토론2** :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통계로 본 여성 노동 50년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분석 시점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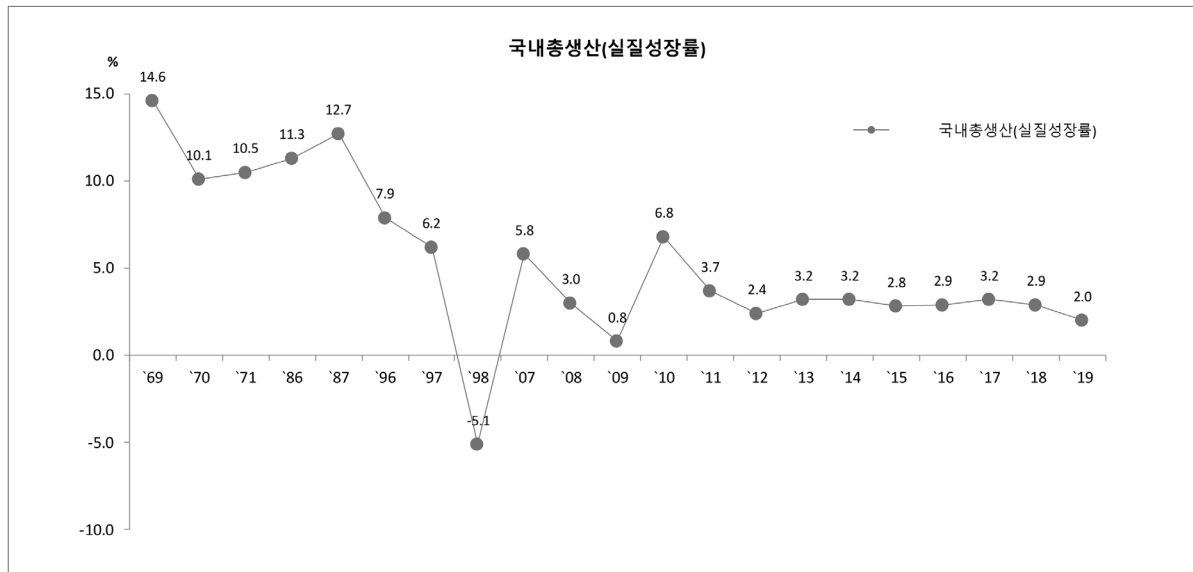
- 전태일 열사 분신 1970년 이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여성 노동 변화를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 전태일 열사 분신 시점인 1970년과 「남녀고용평등법」¹⁾이 제정된 1987년, IMF사태발 외환위기의 1997-1998년과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비교함
 - － 통계 내용에 따라 가용한 시점이 상이하여 비교시점도 상이할 수 있음
- 통계 시점
 - － 1969-1971, 1987, 1997-1998, 2008-2019
- 통계 자료
 - － 통계청(kosis.kr) 및 고용노동부(laborstat.moel.go.kr) 통계시스템 자료 활용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 고용노동부, 「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한국은행, 국민계정

1)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12월 4일 제정됨.

2. 경제

1) 국내총생산

- 한국의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은 1970년 10.1%에서 1987년은 12.7%까지 상승함. IMF 사태로 1998년은 -5.1%p 역성장을 함. 글로벌 금융 위기로 2009년은 0.8%p까지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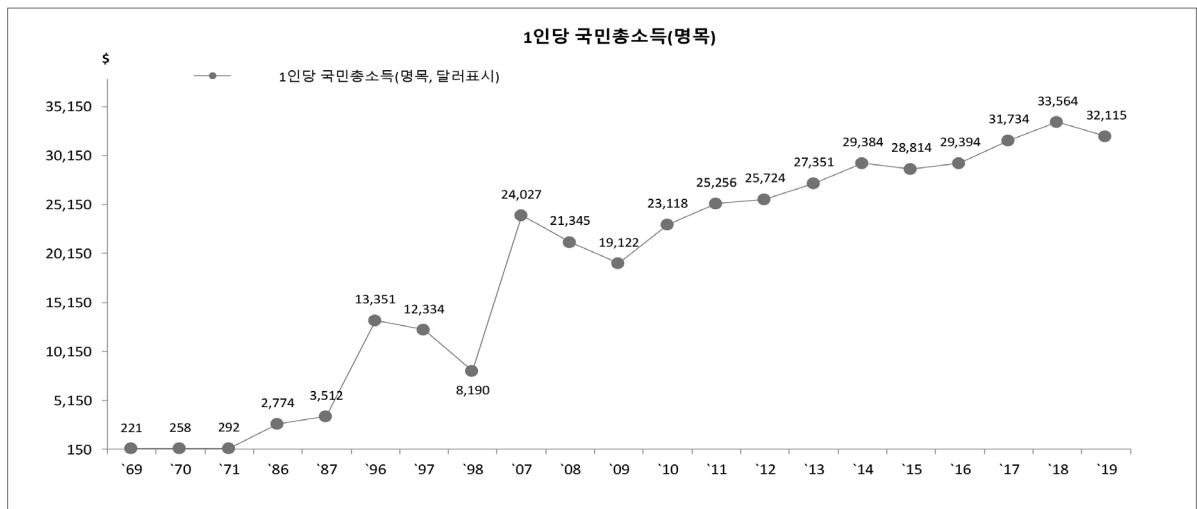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그림 1-1] 국내총생산(1969년 이후)

2) 1인당 국민 총소득

- 1인당 국민총소득 : (1970) 258달러 → (2019) 32,115달러. 124.5배 상승
 - 197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58달러에서 1987년 3,512달러로 상승. 1998년은 8,190달러로 1997년 전년 대비 4,144달러로 33.6% 감소.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은 19,122달러로 전년 대비 10.4% 감소
 -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 31,734달러로 3만달러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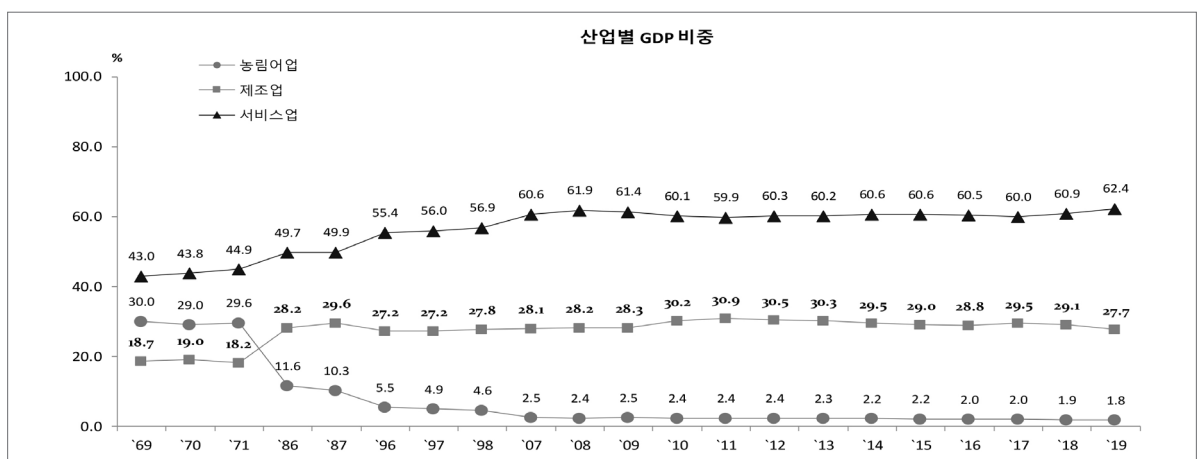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그림 1-2] 1인당 국민총소득(1969년 이후)

3) 산업별 경제활동

□ 주요 산업

- 제조업 생산이 전체 산업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 19% → (2019) 27.7%, 8.7%p 상승
 - 2011년 30.9%까지 상승한 이후 2014년부터 30% 미만으로 하락
- 농림어업 생산이 전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 30% → (2019) 1.8%, 28.2%p 하락
 - 1987년 10.3%에서 1987년 4.9%, 2018년 1.9%, 2% 미만으로 하락
- 서비스업 생산이 전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 43% → (2019) 62.4%, 19.4%p 상승
 - 1987년 49.9%로 50%에 육박, 2019년 62.4%까지 상승



주 : <표 1-1> 참조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그림 1-3] 산업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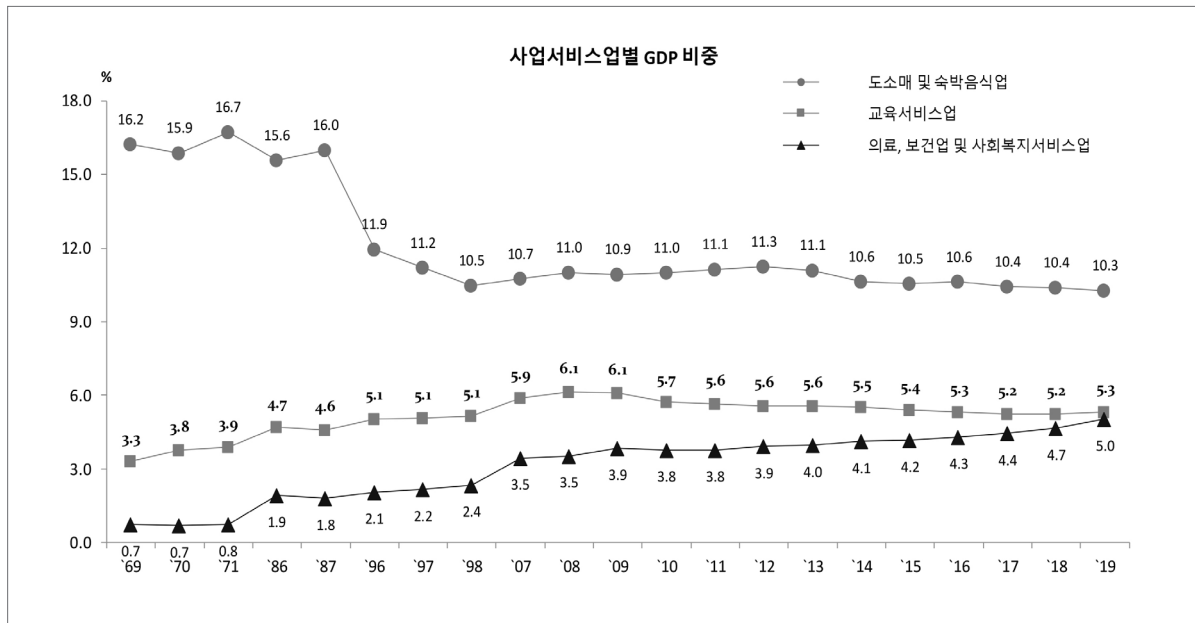
〈표 1-1〉 산업별 GDP(명목)

(단위 : 십억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농림 어업	공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1969	606.48	31.46	377.66	26.21	108.89	869.61	2,020.31	30.0	1.6	18.7	1.3	5.4	43.0	100.0
1970	740.70	41.50	485.40	36.00	130.60	1,116.70	2,550.90	29.0	1.6	19.0	1.4	5.1	43.8	100.0
1971	933.00	46.60	573.00	43.80	138.70	1,413.30	3,148.50	29.6	1.5	18.2	1.4	4.4	44.9	100.0
1986	10,739.60	1,090.80	26,204.80	3,186.30	5,434.20	46,144.00	92,799.70	11.6	1.2	28.2	3.4	5.9	49.7	100.0
1987	11,329.10	1,124.60	32,524.70	3,498.80	6,599.50	54,791.80	109,868.50	10.3	1.0	29.6	3.2	6.0	49.9	100.0
1996	24,349.40	1,754.10	121,265.00	10,244.80	40,733.20	246,792.40	445,138.90	5.5	0.4	27.2	2.3	9.2	55.4	100.0
1997	24,255.50	1,838.20	133,666.40	11,424.70	44,920.20	275,112.20	491,217.20	4.9	0.4	27.2	2.3	9.1	56.0	100.0
1998	22,702.40	1,620.80	136,813.20	12,899.90	38,347.60	280,410.80	492,794.70	4.6	0.3	27.8	2.6	7.8	56.9	100.0
2007	24,881.40	1,823.40	277,677.60	23,629.40	61,401.80	600,170.60	989,584.20	2.5	0.2	28.1	2.4	6.2	60.6	100.0
2008	24,726.20	2,009.00	295,735.10	16,931.70	60,562.50	648,522.40	1,048,487.00	2.4	0.2	28.2	1.6	5.8	61.9	100.0
2009	27,006.50	2,005.00	310,677.20	21,761.10	62,180.70	674,977.50	1,098,608.00	2.5	0.2	28.3	2.0	5.7	61.4	100.0
2010	28,357.00	1,947.40	362,908.20	25,707.30	60,669.40	723,446.60	1,203,035.90	2.4	0.2	30.2	2.1	5.0	60.1	100.0
2011	30,684.40	1,956.30	392,191.40	23,657.00	60,697.60	759,052.10	1,268,238.80	2.4	0.2	30.9	1.9	4.8	59.9	100.0
2012	31,483.50	1,911.70	400,810.30	25,779.00	63,076.60	793,115.50	1,316,176.60	2.4	0.1	30.5	2.0	4.8	60.3	100.0
2013	31,502.90	2,102.30	417,015.40	29,357.20	68,524.70	828,656.30	1,377,158.70	2.3	0.2	30.3	2.1	5.0	60.2	100.0
2014	32,144.40	2,088.50	422,654.30	35,747.10	72,338.70	869,691.70	1,434,664.60	2.2	0.1	29.5	2.5	5.0	60.6	100.0
2015	33,225.20	2,144.80	441,133.50	41,760.40	81,174.20	921,469.80	1,520,907.90	2.2	0.1	29.0	2.7	5.3	60.6	100.0
2016	32,361.70	2,367.70	458,830.60	44,307.80	91,543.00	963,671.90	1,593,082.80	2.0	0.1	28.8	2.8	5.7	60.5	100.0
2017	33,974.30	2,348.80	494,644.90	40,014.20	101,196.60	1,006,839.90	1,679,018.70	2.0	0.1	29.5	2.4	6.0	60.0	100.0
2018	33,150.10	2,128.20	505,650.20	35,153.40	103,323.10	1,057,135.60	1,736,540.60	1.9	0.1	29.1	2.0	5.9	60.9	100.0
2019	31,134.90	1,943.60	485,945.60	36,580.70	105,592.10	1,095,424.30	1,756,621.30	1.8	0.1	27.7	2.1	6.0	62.4	100.0

□ 서비스 산업

-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생산이 전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 15.9% → (2019) 10.3%. 5.6%p 하락
- 교육서비스업 생산이 전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 3.8% → (2019) 5.3%. 1.5%p 상승
-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이 전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1970) 0.7% → (2019) 5.0%. 4.3%p, 7배상승



주 : <표 1-2> 참조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kosis.

[그림 1-4] 서비스산업별 GDP 비중

〈표 1-2〉 서비스업 GDP(명목)

(단위 : 십억원)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서비스업										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1969	2,020.31	869.61	327.68	115.71	37.44	82.52	28.46	20.60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28.27	14.99	47.23
1970	2,550.90	1,116.70	404.90	146.80	54.00	101.60	34.10	28.9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66.10	17.70	66.90
1971	3,148.50	1,413.30	526.60	178.60	69.70	125.30	41.30	37.8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199.20	23.70	88.60
1986	92,799.70	46,144.00	14,444.20	4,818.80	3,707.70	4,484.10	2,370.70	2,981.7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4,989.50	1,803.90	2,155.60
1987	109,868.50	54,791.80	17,557.70	5,380.00	4,672.90	5,161.60	2,900.10	3,858.6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2,002.00	2,501.50
1996	445,138.90	246,792.40	53,190.20	18,967.60	27,113.40	35,565.90	16,174.40	27,274.2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24,147.00	9,223.10	12,633.60
1997	491,217.20	275,112.20	54,946.70	20,784.90	29,764.50	43,088.80	18,454.20	31,861.4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26,642.30	10,699.30	13,981.60
1998	492,794.70	280,410.80	51,607.80	22,240.90	30,245.90	47,064.60	19,325.30	30,911.6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28,426.00	11,587.80	13,647.70
2007	989,584.20	600,170.60	106,258.50	42,590.10	65,868.10	81,024.20	50,004.10	74,804.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58,956.60	34,222.60	28,101.40
2008	1,048,487.00	648,522.40	115,305.30	45,777.80	69,259.50	86,153.20	51,062.40	84,348.5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64,951.40	37,099.70	30,278.10
2009	1,098,608.00	674,977.50	120,130.70	41,865.50	70,527.70	91,108.90	53,637.20	87,635.5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69,371.10	42,384.90	31,545.50
2010	1,203,035.90	723,446.60	132,247.00	45,780.90	77,692.20	93,973.80	55,334.10	98,516.7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72,064.20	45,555.30	33,590.50
2011	1,268,238.80	759,052.10	141,313.00	42,690.90	83,539.40	97,963.10	57,037.30	105,534.0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76,369.10	47,989.20	35,131.80
2012	1,316,176.60	793,115.50	148,070.50	44,128.50	81,294.20	103,066.00	60,214.20	113,053.1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81,486.90	51,610.00	36,826.90
2013	1,377,158.70	828,656.30	152,879.30	47,334.50	79,411.10	108,223.20	63,368.40	122,060.2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86,132.30	54,730.00	37,995.30
2014	1,434,664.60	869,691.70	152,588.20	51,325.90	84,176.30	115,914.20	66,375.10	131,198.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90,616.80	59,058.80	39,312.20
2015	1,520,907.90	921,469.80	160,345.60	58,499.60	88,257.80	122,197.80	69,789.10	141,918.6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95,491.00	63,337.30	39,499.30
2016	1,593,082.80	963,671.90	169,240.80	58,803.10	89,593.70	128,539.40	74,469.70	147,218.4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100,787.10	68,704.80	41,786.50
2017	1,679,018.70	1,006,839.90	175,124.90	58,283.70	96,983.70	133,152.60	76,712.20	154,495.4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107,325.60	74,706.80	42,174.60
2018	1,736,540.60	1,057,135.60	180,424.10	57,925.70	104,189.50	138,192.60	79,536.20	165,545.5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114,862.80	81,128.20	44,654.50
2019	1,756,621.30	1,095,424.30	180,358.00	59,949.60	104,718.60	142,735.80	82,602.90	175,225.1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122,162.40	88,588.10	45,365.80

〈표 1-3〉 서비스업 GDP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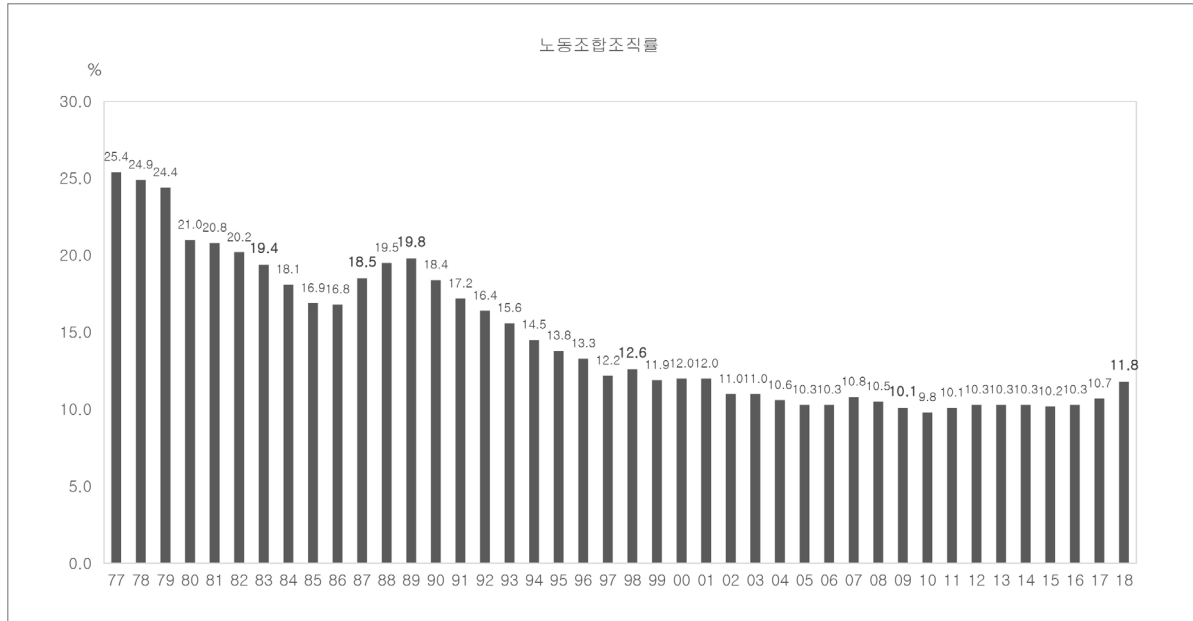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서비스업										
		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1969	100.0	43.04	16.22	5.73	1.85	4.08	1.41	1.02	6.35	3.30	0.74	2.34
1970	100.0	43.78	15.87	5.75	2.12	3.98	1.34	1.13	6.51	3.75	0.69	2.62
1971	100.0	44.89	16.73	5.67	2.21	3.98	1.31	1.20	6.33	3.89	0.75	2.81
1986	100.0	49.72	15.56	5.19	4.00	4.83	2.55	3.21	5.38	4.73	1.94	2.32
1987	100.0	49.87	15.98	4.90	4.25	4.70	2.64	3.51	5.21	4.59	1.82	2.28
1996	100.0	55.44	11.95	4.26	6.09	7.99	3.63	6.13	5.42	5.06	2.07	2.84
1997	100.0	56.01	11.19	4.23	6.06	8.77	3.76	6.49	5.42	5.07	2.18	2.85
1998	100.0	56.90	10.47	4.51	6.14	9.55	3.92	6.27	5.77	5.14	2.35	2.77
2007	100.0	60.65	10.74	4.30	6.66	8.19	5.05	7.56	5.96	5.90	3.46	2.84
2008	100.0	61.85	11.00	4.37	6.61	8.22	4.87	8.04	6.19	6.13	3.54	2.89
2009	100.0	61.44	10.93	3.81	6.42	8.29	4.88	7.98	6.31	6.08	3.86	2.87
2010	100.0	60.14	10.99	3.81	6.46	7.81	4.60	8.19	5.99	5.71	3.79	2.79
2011	100.0	59.85	11.14	3.37	6.59	7.72	4.50	8.32	6.02	5.64	3.78	2.77
2012	100.0	60.26	11.25	3.35	6.18	7.83	4.57	8.59	6.19	5.57	3.92	2.80
2013	100.0	60.17	11.10	3.44	5.77	7.86	4.60	8.86	6.25	5.56	3.97	2.76
2014	100.0	60.62	10.64	3.58	5.87	8.08	4.63	9.14	6.32	5.52	4.12	2.74
2015	100.0	60.59	10.54	3.85	5.80	8.03	4.59	9.33	6.28	5.40	4.16	2.60
2016	100.0	60.49	10.62	3.69	5.62	8.07	4.67	9.24	6.33	5.31	4.31	2.62
2017	100.0	59.97	10.43	3.47	5.78	7.93	4.57	9.20	6.39	5.23	4.45	2.51
2018	100.0	60.88	10.39	3.34	6.00	7.96	4.58	9.53	6.61	5.22	4.67	2.57
2019	100.0	62.36	10.27	3.41	5.96	8.13	4.70	9.98	6.95	5.34	5.04	2.58

2.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직률

- 1977년 25.4%에서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1987년 18.5%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하고 1989년 19.8%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 지속. 2018년 11.8%로 2003년 11% 이후 15년 만에 11%대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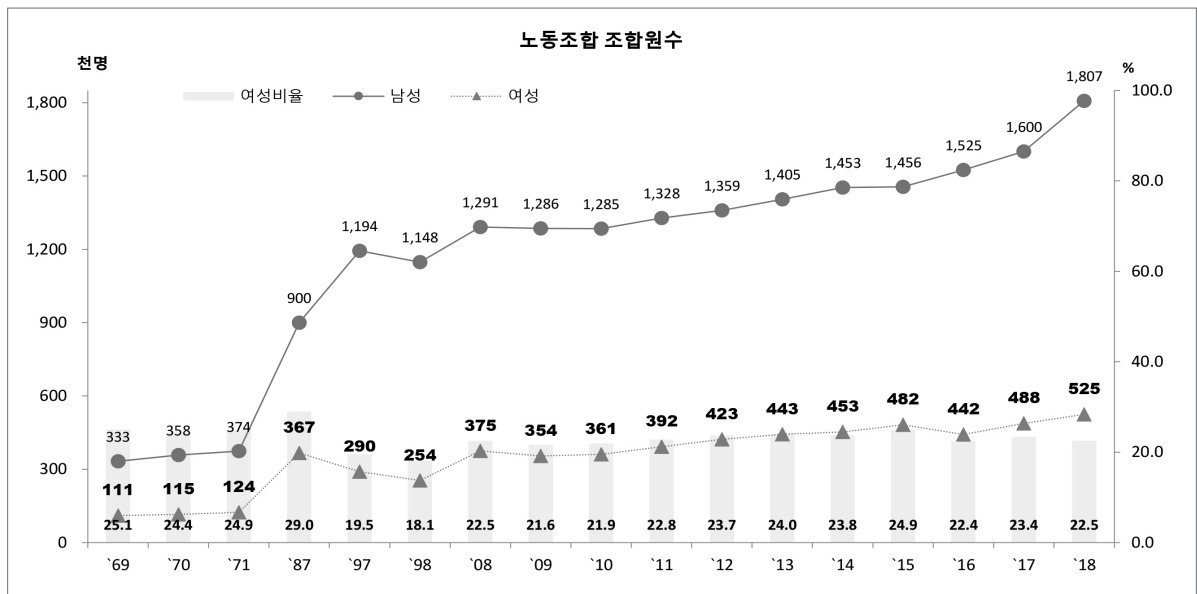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청, kosis.

[그림 2-1] 노동조합 조직률

□ 노동조합 조합원수

- 여성노동조합원수 : (1970) 115천명 → (2018) 525천명. 410천명, 356.5% 증가
 - 남성노동조합원수 : (1970) 358천명 → (2018) 1,807천명. 1,449천명, 404.7% 증가
- 전체 조합원수 중 여성 비율 : (1970) 24.4% → (2018) 22.5%. 1.9%p 하락
 - 여성조합원 비율은 1987년 29% 이후, IMF 사태 1997년 19.5%에서 1998년 18.1%로 하락.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22.5%에서 2009년 21.6%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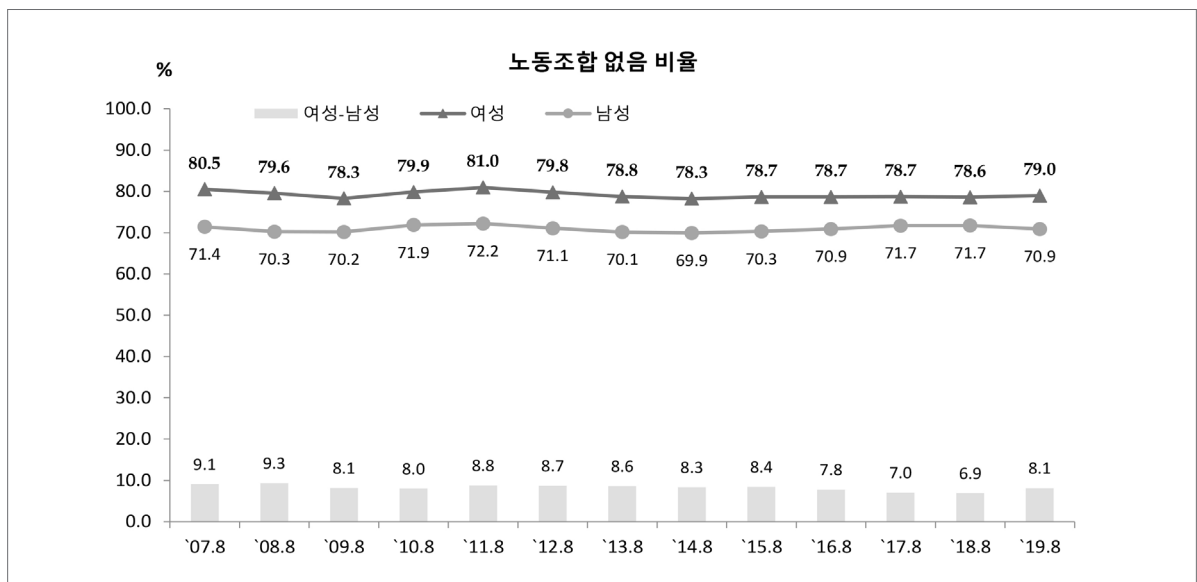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청, kosis.

[그림 2-2] 노동조합 조합원수

□ 노동조합 없음 종사 노동자 비율

○ 2019년 여성 79%, 남성 70.9%로 여성이 8.1%p 높음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 여성은 78.3%로 2008년 79.6%에서 1.3%p 하락. 남성은 동일 시점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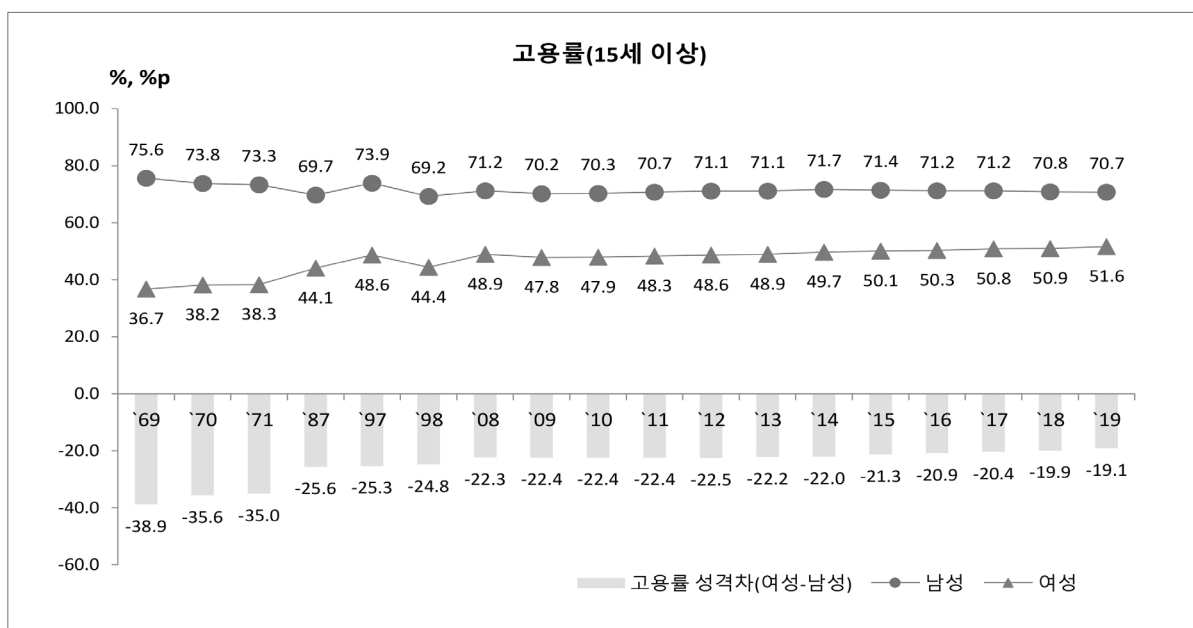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2-3] 노동조합 없음

3. 고용률

□ 15세 이상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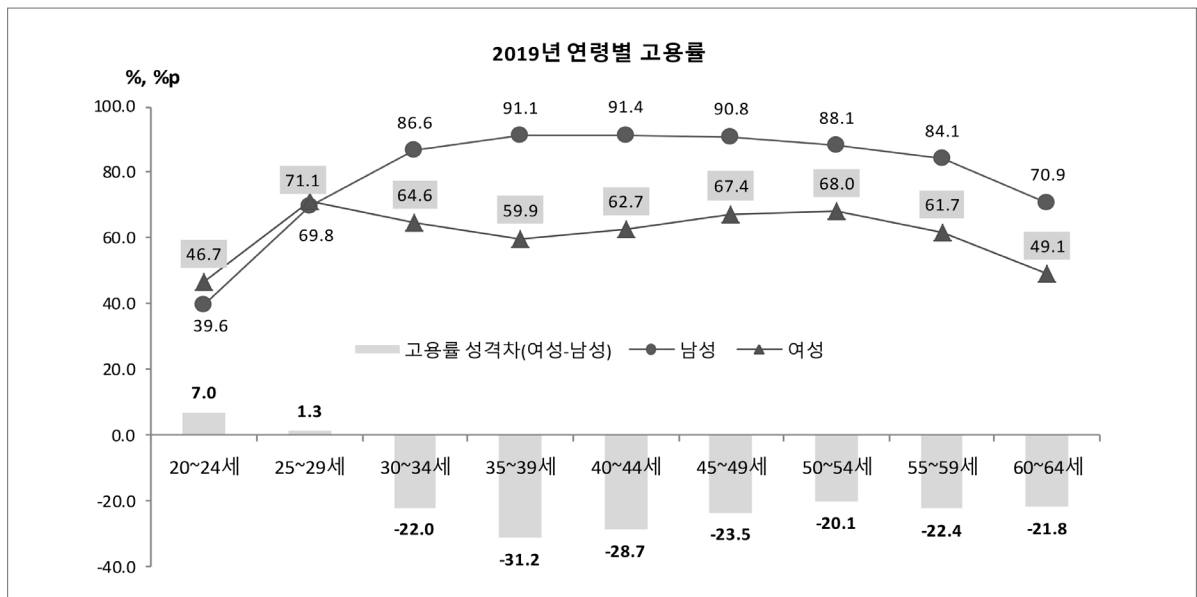
- 여성고용률 (1970) 38.2% → (2019) 51.6%, 13.4%p 상승
 - 남성고용률 (1970) 75.6% → (2019) 70.7%, 4.9%p 하락
-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여성-남성) : (1970) -35.6%p → -19.1%p, 연간 0.3%p 축소
 - 1987년 25.6%, 1997년 25.3%, 2008년 22.3%, 2018년 19.9%, 처음으로 20% 미만에 진입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3-1] 성별 고용률(1969~)

- 연령별 성별 고용률 격차는 35-39세 31.2%p로 가장 큼. 경력단절여성 집중 발생.
 - 2019년 연령별 성별 고용률은 29세 이하 구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나 30세부터 여성고용률이 급락하면서 30대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상회함. 성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연령 구간은 35-39세와 40-44세로 해당 연령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31.2%p, 28.7%p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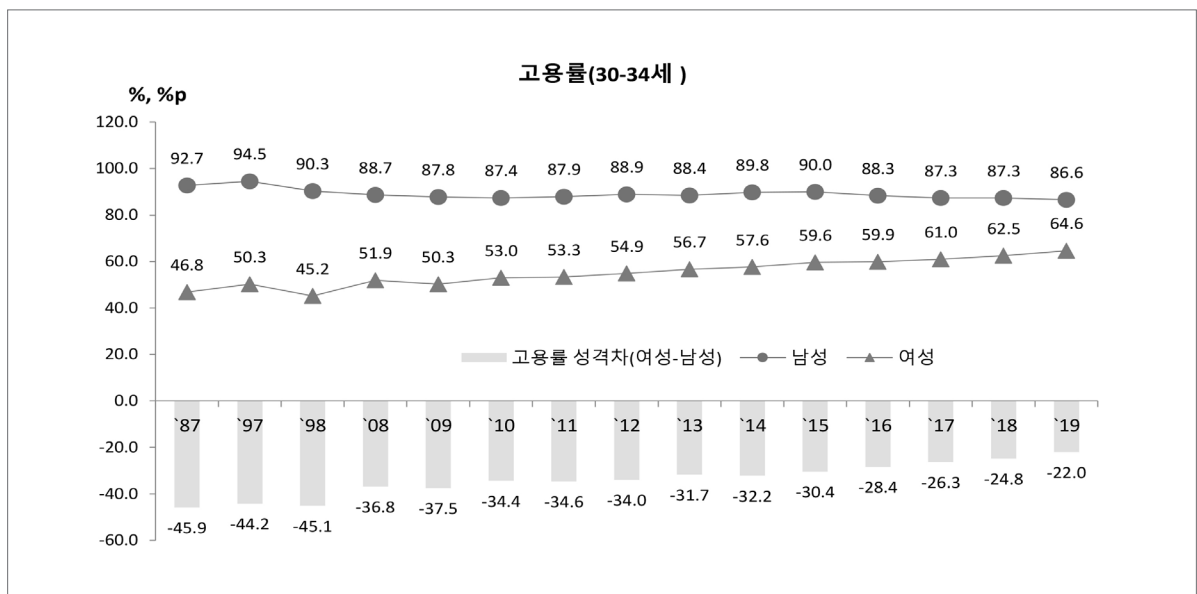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그림 3-2] 연령별 성별 고용률(2019년)

□ 30대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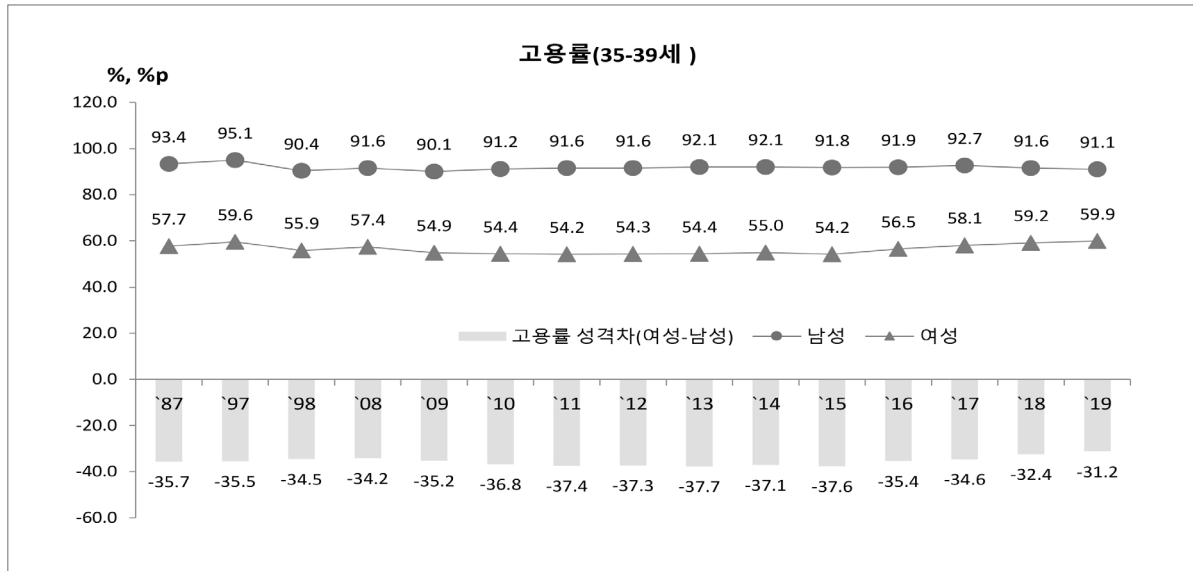
- 30-34세 여성고용률 (1987) 46.8% → (2019) 64.6%. 17.8%p 상승
- 남성고용률 (1987) 92.7% → (2019) 86.6%. 6.1%p 하락
- 30-34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여성-남성) : (1987) -44.2%p → -22.0%p. 경제 위기 직후 격차 확대('97→'98, '08→'09)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3-3] 30-34세 고용률

- 35-39세 여성고용률 : (1987) 57.7% → (2019) 59.9%, 2.2%p 상승. (1997) 59.6% → (1998) 55.9%, 3.7%p 하락. (2008) 57.4% → (2009) 54.9%, 2.5%p 하락
- 남성고용률 (1987) 93.4% → (2019) 91.1%, 2.3%p 하락
- 35-39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여성-남성) : (1987) -44.2%p → -2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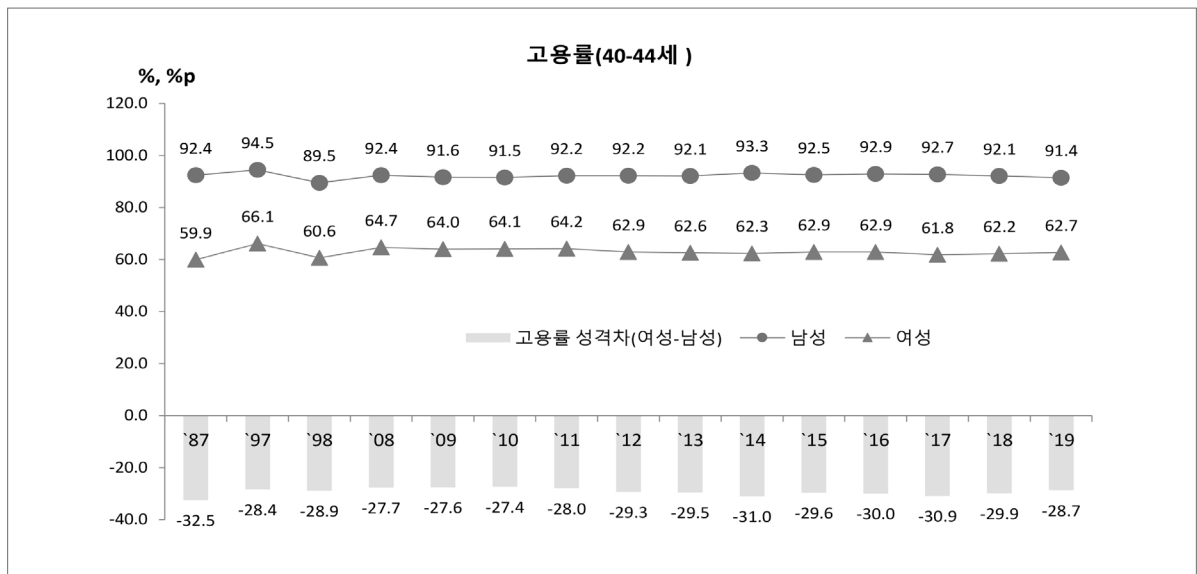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3-4] 35-39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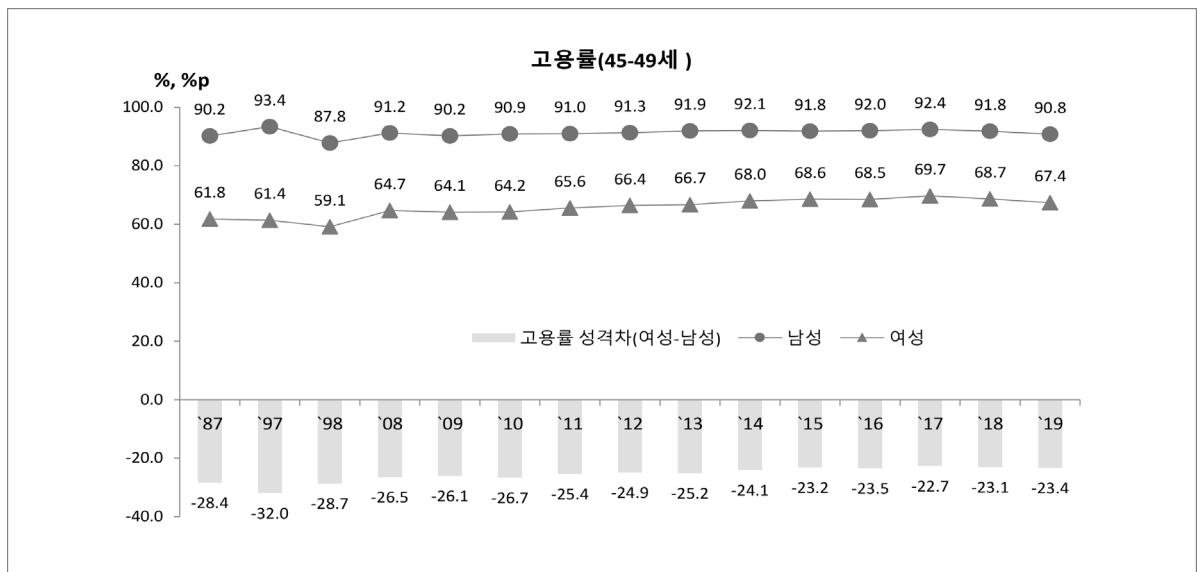
□ 40대 고용률

- 40-44세 여성고용률 (1987) 59.9% → (2019) 62.7%, 2.7%p 상승
- 남성고용률 (1987) 92.4% → (2019) 91.4%, 1%p 하락
- 40-44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여성-남성) : (1987) -32.5%p → -28.7%p
- 45-49세 여성고용률 (1987) 61.8% → (2019) 67.4%, 5.6%p 상승
- 남성고용률 (1987) 90.2% → (2019) 90.8%, 0.6%p 하락
- 45-49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여성-남성) : (1987) -28.4%p → -23.4%p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3-5] 40-4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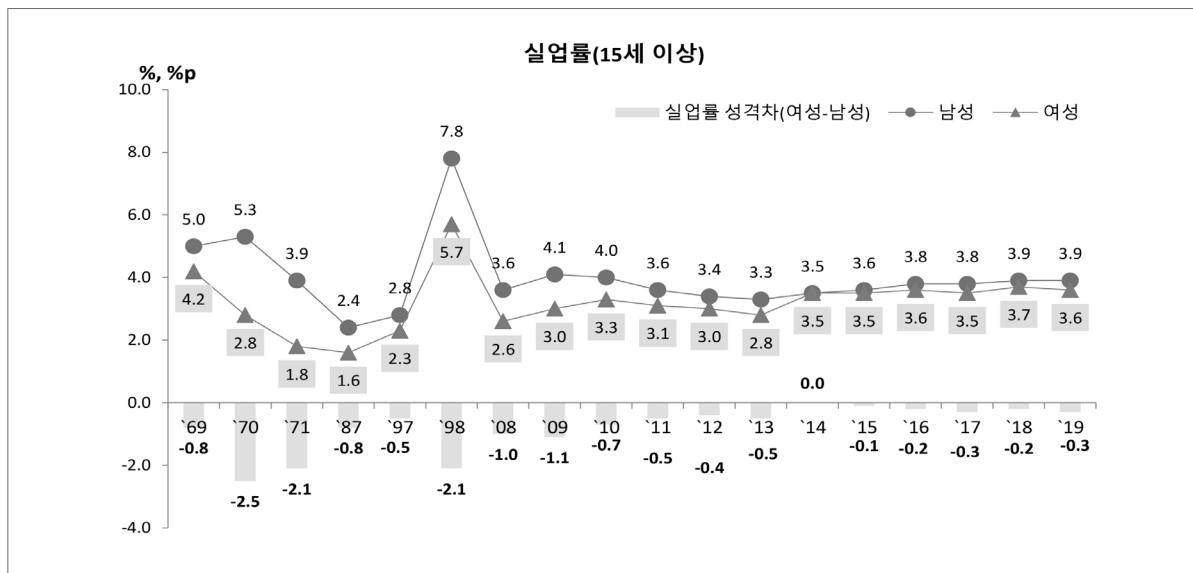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3-6] 44-49세 고용률

4. 실업률

- 여성실업률 (1970) 2.8% → (2019) 3.6%. 0.8%p 상승
 - 1987년 1.6%, (1997) 2.3% → (1998) 5.7%, (2008) 2.6% → (2009) 3%
- 남성실업률 (1970) 5.3% → (2019) 3.9%. 1.7%p 하락
-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 격차(여성-남성) : (1970) -2.5%p → -0.3%p
 - 1997년 여남 실업률 격차는 -0.5%에서 1998년 -2.1%로 4배 가까이 확대. 1997년 IMF 사태로 여성노동자는 1998년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급격히 편입되어 1998년 남성에 비해 실업률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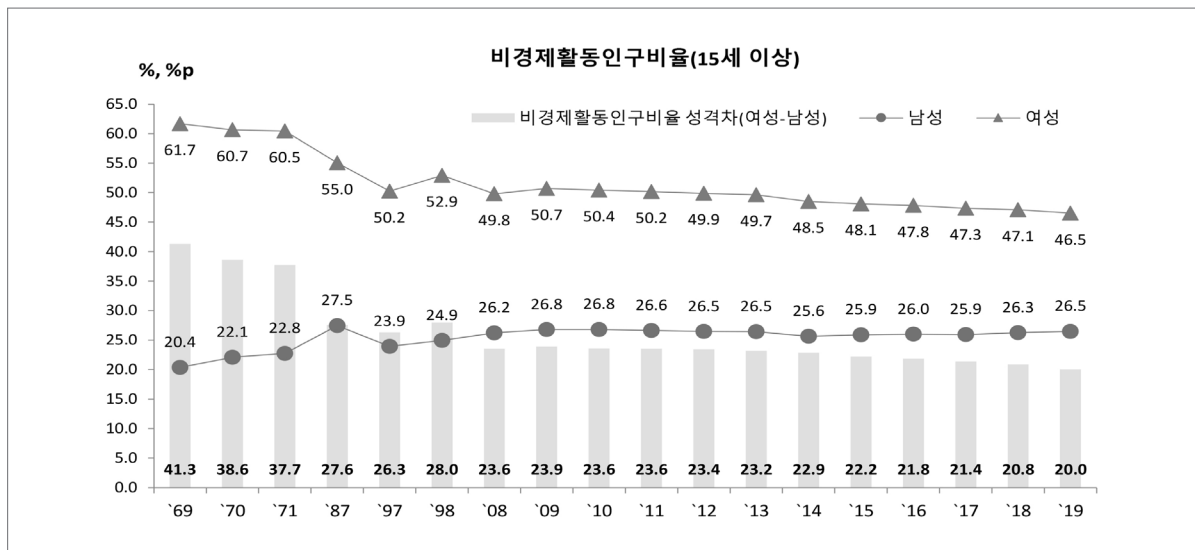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4-1] 성별 실업률(1969~)

5.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여성 (1970) 60.7% → (2019) 46.5%. 14.2%p 하락
 - 1987년 55%, (1997) 50.2% → (1998) 52.9%, (2008) 49.8% → (2009) 50.7%
- 남성 (1970) 22.1% → (2019) 26.5%. 4.4%p 하락
- 여성과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 격차(여성-남성) : (1970) 38.6%p → 20%p
 - (1997) 26.3%p → (1998) 28.0%, (2008) 23.6% → (2009) 23.9%
 -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차년도 비경제활동인구 성격차 확대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5-1]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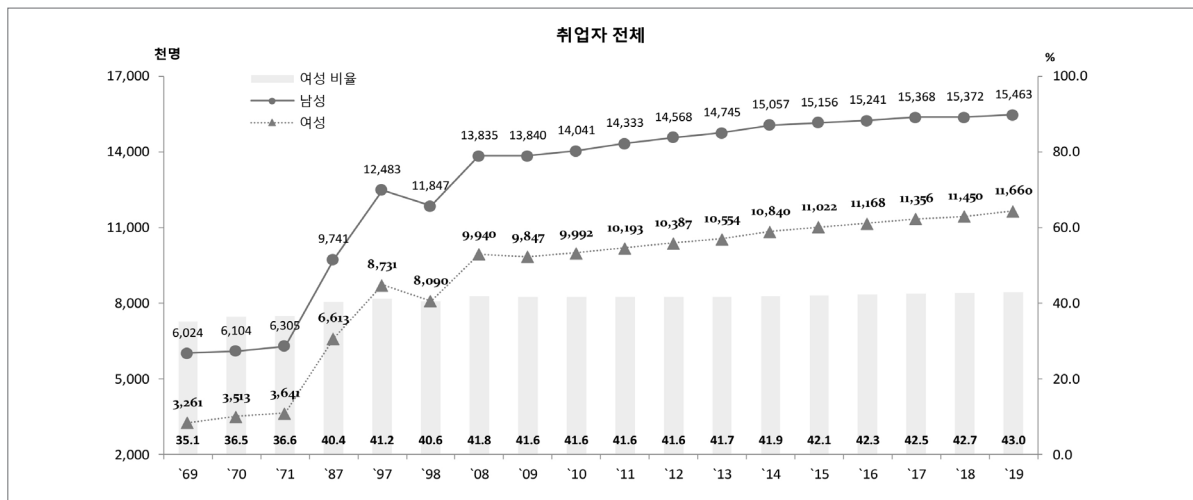
6. 취업자

□ 취업자 전체

- 여성 취업자 : (1970) 3,513천명 → (2019) 11,660천명, 8,147천명, 231.9% 증가
 - (1987) 6,613천명. (1997) 8,731천명 → 8,099천명, 632천명 감소. (2008) 9,940천명 → (2009) 9,847천명, 93천명 감소
- 남성 취업자 : (1970) 6,104천명 → (2019) 15,463천명. 9,359천명, 153.3% 증가
-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1970) 36.5% → (2019) 43%, 6.5%p 하락
 - (1987) 40.4%. (1997) 41.2%→(1998) 40.6%. (2008) 41.8%→(2009)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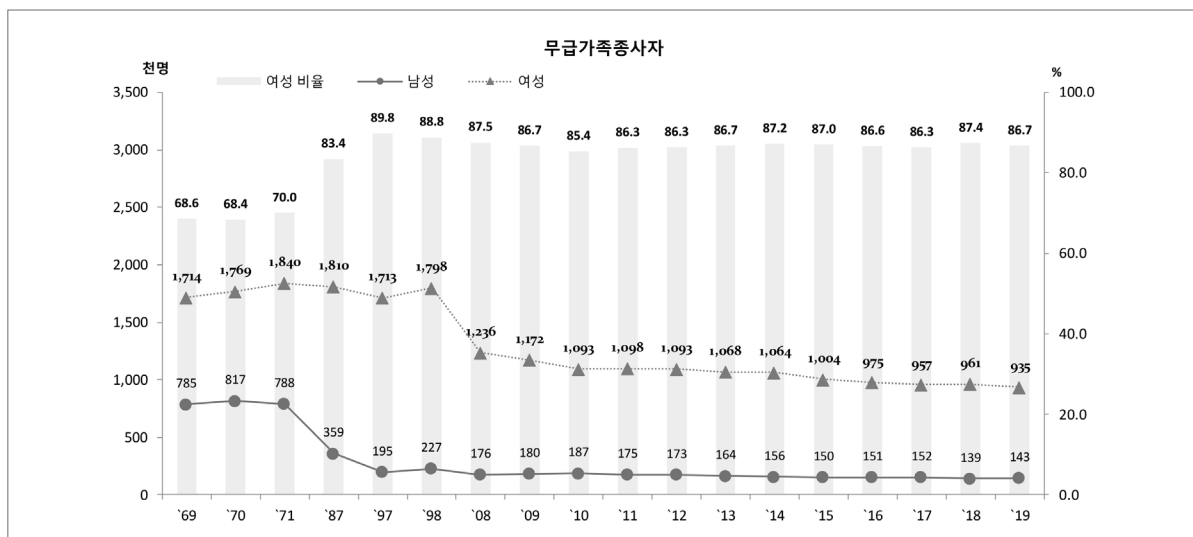
□ 무급가족종사자

-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 (1970) 1,769천명 → (2019) 935천명. 834천명 감소
 - (1987) 1,810천명 (1997) 1713천명 → 1798천명, 85천명 증가. (2008) 1236천명 → (2009) 1172천명, 64천명 감소
- 남성 무급가족종사자 : (1970) 817천명 → (2019) 143천명. 674천명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중 여성 비율 : (1970) 68.4% → (2019) 86.7%, 18.3%p 상승
 - (1987) 83.4%. (1997) 89.8%→(1998) 88.8%. (2008) 87.5%→(2009) 86.7%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6-1] 성별 취업자(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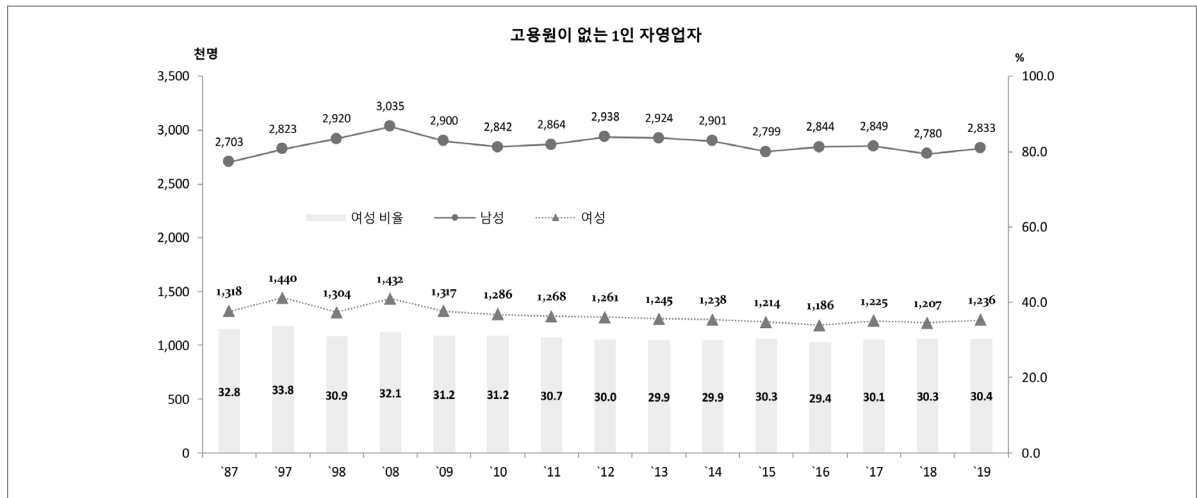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6-2] 성별 무급가족종사자(1969-)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여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1987) 1318천명 → (2019) 1236천명, 82천명 감소
 - (1997) 1440천명 → 1304천명, 136천명 감소, (2008) 1432천명 → (2009) 1317천명, 115천명 감소
- 남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1987) 2703천명 → (2019) 2833천명, 130천명 증가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여성 비율 : (1987) 32.8% → (2019) 30.4%, 2.4%p 상승
 - (1997) 33.8% → (1998) 30.9%, (2008) 32.1% → (2009) 31.2%
 - 2017년 이후 여성비율 상승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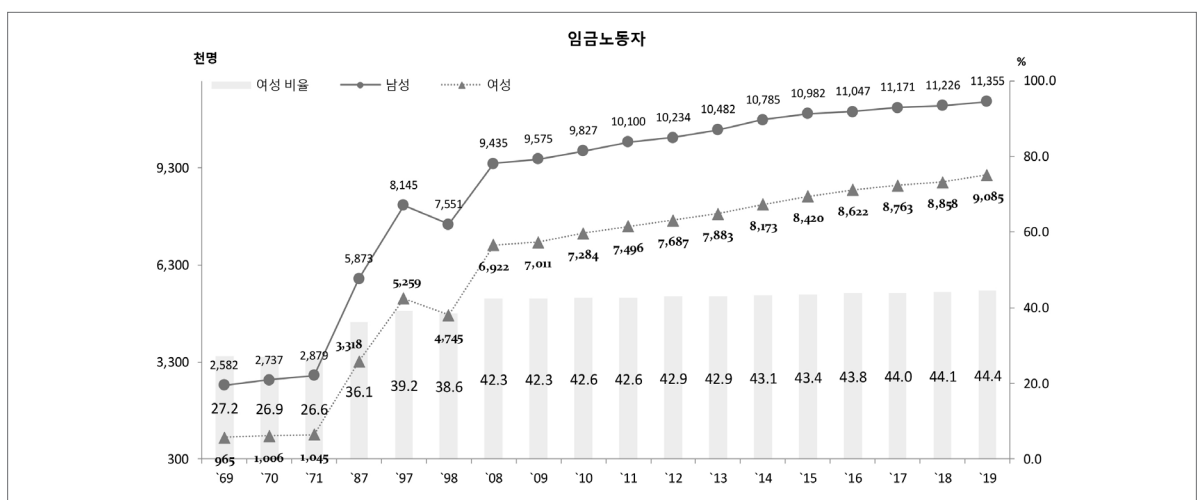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6-3]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1987-)

□ 임금노동자

- 여성 임금노동자 : (1970) 1006천명 → (2019) 9085천명. 8079천명, 803.1% 증가
 - (1987) 3318천명 (1997) 5259천명 → 4745천명, 514천명 감소. (2008) 6922천명 → (2009) 7011천명, 89천명 감소
- 남성 임금노동자 : (1970) 2737천명 → (2019) 11355천명. 8618천명, 314.9% 증가
-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 : (1970) 26.9% → (2019) 44.4%, 17.5%p 상승
 - (1987) 36.2% (1997) 39.2% → (1998) 38.6%. (2008) 42.3% → (2009) 42.3%
 - 2011년 이후 여성 비율 상승 지속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6-4] 임금노동자(1969-)

7.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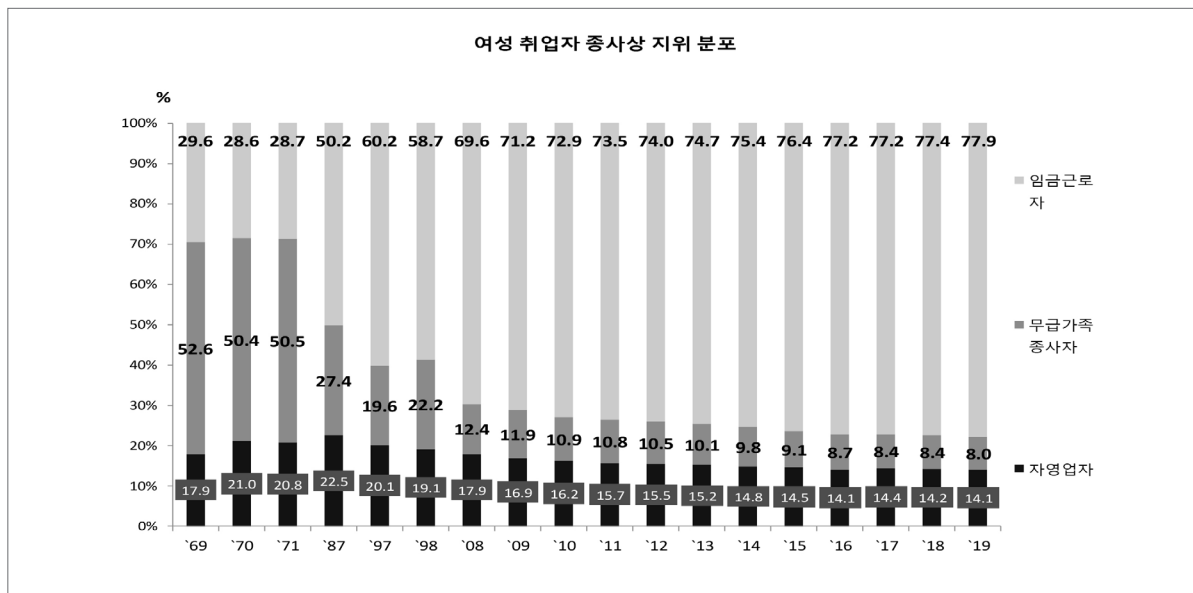
1) 취업자 전체

□ 여성 종사상 분포

- 임금노동자 비율 : (1970) 29.6% → (2019) 77.9%
 - (1987) 50.2% (1997) 60.2%→(1998)58.7% (2008)69.6%→(2009)71.2%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 (1970) 50.4% → (2019) 8.0%
 - (1987) 27.4% (1997)19.6%→(1998)22.2% (2008)12.4%→(2009)11.9%
- 자영업자 비율 : (1970) 21% → (2019) 14.1%
 - (1987) 22.5% (1997)20.1%→(1998)19.1% (2008)17.9%→(2009)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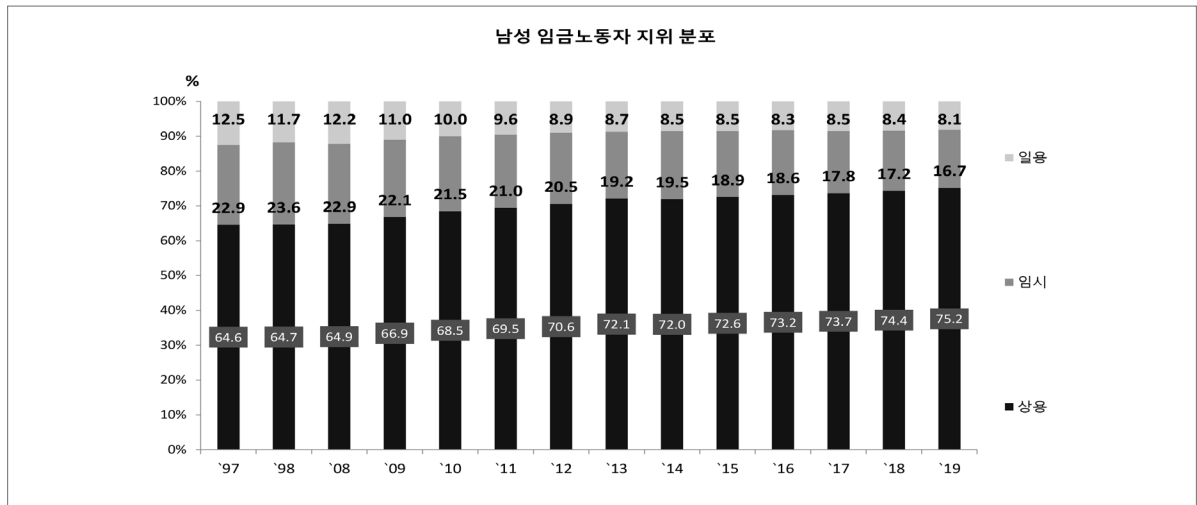
□ 남성 종사상 분포

- 임금노동자 비율 : (1970)44.8% → (2019)73.9%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 (1970) 13.4% → (2019) 0.9%
- 자영업자 비율 : (1970) 41.7% → (2019) 25.6%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7-1] 여성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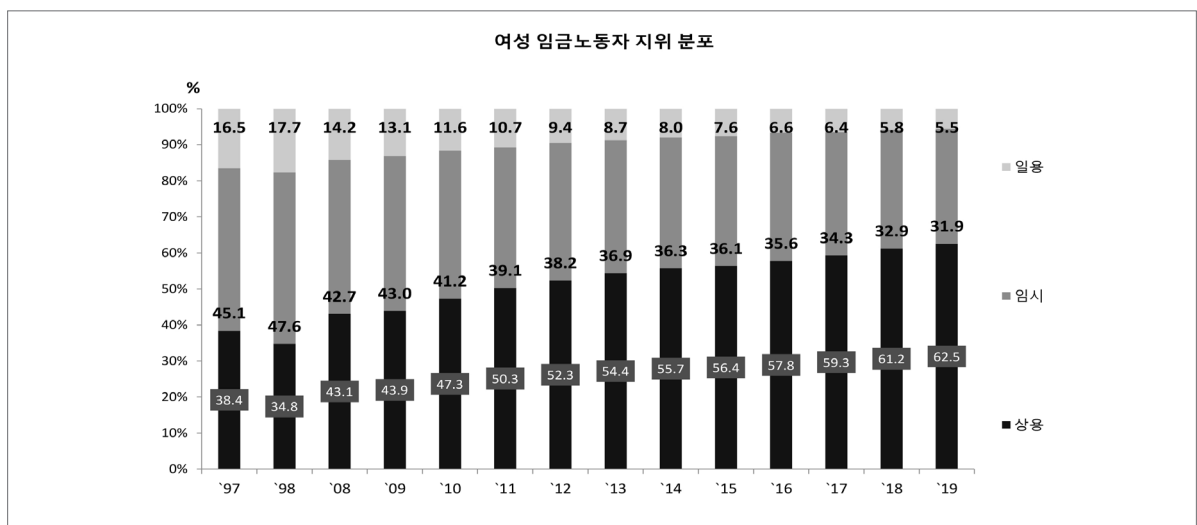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7-2] 남성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1969-)

2) 임금노동자

□ 여성 임금노동자 분포

- 상용 비율 : (1997)38.4% → (1998)34.8%, (2008) 43.1%→(2009)43.9% (2019)62.5%
 - 2018년 여성임금노동자 중 상용비율 처음으로 60% 상회
- 임시 비율 : (1997)45.1% → (1998)47.6%, (2008) 42.7%→(2009)43% (2019)31.9%
 - 임시비율 2009년 이후 지속 하락
- 일용 비율 : (1997)16.5% → (1998)17.7%, (2008) 14.2%→(2009)13.1% (20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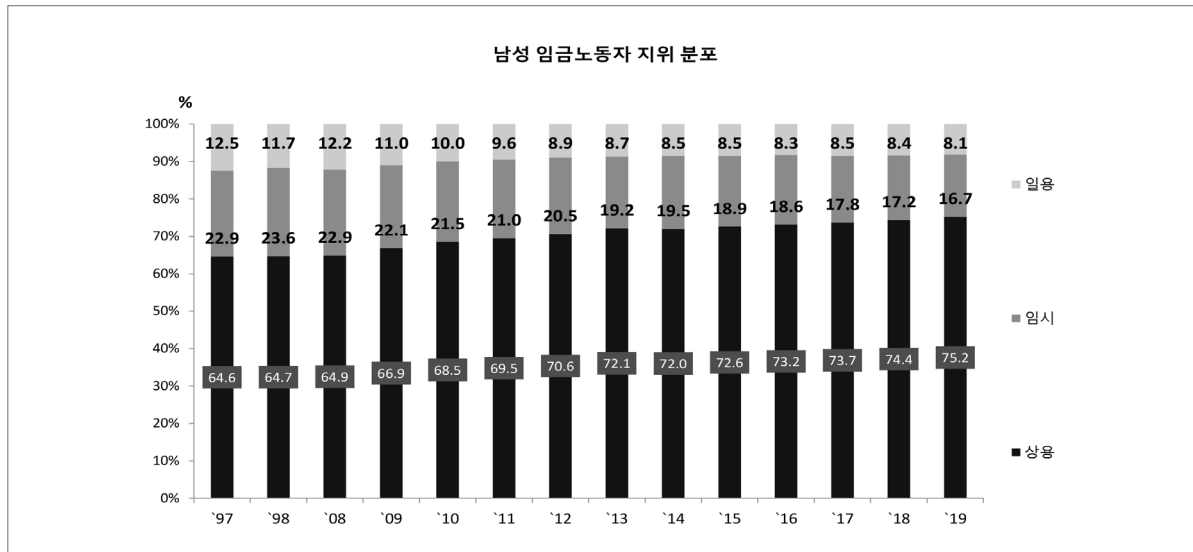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7-3] 여성임금노동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1997-)

□ 남성 임금노동자 분포

- 상용 비율 : (1997)64.6% → (1998)64.7%, (2008)64.9%→(2009)66.9% (2019)75.2%
- 임시 비율 : (1997)22.9% → (1998)23.6%, (2008)22.9%→(2009)22.1% (2019)16.7%
- 일용 비율 : (1997)12.5% → (1998)11.7%, (2008)12.2%→(2009)11.0% (2019)8.1%

□ 여성임금노동자는 남성노동자 보다 상용, 일용 비율은 낮고 임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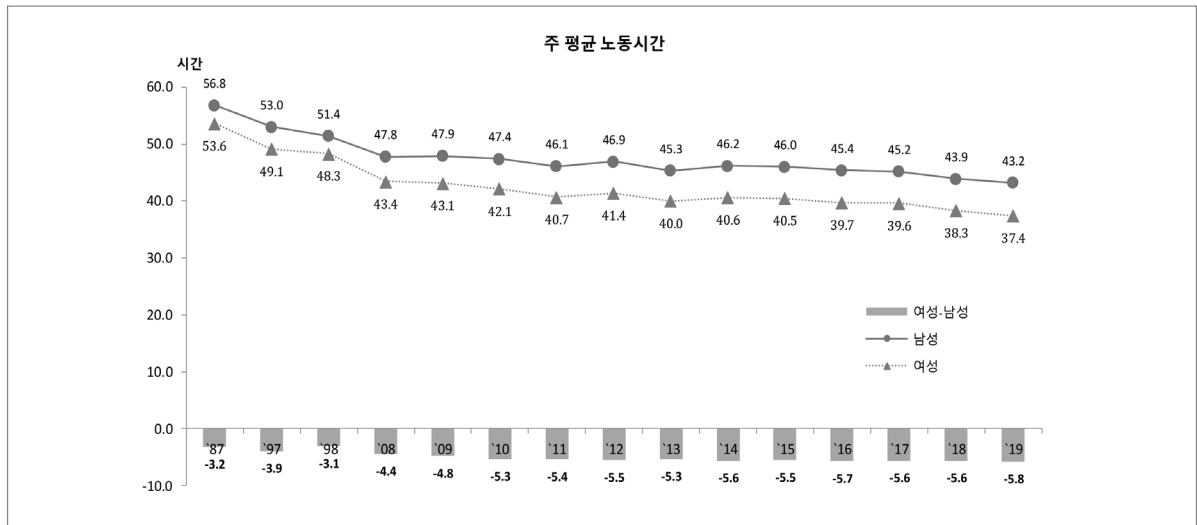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7-4] 남성임금노동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1997-)

8. 노동시간별 취업자

1) 주 평균 노동시간

- 여성 : (1987)53.6시간→(2019)34.7시간, 18.9시간 감소
 - (1997) 49.1시간→(1998) 48.3시간 (2008)43.4시간→(2009)43.1시간
 - 남성 : (1987)56.8시간→(2019)43.2시간, 13.6시간 감소
- 근로시간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87)-3.2시간→(2019)-5.8시간
 - (1997)-3.9시간→(1998)-3.1시간, (2008)-4.4시간→(2009)-4.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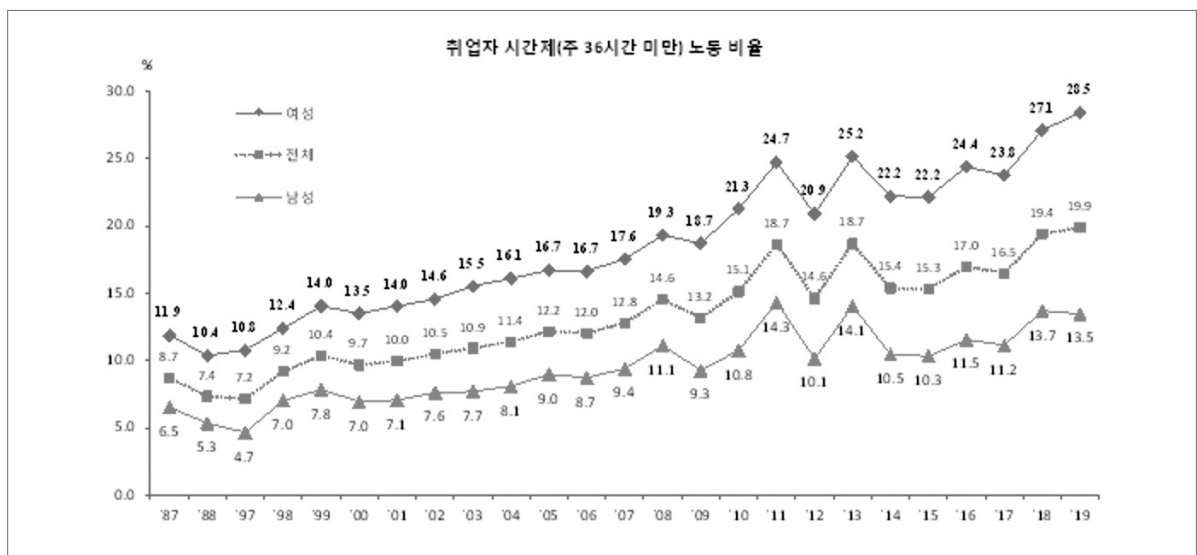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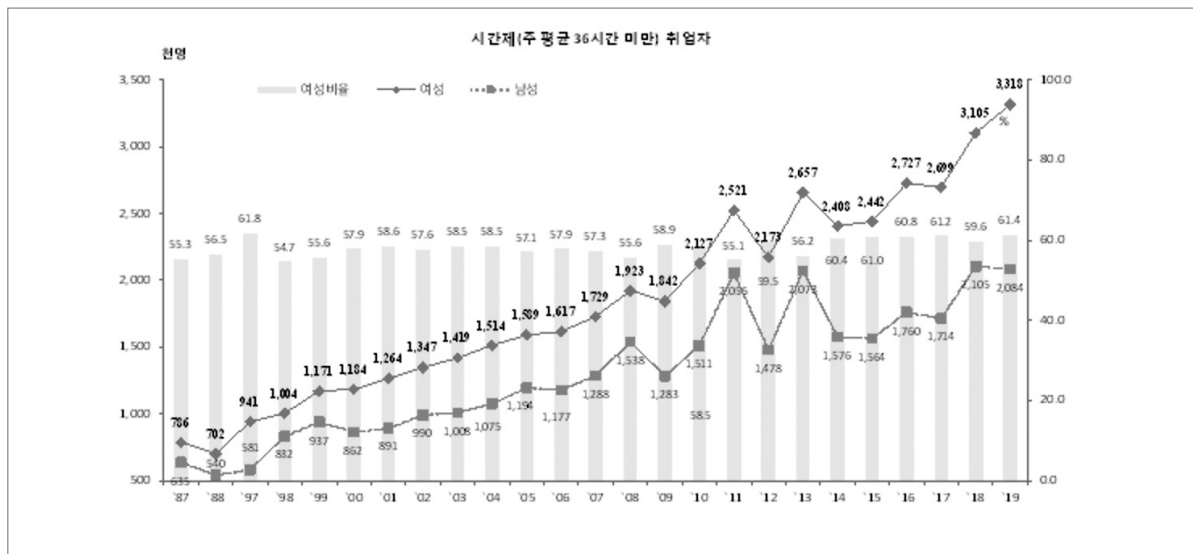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8-1] 주평균 노동시간(1987-)

2) 시간제(36시간 미만) 취업자

-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 : (1987)11.9%→(2019)28.5%, 16.6%p 상승
 - 남성 : (1987)6.5%→(2019)13.5%, 7%p 상승
- 여성 시간제 취업자 : (1987)786천명→(2019)3318천명, 2532천명, 322.1% 증가
 - 남성 : (1987)635천명→(2019)2084천명, 1449천명, 228.2% 증가
- 시간제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1987)55.3%→(2019)61.4%, 6.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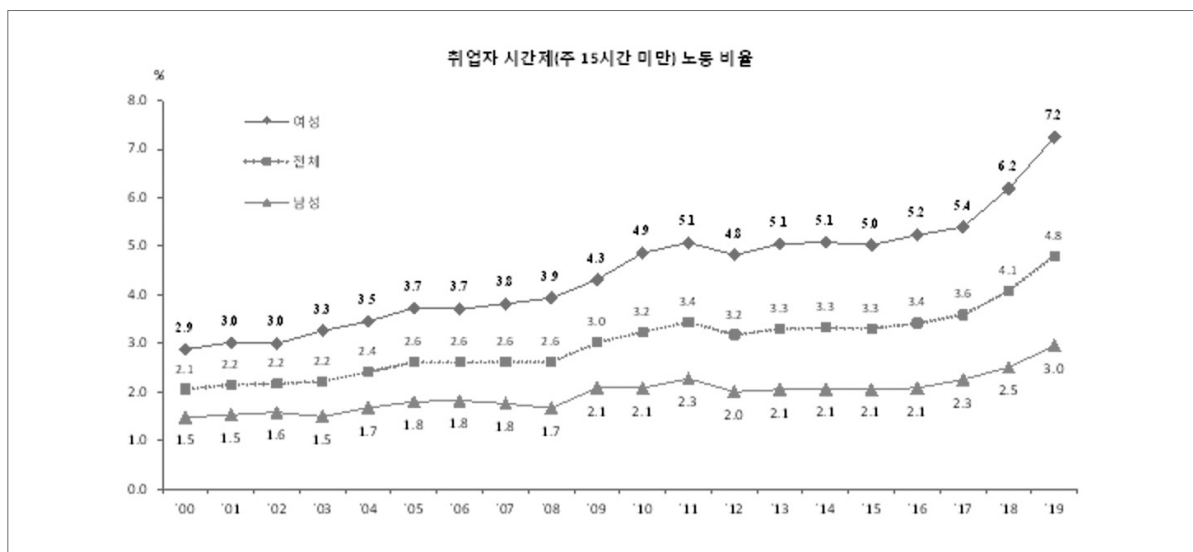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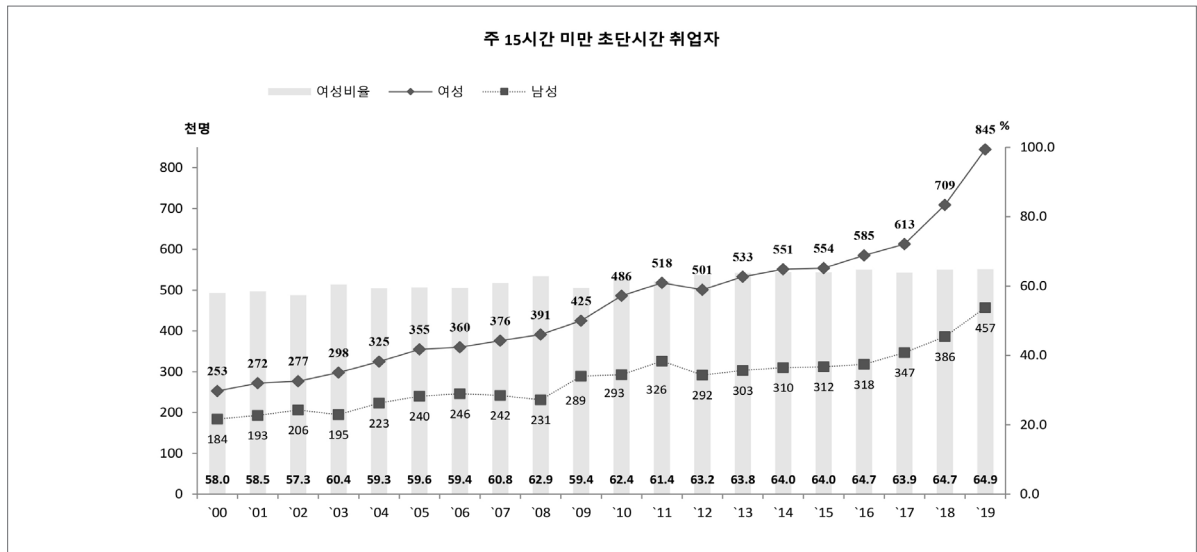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8-2] 시간제(주 평균 36시간 미만) 취업자(1987-)

3)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취업자

-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초단시간 비율 : (2000)2.9%→(2019)7.2%. 16.6%p, 2.5배 상승
 - 남성 : (2000)1.5%→(2019)3%. 1.5%p, 2배 상승
- 여성 초단시간 취업자 : (2000)253천명→(2019)845천명. 592천명, 234.0% 증가
 - 남성 : (2000)184천명→(2019)457천명. 273천명, 148.4% 증가
- 초단시간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2000)58.0%→(2019)64.9%, 6.9%p 상승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8-3]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취업자(2000-)

4)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임금노동자²⁾

- 전체 여성 노동자 중 초단시간 비율 : (2008)2.8%→(2019)7.5%, 4.7%p, 2.7배 상승
- 남성 : (2008)0.8%→(2019)2.1%, 1.3%p, 2.6배 상승
- 여성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 (2008)192천명→(2019)689천명, 497천명, 258.9% 증가
- 남성 : (2008)79천명→(2019)243천명, 164천명, 207.6% 증가
-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 : (2008)70.8%→(2019)73.9%, 3.1%p 상승

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노동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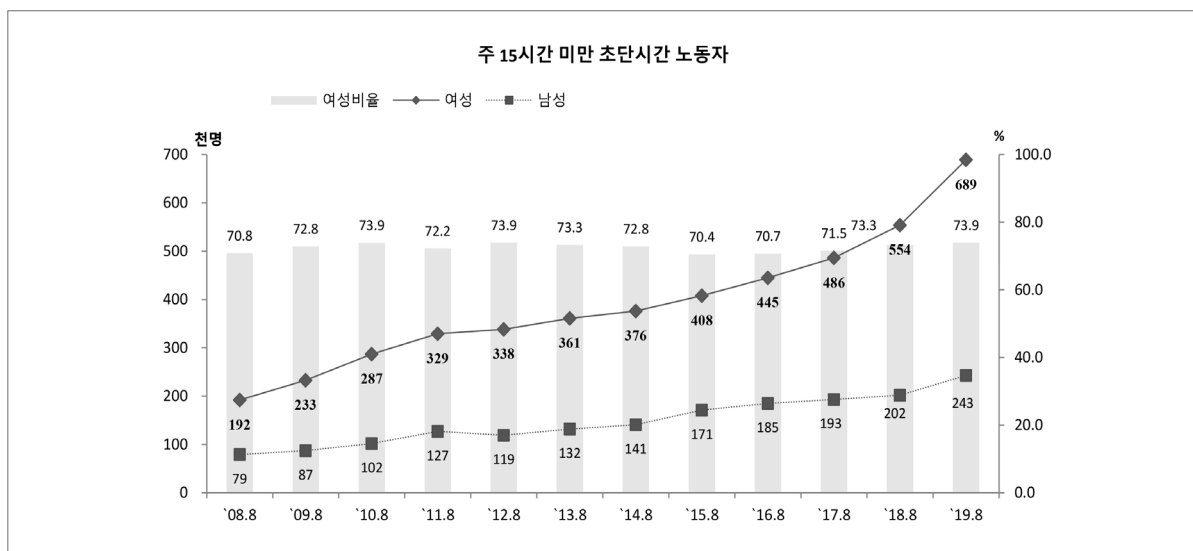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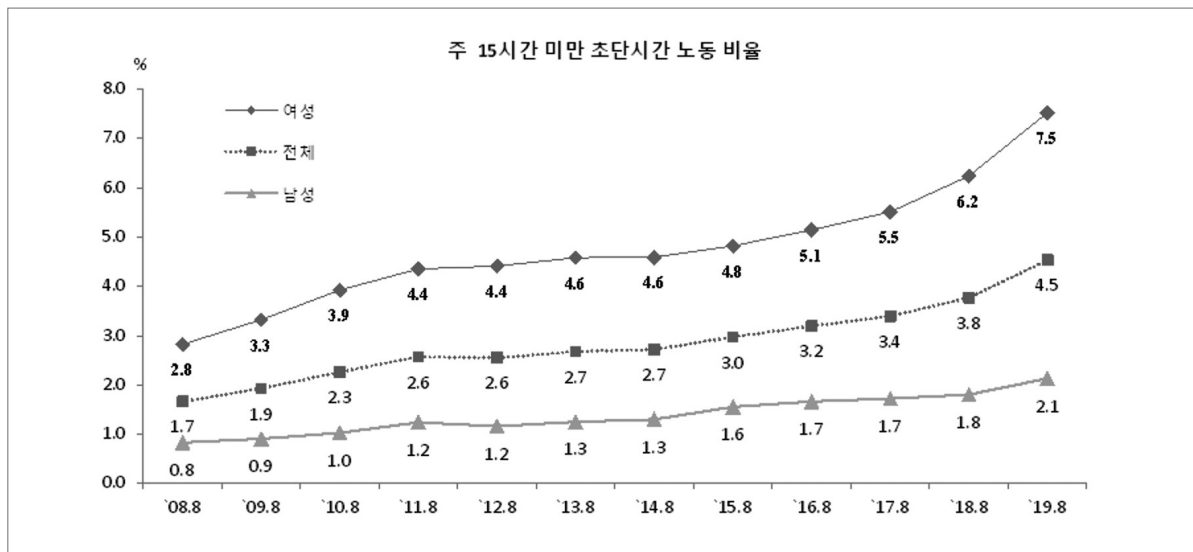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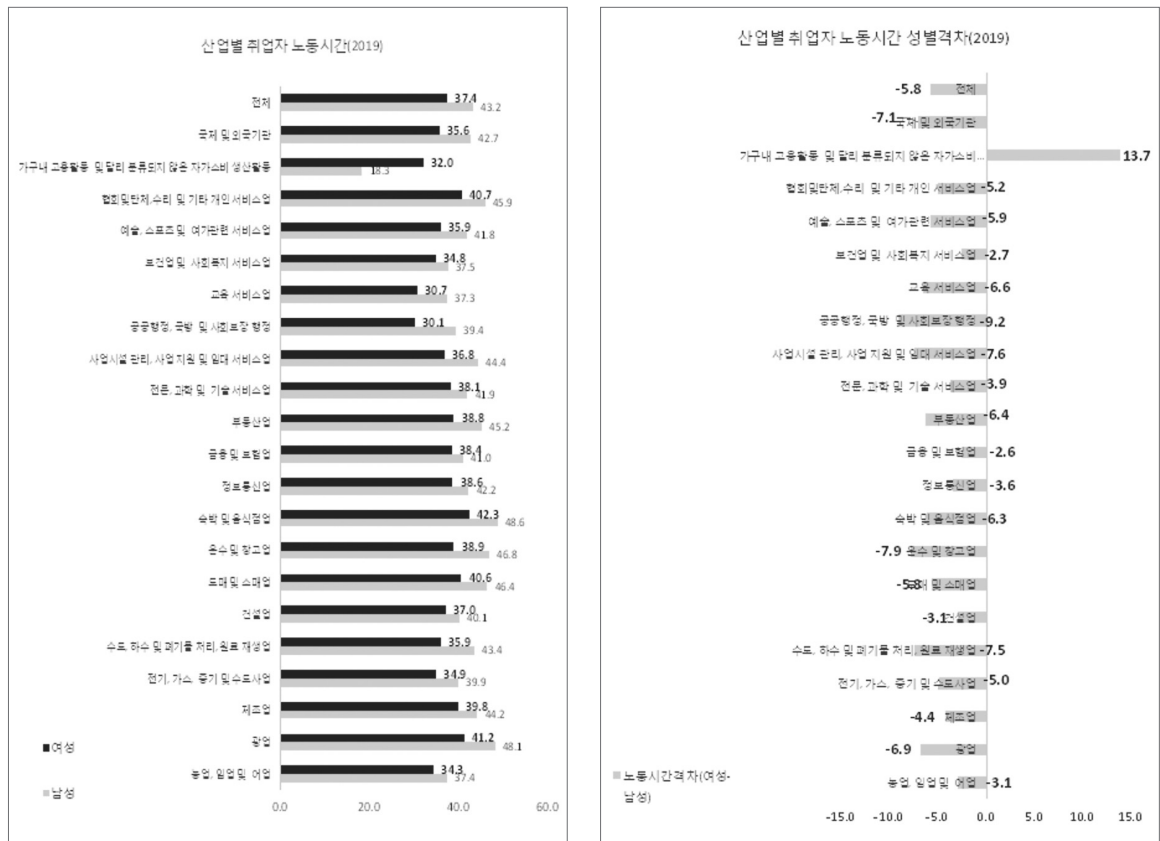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8-4]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임금노동자(2008-)

5) 취업자 산업별 노동시간

- 2019년 여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및음식점업'(42.3시간)
 - 여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0.1시간)
- 2019년 남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및음식점업'(48.6시간)
 - 남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18.3시간)

- 산업별 노동시간 성격차는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이 여성이 남성 보다 13.7시간 더 길게 일하며 가장 큼.
- 여성이 남성 노동시간이 짧은 산업 중 가장 격차가 큰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9.2시간 적게 일함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8-5] 취업자 산업별 주 평균 노동시간(2019)

- 여성은 노동시간이 짧은 산업에 집중
- 2019년 전체 여성취업자 비율은 43%이고 산업별로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7%), ‘교육서비스업’(67.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6.9%)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3시간), ‘교육서비스업’(32.9시간),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31.6시간)은 주평균 노동시간이 짧은 3대 산업에 속함

〈표 8-1〉 산업별 노동 시간 및 여성취업자 비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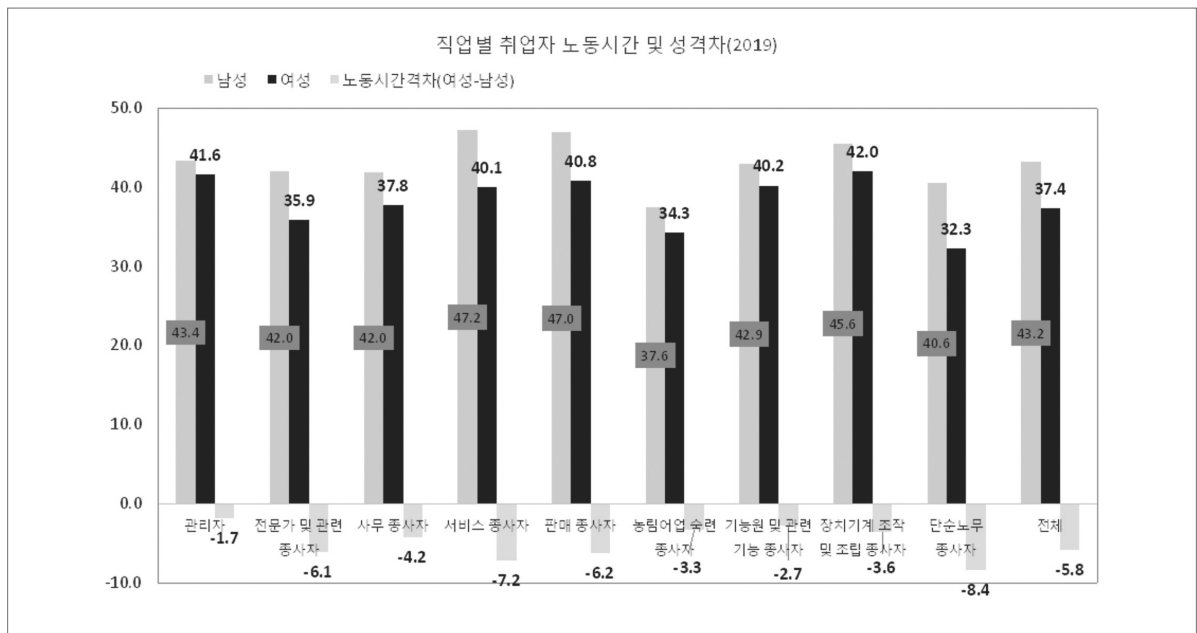
(단위 : 시간, 천명, %)

	주 평균 노동 시간	전체 취업자	여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비율
전체	40.7	27,123	11,660	43.0
광업	47.1	15	2	14.9
운수 및 창고업	45.9	1,431	167	11.7
숙박 및 음식점업	44.7	2,303	1,431	62.1
도매 및 소매업	43.7	3,663	1,680	4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3.2	1,233	626	50.8
제조업	42.9	4,429	1,271	28.7
부동산업	42.8	556	207	37.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2.2	135	22	16.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1.1	1,312	562	42.8
정보통신업	41.1	861	252	2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6	1,157	407	35.2
국제 및 외국기관	40.3	12	4	34.3
건설업	39.8	2,020	202	10.0
금융 및 보험업	39.6	800	439	5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9.3	68	8	1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0	495	236	47.6
농업, 임업 및 어업	36.2	1,395	565	4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6	1,076	439	4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3	2,206	1,802	81.7
교육 서비스업	32.9	1,883	1,264	67.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1.6	75	72	96.9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6) 취업자 직업별 노동시간

- 2019년 여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42.0시간)
 - 여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32.3시간)
- 2019년 남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서비스종사자’(47.2시간)
 - 남성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7.6시간)
- 직업별 노동시간 성격차는 ‘단순노무종사자’가 - 8.4시간으로 가장 큼. ‘관리자’가 - 1.7시간으로 가장 짧음
- 직업별 여성취업자 비율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48.9%, 49.8%로 전체 평균 43% 높은 편임. 이들 두 직업은 주 평균 노동시간이 짧은 직업에 속함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8-6] 취업자 직업별 주 평균 노동시간 및 성격차(2019)

〈표 8-2〉 직업별 노동 시간 및 여성취업자 비율 (2019)

(단위 : 시간, 천명, %)

	주 평균 노동 시간	전체 취업자	여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비율
전체	40.7	27,123	11,660	43.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5.1	3,026	363	12.0
판매 종사자	43.9	3,030	1,522	50.2
관리자	43.1	408	63	1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6	2,372	301	12.7
서비스 종사자	42.5	3,116	2,072	66.5
사무 종사자	39.9	4,749	2,351	49.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9.0	5,556	2,718	48.9
단순노무 종사자	36.5	3,533	1,759	4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6.3	1,332	511	38.4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9. 임금노동자 중 일시휴직자³⁾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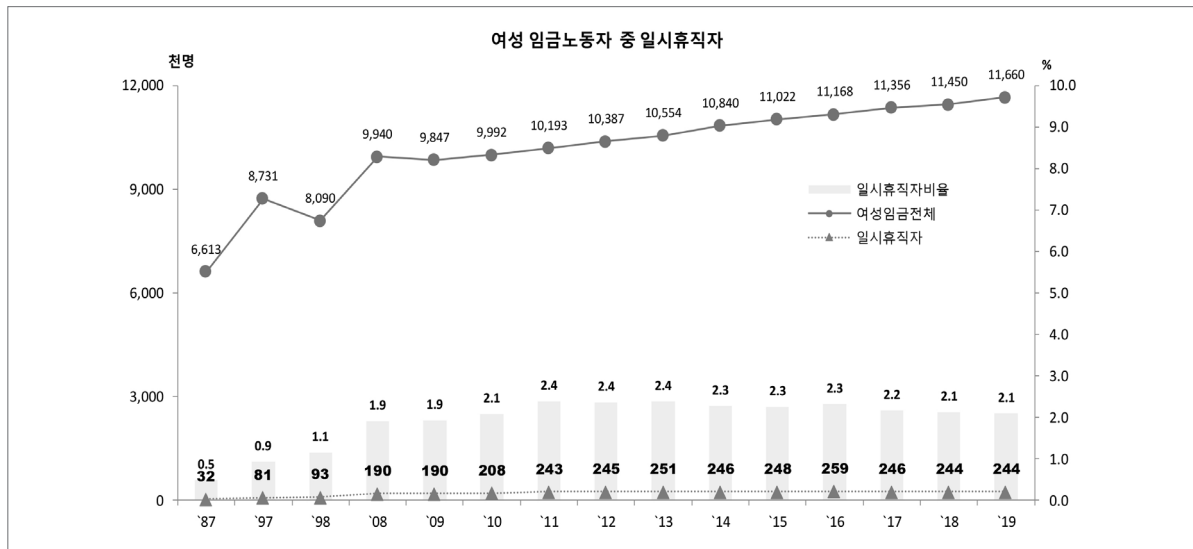
- 여성 일시휴직자 : (1987)32천명→(2019)244천명. 212천명, 662.5% 증가
 - (1997)81천명→(1998)93천명 (2008)190천명→(2009)190천명
- 일시휴직자 비율 : (1987)0.5%→(2019)2.1%
 - (1997)0.9%→(1998)1.1% (2008)1.9%→(2009)1.9%

□ 남성

- 남성 일시휴직자 : (1987)77천명→(2019)163천명. 86천명, 111.7% 증가
 - (1997)97천명→(1998)146천명 (2008)161천명→(2009)177천명
- 일시휴직자 비율 : (1987)0.8%→(2019)1.1%
 - (1997)0.8%→(1998)1.2% (2008)1.2%→(2009)1.3%

□ 일시휴직자 성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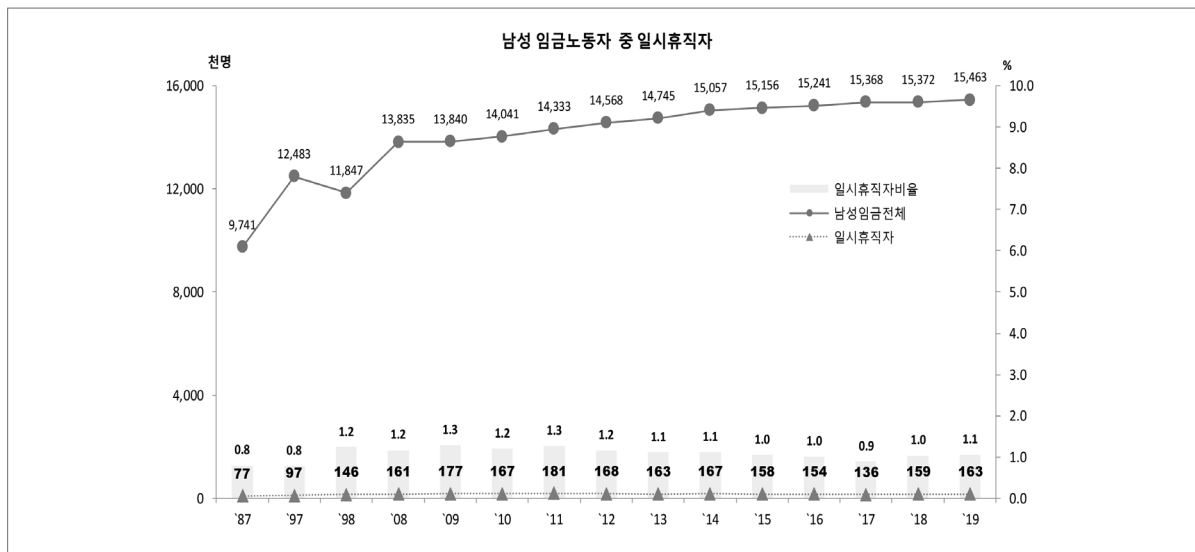
- (1987) 여성 32천명< 남성 77천명 (2019) 여성 244천명 >남성 163천명
- 1998년 이후 여성 일시휴직자 규모는 남성을 상회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9-1] 여성 일시휴직자(1987-)

3) 일시휴직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자(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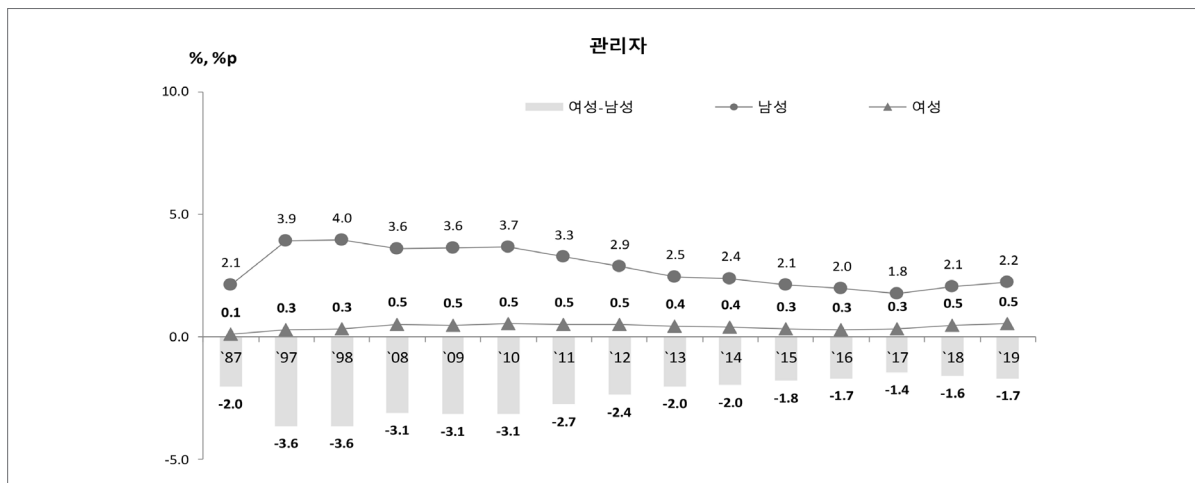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9-2] 남성 일시휴직자(1987-)

10. 직업별 취업자

1) 관리자

- 여성 : (1987)0.1%→(2019)0.5%
 - (1997)0.3%→(1998)0.3%. (2008)0.5%→(2009)0.5%
 - 남성 : (1987)2.1%→(2019)2.2%
- 관리자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87)-2.0%p→(2019)-1.7%p
 - (1997)-3.6%p→(1998)-3.6%p (2008)-3.1%p→(2009)-3.1%p



주 : 연도별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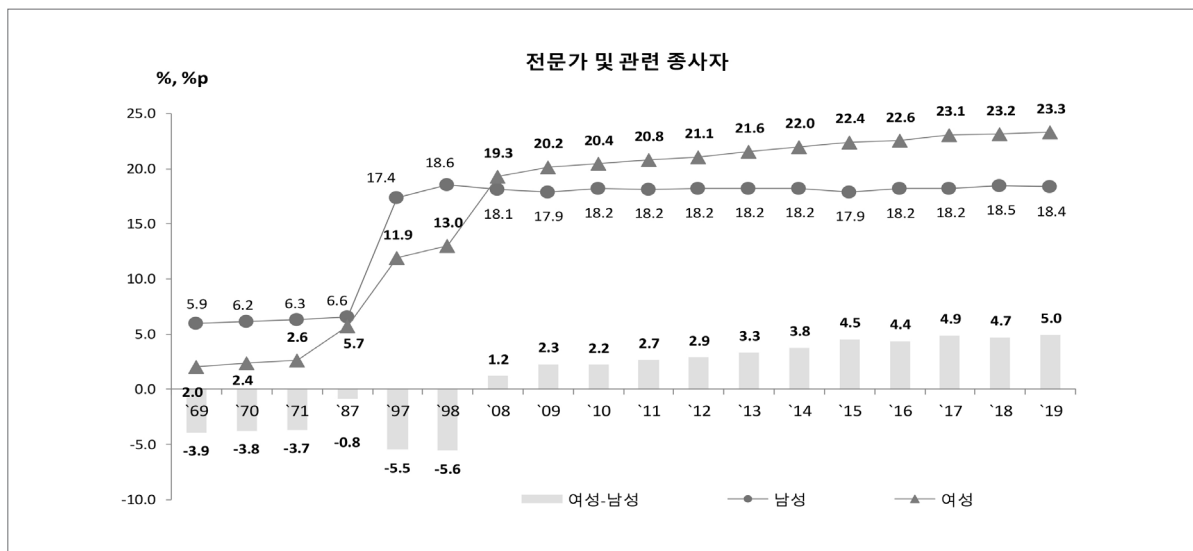
1987	1997-98	2008-2019
행정관리직종사자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관리자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1] 관리자(1987-)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여성 : (1970)2.4%→(2019)23.3%
 - (1987) 5.7% (1997)11.9%→(1998)13.0% (2008)19.3%→(2009)20.2%
- 남성 : (1970)6.2%→(2019)18.4%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3.8%p→(2019)5%p
 - (1987) -0.8%p (1997)-5.5%p→(1998)-5.6%p (2008)1.2%p→(2009)2.3%p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 취업자 비율 20% 로 상승



주 : 연도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1969-1987	1997-98	2008-2019
전문·기술관련직 종사자	전문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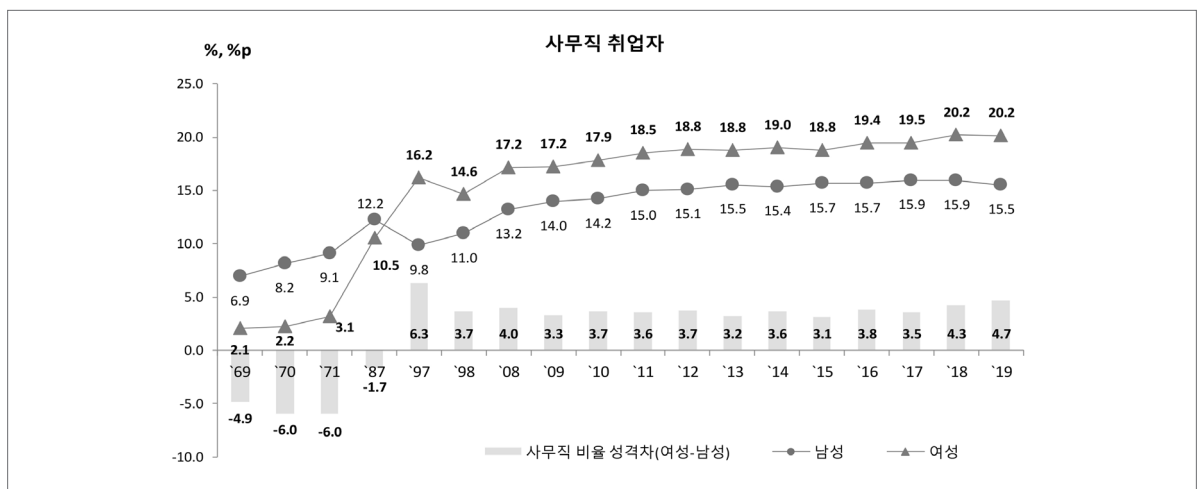
3) 사무직 취업자

- 여성 : (1970)2.2%→(2019)20.2%
 - (1987)10.5% (1997)16.2%→(1998)14.6% (2008)17.2%→(2009)17.2%
- 남성 : (1970)8.2%→(2019)15.5%

- 사무직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6.0%p→(2019)4.7%p
 - (1987)-1.7%p (1997)6.3%p→(1998)3.7%p (2008)4.0%p→(2009)3.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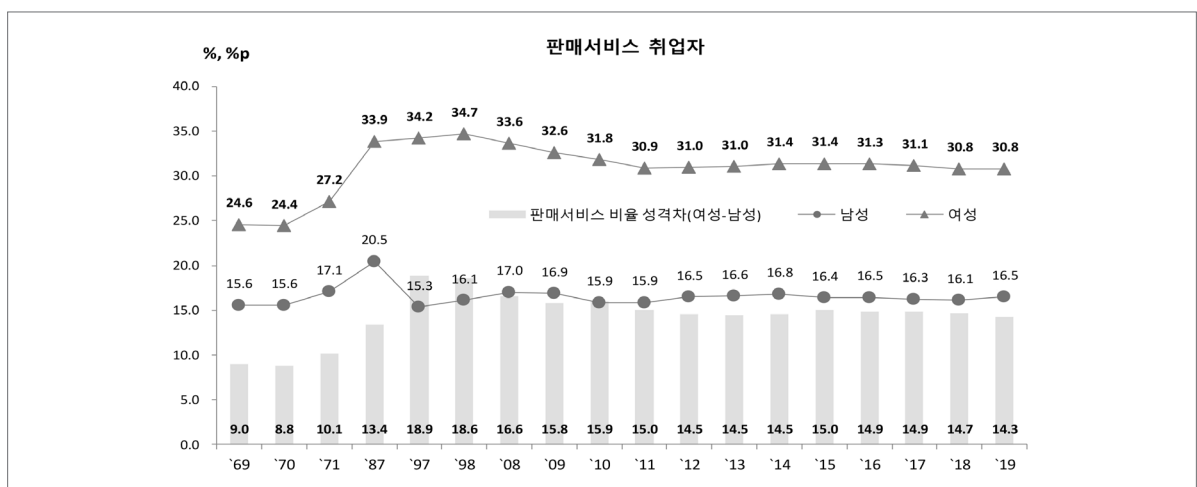
4) 판매서비스 취업자

- 여성 : (1970)24.4%→(2019)30.8%
 - (1987)33.9% (1997)34.2%→(1998)34.7% (2008)33.6%→(2009)32.6%
- 남성 : (1970)15.6%→(2019)16.5%
- 판매서비스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8.8%p→(2019)14.3%p
 - (1987)13.4%p (1997)15.3%p→(1998)16.1%p (2008)17.0%p→(2009)16.9%p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3] 사무직 취업자(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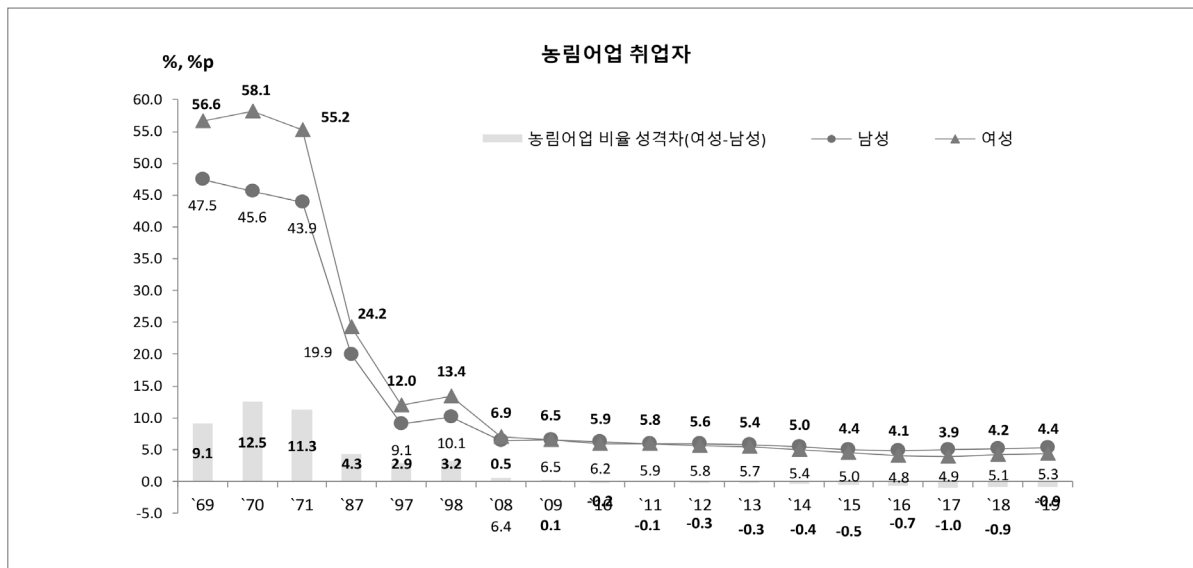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4] 판매서비스 취업자(1969-)

5) 농림어업 취업자

- 여성 : (1970)58.1%→(2019)4.4%
 - (1987)24.2% (1997)12.0%→(1998)13.4% (2008)6.9%→(2009)6.5%
 - 남성 : (1970)45.6%→(2019)5.3%
- 농림어업직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12.5%p→(2019)-0.9%p
 - (1987)4.3%p (1997)2.9%p→(1998)3.2%p (2008)0.5%p→(2009)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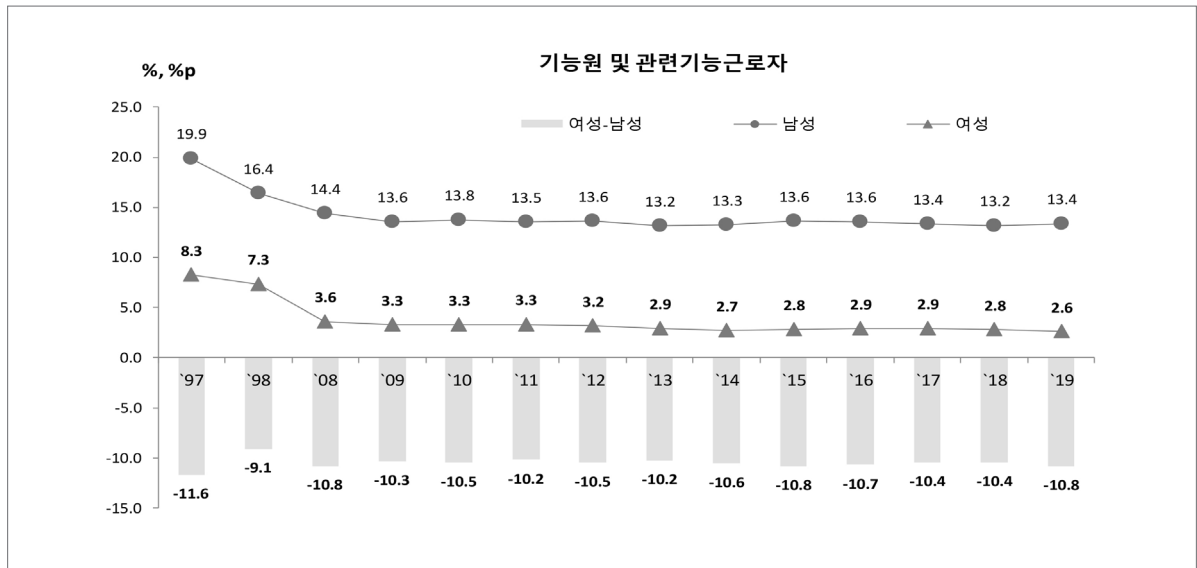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5] 농림어업 취업자(1969-)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 여성 : (1997)8.3%→(1998)7.3% (2008)3.6%→(2009)3.3% (2019)2.6%
 - 남성 : (1997)19.9%→(1998)16.4% (2008)14.4%→(2009)13.6% (2019)13.4%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11.6%→(1998)-9.1% (2008)-10.8%→(2009)-10.3% (201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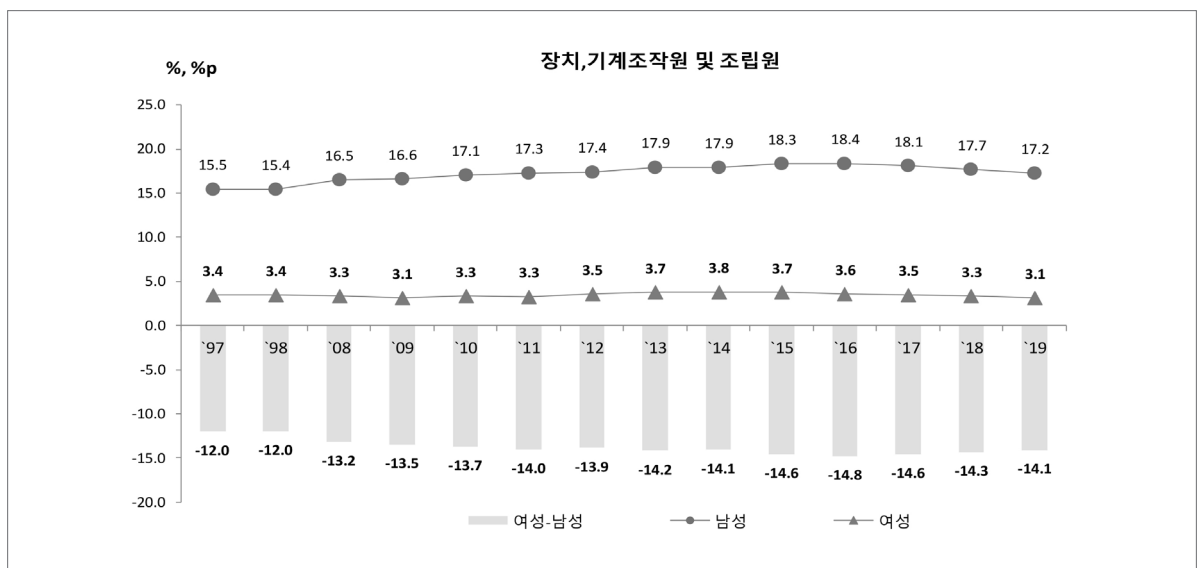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1997-)

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여성 : (1997)3.4%→(1998)3.4%, (2008)3.3%→(2009)3.1%, (2019)3.1%
- 남성 : (1997)15.5%→(1998)15.5%, (2008)16.5%→(2009)16.6%, (2019)17.2%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12.0%→(1998)-12.0%, (2008)-13.2%→(2009)-13.5%, (2019)-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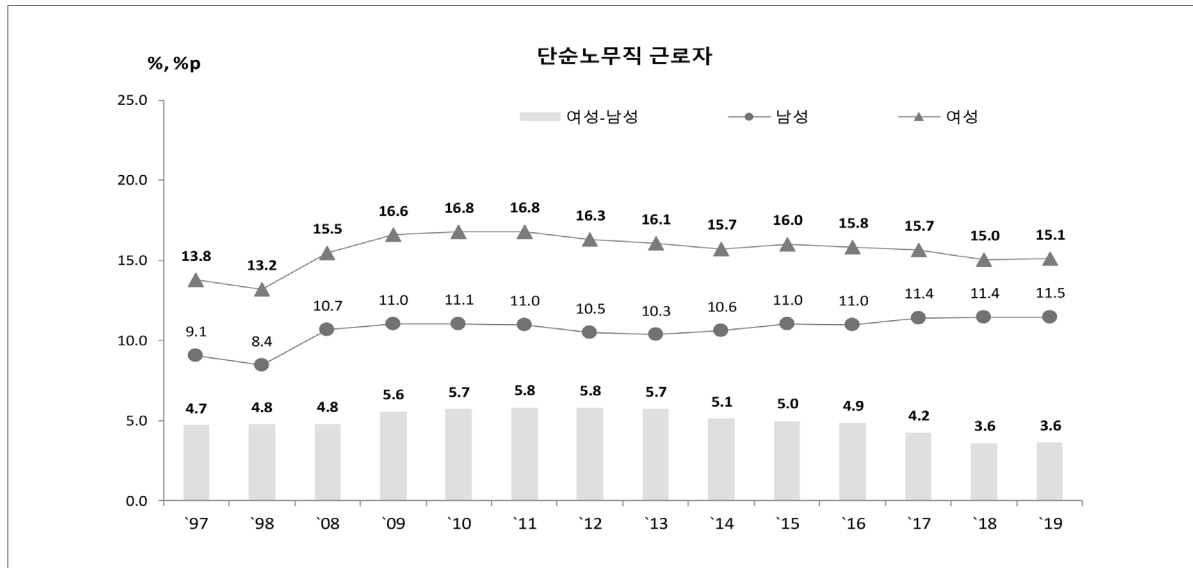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1997-)

8) 단순노무 취업자

- 여성 : (1997)13.8%→(1998)13.2%. (2008)15.5%→(2009)15.6%. (2019)15.1%
 - 남성 : (1997)9.1%→(1998)8.4%. (2008)10.7%→(2009)11%. (2019)11.5%
- 단순노무직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4.7%→(1998)4.8%. (2008)4.8%→(2009)5.6%. (20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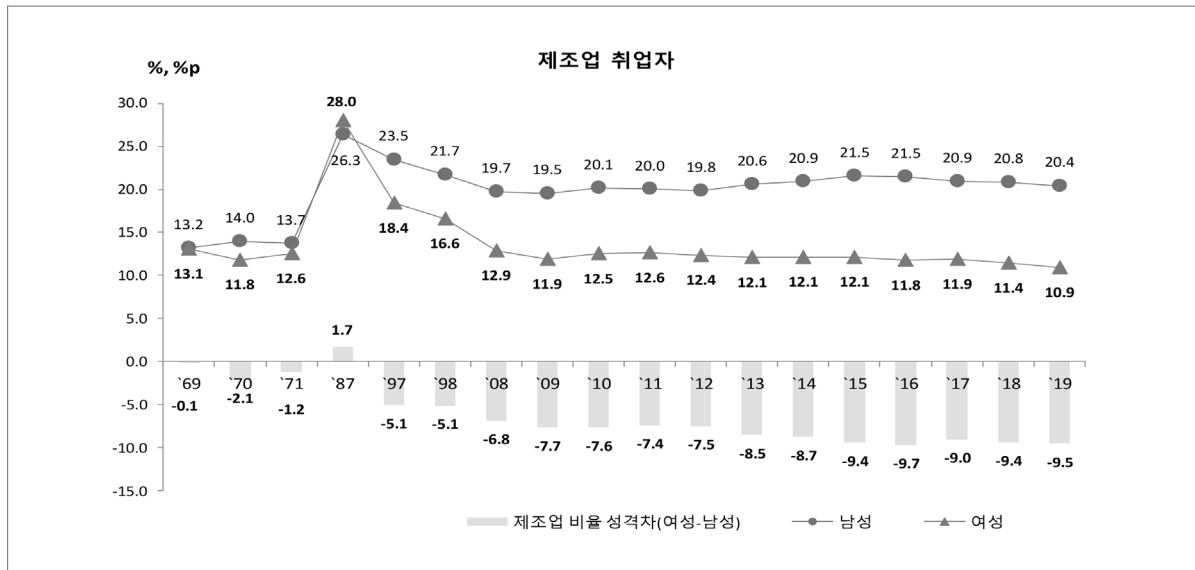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0-8] 단순노무직(1997-)

11. 산업별 취업자

1) 제조업

- 여성 : (1970)11.8%→(2019)10.9%, 0.9%p 하락
 - (1987) 28.0% (1997)18.4%→(1998)16.6%. (2008)12.9%→(2009)11.9%
 - 남성 : (1970)14.0%→(2019)20.4%, 6.4%p 상승
- 제조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2.1%p→(2019)-9.5%p 격차 확대
 - (1987) 1.7%p (1997)-5.1%p→(1998)-5.1%p (2008)-6.8%p→(2009)-7.7%p
 - 1987년은 여성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 비율이 남성을 상회함



주 : 1987년 제조업 취업자 현황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 비율
전체	16,354	4,416	27.0
남성	9,741	2,563	26.3
여성	6,613	1,853	28.0

자료 : 통계청, kosi.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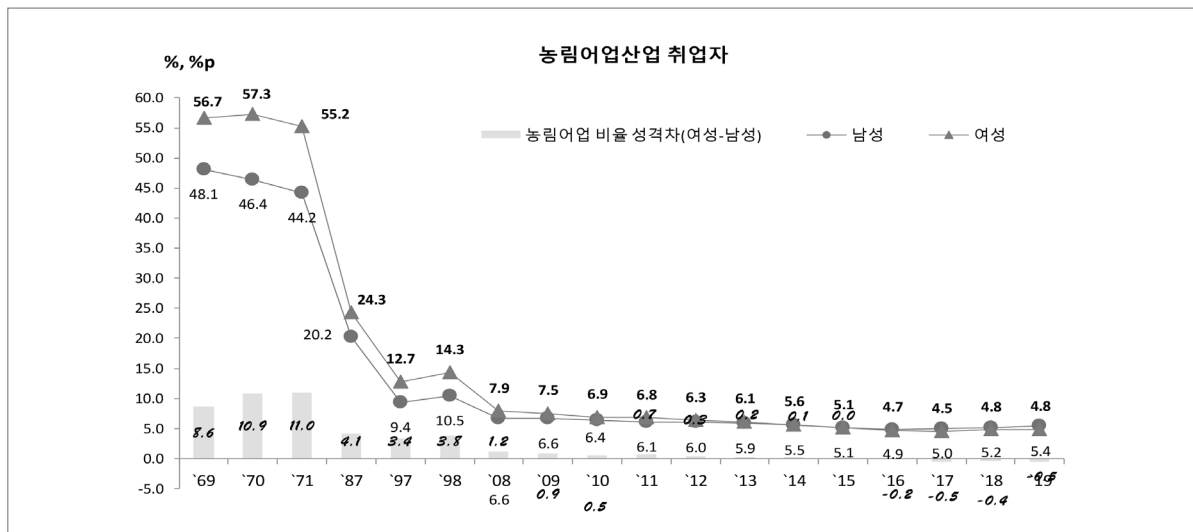
[그림 11-1] 제조업 취업자(1969-)

2) 농림어업

- 여성 : (1970)57.3%→(2019)4.8%, 52.5%p 하락
 - (1987)24.3% (1997)12.7%→(1998)14.3%, (2008)7.9%→(2009)7.5%
 - 남성 : (1970)46.4%→(2019)5.4%, 41.0%p 하락
- 농림어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10.9%p→(2019)-0.5%p
 - (1987) 4.1%p (1997)3.4%p→(1998)3.8%p (2008)1.2%p→(2009)0.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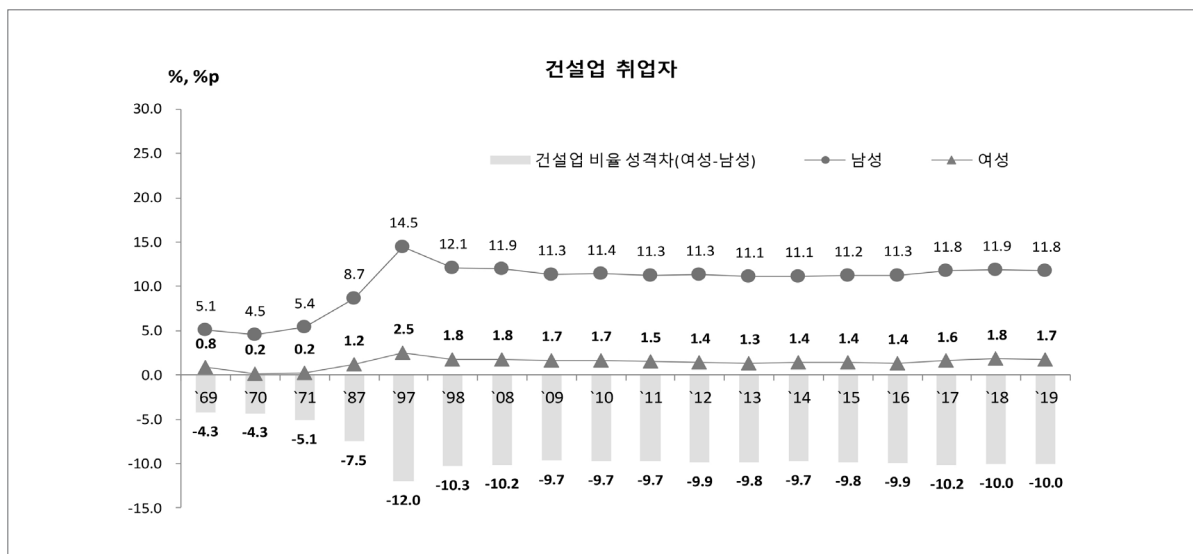
3) 건설업

- 여성 : (1970)0.2%→(2019)1.7%, 1.5%p 상승
 - (1987)1.2% (1997)2.5%→(1998)1.8%, (2008)1.8%→(2009)1.7%
 - 남성 : (1970)4.5%→(2019)11.8%, 7.3%p 상승
- 건설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70)-4.3%p→(2019)-10.0%p
 - (1987)-7.5%p (1997)-12%p→(1998)-10.3%p (2008)10.2%p→(2009)-9.7%p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2] 농림어업 취업자(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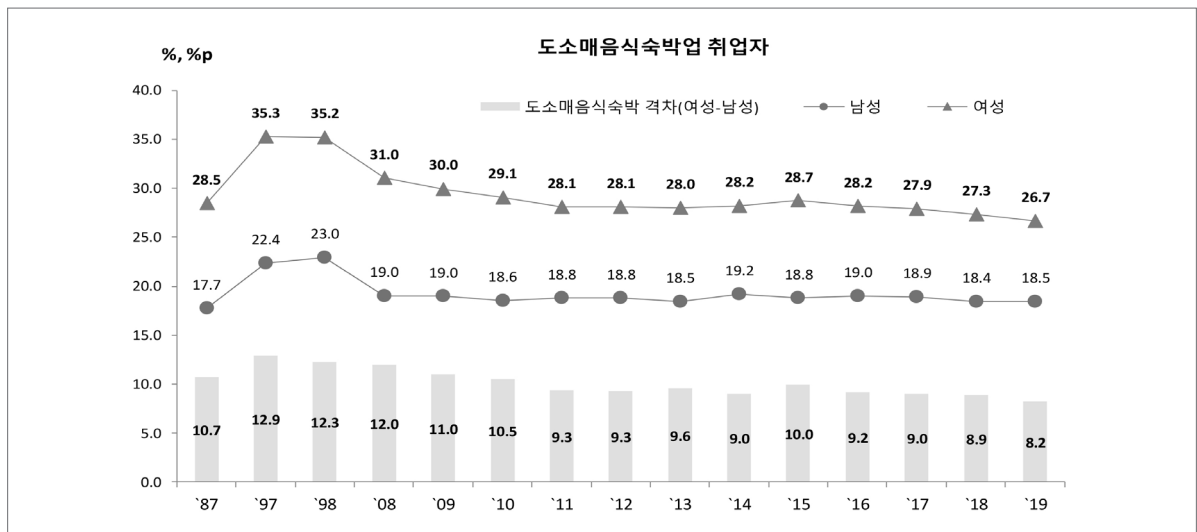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3] 건설업 취업자(1969-)

4) 도소매음식숙박업

- 여성 : (1987)28.5%→(2019)26.7%
 - (1997)35.3%→(1998)35.2%. (2008)31.0%→(2009)30%
- 남성 : (1987)17.7%→(2019)18.5%
-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87)10.7%p→(2019)8.2%p
 - (1997)12.9%p→(1998)12.3%p (2008)12.0%p→(2009)1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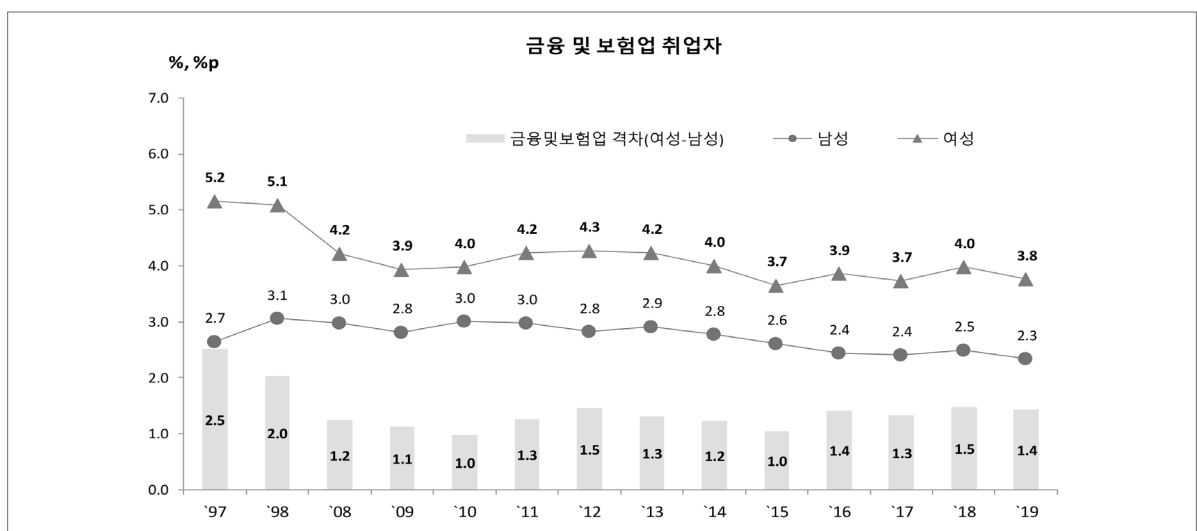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4]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1987-)

5) 금융 및 보험업

- 여성 : (1997)5.2%p→(1998)5.1%, (2008)4.2%p→(2009)3.9% (2019)3.8%
- 남성 : (1997)2.7%p→(2019)2.3%
- 금융 및 보험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2.5%p→(1998)2.0%p
(2008)1.2%p→(2009)1.1%p (2019)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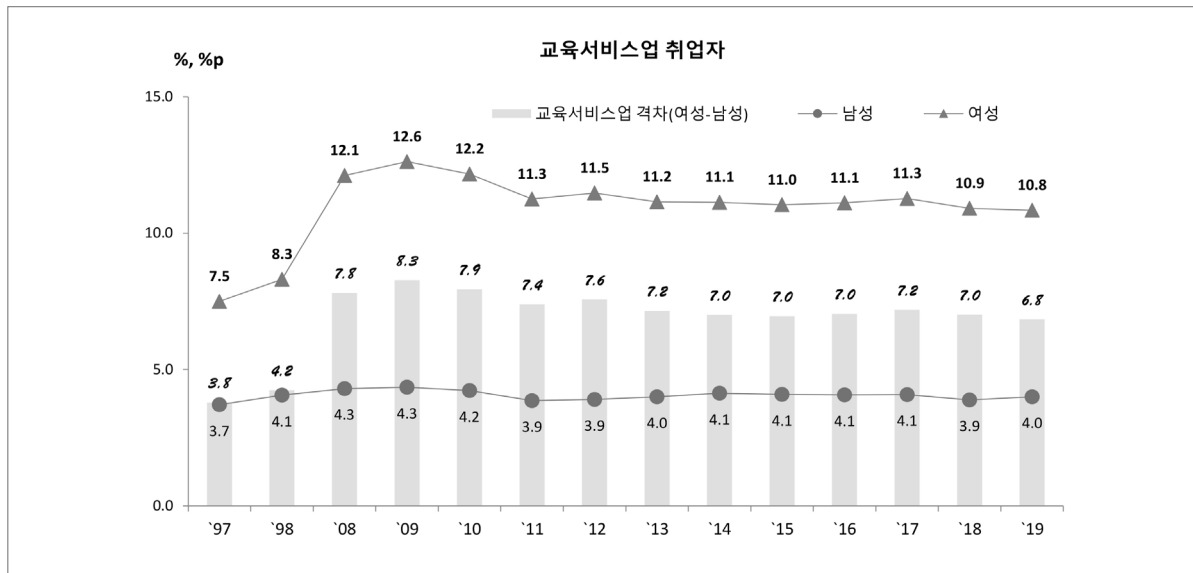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5] 금융 및 보험업(1997-)

6) 교육서비스업

- 여성 : (1997)7.5%→(1998)8.3% (2008)12.1%→(2009)12.6% (2019)10.8%
 - 남성 : (1997)3.8%→(2019)4.0%
- 교육서비스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3.8%p→(1998)4.2%p
 - (2008)7.8%p→(2009)8.3%p (2019)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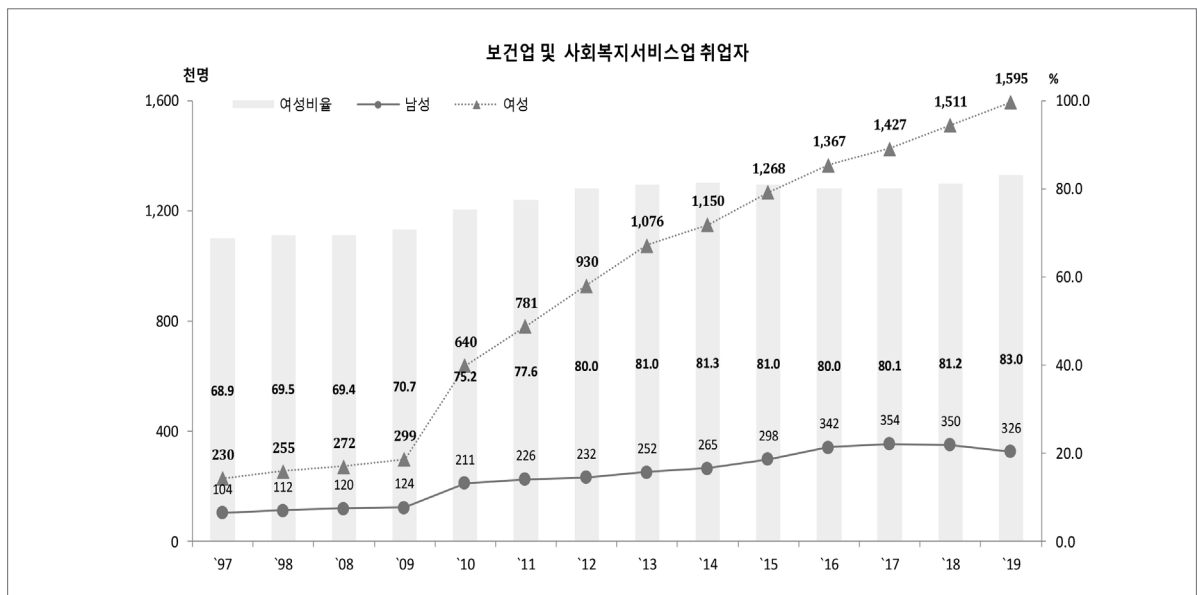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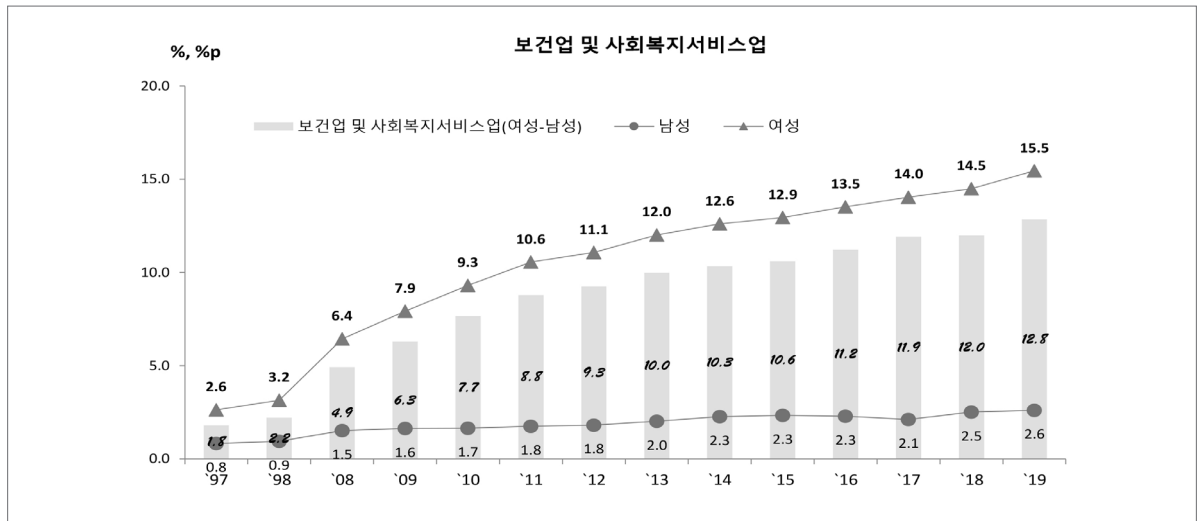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6] 교육서비스업(1997-)

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여성 : (1997)2.6%→(1998)3.2% (2008)6.4%→(2009)7.9% (2019)15.5%
 - 2011년 이후 여성취업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10% 상회
 - 남성 : (1997)0.8%→(2019)2.6%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1.8%p→(1998)2.2%p
 - (2008)7.8%p→(2009)8.3%p (2019)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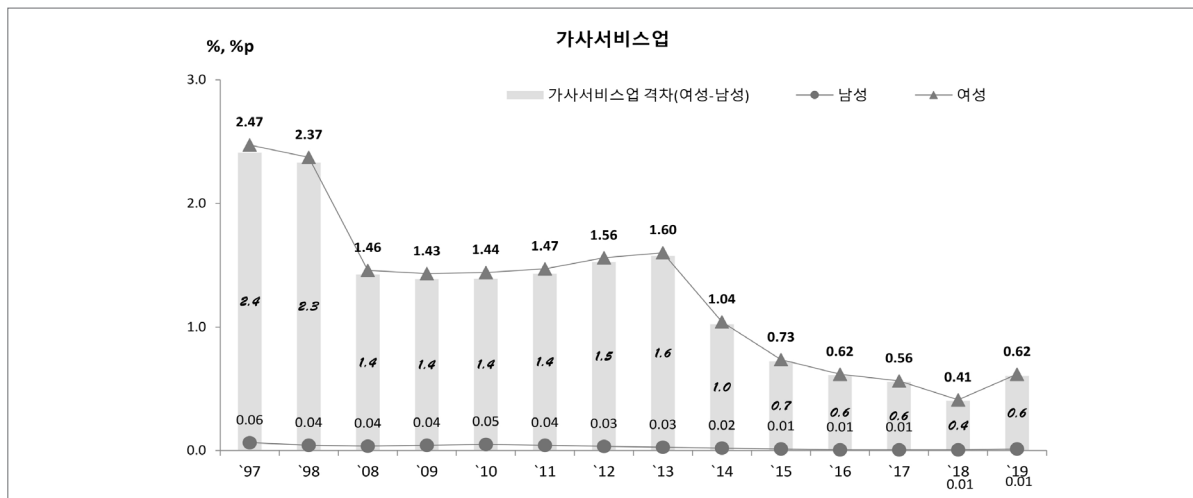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97-)

8) 가사서비스업

- 여성 : (1997)2.5%→(1998)2.4%, (2008)1.5%→(2009)1.4% (2019)0.6%
- 남성 : (1997)0.06%→(2019)0.01%
- 가사서비스업 취업 여성과 남성 격차(여성-남성) : (1997)2.4%p→(1998)2.3%p
(2008)1.4%p→(2009)1.4%p (2019)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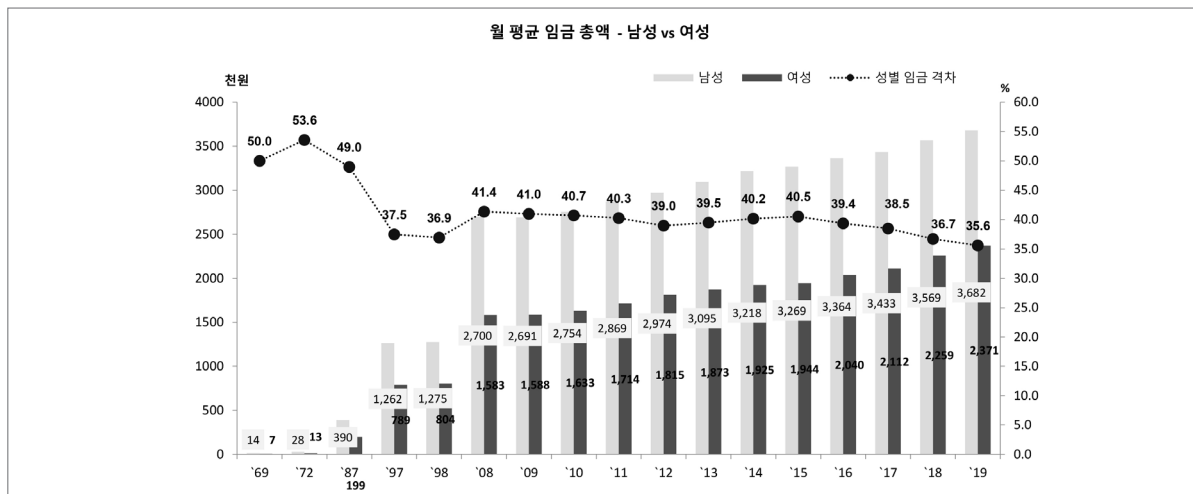
주 : 1997년 가사서비스업 / 2008년~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료 : 통계청, kosi.kr

[그림 11-8] 가사서비스업(1997-)

12. 임금

1) 월 평균 총액 임금 격차

- (1969)50.0% (1972)53.6% (1987)49% (1997)37.5% (1998)36.9% (2008)41.4% (2009)41% (2019)35.6%.
- (1972년) 53.6% → (2019년) 35.6%, 18%p 하락. 18년 동안 연간 0.4%p 축소
- 2015년 이후 성별임금격차 축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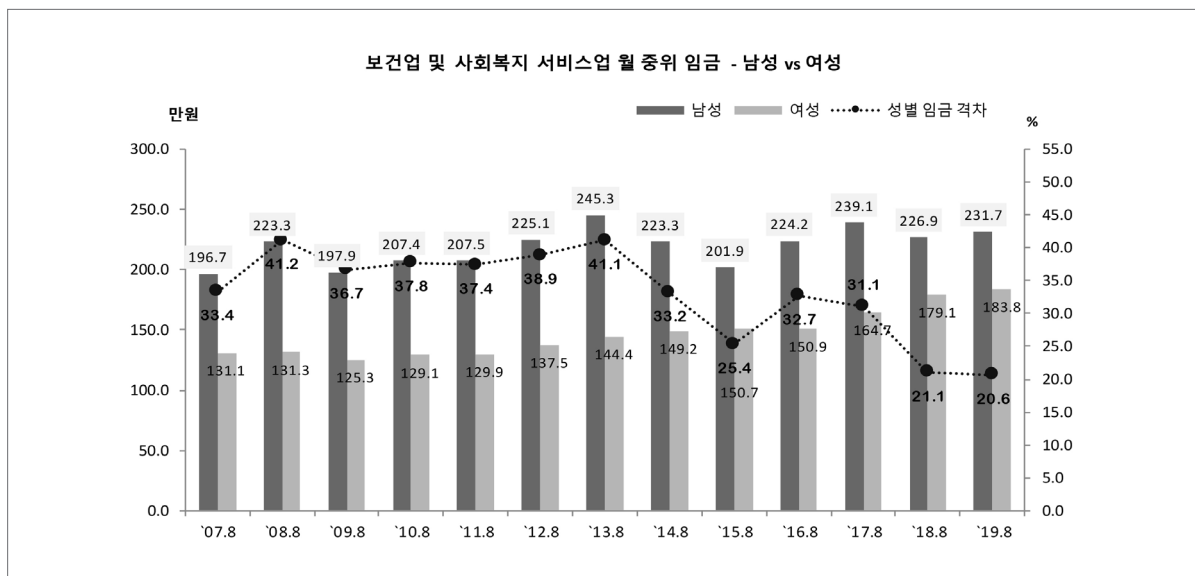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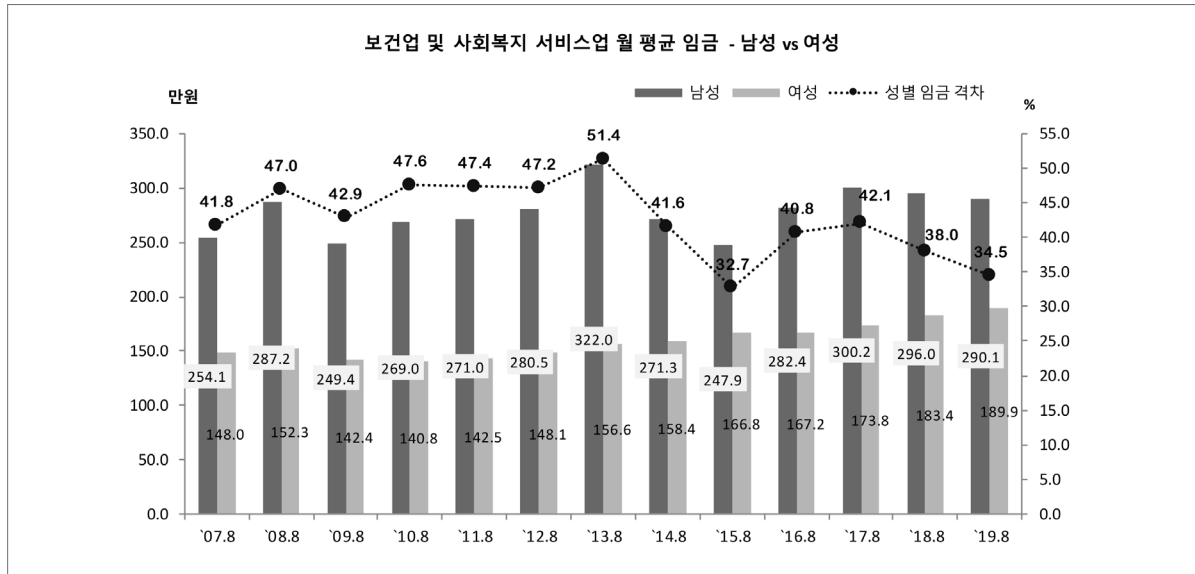
주 : 1970, 1971 직종별 성별 임금만 있고 전체 성별 임금 통계 부재함.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1969, 1972, 1987)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997~). 통계청, kosis.kr

[그림 12-1] 월 평균 임금 총액(1969-)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여초 산업임. 해당 산업의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34.5%이고 중위임금 격차는 20.6%임. 2018년과 2019년 월 평균 임금 성별 임금 격차 보다 중위 성별 임금 격차 감소폭이 큰 것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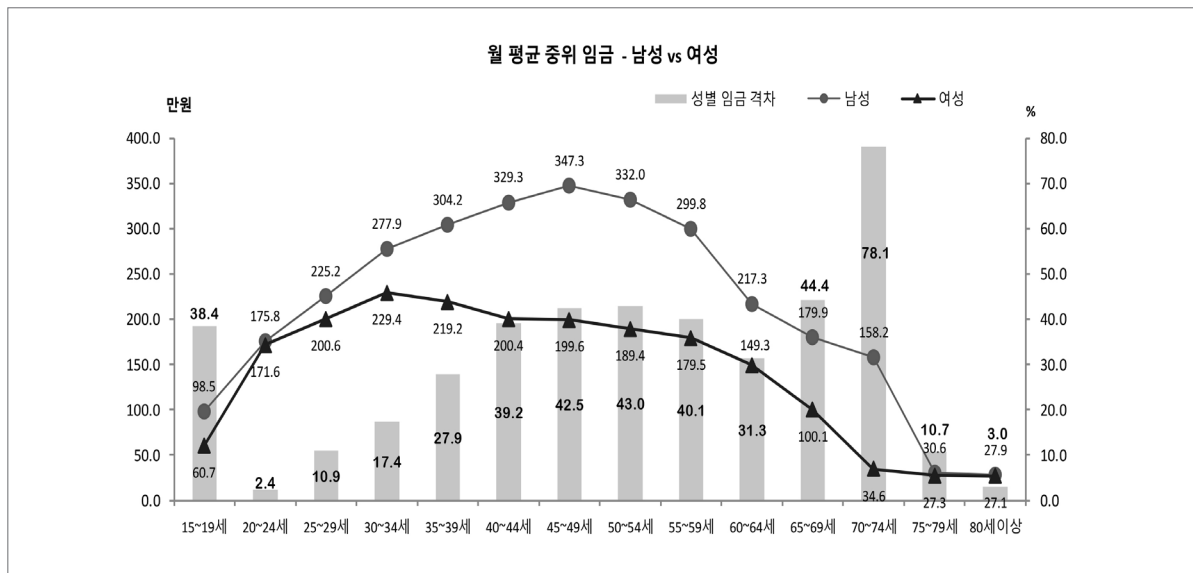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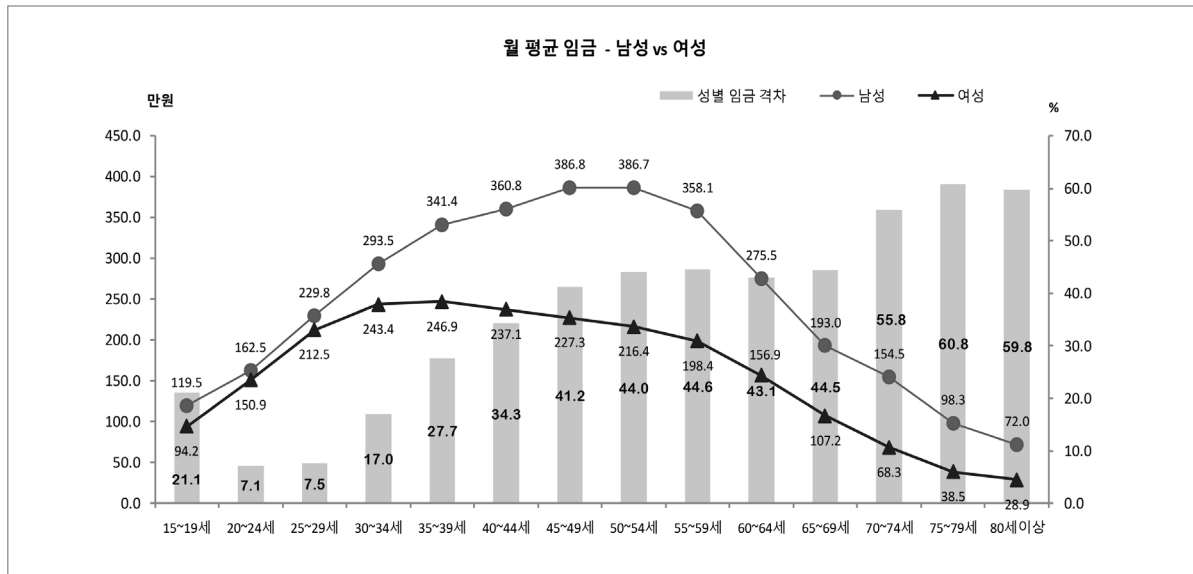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그림 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 격차(2007~2019)

3) 연령별 임금 격차

- 평균 임금 기준 여성임금노동자 생애 최고 임금은 35-39세 246.9만원, 남성은 45-49세 386.7만원. 64세 이하에서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55~59세로 44.6%.
- 중위 임금 기준 여성임금노동자 생애 최고 임금은 30-34세 229.4만원, 남성은 45-49세 347.3만원. 64세 이하에서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은 50~54세로 43.0%.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그림 12-3] 임금노동자 성별 연령별 임금 격차(2019.8)

4) 산업별 성별 임금 및 격차

- 2019년 8월 기준 산업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39.4%로 가장 높고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월 평균 임금 격차가 -21.6%로 21개 산업 중 유일하게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음.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종사 노동자수는 81천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0.4%에 불과함. ‘국제 및 외국기관’도 여성이 남성 보다 임금이 월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임.
- 산업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이 47.8%로 가장 큼. 다음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39.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4.5%) 순서로 높음.
- 여성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산업의 월 평균과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금융 및 보험업’(32.5%, 31.3%), ‘교육서비스업’(30.1%, 2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4.3%, 2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9.6%, 18.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1.6, 47.8%)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여성비율이 50% 이상인 산업 중 유일하게 성별임금 격차가 20% 미만으로 낮음.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시간당 임금 격차에서는 역전하여 남성이 여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표 12-1〉 산업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산업	월 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전체 노동자	여성 비율
	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		
농업, 임업 및 어업	227.4	116.7	48.7	11,559	7,005	39.4	123	47.4
광업	322.9	221.1	31.5	15,483	12,721	17.8	12	12.9
제조업	345.1	216.4	37.3	18,774	12,397	34.0	3,946	2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25.0	256.7	39.6	23,931	15,539	35.1	71	11.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19.4	209.1	34.6	17,203	13,164	23.5	132	16.9
건설업	274.9	223.9	18.5	15,087	13,599	9.9	1,627	10.7
도매 및 소매업	285.6	185.4	35.1	15,354	11,165	27.3	2,253	48.8
운수 및 창고업	287.6	223.5	22.3	15,170	13,411	11.6	808	18.0
숙박 및 음식점업	198.0	139.9	29.4	10,809	9,273	14.2	1,446	64.6
정보통신업	391.3	264.6	32.4	21,752	15,272	29.8	777	30.5
금융 및 보험업	459.2	310.0	32.5	25,982	17,842	31.3	761	55.4
부동산업	259.2	181.5	30.0	13,852	11,684	15.6	406	3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8.6	266.0	37.9	24,028	15,739	34.5	996	3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5.4	177.6	27.6	13,084	10,846	17.1	1,241	4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43.3	195.7	43.0	19,966	13,265	33.6	1,079	41.4
교육 서비스업	348.9	243.8	30.1	21,236	16,935	20.3	1,548	6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7.7	188.9	34.3	16,800	12,019	28.5	2,173	8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4.4	164.4	19.6	13,808	11,276	18.3	343	52.1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5.6	157.8	35.8	13,210	9,550	27.7	726	4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75.7	92.0	-21.6	14,769	7,713	47.8	81	94.4
국제 및 외국기관	334.8	350.5	-4.7	18,875	20,168	-6.8	10	25.4
전체	314.6	201.7	35.9	17,400	12,611	27.5	20,559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5) 직업별 성별 임금 및 격차

- 2019년 8월 기준 직업별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서비스종사자’가 40.8%로 가장 높고 ‘관리자’가 12.8%로 가장 적음. 시간당 임금 격차는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33.6%로 가장 크고 ‘관리자’가 9%로 가장 적음.
- 직업별 여성노동자 비율은 성별 월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서비스종사자’가 67.4%로 가장 높고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관리자’가 13.3%로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음

〈표 12-2〉 직업별 임금

(단위 : 만원, %, 원, 천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
남성	594.9	398.7	372.7	240.4	269.7	244.5	277.9	288.3	177.2	314.6
여성	518.5	257.6	248.3	142.3	174.3	152.9	174.1	210.3	121.7	201.7
월임금격차	12.8	35.4	33.4	40.8	35.4	37.5	37.4	27.0	31.3	35.9
남성	33,293	22,661	20,724	13,339	14,726	12,342	14,940	15,194	10,140	17,400
여성	30,294	16,111	14,605	9,615	10,811	8,944	9,915	11,536	8,759	12,611
시간당격차	9.0	28.9	29.5	27.9	26.6	27.5	33.6	24.1	13.6	27.5
전체 노동자	364	4,586	4,509	2,130	1,656	76	1,762	2,219	3,258	20,559
여성비율	13.3	50.0	49.9	67.5	56.3	18.8	11.2	14.4	51.4	44.6

주: 시간당 임금 = 월 평균 임금(주당 평균 노동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기준) 원자료

13. 합의

□ 1997년, 2008년 경제 위기의 여성노동 충격

- 여성고용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IMF를 겪으며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며 여성의 고용지위는 양적 증가 만큼 상승하지 않음

□ 불완전 노동 및 단시간 노동 증가

- 임금노동자 중 일시휴직자는 여성임금노동자가 남성임금노동자에 비해 전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 여성 일시휴직자 규모와 비율이 1987년 이후 모두 남성을 상회함

- 주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시간제 취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규모 여성이 남성을 상회
- 50년간 여성취업자는 보건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취업 여성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증가
 - － 보건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취업 여성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과 직종

〈표 13-1〉 주 평균 노동시간 짧은 산업과 직업 및 여성취업자 비율(2019)

(단위 : 시간, 천명, %)

	주 평균 노동 시간	전체 취업자	여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 비율
전체	40.7	27,123	11,660	4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3	2,206	1,802	81.7
교육 서비스업	32.9	1,883	1,264	6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9.0	5,556	2,718	48.9

자료 : 〈표 8-1〉, 〈표 8-2〉 재인용

□ 서비스업 국내총생산 상승은 여성취업자가 주도

-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43.8%에서 2018년 62.4%로 18.6%p 상승. 서비스업 중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생산 비중은 1970년 0.7%에서 2019년 5%로 7배 이상 상승.
- 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12년부터 80%를 상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

〈표 13-2〉 주요 지표 변화

항목(단위)	현황				증감
1인당 국민총소득(달러)	1970	258	2019	32,115	31,857.0
제조업 총생산 비중(%)	1970	19	2019	27.7	8.7
서비스업 총생산 비중(%)	1970	43.8	2019	62.4	18.6
교육서비스업 총생산 비중(%)	1970	3.8	2019	5.3	1.5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생산 비중(%)	1970	0.7	2019	5.0	4.3
노동조합 조직률(%)	1977	25.4	2018	11.8	-13.6
전체 노동조합원 중 여성조합원 비율(%)	1970	24.2	2018	22.5	-1.7
15세 이상 여성고용률(%)	1970	38.2	2019	51.6	13.4
15세 이상 고용률 성격차(여성-남성, %p)	1970	-35.6	2019	-19.1	16.5
30-34세 여성고용률(%)	1987	46.8	2019	64.6	17.8
30-34세 고용률 성격차(여성-남성, %p)	1987	-45.9	2019	-22.0	23.9
35-39세 여성고용률(%)	1987	57.7	2019	59.9	2.2
30-34세 고용률 성격차(여성-남성, %p)	1987	-35.7	2019	-31.2	4.5
15세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1970	60.7	2019	46.5	-14.2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성격차(여성-남성, %p)	1970	38.6	2019	26.5	-12.1
전체 취업자 중 여성비율(%)	1970	36.5	2019	43.0	6.5
전체 무급가족종사자 중 여성비율(%)	1970	68.4	2019	86.7	18.3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비율(%)	1970	26.9	2019	44.4	17.5
여성취업자 근로시간	1987	53.6	2019	37.4	-16.2
취업자 근로시간 성격차(여성-남성, 시간)	1987	-3.2	2019	-5.8	2.6
여성취업자 중 시간제 규모 및 비율(천명, %, %p)	1987	786	2019	3,318	2,532
여성취업자 중 초단시간 규모 및 비율(천명, %, %p)	1987	11.9	2019	28.5	16.6
여성임금노동자 중 일시휴직자 규모 및 비율(천명, %, %p)	2000	253	2019	845	592
남성임금노동자 중 일시휴직자 규모 및 비율(천명, %, %p)	2000	2.9	2019	7.2	4.3
여성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	1970	2.4	2.4	2.4	2.4
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 성격차(여성-남성, %p)	1970	-3.8	-3.8	-3.8	-3.8
여성취업자 중 농림어업직 비율(%)	1970	58.1	58.1	58.1	58.1
취업자 중 농림어업직 비율 성격차(여성-남성, %p)	1970	12.5	12.5	12.5	12.5
여성취업자 중 제조업 비율(%)	1970	11.8	11.8	11.8	11.8
취업자 중 제조업 비율 성격차(여성-남성, %p)	1970	-2.1	-2.1	-2.1	-2.1
여성취업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율(%)	1997	2.6	2.6	2.6	2.6
취업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율 성격차(여성-남성, %p)	1997	1.8	1.8	1.8	1.8
전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	1997	68.9	68.9	68.9	68.9
여성취업자 중 교육서비스업 비율(%)	1997	7.5	7.5	7.5	7.5
취업자 중 교육서비스업 비율 성격차(여성-남성, %p)	1997	3.8	3.8	3.8	3.8
월 평균 총액 임금 성격차(%)	1973	53.6	53.6	53.6	53.6

전태일로부터 50년,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1. 우리는 왜 70년대에서 여성노동운동을 보는가

1970년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을 삶의 고비에서 선택해온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계기이며 숙제이며 평생을 곱씹게 되는 과제를 주었다. 그는 남성노동자였지만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훨씬 다수 이고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를 마음아파 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남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싸우다가 너무나 큰 현실의 억압 속에서 절망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이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려 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어야 한다.” 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희망을 외쳤다. 아울러 어머니를 통해 뒤에 남은 이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산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일차적으로는 평생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온 몸을 다해 투쟁한 그의 어머니 이소선과 청계피복노조로 이어졌고 지식인과 종교인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그의 소망과 바람은 당시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바람과도 일치했고 여성노동자들은 독재와 탄압 속에서도 가열 차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투쟁하면서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조건 개선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에서 시작해 ‘김경숙’으로 막을 내렸다”는 최순영 전 YH노조위원장의 말은 바로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치열했던 투쟁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50년이 흘렀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은 사실 많이 닮아 있다.

1970년 100만 명이던 여성임금노동자의 수는 2019년 현재 908만명으로 9배 늘었다. 종사하는 산업도 바뀌었다. 70년대는 지방에서 올라와 수출주도의 대규모 섬유공장에서 근무하던 10대에서 20대의 미혼의 여성노동자가 연상된다면 2020년에는 사무직과 전문직, 다양한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가 연상된다. 또한 학력도 예전에 산업체 학교를 다니며 남자 형제들에게 상급학교진학을 양보하고 집안에 생활비

와 학비를 부치던 여성노동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평균학력이 고졸이상으로 상당수가 대학을 졸업한 여성 노동자들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고용이 불안하고 종사상 지위가 낮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1969년에 50.0%를 기록하였던 성별임금격차는 1987년까지도 49%로 크게 변화가 없다가 계속 조금씩 감소되어 2019년에는 35.6%로 매년 낮아지지만 18년째 OECD 1위로 50년 전 이나 지금이나 경쟁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차별이 적어 선호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성별임금격차는 시장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직업과 대표연령과 숫자의 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노동자로 임금과 처우를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오빠들의 힘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단결력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당사자운동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50년을 이어 여성노동운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2020년 여성노동자에게 닥친 위기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올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과 만나고 있다. 세계적이고 위험하고 모두에게 감염가능성이 열려있고 언제나 멈추어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는 많은 이들의 생활을 바꾸어놓았고 바꿀 것이다. 집밖을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학교와 도서관, 복지관은 문을 닫았고 문을 열어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불안한 상태이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식당에서 낯선 이들과의 접촉을 더 꺼리게 된다. 재택근무라거나 온라인 화상회의와 같은 극히 소수에게만 통용되었던 방식을 다수가 받아들이거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몇 개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무급휴직과 수입 감소를 겪어야만 했다. 언제나 위기가 올 때마다 충격흡수재의 역할을 했던 여성노동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 더 많이 해고되고 더 많은 수입을 잃었다.

2020년 2월과 5월 사이에 여성은 56만 9천명이 일자리에서 내려왔다. 남성의 31만 5천명에 비해 75%나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다. 실업자의 수도 남성이 12만3천명 늘어난 동안 여성은 16만명이 늘어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공적 돌봄이 멈추자 이중 32만 8천명이 육아와 가사로 자리를 옮겨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오직 4천명만이 육아와 가사라는 돌봄의 영역으로 갔으며 취업준비로 8만3천명이 이동한 것과 대비된다. (2020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자료 중에서) 이처럼 이 짧은 시기에 준비 없이 닥친 실직과 돌봄의 짐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3월에 학교가 갑자기 개학을 미루자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학교비정규직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93%에 육박하며 50%이상이 조직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최대 조직이며 많은 수가 이미 무기 계약직으로 정부의 분류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서 결국 비정규직의 한계가 바로 드러나게 되었다. 정규직인 교직원들은 재택근무라는 방식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지만 방학중 비근무라는 형태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많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선언으로 인해 임금 없는 시기를 견뎌야 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출근을 강행하게 되었

고 기자회견, 출근 시위 등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투쟁을 벌인 결과 결국 교육당국과의 합의로 다른 달에 받을 상여금을 당겨 받거나 하여 생계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동안 방과후에 다양한 특기 교육을 담당해왔던 방과후 강사 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대책도 실시되지 않고 수입 없는 봄을 견뎌야만 했다. 또한 코로나시기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 맨 몸으로 아이들과 함께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들 또한 대부분 여성노동자이다. 방역이 요구되어 소독과 방역이라는 업무가 더해졌고 개학연기로 긴급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이 임무는 70%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에게 전담되었다. 생계의 안전과 전염병의 안전이 함께 위협받고 있는 것이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민간부문까지 포함하여서도 가장 손 쉽게 출근중단과 기약없는 무급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다수는 시간제 노동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사실 그동안 시간제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여왔고 특히 여성의 시간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2019년 시간제 중 여성비중은 73.2%이며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64.9%에 이른다. 코로나시기의 일자리 감소는 초단시간 일자리에서 특히 많이 감소하였고 그 대상 또한 여성노동자가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에서도 여성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고 또 그동안 여성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 대면 일자리의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미 돌봄, 교육서비스 등 대면서비스의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또 어떤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실 여성노동자들은 70년대 신흥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를 통해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하여 수출주도의 한국경제를 성장시켰고 97년 경제위기에서 대폭 비정규직으로 이동하여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이라는 두가지 상황을 감내하였다. 코로나 위기 이후 2월에서 5월 사이에 나타난 이 위기가 장기화되어 여성노동자의 위기로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다.

3. 법 바깥의 여성노동자가 많다

70년의 전태일의 외침의 중요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물론 아직도 최저임금을 어기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부분은 그래도 노동부에 상담하고 상당부분 해결되는 편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 예외인 경우가 아직도 많다. 특수고용노동자가 그렇고 초단시간 노동자가 그렇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불완전한 적용을 받는다. 여성의 오래된 직업의 하나인 가사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법 바깥의 노동자 중에는 여성이 유달리 많다. 그 중 특수고용노동자는 2017년 8월 현재 49만 3천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68.2%가 여성으로 33만 6천 명에 달한다.(김유선, 2018) 사업자 등록을 하여 통계청

의 조사에서 노동자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많게는 230만 명 정도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있다.(조돈문, 남우근 외, 2017)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64.9%가 여성이다.

4대 보험 중에서 가장 유용한 보험인 고용보험의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등과 같이 현재의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또한 고용보험을 기반하고 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전수조사를 하었는데 캐디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이 없으니 휴직의 형태로의 출산휴가가 허용되지 않았고 합의하에 1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육아휴직을 하고 온 캐디에게 오히려 불이익과 괴롭힘을 주기도 하여 상담하여 어렵게 직업을 유지하게 된 사례가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험 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은 경제위기나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 여성취업자 1,179만 명 중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그 절반인 563만 명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또 적용대상이라고 모두가 고용보험에 들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4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시간제노동자의 경우 25.9%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2019.8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가사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과 사회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자의 출현에 맞는 새로운 안전망의 구축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고 정부도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4.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 조직화와 세력화

1)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열망, 민주노조

노동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다수의 힘을 모으는 것으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그 시작이 된다. 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도 이를 알았다. 다만 그 조직화가 단순히 노동조합으로의 가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주요 이슈를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다.

〈표 1〉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상황 개관

①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 결성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사/직물업체	청계피복, 한영섬유, 태광산업(광진섬유), 유림통상, 유영산업, 한흥물산, 무궁화주식회사, 삼경복장, 풍천화섬	한일나일론(동양나일론 안양공장), 삼원섬유(인천, 스웨터/편직업체), 삼풍섬유(안양),	마산방직(마산), 태광산업 부산공장(부산), 호남잠사(김제), 국제방직(아산)
봉제(가발업체)	YH무역, 와이비리 상사, 서울통상	반도상사(인천), 한독산업(인천)	
전자	아이맥전자, 크라운전자, 천우사, 아남산업, 한국마벨, 동남전기	신한일전기(부천),	
제약/식품업체	한국화이자, 칠성음료, 국제약품, 종근당제약, 유한양행	유유산업(안양)	
그 외의 업체		제일제당 김포공장(김포)	남한제지 신탄진공장(대덕), 호남고무(목포), 한진콜크(원주)
② 노조 민주화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 섬유업체	한국모방(원풍모방)	동일방직(인천)	
그 외의 업체	대일화학(파스, 밴드 생산), 인선사(노트, 앨범 제조업)		
③ 노조가 주도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업체	광진섬유(구 태광산업)	나전모방	은성산업 옥천제사(옥천), 내외방직(대구), 삼익직물(대구), 동광모방(부산)
봉제(가발업체)		한독산업(인천)	
전자	한국시그네틱스, 페어차일드		
그 외의 업체	애경유지(화학), 삼원산업(금속)		
④ 어용노조 하에서 여성 평조합원들이 벌인 노동조건 개선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업체	대한모방, 경성방직, 방림방직, 남영나일론, 동광통산, 삼기물산	대한방직(수원), 태평특수섬유(인천)	
전자	대동전자		
제약/식품업체	삼립식품, 해태제과, 롯데제과, 진로		
⑤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업체	태한산업, 승한봉재, 동아염직		
그 외의 업체	대협(완구류 생산)		

자료 출처 :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I』, 한울, 143~310쪽.

위의 표는 2019년 김경숙 40주기 토론회에서 이옥지의 책의 내용을 김상숙이 재 정리 한 표이다.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결성투쟁과 노조 민주화투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70년대는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때이다.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정권과 야합하여 관변노조나 어용노조로 생존하고 있었다. 또 이들의 유일한 상충부였던 한국노총도 노사협조주의 노선아래 기업의 파트너로 노

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노조가 사실상 노무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치열한 투쟁이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핵심사안이었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역할이 없었으므로 JOC나 도시산업선교회 등과 같은 종교지원단체 등이 바로 노조 결성을 지원하거나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70년대는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노동현장을 통제하는 시대였다. 성별임금격차는 물론이고 현장을 가부장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였다. 회사와 야합하여 노무관리 역할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간부 또한 대부분 남성이었다. 여성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민주화는 72년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여성지부장의 탄생을 시작으로 여성간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동일방직에서 YH노조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와 여성지도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민주노조의 출현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유명무실한 노동조합과 어용노동조합을 고쳐 가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을 하였고 믿을 것은 조합원대중의 지지이기에 여성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운동방식을 선택했고 독재정권과 부□힐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식화 교육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숫자로는 많지 않아 보이던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은 계속 이어져 결국 강고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박정희 정권에 파열구를 내게 된 것이고 50년을 이어 지금의 민주노조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 여성노동자 조직화, 필요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까지 꾸준히 하락했던 조직률은 1987년을 거치며 다시 상승하여 1989년에는 정점을 찍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률 또한 크게 감소했다. 1989년 530,309명이던 여성조합원 숫자는 1998년에는 253,505명으로 반토막 났고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1989년에 근접한 524,926명으로 회복되었다. 같은 시점에서 남성 조합원 수는 각각 1,402,108 → 1,148,435 → 1,806,706명으로 변화되어 여성노동자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2018년에는 1989년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여 임금노동자가 900만이 넘는 시점에서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조직률이 최하로 떨어졌던 1998년과 큰 차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TX_11824_A009&conn_path=I3]

외환위기 때의 조합원의 감소는 여성노동자에게 더 큰 비율일 뿐 아니라 더 큰 숫자로도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큰 규모의 기업에 있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정규직의 반듯한 직장 여성노동자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이후의 고용 회복 국면에서는 나쁜 일자리로 여성들이 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98년의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73%로 여성노동자의 3/4이 비정규직이 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전체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노동운동 세력의 많은 고민 끝에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두가지 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서 여성조합원의 참여를 모으고 여성조합원의 의견이 노동조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대표적으로 할당제가 추천되었고 2004년을 전후로 양 노총은 할당제를 의결하여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길은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조직화였다. 이 길 또한 두가지로 고민되었다. 금융과 같이 여성노동자가 많으면서도 임금이나 직급에서 차별을 받고 남성중심의 노동조합이 이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 산업을 중심으로 사무직 여성노동조합을 추진하는 것이 강력히 추천되었다. 또 하나는 기업과 산업을 뛰어넘어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여성독자노동조합의 조직이었다. 전자는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고 후자는 1999년 세 개의 여성노동조합을 탄생시켰고 그 중에 하나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아직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99년 결성된 이래 그동안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아니었던 다양한 여성노동자를 조직해왔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여성노동자, 청소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여성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원, 복지사, 콜센터 노동자, 기업의 파견직 여성노동자 등을 조직하고 투쟁하였다. 그동안 노동자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다양한 여성노동자를 드러내게 하고 당사자 운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당사자 조직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적용 등의 제도적 과제에 대하여 때로는 연대로 때로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은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 여성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가 그들이 다.

2019년을 대표하는 두가지 투쟁은 모두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투쟁이었다. 상반기는 3일간의 전국적 총파업으로 언론을 장식했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여성노동자투쟁이었고 하반기는 톨게이트 여성노동자가 그것이었다. 톨게이트의 요금수납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로의 고용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의 직접고용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 두 노동조합의 공통점은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 40대이상의 여성이 많다는 것, 노동조합이 여러개이지만 함께 연대하여 교섭하고 투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과 조직에서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여전한 과제이다. 2020년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뛰어 넘는 조직을 하였는데 주로 공공부문의 조직이 많았고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많이 조직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28%가 되었다. 2015년부터 대규모로 조직된 학교비정규직의 조직과 2017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과정에서 조직된 여성노동자가 그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촛불이후 들어선 정부가 명시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이 늘어난 것이다. 조직이 되고 눈에 띄는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지위는 아직 미흡하다. 할당제의 도입에도 불구

하고 30%가 아니라 조합원 비율을 적용하여 진행한 결과 양 노총 다 공히 여성조합원 비율보다 적은 지도력을 세우고 있다. 또한 대의원 등은 할당으로 채우지만 의사결정의 최고단위인 조직의 대표들은 대체로 남성이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남성이다. 산별 위원장 중에서 여성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보건의로 노동조합 대표를 제외하면 거의 남성이고 지역본부의 본부장 또한 양 노총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더 많은 여성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나가고 더 대표성을 확보해 나갈 때 여성노동자에 유리한 국면들이 더욱 전개되리라 믿는다.

5. 몇 가지 질문들

1) 여성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의 관계

– 왜 미투운동은 노동운동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가

2) 미조직여성노동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3) 사회적 대화는 여성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4)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5) 돌봄의 가치는 노동운동에서 어떻게 자리 매겨져야 하는가

6) 청년들이 노동조합과 잘 호흡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7)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전태일로부터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토론회’ 토론문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두 가지 발제문에 관한 의견

둘째,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함의

셋째, 1960-70년대 한국노총과 여성활동 재평가 필요성 제기

I. 발제문에 관한 의견

1. 발제 1. “통계로 본 여성 노동 50년”

1) 여성노동 현황과 위상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

- 1970년과 대비된 2019년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현황과 위치를 잘 보여줌. 1987년과 1997-1998년 사회경제적으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던 시점이나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시장에 대한 주요지표 분석은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위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음.

2) 여성노동 차별의 개선 추세

- 한국에서 1970년 대비 2019년 여성노동 차별 상황은 수치로 볼 때 감소하고 있음. 여성노동시장의 지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해 고용률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성 격차가 줄어들었음.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 여성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 등이 개선되고 있음.

3) 주목할 사항

- ① 여성의 35-39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2019년 연령별 고용률(그림 3-2, 11p)을 보면 M자형 취업곡선임이 확인됨.
 -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의 발생이 지속됨.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압력?)이 핵심 원인의 하나로 작용함.
 - 성별역할,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일·가정 양립 등 각종 정책의 점검도 요구됨.
- ② 1970년 대비 2019년의 주요 지표로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무급가족종사자 중 여성비율이 1970년 68.4%에서 2019년 86.7%로 18.3%p가 더 높다는 점임. 1987년 83.4%에서 1997년 89.8%로 최고점을 찍고 이후 8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음. 이것이 여성노동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궁금함.

4) 요청사항

- ① 여성노동자 속성(예:학력)에 따른 고용률 분석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형태는 L자형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됨.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30대 전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간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현상. 경력단절 이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하향 취업을 해야 하므로 취직 자체를 단념하고 영원히 일자리에서 사라진다는 것임⁴⁾
- ② 여성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
 - 예)사회보험 가입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③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직종별 분석 필요
 - 전직종과 생산직의 성별임금격차 다름 (<표1> 참조)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131222> (매일경제 / 기사명 :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졸여성 취업곡선 'M' 아닌'L' / 검색일 : 2020.07.08.).

〈표1〉 남녀 임금현황(노동부 자료)

(단위: 년 원, %)

	1977			1978			1983		
	남자	여자	남자-100	남자	여자	남자-100	남자	여자	남자-100
전직종	102,924	45,199	43.9	135,089	58,662	43.4	290,055	135,638	46.8
생산직	76,373	39,991	52.4	100,783	51,113	50.7	257,338	120,655	46.9
금융업	-	-	-	-	-	-	359,275	186,100	51.8

자료:노동부(1984), 『여성과 취업』, 104p(노동부, 1983,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노동청(1979), 『여성과 취업』, 52p(노동부, 1983,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참고.

- 한국노총 조직의 남녀 임금현황에서도 업종 간 성별임금격차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금융노조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타 업종보다 작음.

〈표 2〉 한국노총 조직 남녀 임금현황(한국노총 자료)

(단위: 년 원, %)

	1979.6.30현재				1980.6.30현재			
	전체	남자	여자	남자-100	전체	남자	여자	남자-100
섬유	89,622	140,309	78,391	55.9	115,648	181,023	101,563	56.1
화학	107,460	139,111	72,678	52.2	139,225	179,568	94,928	52.9
금속	146,584	169,430	97,584	57.6	179,966	210,572	105,909	50.3
체신	116,810	129,258	102,366	79.2	153,904	170,846	133,753	78.3
금융	130,971	151,800	117,150	77.2	152,330	174,900	137,775	78.8
출판	117,632	140,563	89,300	63.5	170,019	189,786	139,493	73.5
자동차	125,514	134,115	84,907	63.3	176,919	192,176	109,278	56.9
연합	125,332	141,154	98,080	69.5	143,335	168,293	102,572	60.9
관광	136,707	148,258	114,941	77.5	209,934	226,029	175,789	77.8

*자료:한국노총, 1979R:324-351; 한국노총, 1980R:317-349 중에서 여성이 많은 산별들 중심으로 작성함.

*금융노조의 경우 임금은 행원급 기준임. 전체 여성 조합원 중 행원급 비율이 각각 1979년 93%, 1980년 94%임.

2. 발제 2 : 전태일로부터 50년,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1) 여성노동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발제자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함.

- 1970년대 전태일 열사의 죽음, 여성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을 거치면서 50년이 흘렀지만 여성노동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함. “통계로 본 여성노동”은 이를 잘 보여줌. 발제자가 여성노동의 차별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노동자의 주체적인 노력 즉 조직화와 세력화 방안을 제시한 데에도 이견 없음.

2) 다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것을 제안함.

- ①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관한 문제
 -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봄.
- ② 1970년대 한국노총에 대한 서술(평가)

II.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⁵⁾

1. 여성노동권과 조직화의 관계?

〈표3〉 1970년대 남녀 노조 조직률과 성별임금격차

(단위:년, %, %포인트)

구분	노조 조직률				한국노총 여성 비율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
	전체	남자	여자	남녀 차이		
1972	12.9	12.9	12.9	0	25.1	45.1
1973	13.2	13	13.6	-0.6	26.8	45.4
1974	14.8	14.2	16.2	-2	30.3	44.6
1975	15.8	14.5	19.3	-4.8	31.1	42.2
1976	16.5	15.2	19.5	-4.3	33.2	43.9
1977	16.7	15.6	19.5	-3.9	34.2	43.9
1978	16.9	15.9	21.2	-5.3	33.6	43.4
1979	16.8	16.2	18.1	-1.9	33.3	42.4
1980	14.7	13.6	17	-3.4	36.7	42.9
1981	14.6	13.9	16.3	-2.4	36.2	44.5
1982	14.4	13.8	15.7	-1.9	34.6	44
1983	14.1	14.2	13.9	0.3	33.1	45.2
1984	13.2	13.5	12.8	0.7	31.7	45.9
1985	12.4	13.1	11.1	2	37.6	46.7
1986	12.3	13.2	10.5	2.7	30.2	48
1987.6	11.7	13	9.5	3.5		49.2

주: 노조 조직률=조합원수÷총피용자×100

자료:노조 조직률=한국노동연구원(1990: 152), 『1990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한국노총 여성조합원 비율=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서 참조; 성별임금격차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한국노총, 1980R: 654에서 재구성함.

5) 박현미, 2019, 「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하와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함.

- 1960~70년대 한국노총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의 관계는 노조조직률과 여성의 노동권과의 관계에 답해주고 있음.
- 왜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유례없이 높았고 한국노총 내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조합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조직 내에서조차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내 지위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성별임금격차가 유지되고 재생산되어 왔던 것일까?
- 왜 결혼이나 임신퇴직, 조기정년이나 정년 차별, 그리고 승진승급 등의 고용차별 관행은 왜 노동조합의 핵심의제로 제기되지 않았던 것일까?
-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여성노동자 주체의 측면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함.

2. 여성노동자 주체의 역량?

- 1960~70년대 성별화된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분석결과 여성의 노동자 의식이 낮았고 그런 조건 하에 있었음을 확인함.

①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주변화되어 있었음.

결혼하면 가정으로 돌아갈 노동력이라는 노동조합의 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교육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여성들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는 물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주변화되어 있었음.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식이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은 구조적으로 매우 미흡했음.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동자 의식이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

② 1960~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유니온숍 제도에 의함.

의무조합원제, 강제성원제도인 ‘유니온숍’ 제도는 당시 노조의 조직확대와 성장을 가져온 주요 요인임(김성진, 1979: 84; 최장집, 1997: 115). 유니온숍 제도는 1970년대에 모든 산업별노조에서 널리 시행되어 왔음.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직업체의 86.6%, 조직노동자의 82%에 유니온숍이 적용되고 있고 조직업체의 4.2%와 조직노동자의 4.1%가 클로즈드숍의 적용을 받았음(김성진, 1979: 85). 특히 섬유노조는 전적으로 유니온숍에 의존했고 금속과 화학노조에서는 유니온숍과 오픈숍이 거의 대등하게 적용되었음.⁶⁾ 당시 많은 여성들은 기업에 입사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었음. 따라서 여성들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지만 여성노동자 개인 혹은 노동조합

6) 기업규모 확대와 단체협약 상 규정되어 있는 유니온숍 조항에 의해 기존 조직의 조합원 수 증가하였는데, 섬유, 금속, 화학 등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원보, 2004: 380).

의 의도적인 노력 등이 없이는 노동조합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앞서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이었음을 언급함. 당시 여성노동자 교육 또한 전통적인 성별분업담론을 토대로 진행됨으로써 여성들에게 성별화된 규범을 강하게 심어주었음.

③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포섭

- 한국에서 산업화 초기에 남성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성별로 위계적인 방식으로 포섭하였음.
- 서구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낮은 임금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왔음. 반면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나 노동조합과 그러한 갈등을 겪지 않았음. 1970년대 ‘민주노조’의 흐름을 타고 출현한 여성중심 노동조합들이 한국노총이나 산별조직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면, 서구 산업화 초기에 서구 여성노동운동이 경험했던 남성노동자와 남성노동조합의 노조가입이나 활동의 방해나 제한 등은 산업화 초기 한국의 노동조합에서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남성노동자나 남성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서구와 달랐던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자의식이나 남녀평등 의식이 낮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특히 국가의 성별화된 산업화 전략, 가부장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경영전략 등으로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의 노동자의식이나 남녀평등 의식의 발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3. 여성노동자의 과제 : 조직화 + 성별화된 노조의 혁신

- 1960~70년대 한국노총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의 관계는 여성의 노조조직률이 여성노동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긴 하지만 충분치 않음을 보여줌. 여성의 노조조직률이나 노동조합 내 여성비율이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성별화된 노동조합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함.

① 의사결정기구/과정에서의 대표성 확보

- 전통적인 성별분업담론에 기반했던 1960~70년대 노동조합은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주변화, 여성의 과소대표성, 그리고 주변화된 부녀업무 조직과 여성의제 등을 특징으로 함. 성별로 위계화되어 있는 이같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와 관행이 지속되는 한 노동조합에 많은 여성들이 있다고 해도 여성노동권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음. 1960~70년대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오늘날의 여성노동자와 여성노동운동에 주고 있음.
- 사회적으로 성별분업관념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2019년 현재 한국노총 조직

들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노동조합 내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분업관념과 이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문화나 관행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한국노총의 조직운영 전반에서 여성의 주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의 숫자는 극소수임. 한국노총에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여성할당제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2019년 기준 한국노총의 파견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은 전체 여성조합원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4〉 한국노총 대의원 및 중앙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성비율	15.3	15.4	15.7	15.6	15.5	15.8	15.8	18.2	17.6	18.0	18	17.8	16.5	17.8	17.9
대의원	전체	743	721	709	702	707	709	696	676	642	678	714	776	785	806
	여성(참석)	26	113	100	93	97	102	90	97	91	90	102	116	105	112
	비율	3.5	15.7	14.1	13.2	13.7	14.4	12.9	14.4	14.2	13.3	14.3	15.0	13.4	(81) (80)
중앙위원	전체	102	94	99	97	99	97	97	96	98	107	110	122	122	13.3
	여성	3	11	9	7	7	11	12	11	13	10	12	15	15	123
	비율	2.9	11.7	9.1	7.2	7.1	11.3	12.4	11.5	13.3	9.4	10.9	12.3	12.3	15

* 자료 : 여성본부 내부 자료(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서, 중앙위원은 당연직 제외)

산별이나 지역조직 다수는 규약이나 규정에 명시된 여성할당제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아직 조직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한국노총의 여성 과소대표성이 조만간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함.

② 여성의제의 주변화 극복/탈피(?)

- 노동조합에서 여성의제도 주변화되어 있음. 1960~70년대 여성문제는 여성부서에서 여성간부들이 논의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양태는 달라지지 않았음.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에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법 등으로 여성노동과 관련된 굵직한 의제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음. 당시 한국노총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여성노동권의 진전에 큰 의미가 있었던 이들 안건들은 논의되지 않았음. 한국노총의 핵심 의사결정기구 예컨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중앙위원회,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도 여성의제는 거의 취급되지 않았음(박현미 · 이원희, 2015: 265-266).
-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발달로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여전히 심한 임금차별을 받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현실은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과 여성의제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여성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차원에서 여성의제가 논의되고 공론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함.

- 노동조합에서 여성들 스스로 여성들의 의제를 개발하고 모아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혹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기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여성위원회나 여성부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산별조직과 지역조직의 여성간부들을 엮어내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해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여성할당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남성중심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나 여성의제의 주변화는 노동조합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극복되기 어려움.

III. 한국노총에 대한 서술(평가)

- 발제문에 나타난 대로 ‘한국노총=어용, 기업의 파트너로서 기업의 이해 대변/저임금 지속시킴, 상급단체 역할 없었음’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 여성노동자 문제를 다루면서도 1960-70년대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이나 운동에는 주목하지 않음.
- 발제문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70년대는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때이다. 1)기존의 노동조합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정권과 야합하여 관변노조나 어용노조로 생존하고 있었다. 또 이들의 유일한 상충부였던 2)한국노총도 노사협조주의 노선 아래 기업의 파트너로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3)노조가 사실상 노무관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투쟁이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핵심 사안이었다. 4)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역할이 없었으므로 JOC나 도시산업선교회 등과 같은 종교지원단체 등이 바로 노조 결성을 지원하거나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발제문 6p)

1. 한국노총이 어용이라는 평가?⁷⁾

7) 유병홍, 2018, “한국노총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미간행 글)

〈표 5〉 한국노총 조직화 수치 해석

- 외부자는 물론이고 한국노총 내부자들도 과거 한국노총에 대해 “어용과 굴종의 역사”로 보는 경우가 많음. 5.16쿠데타 이후 정부가 만든 노총이라는 한계를 많이 지적함. 그럴까?
- 조합원수: 1961년 96,831명. 1963년 224,420명. 1965년 294,105명. 1967년 366,973명. 1969년 444,372명. 1971년 493,711명.
- ⇒ 그렇게 어용이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왜 노조를 만들었을까? 이 정도 조직사업이면 나름 열심히 한 것 아닌가?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 조합원 전부가 “어용”이란 말인가? 50만 어용 조합원?

- 위 내용을 보고 난 후 ‘한국노총 어용’이란 말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할 가능성이 높음. “아, 누가 조합원더러 어용이랬나? 한국노총 간부를 말하는 것이지.”라고. 이것은 더 큰 문제 아닌가? 한국노총 간부가 한국노총을 전부 대표하나? ‘한국노총=한국노총 간부’인가? 노동계급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노조운동론 접근 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기층에서 열심히 싸운 단위노조(지부)들은 뭔가?
- ‘민주 vs. 어용’ 식의 접근은 선명해보이고 1987년 이후 한동안 나름 유의미한 역사적 역할을 한 해석이라고 보임. 그러나 이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첫째, 유의미하지도 않고 둘째, 타성에 젖은 평가 아닌가?

2. 기업의 파트너로서 기업의 이해 대변/저임금 지속시킴,

- 성별임금격차 지속, 재생산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노조가 역할 했음은 인정함.
- 저임금 유지는 산업화 시기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에 영향을 크게 받음. 다음 2가지 내용을 고려할 때 노조가 저임금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① 임금억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⁸⁾

- p. 263 1960~70년대 정부는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전개되면서도 매년 노사 간에 첨예한 쟁점 사항이 되고 있었던 임금인상(율)의 결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에서

8) 김양화. 2009. 「한국면방직공업의 자본축적(1947~76년)에서의 정부개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 시기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 237-274.

노사 양측의 협상결렬로 “실력행사”(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발생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타결이 지체되거나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 p. 265-266 정부개입은 면방직 공업부문의 노동분배율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노동생산성에 크게 뒤쳐져 있던 실질임금은 1968-1970년간에는 방직 및 방직의 두 부문 모두에서 근접해지면서 노동분배율이 크게 높아지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1976년간에는 다시 그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75년부터는 실질임금의 절대수준조차 떨어지는 등으로 노동분배율은 크게 낮아졌다. 이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무엇보다도 국보특별법이라는 형태의 정부개입이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발효로 노동분배율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인 계급역관계가 일거에 자본 우위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② 1963~1971년 노동쟁의 발생과 그 원인⁹⁾

- p. 88 노동쟁의의 발생건수와 참가인원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매년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도 계속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964년-1971년 파업가부투표에서 대부분이 90-99%의 노동조합원이 참가하여 90-99%의 파업찬성률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이며 쟁의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⁰⁾
- p. 89 노동쟁의의 주요 요구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요구가 최저 54.3%(1968년)에서 최고 80.0%(1967년)까지 압도적 비중 차지 → 끊임없는 투쟁. 성과는 크지 않았음. 가장 큰 제약요인은 저농산 가격 - 저임금에 의한 수출입국- 경제성장의 논리가 국민경제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이에 더해 사용자측의 태도나 법률적 측면은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사용자의 부당한 억압과 파괴공작, 노동쟁의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③ 섬유노조, 1972R: 151

노동청의 조정안... "노동조합측이 정식으로 거부하자 당국자 등은 기필코 이를 수락시키려고 강요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은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하였다. 노동청측의 조정실무자가 노동조합 대표에 대하여 '48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미없다'느니 '삼호방직대전공장지부장을 얼마나 해먹는지 두고 보자'느니 등등 협박과 위협을 하였던 것이나 노동조합측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④ 콘트롤데이타 노조에서 임금인상 투쟁 시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임금억제정책을 공표하는 정부정책이었음(한명희, 2011:25).

9) 이원보, 1978, "한국 노동운동사 연구-6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산연논총」,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77-98

10) 박현채, 1971, "해방 후 한국노동쟁의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노동문제 논집, 제2집, 고대노동문제연구소, 1971. 3, 22p

3. 상급단체의 역할 없었다?

① 박준식. 1984. 『한국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산업갈등의 과정에 대한 상부조직의 지원은 주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 산하의 지역별지부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지원건수가 전체 사례의 약 42.9%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산업별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이들의 역할도 매우 활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체로 상부단체 지원은 노조결성이나 운영 및 쟁의의 과정에서 개별노조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s. 비교적 활발했던 상부단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특히 노동조합 지도층과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력이 대립하면서부터는 상부조직이 앞장서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킨 경우도 있었다. (90-91p)

② 최장집. 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의 60-70년대 단체교섭 활동 의의 높이 평가
- 한국노총과 산별노조가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임금자료를 제시하고 지도하는 교섭활동이 계속되면서 노조지도자들은 임금개념이 1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생계비 임금으로부터 1인 노동자의 임금이 1가구 소득의 주원(主源)이 되는, 그러므로 마땅히 한 노동자 가족을 위한 최저생계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게 되었다. 이제 임금투쟁은 노동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임금 수준을 의미하였다. 분명히 이 단체교섭의 실체는 노동자들이 계약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노동을 단위시간에 의한 임금계산으로 연결시켜 이해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임금개념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¹¹⁾
- 임금교섭에서 노조의 역할은 효과적인 단체교섭력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보다는 교섭과정에서 '정당한 임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임금이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노동에 대해 갖는 전통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이태호(1983), 「1970년대 노동운동의 궤적」, 『실천문학』, 4

- 한국노총 존재 의의

“한국노총은 외형상 민주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60년대 초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로 발족한 한국노총은 재건과정에서의 관의 작용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었지만 일선 노동자들의 의견을 산업별로 반형,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는 확보하고 있었다. ... 산업별로

11) 관습적인 임금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는다’는 말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310p 주54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의로 해결하고 노총 밖의 압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기구이다. 한국노총은 노조를 합법적으로 조직,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노동자들은 조직에 의해 효과적으로 의식화되고 의식화된 행동은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한다. ‘사용자 눈치를 보며’ 노조를 결성할 필요가 없다. 한국노총은 법이 허용하는 노조결성의 권리를 조직의 축적된 힘으로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구...”

④ 이태호(1983), 「1970년대 노동운동의 궤적」, 『실천문학』, 4

－ 한국노총 공적

1970년대 노동운동 측면에서 1)노총이라는 간판을 보존했다는 점, 2)노동운동을 법질서에 충실한 관점에서 전개했다는 점, 3)노총 내부의 지휘권 확립 즉 명령, 복종관계로 일사불란한 체질을 구축했다는 점, 4)몇몇 지도자의 정치참여라는 제한된 의미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 5)정치적 격동기에 질서유지자로서의 전통을 고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으로나마 공헌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8-169p)

※ 한국노총의 역사적 과오

- 1) 한국노총은 유신체제의 종속기구로 전락, 2)소극적인 운동으로 일관함. 한국노총은 대부분 진정, 건의, 호소, 지지 등 온건한 대응방법을 노동운동에 적용. 정부로 하여금 안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 책임도 없지 않음 3)한국노총 지도부는 지성이 결핍된 노선을 보였음.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소리 외면, 배신하면서도 그 노선의 부당성을 자각하지 못했던 역사적 과오. (169~170p)

⑤ 황석만(2006), 『1970, 80년대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노동자 이익 대변 조직으로 존재 = 노동자들의 권익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반공주의적인 내부적 이념 지향성이 매우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서 일정한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총은 형식적으로나마 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라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내의 파벌싸움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싸움은 노조의 존재 의의, 조합 운영의 민주성이라는 이슈를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는 정부의 통제 정책과 일정한 갈등 관계를 가지며 예상치 못한 여부 사건을 만들었다. 노총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통제 하에서도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존재했다는 점은 노동자들의 권익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노총이 비판받는 점

단위노조에서 심각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노총의 역할이 중요해질 때, 노총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노동쟁의의 성격이 노동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설 때 그러하다. 이것은 노총이 한편으로 정치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총이 태생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에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정권은 노동운동이 정치화 되는 것 사실은 모든 정치적 도전에 대한 정권이 보인 반응이기도 하지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을 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노총은 진퇴양난이었는데, 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사실상 노총의 해체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존재의미가 없어진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총이 노동자들에게 쉽게 적대적이 되기 쉬운 정치적 상황에서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기여 곧, 노동자보호 입법, 임금 인상 등에서 일정한 압력집단의 역할을 했으며, 노동운동 전문가에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 점 등에 대해서 일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고용주, 정부로부터 좌익혐의를 받을까 봐 심각한 자기 검열과 계산을 해야만 했다. 자신들이 좌익이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해 노총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단적인 예였다. 당시 가장 합법적이며 문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노총이었으며, 조합원들도 한국노총이라고 하면 커다란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31p)

⑤ 한국노총의 1960-70년대 여성활동

- 다음 절에서 몇 가지 내용 소개함.

IV. 1960-70년대 한국노총 여성활동 재평가 문제

1.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주장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노동운동이 1970년대에 여성 특수주의제를 제기했다는 입장과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는 역사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에 여성특수주의제가 노동운동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주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운동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1960년대 전매노조나 체신노조에서는 결혼퇴직제 철폐 활동이 있었고 생리휴가 확보와 사원편의, 수유시간 문제 그리고 산전산후 휴가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여성노동자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금융권의 결혼퇴직제 폐지 투쟁에도 처음에 미온적이었던 금융노조들도 함께 하였다. 한국노총에서 모성보호는 196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고용차별문제도 일부 개선이 있었다(박현미, 2019:31-32).

2. 한국노총의 여성의제

① 모성보호 관련

- 경제경영계의 여성관련 조항 개악 반대투쟁 : 1960년대 경제경영계에서 시도한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함. 1964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성의 시간외 근로 연장, 산전산후휴가 40일로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건의함(한국노총, 1964R:567). 이 안은 국회보사위를 통과했을 뿐 한국노총의 투쟁으로 국회에 계류됨. 그러나 1965년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성근로자의 1개월에 1일인 생리유급휴가를 없애고 산전후 휴가 60일을 40일로 줄일 것을 다시 제안함(이명희, 1985:101). 사측의 여성관련 조항의 개악시도는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음(박현미, 2019:207).
- 한국노총 전매노조 여성조합원들은 1960년대 경영계가 요구했던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단축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투쟁을 전개함(전매노조, 1965R:481).

* 생리휴가 청구의 어려움 해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1989. 3. 29.)¹²⁾

- 한국노총이 상급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인 노동현실에서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함. 변경된 문구는 다음과 같음.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전매노조 : 육아시간 확보와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 권리위한 활동 전개함.

육아(수유)시간의 기본근로시간 공제활동은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전매노조에서 생산장려금은 일정시간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어 육아시간을 여성의 기본근로시간에서 공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아를 둔 여성조합원들 중에는 집에서 할머니들이 암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유가 없던 때라 젖을 먹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가 아픈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일부 여성조합원들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사업장 내의 탁아소에서 모유를 수유하기도 하였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숫자로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였다(여성간부 D 전화 인터뷰, 2019.1.2.). 육아시간의 기본근로시간 공제에 대한 문제는 서울연초제조창지부에서 1964년 1월에 처음 제기되었고 그해 7월에 합의되었다. 이어 9월 전매노조 본부 차원에서 ‘육아시간의 기본근로시간 공제’ 원칙에 합의함

12) 김엘림, 2014, “생리휴가제도와 판례,” 「여성신문」(2014.12.18.).

으로써 1965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박현미, 2019:229).

– 생리휴가 관련

섬유노조, 전매노조, 체신노조 등 : 생리휴가 확보(부여) 문제, 생리휴가 부여와 결근일 연계 문제, 생리휴가의 사용촉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다루어짐.¹³⁾

– 산전산후휴가 사용 문제:체신노조에서 대무요원 확보(1979년)¹⁴⁾

② 고용차별 개선 – 1960년대 한국노총 조직들

– 한국노총에서 1960년대 여성의 고용차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여성의 결혼퇴직제 반대활동이다. 1960년대 초 전매노조와 체신노조에서 쟁점이었고 개선활동도 있었다.

– 전매노조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전매사업 운영 개선안에 포함된 여성 종업원 결혼퇴직제를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했고 철회시켰다.

– 단체협약에 결혼,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제한 규정을 두었던 체신노조는 1963년 여성이 결혼하면 사표를 강요해온 광주지청의 부당처사를 노사협의회를 통해 시정토록 하였다.

– 섬유노조의 대전방직 지부 : 노사교섭에서 여자 조합원에게 대하여 결혼하면 퇴사조치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선처하겠다고 약속”받았다는 기록이 있다(섬유노조, 1965R:128).

V. 의견 혹은 제안??

– 한국노총 1960-70년대 활동과 역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함.

※ 노총의 역사적 제약에 대한 이해 필요. – 반공주의

지금 관점에서 한국노총의 60-70년대 활동을 평가??

– 1960년대 노동조합운동/노동운동에 대한 관심 필요. 민주와 어용이란 대립각으로만 노동운동, 노동조합을 설명하고 사실을 보려 할 때는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됨. 예컨대 1979년 산별조직 산하지부 545개, 분회 4,088개(한국노총, 1979R:307)인데 “한국노총=어용”이라면 이들 조직 모두가 어용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

예) 기존 여성노동운동연구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분석되면서 이를 제외한 여성노동

13) 자세한 논의는 박현미, 2019:211-228 참조.

14) 자세한 논의는 박현미, 2019:226 참조.

운동이나 노조활동은 잘 다루지 않음. 특히 경공업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운동을 서술함으로써 1960년대 전매노조나 체신노조에서 전개했던 여성들의 권익활동 등은 주목받지 못함.

〈참고문헌〉

* 약칭

- 한국노총, 산별노조 각 년도 사업보고(활동보고)는 연도 뒤에 R로 표기하고 인용한 페이지를 명기함. 예)한국노총, 1962R:23

○ 노동조합 자료

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

섬유노조. 1964. 사업보고

전매노조. 1965. 사업보고.

체신노조. 1978-1979. 사업보고

○ 국내 자료

김성진. 1979.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송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양화. 2009. 「한국면방직공업의 자본축적(1947~76년)에서의 정부개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 시기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5, 237-274.

김엘림. 2014. “생리휴가제도와 판례,” 『여성신문』(2014.12.18.).

박준식. 1984. 「한국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미. 2019. 「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현미 · 이원희. 2015. 한국 여성노동정책과 노동운동 과제-한국노총 여성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채. 1971. “해방 후 한국노동쟁의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노동문제 논집, 제2집, 고대노동문제연구소, 1971. 3, 22p

유병홍. 2018. “한국노총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미간행 글)

이명희. 1985, 『여성과 노동』, 동녘

이원보. 1978. “한국 노동운동사 연구-6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산연논총』,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77-98

이원보. 2004.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한명희. 2011.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여성과제: 콘트롤데이타 노동조합 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인터넷 자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131222> (매일경제 / 기사명 :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졸여성 취업곡선 'M' 아닌'L' / 검색일 : 2020.07.08.).

K-여성노동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1. 생계를 책임져도 피부양자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으로 가족의 생계와 남자 형제의 학업을 책임졌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밥이고 옷이었으며 비를 피할 집이었다. 그것은 70년대를 거쳐 2010년인 오늘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늘 피부양자로 불렸고, 생계보조자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의 노동은 늘 반찬값으로 취급되었다. 경제위기 국면도 아니었던 지난해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1,500백명이 일시에 대량해고되었을 때 아무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의 제목은 ‘겁 없는 여자들’(kbs 시사직격)이었다.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생계를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는 노동으로 취급되었다. 실제 그렇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늘 생계부양자는 남성으로 이해된다. 이런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니까 낮은 임금도 괜찮아, 낮은 임금이니까 여성 일자리라는 도식을 만들어 낸다. 이 모순된 순환고리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신조어 ‘K-장녀’. 이 유행어는 코리아(Korea)의 앞글자 ‘K’와 만딸을 뜻하는 ‘장녀’의 합성어다. 주로 ‘지옥의 가부장제’를 견디며 살아온 여성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지칭할 때 쓰인다. 쓸데없는 책임감, 심각한 겸손함, 습관화된 양보 등 “나 K-장녀야” 한마디면 화자의 성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상징적 수식어이기도 하다.¹⁵⁾ 한국의 장녀들은 권한은 아무것도 없이 의무와 책임만 있는 캐릭터였다.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구조화된 조직적 착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여성노동자’라는 캐릭터 역시 성립 가능하겠다. 분명 임금을 받아 나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기술되며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이어도 괜찮아라는 암묵적 야합 속에 체계적 차별과 배제에 놓여 있는 K-여성노동자. K-여성노동자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성별임금격차이다. 1972년 53.6%였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35.6%가 되었다. 절대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2. ‘풀빵 정신’이 기록하지 않은 것

전태일 열사는 차비를 아껴 시다들에게 풀빵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전태일 열사의 발자취를 더듬고 해석하는 이들은 이를 ‘풀빵 정신’으로 기록한다.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 나눔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평화시장 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노동자였다. 평화시장 시다였고, 청계피복 노동조합 간부였던 신순애는 이렇게 말했다.

『전태일 평전』은 ‘불쌍한 여공’으로 묘사된 그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아니다. ‘불쌍한’, ‘힘 없는’ 여공이었던 그녀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며 느꼈던 자부심, 자립심, 삶의 애환과 희로애락과 같은 모습을 담지는 못 했다.¹⁶⁾

우리는 때로 여성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에 대한 과도한 공감으로 그 삶이 늘 피폐하고 어렵기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은 그때도 지금도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책임졌던 생계부양자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꾸려온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임을 의미한다. 내 입에 들어갈 밥은 내가 마련할 수 있고 일터에서 한 사람 몫의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고달픔과 동시에 자부심과 독립심도 함께 가지고 있다. 70년대건 오늘날이건 투쟁하는 주체로서 여성노동자운동을 경험한 여성노동자라면 여기에 주체성과 당당함이 추가된다.

15) 경향, 2020.04.05., 온라인에서 뜨는 ‘K-장녀’...“여성차별을 조목조목 말할 때 속이 다 시원”, 이유진

16) 신순애(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33p

3. 시다에서 비정규직으로

올해 초까지 전태일 기념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시다의 꿈’ 기획전에 한 관람객이 남긴 인상적인 메모가 있었다. ‘70년대의 시다는 오늘의 비정규직인 나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에서는 시다 2-3년, 미싱 보조 1-2년을 거치고 나서야 미싱사가 될 수 있었다.¹⁷⁾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불렸던 시다는 을 중의 을이다. 평화시장으로 흘러간 열 두엿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이 시다였다. 그 시다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본 것이다. 절대적인 노동환경은 70년대와 많이 다를 수 있다. 환기시설도 없이 다락방을 기어다니며 일해야 했던 70년대에 비해 적어도 산업 안전 기준은 향상되었고, 현장 준수율은 올라갔다. 하지만 70년대의 시다와 오늘의 비정규직을 관통하는 것은 절대적 을로서의 위치성일 것이다. 이것 역시 K-여성 노동자의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노혜경 시인은 시사저널 기사를 통해 이렇게 꼬집었다. “없어질 일자리”엔 뭐가 뭐가 있나? 톨게이트 수납업무가 스마트폰 시대에는 쉽게 없어질 자리란 것은 명백하다. 요즘은 마트의 계산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핵심이던 자유수출지역 봉제공장들은 이미 없어지거나 제3국으로 갔다. 왜 이 모든 일자리들의 절대 다수는 여성노동자들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왜 거의 모든 최저임금 일자리는 여성노동자인가.¹⁸⁾

기준임금은 최저임금. 그것이 여성노동자의 임금이었다. 발제문은 ‘2018년과 2019년 월 평균 임금 성별 임금 격차보다 중위 성별 임금 격차 감소폭이 더 큰 것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 결과’라 밝히고 있다. 2001년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조가 여성노동자의 용역직 여성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 최초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되고 있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임금 상승률이 커지는 구조로 안착되어 버렸다.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임금이 여성노동자에게는 그것만 주는 되는 임금으로 인식되어 버린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유도하는 문제는 노동시간에도 도사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문제가 되지만 기준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은 임금하락을 야기한다. 87년 53.6시간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2019년 34.7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남성들은 56.8시간에서 43.2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과거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 한 채 일해 왔다. 2020년이라고 모두가 다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처럼 싹 무시한 채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동환경이 되어 있다. 34.7시간이라는 노동시간으로 여성들은

17) 신순애(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101p

18) 시사저널, 2019.11.16., 왜 ‘없어질 일자리’는 죄다 여성 노동자인가…톨게이트 노동자의 비밀, 노혜경

과연 독립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노동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2019년 현재 여성노동자의 25.2%가 시간제 노동자라는 현실은 이러한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건 단시간 노동이건 그 선택권은 일하는 당사자인 여성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한다.

4. 여성노동자가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것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 말 무력화된 근로기준법·노사관계법과 끔찍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기 위한 ‘인간선언’이었다.¹⁹⁾ 일터에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획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라는 것은 70년대도 지금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부리는 노동자라서 함부로 대한다. 여기에 덧붙여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성차별, 비정규직이어서 당하는 차별과 배제. 결국 K-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중 삼중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는 싸움이 된다.

YH김경숙 열사가 1979년 8월 10일 저녁 종결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 시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노동자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이 사회에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아 외칠줄 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²⁰⁾였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벌어진 노동조합 와해공작으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난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 분회 조합원들, 출장정지를 당하고 6년을 회사로 돌아가지 못 했다. 오랜 투쟁 끝에 대법판결에서 승소 후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다. 회사는 조합 탈퇴서만 쓰면 당장 복귀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끝까지 버텼다. 한 조합원에게 왜 조합 탈퇴서를 쓰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 경기보조원들은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 했다. 1999년 40세 정년투쟁부터 시작해 노동조합 10년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패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인터뷰한 희정은 “봐 주는 일도 없고, 어떤 자원도 쉽게 내주지 않는 사회에

19) 신순애(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54p

20) 신경아(2019), 「여공, 기억에서 역사로」, 김경숙열사 40주기 기념 심포지엄 자료 54p

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자원을 스스로 획득했다. 집단화, 노동조합으로 모인 것이다. 옆 사람과 함께 가는 일, 뭉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과정에서 획득한 교훈이다. 함께했고, 조직했고, 그러므로 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²¹⁾고 기술했다.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의 존중을 획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조직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단화된 투쟁 경험은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면서 동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 조직화 경험은 세상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이었다. ‘불쌍하고 힘없던 여공들이 조합원과 함께 퇴직금 투쟁을 행동에 옮긴 것은 수동적인 ‘공순이’를 자존감 넘치는 노동자로 만든 사건이었으며, 함께한 조합원들은 든든한 동지이자 함께 갈 동반자들로 여기게 하였다.”²²⁾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경험과 2020년의 경험은 다르지 않다. ‘아줌마’들은 뭘 모르는 존재라고 해서 물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하면서”라고 답한다. “노조 하면서 우리 권리를 알게 되고 할 말 하게 됐지.”²³⁾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를 사람으로서의 존중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타인의 존중을 요구하고 획득해 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21) 일다, 2020.4.21., 싸우는 여자는 어디든 간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남긴 것④, 획정

22) 신순애(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164p

23) 일다, 2020.4.21., 싸우는 여자는 어디든 간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남긴 것④, 획정

06 종교분야

한국교회, 전태일을 기억하다

2020. 11. 05 (목) 18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민중신학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영등포산업선교회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전태일기념관

후 원 : 심원안병무선생기념사업회

한국교회, 전태일을 기억하다

□ 형식

- 라운드 테이블 토론
- 각 주제별 10분 내외 길이의 발표
- 전체 발표 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자유토론
- 각 주제별 주토론/질문자 배치

□ 발표 및 진행

- **좌 장** : 박승렬 소장(NCCK 인권센터)
- **개회사** : 홍인식 이사장(NCCK 인권센터)
- **환영사** : 이수호 상임대표(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 **발 제** : 1. 최형묵 박사(한국민중신학회)
2. 손승호 박사(NCC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3. 오세요 목사(한국민중신학회)
- **토 론** : 1. 홍윤경 소장(영등포산업선교회 쉼힐링센터)
2. 하성웅 총무(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노동자의 인간선언과 그 신학적 메아리

-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에 맞서 참 사람의 길을 연 전태일을 기억하며

최형묵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1. 증언, 사건과 기억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치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댓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人間像)을 증오한다. 어떠한 인간의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떤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¹⁾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밀려난 소외된 인간의 아픔을,
그 시대의 모순을 이렇듯 정확하게, 생생하게, 절실하게 지적인 표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²⁾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 그들의 가슴 속에 저항과 반항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그때까지 집단적인 목표를 위해 노동자들을 고취하고 동원할 수 있는 성스러운 상징과 존경할 만한 전통이 없었던 한국의 노동계급에 강력한 상징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또한 급속한 수출주도형 산업화과정에서 만들어낸 노동문제가 산업영역에서 감추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폭발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산

1)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 전태일평전』(서울: 돌베개, 1983), 165.

2) 조영래, 『전태일평전』(서울: 전태일재단, 2020), 6.

업노동자들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변혁의 핵심세력으로서 역사의 장에 들어선 것이다.”³⁾

“청년 전태일군의 분신자살이 신학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다. ... 이것은 사건이 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여 일어났으며, 죽은 듯했던 노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0년에는 165건에 불과했던 노사분규가 그가 죽은 다음 해인 1971년에는 그 열배인 1,656건이나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리스도교의 일각에서도 눈을 떠서 1971년 9월 도시빈민들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도시선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민중현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뛰는 자들이었다. 민중신학은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이렇게 일어난 사건의 증인으로 그 뒤를 잇게 된 것이다.”⁴⁾

“전태일의 삶은 불의한 착취와 그 착취에 시달린 어린 생명들의 아픔을 한 몸에 흡수해버리고 그 착취와 아픔으로부터 삶의 해방하고자 했던 삶이다. ‘참 삶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러한 속죄양의 희생에서 제시된다.”⁵⁾

1970년 11월 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71년 「동아일보」 신년호가 밝힌 것처럼 6·25가 1950년대를 상징하고 4·19가 1960년대를 상징한다면 전태일의 죽음은 1970년대 한국의 문제를 상징하는 가장 뜻 깊은 사건이 되었다.⁶⁾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그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즈음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상황이 전태일의 죽음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로부터 우리사회에서 노동문제가 전면에 부상하였고, 나아가 민중에 대한 인식이 새삼 본격화되었다. 노동자의 인간선언으로서 전태일 사건은 이후 도도히 이어진 민중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2. 노동자의 인간선언에 대한 신학적 메아리

전태일이 죽은 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했던 노동자들, 학생과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움직였다.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청계피복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이후 19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다면...”,⁷⁾ 전태일의 그 호소에 응답한 학생들은 가장 먼저 나서 그 죽음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그 뜻을 기리는 장례를 주도하였다. 전태일의 삶과 죽음의 의

3) 구해근 지음 / 신광영 옮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112.

4) 안병무, “민중운동과 민중신학”, 『역사와 민중』 안병무전집 6(서울: 한길사, 1993), 254-255.

5)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개정증보판(서울: 동연, 2018), 453.

6)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 전태일평전』, 24.

7)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 전태일평전』, 135.

미를 세상에 알린 『전태일평전』의 탄생도 이 때 가장 먼저 나섰던 조영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과 더불어 종교인들 역시 발 빠르게 나섰다. 정작 전태일과 그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살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하는 마당에 재야의 신·구교 성직자들이 함께 나서 11월 25일 합동추모식을 열었다.

이 때 김재준 목사는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기독교도들은 여기에 전태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나태와 안일과 위선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다.”⁸⁾ 이 고백은 전태일의 죽음이 주는 충격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물론 기왕에 한국 기독교는 4·19의 충격으로부터 역사참여 전통을 회복하고, 또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산업화의 문제가 노정되기 시작한 1960년대말 산업선교를 본격화하였지만,⁹⁾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의 민중선교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국 기독교 민중선교의 중대한 기폭제로서 전태일 사건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기왕의 민중선교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켰다. 이는 한국 민중현실로부터 출발한 고유한 신학적 성찰을 촉발시켰고, 이로써 형성된 민중신학은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기독교 민중선교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전태일 사건은 한국 민중신학을 탄생시킨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민중신학의 선구인 안병무와 서남동이 그 신학적 성찰의 열개를 엮어낸 것이 1975년이었지만,¹⁰⁾ 그 성찰의 맹아는 1970년 전태일 사건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롯되었다. 바로 그해 1970년 12월 『기독교사상』에는 당시 청년학생들과 함께 했던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KSCF) 총무 오재식의 의미심장한 글 한 편이 실렸다. “어떤 예수 죽음 - 고(故) 전태일씨의 영전(靈前)에”라는 글이다. 이 글은 정작 본문에서는 ‘전태일’ 이름 석 자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예수의 삶과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곧바로 연상시킨다. 자살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보수교회의 교리주의에 맞서, 죽음이 예견되는 길을 스스로 나서 맞이한 예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는지 반어법으로 되물으며 오히려 사회적 타살로서 전태일의 죽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 의미는 전태일의 삶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예수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에서 더욱 증폭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한 15:13). 전태일이 죽음 앞에서 어머니에게 전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환기시켜 주고 있다.¹¹⁾

민중과 예수의 동일시를 핵심 요체로 하는 민중신학적 통찰은 바로 그 착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가 스스로 민중과 동일시하였다는 것은 복음서의 증언이 확인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예컨대 마태 25장 등), ‘예

8)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엮음,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 전태일평전』, 23.

9)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1970년대 노동운동』(서울: 선인, 2013).

10) 서남동, “예수 · 교회사 · 한국교회”, 『기독교사상』(1975/2); 안병무, “민중 · 민중 · 교회”, 『기독교사상』(1975/4). 이 두 편의 글은 민중신학의 열개를 보여준 최초의 글로 평가된다.

11) 송필경, “분신 그 이후”, 『건치신문』, 2020.6.23. 인터넷판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53>.

수운동'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듯이¹²⁾ 예수의 삶을 당대 민중운동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수용하는 기왕의 신학에서도 인정되어 왔다. 민중신학의 특이성은 오늘의 민중에게서 재현되는 예수를 발견한 데 있다. 그것은 곧 오늘의 민중사건을 구원사적 의미를 지닌 예수사건과 동일시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개념으로서 '사건'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한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그 개념을 실존주의 신학자 볼트만에게서 빌려왔다. 볼트만에게서 '사건(Ereignis)'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신적 구원 사건으로서,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볼트만에게서 그 사건의 의미는 신앙을 통한 실존적 체험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앙을 통해 그 의미가 현재화될 때 오늘의 개별적인 주체에게 실존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었다.¹⁴⁾ 그러나 안병무는 그 사건의 의미를 역사적 지평에서 재해석하였다. 안병무는 특별히 민중 예수가 일으킨 사건을 주목한다.¹⁵⁾ 안병무는 예수를 개인적 인격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단적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민중 예수'는 예수 그 자신이 민중을 대표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언제나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가운데 더불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예수와 민중은 분리되지 않는다. 한편은 주체가 되고 한편은 객체가 되는 관계가 아니다. 혼연일체로서 주체를 형성한다. 안병무는 혼연일체로서 그 주체가 일으킨 사건 속에서 역사적 예수의 진면목을 찾는다. 그 사건은 2천 년 전 갈릴리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난 유일회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화산맥이 분출하듯,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 재현된다.

안병무가 전태일 사건을 서슴없이 예수사건이라 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이다. 예수와 민중은 해방의 사건 안에서 하나가 된다. 안병무가 사건의 의미를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민중의 자기초월의 성격이다. 안병무는 숭한 역사적 사건 안에서 민중이 자기초월을 하는 것을 본다고 역설했다. 전태일 사건의 경우, "자기 고통의 문제를 자기 개인에게 한정시키지 않고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승화시킨 데서 민중적 메시아상이 드러난다고 보았다."¹⁶⁾ 그것은 전태일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전태일 사건 안에 민중의 메시아적 역능이 현존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중신학이 강조한 예수와 민중의 동일시는 이른바 존재론적 동일시와는 달리 철저히 사건의 지평 안에서의 동일시를 뜻한다.

12) Gerd Theissen 지음 / 조성호 옮김, 『예수 운동의 사회학』(서울: 종로서적, 1981).

13) 이하의 내용은 최형묵, "안병무의 민중신학 - 민중사건의 증언", 『진보평론』64(2015/여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이 글의 맥락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14) R. Bultmann, Kerygma und Mythos, Bd. I, Hamburg, 1967, p. 67; 김명수, 『안병무의 신학사상』(서울: 한울, 2011) 139 참조.

15) 민중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안병무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의미를 집약한 것으로는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86-128 참조.

16)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116.

전태일 사건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형성된 민중신학은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것은 민중의 고난을 증언하는 데서 나아가 역사의 주체이자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중을 주목한 것이다. 안병무와 함께 또 다른 민중신학의 정초자인 서남동은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의 의의를 이렇게 집약하였다. 곧, 민중은 “생활가치를 생산하고 세계를 변혁시키며 역사를 추진해온 실질적 주체이면서도 지배권력으로 부터 소외·억압되어 천민·죄인으로 전락했”지만,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의 외화물(外化物)인 권력을 원자리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공의 회복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서 그로써 구원을 성취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¹⁷⁾

한 노동자의 인간선언으로서 전태일 사건의 메아리는 이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사건이 함축하는 뜻은 이보다 더 심원하게 펼친 경우가 있을까? 그것은 그의 삶과 죽음이 갖는 숭고함¹⁸⁾을 간파한 신학적 혜안의 결과였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했던 주인공의 외침은 헛되지 않았다. 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종의 부채의식이라고 할까? 그 부채의식은 연대의식으로 발전했고, 민중의 시대를 열어갈 정신적 자산이 되었다. 노동자 자신들에게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된 것을 필두¹⁹⁾로 노동자의 각성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일련의 변화는 1970-1980년대 민중의 시대를 이끌었다.

그 사건으로부터 50년, 것처럼 놀라운 각성과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노동자의 인간선언은 과연 성취되었을까?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사회 여러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노동자의 인간선언’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3. 너무나 쉽게 메워지는 50년의 간극

1970년 11월 13일 낮 1시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스러져가며 혼신을 다해 다시 외친 말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였다. 전태일이 병원으로 실려가 떠난 그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울부짖으며 외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을 누가 죽였는가?” “우리도 사람이다. 16시간 노동이 웬말이냐?”

이로부터 딱 50년이 지난 오늘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주5일 근무제로 일요일은 쉬게 된 것, 하루 8시간 노동이 표준으로 정착된 것 정도일까? 그나마 휴일 없이 노동해야 하는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 무려 하

17)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58.

18) 송필경, “우리 시대 가장 숭고한 이름, 전태일!”, 『건치신문』, 2020.4.20. 인터넷판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05>.

19) 청계피복노조사편찬위원회 기획 / 안재성 씀, 『청계, 내 청춘 - 청계피복노조의 빛나는 기억』(서울: 돌베개, 2007).

루 18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²⁰⁾들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은 그마저 무색하게 한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전태일 50년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²¹⁾ 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동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진다고 답한 것은 정규직(34.7%)보다 청년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가 훨씬 높아 거의 절반(47.8%)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내용은 ‘노동시간 및 휴가’(51.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임금채불’(48.0%), ‘모성보호’(43.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처우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1970년대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 노동자들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는 그 양적 규모로 볼 때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현재 한국은 국민총생산(GDP)기준으로 볼 때 세계 12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선진국의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1996년) 오래되었고, 지난 해 2019년부터는 이른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군)에 일곱 번째로 이름을 올려 가히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할 만큼 놀랍게 발전하였다. 산업화의 진전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진전도 급속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조사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가 2018년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민주주의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78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보다 앞선 경우는 모두 그 인구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이고, 이른바 ‘30-50클럽’ 가운데서는 가장 앞선 순위에 해당한다.²²⁾ 이 결과는 사실 최근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경험한 체험을 통해 볼 때 놀라운 것은 아니다. 심지어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공도 실은 ‘민주적 시민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³⁾

경제적 산업화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나 정치적 민주화의 측면에서 동시에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 다수가 50년 전이나 지금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놀랍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실상이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주변화, 아니 노동의 위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늘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실상은 외면당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장시간의 노동, 부끄럽게도 역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재해, 과도하게 높

20) 채윤태, “택배노동자 일일 동행 르포(1)”, 『한겨레신문』, 2020.10.15. 1면 머릿기사.

21) 이하 내용은 전광준, “전태일 외침 50년 흘렸지만... 청·비·영 절반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한겨레신문』, 2020.10.5. 참조.

22)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서울, 해냄, 2020), 24.

23)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의외의 응답편’”, 『시사IN』 663(2020.6.2.); 황정아,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모델’”, 『창작과비평』 189(2020/가을), 27.

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과 그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심한 차별, 따라서 그 차별 가운데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 오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실상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기본권마저도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다. 헌법과 노동관계 법들은 모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자의 단결권의 행사에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정상적인 노사협상이 가능하다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극한적인 쟁의행위에 나서야 할 까닭이 없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거의 예외 없이 사실상 불법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규범으로 확립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그 규범이 통용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의 개정 및 제정이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 3법 가운데 첫 번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은 제2조에서 근로자에 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며, 또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이 높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놀라운 경제적 산업화와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뒷전에 밀려왔던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 상황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태일 죽음 이후 50년, 아니 그보다 앞서 70년 이상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노동배제체제가 있다.

4. 지속되는 노동배제체제와 유보되는 노동권²⁴⁾

자생적 근대화의 실패로 인한 식민지화, 그리고 이어진 분단과 군정 등으로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왜곡과 지체의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규범을 확립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중 1953년에 제정된 노동법들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한 매우 진취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통해 제시된 기본권 규범이 곧바로 현실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못했다. 당시 국가권력은 냉전체제하에서 반공보루국가를 형성하고자 한 미국의 절대적 지원과 식민지적 관료체제의 존속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의 절실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분단 및 전쟁과 함께 극단적인 냉전 이념지형의 형성으로 기존의 민족·민중운동의 전통이 단절되었고, 권력에 대한 저항세력은 미미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일관되게 지속된 노동에 대한 억압적인 배제체제²⁵⁾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 배경 가운데서 배태되었다. 해방 직후 산업화의 수준이 빈약하고 남북의 분단으로 산업구조가 굴절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노동자 조직이 건재하였다. 농민층에서 농지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즈음 노동자들은 인민정권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자 자주관리와 산업건설 협력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²⁶⁾ 이러한 노동운동은 정부수립 이전부터 배제의 대상이 되었고, 1946년 미군정과 과도정부 및 각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대한노총이 결성됨으로써 전평은 견제를 받다가 1947년 3월 총파업으로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²⁷⁾ 대한노총의 등장은 강력한 국가통제하의 노동억압체제를 예시한 것이었고, 그 노동억압체제는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53년 진취적인 노동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정책이 좌우되었고 노동자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억압받았다.

4·19혁명으로 민중들의 민주주의에의 요구가 드높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되었고,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국민총동원체제의 형성으로 노동배제체제는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화의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내내 지속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부족한 자원의 한계 안에서 집중과 선택을 요한 산업화과정은 산업간 불균형

24) 이하 1997년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최형묵,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순관계에 주목하다』(서울: 한울, 2015)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25)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서울: 후마니타스, 2008), 86-87 참조.

26) 박현채, “남북분단의 민족경제사적 위치”,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서울: 한길사, 1985), 232; 성한표, “9월총파업과 노동운동의 전환”,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372.

27) 김윤환, “산업화 단계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박현채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1』(서울: 한울, 1984), 357.

을 초래하여 도시는 그 성과를 누린 반면 농촌은 피폐화되어갔다. 공업위주의 산업화과정에서 저임금 도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의 피폐화는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으로 광범위한 노동자군이 형성됨으로써 저임금 노동 상황이 지속되는 한편 도시빈민층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와 농촌은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시 중산층 이외에 농민과 도시 노동자 및 빈민층은 심각한 생활상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절대 빈곤선에는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농민과 도시 노동자 및 빈곤층의 상대적 빈곤과 기회의 박탈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의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경제개발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되기보다는 산업화를 위한 동원 대상으로서 간주되었다. 그것은 우선 노동법의 개정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1953년 제정 노동법은 이후 계속 개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5·16군사쿠데타 이후 일련의 노동법 개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노동권의 억제와 잠정적 유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억압하고 임금의 최소화와 장시간 노동의 법적 근거가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1961년 노동법은 한국노총을 유일한 대표기구로 만들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막았으며 노사협의회를 의무화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1963년 노동법은 근로시간의 연장과 근로기준의 하향조정을 핵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산업화에 대비하였다.²⁸⁾ 이와 같은 노동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동원’이라는 개발독재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었다.²⁹⁾ 그러나 한편 일련의 개정 노동법은 1953년 노동법에서 크게 후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등 단결법을 유지시켰다. 그 때문에 법률로 완전하게 노동자들 통제할 수 없었던 국가는 반공주의와 노사협조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통제수단과 노동법 이외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의 법적 수단, 그리고 경찰력의 동원 등 물리력을 수시로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통제하였다.

전태일 사건이 일어난 1970년은 2차 경제개발이 진척되어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고 동시에 개발독재로 치닫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1969년 삼선개헌,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이어 1972년 유신체제로 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고도성장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노동문제였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았고 작업장 내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건이 준 충격은 컸지만 국가의 노동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국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고도성장 기조에 맞춰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신체제하에서 노동통제는 노동법의 개정을 동반하지 않고 1971년 12월 27일 국가비상사태의 선포와 함께 공포된 국가보위법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보위법은 노동자의 단체교

28) 송호근, “한국의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2/2(2002/10), 23 참조.

29)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88.

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주무관청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 가운데 주요 두 가지 권리를 제한하였다. 노동자들의 두 가지 핵심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결권마저도 사실상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노동관계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고, 고도성장기 내내 노동자들의 권리는 극도로 억압당하였다. 유신체제 말기 노동자들의 쟁의가 빈발하고, 그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쟁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그 억압적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1980년 신군부 집권과 함께 시작된 제5공화국 하에서 농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의 기초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곡수매가가 동결되었고, 주곡의 인상 억제로 복합영농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수급불균형과 계속된 가격폭락으로 적자영농에 시달리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였고, 따라서 농민층의 기본적인 생활압박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속되어 온 억압적 노동배제체제는 제5공화국에 이르러 법률적·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1980년 개정 노동법은 노동조합 결성의 억제, 조합활동의 작업장 내부화, 정치활동의 결빙, 제3자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함으로써 노동조합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능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복지에 한정하였다.³⁰⁾ 국가강권력에 의한 노동통제 또한 지속되어,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조합원들이 폭력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또한 경제안정화정책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도 억제되었고, 노동시간도 늘어났다. 그러한 억압적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조직화되고 급기야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한 것은 한국 민주화의 특성을 형성한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환 기점이었다. 이를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노동권의 보장 또한 진전되었다. 1987년 노동법 개정은 노동조합 설립형태의 자유화, 설립요건의 완화, 설립신고증 교부기간의 단축, 서류의 간소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함으로써, 1980년 노동법 개정에서 거의 완전하게 억제되었던 노동3권을 상당부분 복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³¹⁾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던 국면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체제가 해체되지 않고 지속된 까닭에 노동권의 확장이 저절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1987년의 개정 노동법 자체 안에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등 기업별 조직과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억압적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니와,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을 배제하는 정책들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노동권의 확장은 계속되는 숙제

30) 송호근, “한국의 노동과 인권”, 24 참조.

31) 송호근, “한국의 노동과 인권”, 24.

로 남았다. 단적으로 말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에 대한 배제체제는 지속되었고, 노동권의 확장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써만 확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1996년 노동법 개정과 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1997년 노동법의 재개정 사태는 그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 주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배제체제가 유지된 것은 기존의 지배체제가 여전히 지속된 데다가 자본의 지구화 현상 앞에서 경제의 전면적 개방화가 겹친 것 또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애초부터 대외의존성이 강한 한국경제는 자본의 지구화 현실이 빚어내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국가와 자본의 선택은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대안으로 삼는 것이었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국가에 대한 자본의 우위 상황은 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강고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민중운동세력이 분화되는 양상 또한 노동자의 문제를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노동’문제로만 한정시켜 이해하게 만드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가계 전반의 생존 및 생활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1997년 벽두 최대의 총파업으로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세에 맞섰던 노동운동은 바로 그 해 말 닥친 구제금융 사태로 위기를 맞이했고, 이후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실상 최초의 정권교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이 이뤄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표방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방침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은 곧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구현을 뜻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도입 및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금융산업·공공부문·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켰다. 자본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외주화 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축소했고, 노동현장은 소수의 핵심노동력과 다수의 비정규 노동력으로 분단되었다.³²⁾ 그 기초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직권중재 폐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공무원노동 기본권 보장 등 법 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공권력 자제, 일방적 민영화 철회,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등이 시도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초 아래 노사안정을 시도한 것으로³³⁾ 노동배제체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노사정위는 오히려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파고 가운데서 자본의 권력이 강화되는 양상이었다.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을 지나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노동배제 정책은 더욱 노골화되었

3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개정증보판(서울: 노동사회연구소, 2013), 353-355.

33)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355-356.

다.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억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의 부담을 덜어내 버리고³⁴⁾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표방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임오프제도, 기업 단위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하는 한편 교섭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강행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해태, 단체협약 개선명령, 단체협약 해지, 노조변경설립신고증 교부거부 등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였다.³⁵⁾ 한편으로 법치주의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더불어 각종 쟁의와 집회 등에 경찰력을 중심으로 한 물리력을 동원이 빈번해졌다.³⁶⁾ 쌍용자동차 사태는 그 단적인 예였다. 그와 같이 노골적인 반노동 정책 아래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외주·하청화, 비정규직의 확대로 고용불안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³⁷⁾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정책을 내세우며, 이전부터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 정책을 더욱 선명하게 추진하였다.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정규직 해고 제도, 산업재해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과 관련되었고, 단적으로 말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단화하고 경제 불황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지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정과 진보정당 해산까지 감행하였다. 이는 정권의 핵심부를 차지한 1970년대 개발독재체제하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지향해왔던 정치세력들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법치주의의 궤도를 따르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1987년 이후 확장되어 왔던 노동 기본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³⁸⁾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로 이어진 촛불항쟁은 새로운 노동체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에도 그간 강고하게 지속되어 왔던 노동배제체제로부터 노동포용체제로의 전환, 곧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기대되었다. 1987년과 달리 사실상 촛불항쟁을 촉발한 주역이 노동자들이었고, 항쟁과정에서도 노동의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며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다. 일자리 정책,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노동 정책,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정책 모두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상시 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 공공 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등 모두 반길 만하였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 조직률 제고, 산별교섭 등 기업단위를 넘어선 단체교섭 촉진 제도 도입, 근로감독 강화, 노동 인권 교육 의무화 역시 노동

34) 노중기,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서울: 후마니타스, 2020), 71.

35)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401.

36) 노중기,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 71.

37)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402.

38) 노중기,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 162~197 참조.

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 사회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기대되는 바였다.³⁹⁾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일 뿐, 아직까지 그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추세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난망해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태일 사건 50주년인 지금 ‘전태일 3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현재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노동배제체제는 지속되고 있고, 노동자의 인간선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5. 다시 생각하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의 의미

하나의 불꽃이 되어 자신의 몸을 사르며 외친 노동자 전태일의 인간선언에 대해 당대의 신학적 반향은 놀라웠다. 바로 그 사건에서 구원사적 의미를 발견하였으니 신학적 반향으로서는 더 다다를 수 없는 최고의 수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로써 새로운 신학, 곧 민중신학이 탄생하였고 교회를 각성시켜 민중연대와 민중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으니 그 영향은 한국 기독교 신학과 교회에 아로 새겨져 있다 할 것이다. 물론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 역시 두말할 것 없다.

그 사건의 영향이 그렇게 기념비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건만 정작 그가 외친 노동자의 인간선언은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일까?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50년 아니, 그보다 앞선 시간을 포함하여 70년에 걸친 노동배제체제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강고한 노동배제체제를 역사적으로 서술한 것만으로 어찌서 노동자의 인간선언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답이 찾아진 것은 아니다. 그저 그 역사적 현상태만을 기술한 것뿐이다. 그렇게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만 해명한 것일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캐물어야 한다.

노동배제체제의 기원을 자본주의 역사 일반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관계 안에 있는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인간선언 요구는 외면될 수 없었다. 어찌면 그 모순관계 자체가 끊임없이 노동자의 인간선언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적 기반이었다. 그 요구는 현실의 모순관계를 조정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 곧 노동기본권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편적 인권, 곧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써 인권은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된 이들의 이익제기에 의해 그 허구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실질적 내용을 확보해왔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39) 노중기,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 227, 229.

근대의 정치적 혁명을 통해 제기된 인권은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표방되었다. 그러나 그 허구성은 곧바로 드러났다. 예컨대 여성과 어린이, 노예 등이 배제되었고,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본격화되었을 때 노동자 역시 그 보편적 인권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흔히 자유권으로 표현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향유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권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요구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 여러 사회복지의 권리 등을 수반하였다. 그와 같이 인권의 요구는 항상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 내지는 시민의 권리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대립⁴⁰⁾ 지점에서 발생하며, 배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로서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부당함을 드러내줌으로써⁴¹⁾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체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⁴²⁾

바로 그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인간선언의 요구가 무시된 채 강고한 노동배제체제가 자리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한 자유권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산업혁명을 통한 노동자의 부상으로 사회권 개념이 확립된 것과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 이중의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간략히 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확보된 조건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확장의 요구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그 이중의 과제가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 요구로서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찍이 박형규 목사가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다”⁴³⁾고 한 것은 정치적 자유 없이 민중적 권리 보장 또한 어려운 현실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생적 근대화의 실패 이후 식민지를 경유하여 분단체제가 형성된 조건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이룬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⁴⁴⁾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 그리고 이와 동시적으로 성취된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민주화가 일상적 삶의 민주화와 기본권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적 조건은 아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⁴⁵⁾ 우리가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은, 불행한 과거의 유산으로 누적된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곡을 넘어서기 위해 분투해 왔던 기억을 되살려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의 괴

40) Slavoj Žižek, “반인권론”, 『창작과비평』 132(2006/여름), 398.

41) 박기순, “근대와 인권의 정치”, 맑스코뮤날레조직위원회 엮음, 『맑스주의와 정치』(서울: 문화과학사, 2009), 177 참조.

42) 이는 인권의 문제의식이 자본주의 체제 한계 안에 머문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제된 자들의 권리로서 인권의 제기는 그 체제의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의 전망을 열어준다.

43) 신흥범 정리,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 박형규 회고록』(서울: 창비, 2010), 207.

44) 이에 대한 더 충분한 설명은 최형묵,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128-134 참조.

45)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리⁴⁶⁾로 집약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여기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내적 근거이자 동시에 그 구체적 결과이기도 하다. 그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언제나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인권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 어떤 과제이든 다른 어떤 과제로 환원될 수 없기에 그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 사실상 외면되어 온 노동자의 인간선언 요구를 아직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것은 한국사회의 부끄러움이다.

특별히 전태일을 기억해 왔고 기억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그 현실을 직시하여 복음을 구체화하는 과제로서 오늘의 인권선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귀한 형상을 부여해주었다는 진실, 마침내 하느님이 인간이 된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 복음의 진실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오늘의 인권실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인간선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한 노동자의 인간선언, 곧 50년 전 전태일 사건에서 구원사적 의미를 통찰한 민중신학의 메아리는 기존의 교회들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기에 소수의 교회들만이 그 메아리에 반응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요구와 노동자의 기본권 요구는 오늘 세계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회와 신학의 마땅한 과제로 여겨진지 또한 오래이다.⁴⁷⁾ 한국교회는 그 역사 안에 인권선교의 귀중한 유산을 이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대의 인권 문제에 무심하다. 우리사회 구성원 절대다수가 노동자로서 일상의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 가운데서 50년 전 한 노동자의 인간선언, 아니 ‘기독청년’ 전태일의 절규를 다시 듣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46)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32.

47) 최형묵,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9-96.

전태일과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손승호 NCKK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 간사

1. 시작

‘전태일이 죽은 것이 벌써 50년이 지났나’라고 생각하다 문득 발표자가 아직 50살이 안되었음이 떠올랐다. 발표자에게 마치 자신이 전태일의 죽음을 경험하였던 것 같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1970년 11월 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으로 항거했다는 이야기를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 교육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마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몇몇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다.

이러한 착각의 기반 위에 일부 사실을 더하여 개신교인들은 전태일이 개신교인이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따져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의 방향을 이만큼 틀어 놓은 경우는 흔치 않다. 많은 이들이 1970년대와 그 시절의 노동운동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다. 전태일의 죽음이 1970년대의 시작이었고 다른 한 노동자, 김경숙의 죽음이 1970년대의 마지막이었다는 말이다.⁴⁸⁾ 전태일의 분신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으며 역사의 방향을 견인하였다. 오늘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것인데, 개신교인이 전태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개신교인임

48) 한홍구, 『유신: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한겨레출판, 2014), 337; 정영훈, “세상이 다 알았던 죽음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죽음 - 김경숙 일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81> 2020년 10월 19일 접속.

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대체로 2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전태일이 개신교인임을 모르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전태일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둘째는 전태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감리교인인 경우이다. 감리교인들을 대체로 전태일을 기독교인 또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감리교인이라고 말한다. 전태일을 어떻게든 더 좁은 ‘우리’의 일원으로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전태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본 글은 이렇게 역사적 인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전태일이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의 출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글은 우선 전태일이 실제 지니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태동기에 한국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인권의식과 어떤 연속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태일의 분신 이후 한국기독교의 저항적 흐름이 어떻게 인권운동에 이르는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전태일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전태일’을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92건, 국내학술논문 203건에 이른다.⁴⁹⁾ 그러나 이 중 기독교와 전태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글의 목적에 맞게 참고할 만한 전태일 관련 선행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임송자의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은 전태일의 사상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였기에 참고하였다.⁵⁰⁾ 또한 오창은의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를 중심으로” 역시 전태일의 사상의 변화를 다루고 있기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⁵¹⁾

기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적 기록을 찾기 어려웠던 관계로 당시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에 앞장 섰던 인사들의 회고록과 기관사를 사용하였다. 박형규의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와 권호경의 회고록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는 전태일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박형규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으며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이하 KSCF)의 기관사인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는 전태일의 죽음 이후 발생한 기독교청년들의 변화가 소략하나마 정리되어 있다.⁵²⁾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인권위원회의 창설로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이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과 장숙경의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을 주로 참고하였다.⁵³⁾

49)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어 ‘전태일’ 입력시 결과, 2020년 10월 27일 접속.

50) 임송자,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호(2010), 319-360.

51)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6집(2017.9), 115-147.

52) 박형규, 신홍범 정리,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창비, 2010); 권호경,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대한기독교서회, 2019);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다락원, 1988).

53)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선인, 2013).

하지만 무엇보다 전태일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참고한 것은 그의 일기·수기·편지 모음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이다.⁵⁴⁾ 이 책은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전태일이 쓴 글을 모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1차 사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책에서는 전태일의 오기를 그대로 살렸으며 당시와 지금의 표현법이 다른 면이 있어 이 글에서 인용할 때는 오자를 바로 잡고 현대의 한글 표현에 맞게 수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현재까지 가장 권위있는 전태일 관련 서적은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이다.⁵⁵⁾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전태일 평전』을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전태일 평전』이 그려놓은 전태일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은 『전태일 평전』의 권위에 눌려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전태일이 직접 쓴 글을 원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2. 전태일의 문제의식의 발전과 1970년 11월 13일

널리 알려졌듯이 전태일은 어려서부터 지독한 가난에 힘겨운 삶을 살았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어린시절 가출했던 전태일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몰래 탄 기차가 서울이 아닌 영천에 도착한 것을 깨닫고 좌절하며 차라리 역무원에게 잡혀가 매를 맞더라도 배고픔을 면하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이를 수 없었다.

“순간적인 조그마한 희망은 이내 실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개찰구를 지나치자 수포원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빨리 나가라고 뒷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나는 그때 전형적인 거지였으니까? 아예 나는 잡혀갈 가치도 없었던 것이다.”⁵⁶⁾

‘잡혀갈 가치도 없는 거지’의 서러움은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지예요.

덥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도도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내내 도도하십시오.”⁵⁷⁾

그러면서도 전태일은 타인이 베푸는 선의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54) 전태일 지음,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돌베개, 1988).

55) 조영래, 『전태일 평전』(아름다운 전태일, 2009).

56)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40-41.

57) “67년 2월 30일 일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98.

“마침내 지나치는구나.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거의 발악에 가까운 자존심 때문에
허기찬 배는 다시 일거리를 달라고 아우성이다.”⁵⁸⁾

“이렇게 하룻밤을 따뜻한 방에서 잘 땀 얼굴을 들 수 없는
패배감과 자존심이 나를 죽이도록 증오한다.”⁵⁹⁾

이런 경험과 강한 자존심은 그로 하여금 빈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갖게 하였다. 그에게 사회적 약자란 “동정을 받고 양심까지도 다 내어 보여야 하는” 존재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힘든 사람이었다. 그는 이런 빈자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막연한 생각을 청옥고등공민학교 재학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점심시간에는 나는 학교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식당에서 다른 선수들과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면서 남·여 선수들과 같이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문득 내가 아직도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었겠나를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 어떻게든지 공부를 끝까지 해서 지금도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5원의 동정을 받고 양심까지도 다 내어 보여야 하는 언제든지 밋지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다.”⁶⁰⁾

이 인용문은 학교대표로 체육대회를 나갔을 때의 기억을 회고한 것으로 전태일은 이때를 그의 어린시절 중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도 같은 순간에 대한 것이다.

“맑은 가을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깊었으며 그들과 그들로 옮겨 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음미할 때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내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진심으로 주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인 손선생님께서 나를 손수 찾아다니시며 대견해 하실 때 얼마나 좋았는지, 선생님 손을 잡고 꺾충꺾충 뛰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런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⁶¹⁾

58)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37.

59)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69.

60)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49.

61)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50.

흥미로운 것은 위의 두 인용문 모두에서 전태일은 본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서술하다가 갑자기 빈자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가 갑자기 베테스다 연못으로 가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물론 이 수기는 1969년 가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글에 등장하는 빈자에 대한 연민에 가득 찬 전태일이 청옥고등공민학교에 재학중인 1963년의 전태일인지 평화시장에서 해고되어 공사판의 막노동자로 일하던 1969년 가을의 전태일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충만함이 벅차오른 순간에 갑자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떠올랐던 것을 꾸며낼 정도로 전체적인 글의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지는 않은 것을 볼 때 막 연하나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⁶²⁾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1965년 가을 평화시장 내 삼일사에 견습공으로 취직하면서 구두닦이와 신문 팔이 생활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차 노동문제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1966년 통일사의 미싱사로 일하던 그는 이미 야간작업과 수당 등의 노동조건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⁶³⁾ 당시 그는 본인이 재단사가 되어 약한 직공들 편에 서겠다는 개인적 수준의 해결책을 떠올렸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나가며 구조적 모순에 눈을 떠갔다.

1966년 10월 한미사의 재단보조로 입사한 전태일은 이듬해 2월 재단사가 된 직후 한미사 사장의 처제와 사랑 혹은 짝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를 기준으로 볼 때, 전태일이 일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을 남긴 시기는 이때부터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일기이다. 앞에서 언급된 수기들은 더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쓰인 것은 1969년 이후인 것에 반해 재단사가 된 1967년 2월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으며 그것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1967년 2월부터 3월에 이르는 시기의 일기들은 온통 ‘이금희’, ‘오금희’, ‘희’, ‘금희 누나’, ‘이모’, ‘누님’과의 사랑으로 인한 환희, 그리고 그 사랑의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19살에 찾아온 실연으로 인해 전태일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실연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사랑을 끊기 위해 은사인 이희규 선생과 금희 누나의 중매를 서기도 하였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타락으로 이해했다.

62) 그의 가난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도우라는 명령에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며 가출하고 돌아온 전태일에게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소리를 질렀다. “공부해가지고는 대통령이나 안된 다음에야 밤낮 남의 밑에서 빌어먹기 알맞지. 어디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되는 사람이 공부 가지고 하는 줄 알아. 돈 가지고 하는거야. 돈. 이 병신 새끼야.”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과 생활고는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폭력이라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으며 이런 상황은 전태일에게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다.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 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58.

63)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74-75.

“내 정신이 이토록 타락할 줄은 정말 나 자신도 이때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젊음을 출세를 위해서 스승님에게 밀다니. ...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행했을 뿐이다. 출세 바로 출세다. 출세뿐이다.”⁶⁴⁾

“솔직히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앞날의 출세를 위해서 이 공장에서 완전한 재단사가 되기 위해,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한참 피어나는 사랑을 짊어버린 것이다. ... 부디 동심을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라.”⁶⁵⁾

그는 사장의 처제와의 연애가 혹시 자신의 출세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인지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2월 23일의 일기에서는 “최소한 집 한 채는 마련해야지. ... 나는 지금 한미사 이 집에, 온 생애를 다 걸다시피했다. 여기서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 나가야 한다”고 자신의 처지를 기술하였다.⁶⁶⁾

그는 한미사에서 돈을 벌어 이듬해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2월 20일자로 보이는 일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마침내 생각대로 했다. 시청 뒤 보건사회부 옆 학원사 2층에 가서 연합 중고등 통신강의록 중학 1권을 150원에 샀다. 이로써 희미해져 가는 배움의 정신을 내 마음 한 곳에 심한 타격을 줌으로써 다시 똑똑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붙들어 맨 것이다. 남은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리가 어디 있어. 해보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는 꼭 대학입시를 보자.”⁶⁷⁾

그리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채 실컷 울었다. 전태일은 ‘거리에서 해매며 노숙할 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금희를 생각하며 “동심을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오창은은 이 시기 전태일이 중요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금희와의 사랑을 스스로 철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태일(泰一)’에서 ‘태일(泰壺)’로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주체로 살아갈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태일이 겪은 실연의 아픔은 사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태일의 개인적 사랑의 실패는 평화시장의 독특한 생산양식으로 인한 착취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64) “67년 2월 14일 일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87.

65)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86.

66) “67년 2월 23일 일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04.

67) “67년 2월 30일(20일의 오기로 보임) 일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97.

이다.⁶⁸⁾

실제로 1967년 겨울 그는 한미사에서 시다와 미싱사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재단사들의 모임인 ‘바보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1967년 4월부터 1969년 8월까지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 시기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으며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⁶⁹⁾ 다만 이 기간 그는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바보회를 조직하였고, 평화시장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다 업주에게 발각되어 본인은 해고되었으며 바보회는 해체되었다. 그는 이 좌절을 겪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의식을 침체하게 갖고 닦았던 것으로 보인다.⁷⁰⁾

바보회의 해체 후 그는 1969년 9월부터 1970년 4월까지 건설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수기와 소설 초안, ‘친구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썼다.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인간을 짐승보다 천대하며 생존경쟁에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러차례 비판하고 있다.

“내가 탄 버스엔 2백 명은 탄 것 같네. 벌써부터 땀이 나고 공기가 희박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다. 못 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인간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차에게 말이다. 앞에 젖소가 트럭에 실려간다. 다섯 마리를 칸막이를 해서 실었다. 우습지 원섭아.”⁷¹⁾

“아무리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 생존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이 악마는 이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⁷²⁾

이 글에서 전태일은 평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사회에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경계가 존재하고 이 경계가 사회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할 “약한 여공”과 “어린 동심”, “천대 받는 인간”을 타자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태일이 여기에 대해 내놓은 해법은 그 경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속에 뭉치기를 희망하지 않고 그 뭉친 덩어리를 전부 분해해 버리겠네. ... 특히 나는

68)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를 중심으로,” 129-132.

69) 물론 『전태일 평전』에는 이 시기의 전태일의 행적과 생각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70) 임송자, “전태일의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329.

71)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친구 원섭에서 쓴 편지,”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19.

72)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친구 원섭에서 쓴 편지,”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23.

그 텅어리를 자진해서 풀어지게, 그들의 호흡 기관 입구에서 향을 피울 걸세. 한번 냄새를 맡고부터 영원히 뭉칠 생각을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향을 맡일세. 그렇게 되면 사회는 텅어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부스러기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 걸세.”⁷³⁾

텅어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 역시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전태일은 그런 사회를 꿈꾸며 투쟁의 방식을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1970년 초에 작성한 단상에는 자신을 투영한 것으로 보이는 소설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B-2는 기성세대 사고방식에 항의하는 내성적 휴머니스트

B-2 :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철저한 이념의 소유자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대두되나 만족할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선한 목적에 선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외친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항상 선을 기억한다. 현 세대 사회환경 속에서 현 기성세대들의 경박관념과 후진국 공통적 경제상황이라는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편견 하에 부분적으로 희생되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지킬 것을 세상에 호소한다. 여기에서 현 사회는 B-2를 멸시하고 자기들의 활동 범위 내에서 제지하려고 한다. B-2는 인간으로써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몰수당한다. 끝으로 총칼을 부정한다. 신의 은총만이 현 사회를 구할 수 있다.”⁷⁴⁾

여기에서 기존의 질서와 사상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며 세대(사회)를 변화시키려 하는 전태일의 사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폭력이 아닌 사랑의 저항을 선택하였으며 이것이 신에게 의지하고 신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라 믿었다.⁷⁵⁾

“다시 여러 수천 번을 자문자답하던 문제를 결단을 내린다. 정립보다는, 총칼이 되기보다는 사랑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인공의 한 눈을 준다. 남이 총칼로 덤빈다고 해서 같이 총칼로 대적한다는 것은 같은 인간이기에. ...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는 지나갔다. 신을 의지하고 신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급선무라고 ... 단 일신 여호와를”⁷⁶⁾

73)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친구 원섭에서 쓴 편지,”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21.

74)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일기 속의 단상들,”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31.

75) 임송자는 이것이 1963년 연이어 발생한 티벳 불교의 소신공양과 연결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임송자, “전태일의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325-326.

76)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소설 초안,”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48.

좌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가 인식한 세대는 인간을 물질화하는 시대이며 인간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또 박탈하는 구조적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무시무시한 세대였다. 그는 이러한 세대에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아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아무리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인과 같은 가치적 동등한 인감임엔 추호의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치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적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써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⁷⁷⁾

이 시기 그의 일기에는 자주 죽음에 대한 언급이 보이며 평화시장으로 돌아오기 직전인 1970년 8월 9일 ‘자신을 다 바칠 것’을 결단하였다고 말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린 이 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 때에 한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⁷⁸⁾

1970년 9월 왕성사에 재단사로 취직하면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그는 바보회를 ‘삼동친목회’로 새롭게 조직하고 평화시장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설문을 무사히 마쳤다. 이어 10월 6일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성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였고 10월 24일에는 근로조건개선 시위를 기도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리고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분신을 감행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3. 1970년 11월 13일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

한미사에서 해고된 전태일이 노동문제의 의식을 심화해가던 시기, 한국기독교 역시 종래의 복음전도와 다

77) “나는 왜 언제나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나: 전태일 회상수기,”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35

78) “나는 돌아가야 한다: 결단(1970.8.9.),”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73.

른 개념의 2가지 선교를 시작하였다. 하나는 산업선교이다.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의 산업전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사업이 1964년경부터 노동조합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1968년 산업선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산업전도와는 확연하게 차별되는 질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⁷⁹⁾ 또 다른 하나는 도시빈민선교이다. 1968년 9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와 산하의 도시선교위원회의 설치로 시작된 도시빈민선교는 주민조직이론에 기초하여 도시빈민을 조직화하여 단결된 힘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새로운 선교의 분야 중 전태일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산업선교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산업선교회는 이듬해의 김진수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발표하며 기성 교회와 노동자 사이의 균형을 포기하고 확고히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하였다.⁸⁰⁾ 전태일의 수기와 일기에서 산업선교라는 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산업선교회의 1970년 기록에서 ‘전태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지점이다.⁸¹⁾ 그러나 이후 산업선교회는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노동권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다.⁸²⁾

한편 전태일의 분신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기독교청년들이었다. 11월 22일 “새문안교회 대학생회가 추모기도회를 거행하고 종교계의 각성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4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⁸³⁾ 이어 25일에는 KSCF가 가톨릭 학생회와 공동으로 추도식을 개최하고 “헌신 고백문”을 발표하였다.⁸⁴⁾

전태일의 죽음은 기독교학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학생운동이 “노동운

79)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65.

80)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대중에 노동자들이며 모든 금력과 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 무참히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던 말인가. 파벌다툼과 교세팽창만이 목적인 오늘의 한국교회는 … 이 무직한 자의 억울한 주검 앞에서 이 참혹하고 악랄한 살인행위에 동참한 사실을 깊이 회개하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1971년 6월 25일

81) 1970년대 노동수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도 전태일의 서사와 비슷한 맥락이 발견된다. 이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동법을 공부하며 운동을 준비하였다.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수기에서는 산업선교회의 도움으로 의식화 과정을 겪었다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수, “1970년대 노동수기와 근로기준법,” 『우리말글』 77(2018.6), 215-244 참조.

82) 1972년 7월 28일에는 인천의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총무 조승혁 목사가 “보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의 손을 그린 포스터를 각 공장에 배포하여 부착한 것을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1973년 10월에는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의 조지송, 김경락 목사가 대한모방의 노동쟁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었다.

8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108-109

84) “전태일 선생의 죽음이 우리의 비굴함과 나약함을 대신한 순교일진데 우리는 그 분의 용기와 희생을 우리의 의로운 전장에 부활한 장군으로 모시리라. … 오늘날의 현실을 보라.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며, 어미를 가도 멸시를 받고, 억눌린 자는 어미를 가도 자유와 권리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한 근로자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죽음은 헛된 일이 되어가고 있다. … 우리는 이에 주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망각하는 모든 죄인들의 참회를 바라며, 우리의 고백을 명백히 하노라. ① 이제부터 전선생의 고귀한 죽음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받고 모든 불의와 권력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칠 것을 고백한다. ② 우리의 훌륭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 노동조건을 평화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작업장에서 시행되도록 당국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 ③ 이러한 불의와 권력에 대한 희생정신이 전국의 겨우뉘에 다시 샘솟아 전선생의 추도와 우리의 참회로 이 해를 보낼 것을 고백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지지 않고 채찍질 하고 또 전태일 선생이 죽어 얼어붙은 땅 속에 파묻혔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전태일 선생의 부활을 증명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이에 고백한다,” KSCF, “헌신고백문,” 1970.11.25.

동, 농민운동 등 현장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의 기독교학생운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기독교 대학생 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 “1) 우리는 종전의 기독교학생운동이 학원 안에서는 신앙적 생활이란 독선적 의식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은 구호 사업적 자선으로 점철해온 것을 비판하고 그 방향을 전환한다.
- 2) 1968년 여름대회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의 자유와 창의력을 억압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옮긴다.
- 3)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자의 사명은 근대화의 그늘아래 신음하는 빈곤한 대중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본다.
- 4)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에 행동하기를 결단하고 학생이란 신분의 수명의 한계와 문제의 지속적 발전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학생 스스로의 문제에 의한 경험과 행동은 사회와 대학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확신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다.”⁸⁵⁾

KSCF의 사무총장인 오재식은 「기독교사상」 1970년 12월호에 전태일의 영전에 바치는 “어떤 예수의 죽음”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전태일을 예수에 비유하며 기성교회를 비꼬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고뇌에 쪼들린 마음속에도 암흑을 벗겨버릴 분노가 서리고, 놀리고 혈뜬긴 가슴이지만 죽음을 이길 만한 자유는 있어, 하여 죽은 너는 다시 무리 속에 살아서 흐르지 않는가. 새 역사의 여명이 부활의 아침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예수, 너는 죽어서 많은 예수를 낳고 그 예수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거리에 서는 날, 너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칠 것이다.”⁸⁶⁾

기독교청년들의 활동은 점점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KSCF는 1971년 4월 10일 YWCA, 그리고 가톨릭 청년단체인 Pax-Romana 등과 함께 400여 명이 모여 “부활과 4월 혁명” 행사를 진행하고 그동

85)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 219.

86) 오재식, “어떤 예수의 죽음,” 「기독교사상」 14권 12호(1970.12), 82.

안 교회가 불의를 방관하였음을 반성하면서 그 속죄의 표시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열리는 남산을 향하여 대형 십자가를 매고 행진하였다. 그리고 무장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경찰의 곤봉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의 자유수호”, “조국의 민주수호”를 외치는 농성과 시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지구 교회청년협의회는 4월 18일 그간의 신앙자유 수호투쟁을 대통령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한 선거참관인 운동으로 공식 전환하면서 “4·19 기독교청년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4월 10일의 사건 이후의 신앙자유를 위한 투쟁이 본질적 성격이 ‘보편적 자유의 수호와 동일한 민주·민권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고 신앙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⁸⁷⁾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지자 기독교청년들의 활동은 부정 부패 추방운동과 반독재 운동으로 이어졌다. 1971년 7월 발표된 KSCF의 ‘여름대회 선언문’은 반독재를 향한 기독교청년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주님은 우리를 역사 속에서 부르신다. 독재와 인간 소외의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고난을 죽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생활을 근본으로 삼는 우리 기독교학생들은 굴욕에서 자유에로의 엄숙한 선언을 한다. ... 이러한 사회 참여를 통한 투쟁의 대열은 학원의 비자유화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려는 정보정치에 의해 벽에 부딪치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넘어선 무수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세력은 강해질 것이다.”⁸⁸⁾

청년들에 비해 즉각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빈민선교 진영도 방향의 전환을 감행했다. 전태일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박형규를 비롯한 인사들은 본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빈민선교를 전개하기 위해 1971년 9월 1일 도시선교위원회를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이하 SMCO)로 전환하면서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라는 안전망이자 걸림돌에서 벗어났다. SMCO는 다음과 같이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불의로 인하여 위협받거나 억압받는 경우에 교회는 눌린 자를 억압에서 해방하고 모순적인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다.”⁸⁹⁾

위원장인 박형규는 평화시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서울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기도 했다. 박형규는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교회 3층에 “형제의 집”을 만들었다. 이 곳은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청계천과 중부시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학생 야학의 공간이었다. 교회 주변의

8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112-114.

88) KSCF, “여름대회 선언문,”(1971.7)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15-116에서 재인용.

89) 한국특수지역선교위원회, “사업보고서 (1971-1976년도),” 2-3.

노동자들은 저녁 늦게 형제의 집에 와 대학생들과 만나 어울려 공부하며 친교도 나누었을 뿐 아니라 노동법을 배웠다. 자연스럽게 형제의 집은 지역 노동자의 거점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들은 이후로도 민주화·인권운동의 실무자로 활동하였다.⁹⁰⁾

이후 KSCF와 SMCO는 1972년 10월 성립된 유신체제에 대한 기독교계의 저항의 선봉이 되었다. 두 기관이 협력하여 시위를 조직한 것이 정부에 의해 내란음모로 조작된 남산부활절연합예배 사건(1973.4.22.), 긴급조치에 대한 최초의 저항인 SMCO 실무자들의 성명 발표(1974.1.17.), 그리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서 KSCF가 중추세력으로 지목되어 정부의 거센 탄압에 직면하고 SMCO의 위원장인 박형규가 배후의 자금출처로 투옥된 사실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기독교공보」의 편집장 고환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연행, 고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적지 않자 기독교는 구속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반유신운동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남산부활절연합예배 사건 1차 공판일 사람들이 경동교회에서 모여 기도한 후 재판참관을 간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도모임이 1974년 7월 18일 민청학련과 기타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한 기도회로 이어지면서 목요기도회로 공식화되었다. 목요기도회는 매주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당시 유일한 시국집회의 성격을 지녔다. 목회기도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된 구속자의 가족들은 유신체제하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⁹¹⁾

산업선교회, SMCO, KSCF, 그리고 신구교 연합체인 크리스찬사회행동협의체 등의 저항적 선교활동과 일본으로 거처를 옮긴 오재식이 지명관, 김용복과 함께 발표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목요기도회에 모인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 등은 NCK가 한국 인권운동 기구의 효시 중 하나로 꼽히는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게 만들었다. NCK는 1973년 4월의 ‘오늘의 구원’ 협의회에서 유신정부와의 대결의 신학적 정당화를 모색⁹²⁾하였고 같은 해 11월의 인권문제협의회에서 ‘인권을 위한 상설기구’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74년 5월 4일 창설된 NCK 인권위원회이다.

NCK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기독교계 기관들의 인권수호를 위한 사회운동은 한국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 발표자도 그런 인식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의 근원적인 촉발점

90) 권호경,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 104-105.

91)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109-111.

92) 이 협의회의 참가자들은 사회적 구원을 “1) 모든 사람이 각종의 불의의 세력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 2)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과 자아를 회복하는 것, 3)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의 하나로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형성”을 꼽았다.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84.

이 전태일의 분신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때,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이 전태일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계승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NCCK는 인권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인권을 정치적인 의미, 다시 말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의 의미로 국한시켰다. 아래는 당시 NCCK 총무였던 김관석의 발언이다.

“제 개인의 최근의 의견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하나의 자극제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구원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정치·사회·경제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서 국제회의에서 흔히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곤 하는 인종적 갈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⁹³⁾

그 결과 NCCK의 초기 인권인식은 자유권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오늘의 눈에는 다소 편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모든 사회 모순의 정점에 유신체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전태일이 가졌던 부자와 빈자의 경계가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사실상 NCCK 인권운동의 우선순위에서 지식인과 대학생, 종교인 및 재야인사의 인권문제에 완전히 밀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동일방직 사태를 맞이하여 산업선교실무자들이 NCCK 총무실을 점거하고 NCCK와 회원 교단들이 이 문제에 개입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게 만들었다.⁹⁴⁾ 전태일의 일관된 빈자를 향한 연민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초기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에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이 드는 지점이다.

한국기독교가 전태일을 자랑스럽게 추모하면서도 좀처럼 되새기지 않는 말이 있다. 이제는 거의 잊혀버린 그의 일성이다.

“1시에 분신한 태일이를 내가 두세 시쯤 만났는데 그때부터 숨이 꼴깍 넘어갈 7시까지 아무 말도 말고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했어.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자신이 보니까 있는 집에는 심방을 안 오래도 계속 가고, 없는 집에선 오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안 가는데 그런 목사 밑에서 예수 믿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⁹⁵⁾

9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236.

94)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167.

95) 이영란, “전태일의 어머니,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기독교사상』 53(3)(2009.3), 15.

어쩌면 전태일이 교회에 원했던 것은 인간을 향한 조건 없이 평등한 사랑의 실천,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4. 결론

서론에서 말했듯이 한국인의 많은 수가 전태일을 안다고 느낀다. 그가 분신하며 외쳤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국민적 상식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의 죽음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에 모든 관심을 할애하면서 정작 그가 22년을 살았던 인간임을,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서사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놓치곤 한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그렇기에 죽음은 삶의 서사와 맥락 속에서 삶의 일부분으로 읽힐 때 그 온전한 뜻이 드러날 수 있다. 전태일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 역시 헛되이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죽음과 부활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궤적에서 진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언적 의미로 기억하게 될 때, 때때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거로 그 누군가를 이용하게 된다.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도리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그런 방식의 기억과 재현은 우리의 영웅에게 보낼 적절한 존중은 아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태일의 글들을 다시 읽으며 다양한 전태일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가출하면서 굳이 동생을 끌고 나가 고생시키는 겁쟁이 형, 여성 노동자를 오로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 자신에게 생긴 연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 끊임없이 고통 받는 풋내기 청년 등의 모습은 그동안 전태일에 대한 기억에서 제거되었던 모습들이다. 그 결과 전태일은 단지 우뚝 솟은 노동투사로서 언제나 순수해야 했고 아름다운 청년이어야 했다.⁹⁶⁾ 이제는 좀 더 전태일이라는 인간 자체에 집중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의 ‘전태일 연구’가 계속되기 바란다.

전태일의 묘에는 기독교청년이라 적혀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전태일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삶이 기독교인으로서 충실했던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유족과 지인의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태일의 50주기를 맞이하여 CBS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가제도 “기독교청년 전태일”이다. 굳이 오늘날 개신교 일각에서 그의 묘비 글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인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던지는 시대적 메시지를 찾고자 함이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다만 만족하고 넘어가지 않는 50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에게 전태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동시에 사회의 주류인 기득권자를 시종일관 부러워해야만 하

96) 김성은 역시 전태일의 재현이 진정성으로 획일화하는 것이 그의 다양한 면모를 가리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성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진정성 담론의 역설,” 『기억과 전망』 37(2017), 101-139 참조.

는 약한 이웃들이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교차로에서 저는 언제나 좌회전입니다. 세상에선 우회전에 우선권이 있다는 법칙 속에서 우회전의 부러운 우선권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⁹⁷⁾

〈참고문헌〉

1. 1차 문헌(자료집, 회고록)

전태일 지음, 전태일기념사업회 엮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돌베개, 19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박형규, 신홍범 정리,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창비, 2010).
권호경,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대한기독교서회, 2019).
오재식, “어떤 예수의 죽음,” 『기독교사상』 14권 12호(1970.12).

2. 연구문헌

도서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선인, 201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다락원, 1988).
한홍구, 『유신: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한겨레출판, 2014).

논문

김경수, “1970년대 노동수기와 근로기준법,” 『우리말글』 77(2018.6).
이영란, “전태일의 어머니,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기독교사상』 53(3)(2009.3).
임송자,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호(2010).
오창은, “민중의 자기서사와 한국 노동현실의 증언-전태일의 일기·수기·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6집(2017.9).

97) “걷는 에너지가 모자라 애태우고 있다: 일기 속의 단상들,” 전태일 지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31.

오늘날 청년 노동자와 전태일 정신

오세요 한국민중신학회, 목사

1. 들어가며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22세의 노동자 전태일은 몸에 불이 붙은 채 “우리들은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그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노동쟁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0년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만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9.9%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8.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전태일이 일하던 시대에 비해 오늘날의 노동처우가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규직의 69.8%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52.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세대별로 나눠보자면 50대는 81.4%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20대는 절반가량인 50.5%에 그쳤다.⁹⁸⁾ 또한 올 한해 지금까지 15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글은 오늘날 ‘청년 노동자’, ‘청년 전태일’, ‘전태일 정신’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지, 그리고 각각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8) 정성조, “전태일 떠난 지 50년...직장인 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진다”,” 『연합뉴스』 (2020.10.04).

2. 오늘날 청년 노동자

오늘날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다루기에 앞서 검토해야 할 단어가 있다. 바로 청년이라는 단어가 그것이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먼저 규정하지 않고 ‘청년 노동자’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2.1. 청년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괘종을 들어보시오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못 가니 인생의 백년가지 주마갈도다

학도가 (작사, 작곡 미상)

청년이란 고정된 개념이라고 보기에 다소 애매한 개념이다. 혹자는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대가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2019년 9월 10일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예비)청년창업자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한다. 몇몇 지자체의 청년발전 기본조례는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 짓기도 한다. 이 모호한 나이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균일한 대상으로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

청년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쓰여왔는가? 19세기 말엽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1910년대부터 본격적인 근대문학이 등장하면서 사회와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는 과학과 합리주의의 시대였으며 합리적인 인간상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되는 시기였다. 이런 인간형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었으며, 또한 근대적 교육의 내면화는 동시에 식민지 규율 속으로 편입됨을 의미했다. 이 시기의 신교육운동에는 민중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지식이라는 새로운 힘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었으며 이 담론의 중심에는 성숙의 과정에 놓여있는 청년이 있었다.⁹⁹⁾ 청년은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는 근대적 인물상으로 빛어진다. 이러한 청년의 구성은 일본의 조선 강탈 이후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는다. 국권 상실 이후 지식인의 상실감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나고 발전을 실현시킬 대상을 찾았으며 그 대상으로 청년이 호명된다. 청년이라는 가득 차지 않은 기표는 이렇게 개인의

99) 양선정, “1910년대 근대소설에 나타난 청년상,” 『인문과학연구』 25(2010), 134.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갈망하는 젊은이라는 기의로 채워지기 시작한다.¹⁰⁰⁾ 이들은 스스로를 신교육을 받고 신문학을 쓰고 읽는 신청년으로 정체화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봉건적 구습의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1917년 창간된 조선기독교청년회의 기관지 ‘기독교청년’을 통해 기독교청년이라는 개념이 구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광수와 전영택의 글에서부터 기독교+청년이 아닌 ‘기독교청년’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기독교 사회화라는 원칙에 따라 기독교청년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과학(신학문)을 익힌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 민족개혁과 기독교 사회화를 이룰 주체로 호명하였으므로 기독교청년은 기독교의 목적을 이루고 민족의 천년대계를 확립할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로 호명되었다.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청년은 이전 세대와 단절을 선언하고 신인류를 자처한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는데 이는 역시 기성세대와의 불화를 의미했으며 기독교청년 역시 유교의 타성에 젖어있는 부모세대, 혹은 교역자, 목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¹⁰¹⁾ 기성세대와 긴장감을 유지하는 지덕체와 영성의 균형을 갖춘 기독교청년이라는 개념은 어느정도 196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¹⁰²⁾

한편 청년은 군국주의 그리고 해방과 전쟁의 기간 동안 사회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기보단 전쟁과 이념의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사회에서 청년의 새로운 면모가 발견된 것은 산업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산업화되는 도시의 청년들은 전후 세대로 전쟁의 상흔이 크게 기억되지 않은 세대였다. 산업화시대의 청년은 산업화의 열매를 독점하는 주체, 재벌로 성장하기를 요구받는 세대였다. 그러나 동시에 저항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상도 등장하게 된다.¹⁰³⁾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만드는 꿈을 가졌던¹⁰⁴⁾ 전태일 역시 청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항의 주체로서 일종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9년 11월 집필하고 박정희에게 발송하지는 못한 탄원서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저 착하디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

100) 위의 글, 136-138.

101) 김민섭, “1910년대 후반 기독교 담론의 형성과 ‘기독교청년’의 탄생,” 『한국기독교와 역사』 38(2013), 191-197.

102) 편집자, “교회청년의 좌표,” 『기독교사상』 11월호(1963), 89.

103) 최성민, “‘청년’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0(2012), 234-236.

104) 조영래, 『전태일 평전』 (파주: 돌베개, 2006), 223-229.

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써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¹⁰⁵⁾

1970년대 이후 청년들은 저항의 주체로 정체화하면서 동시에 자신들만의 청년문화를 갖게 된 세대이기도 했다. 동아일보 김병익 기자는 청년의 자체문화가 탄생시킨 스타 김민기, 서봉수, 양희은, 이상용, 이장희, 최인호를 언급하며 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무기력한 선배와 폐쇄적인 현실을 야유하면서 순진한 야성의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야성은 정치적 좌절과 사회적 패배주의를 우회 극복하는 「새부대에 담길 새포도주」. 이들의 힘은 거짓을 증오하고 허황함을 비웃으며 안일을 비판하고 상투성을 공격하며 침묵을 슬퍼하는 데 있다. …… 중략 …… 블루진과 통기타와 생맥주 | 이것은 육당과 춘원, 삼일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사일구와 육삼데모로 연연이 이어온 청년운동이 70년대에 착용한 새로운 의상이다. 그리고 청년문화는 잠재된 젊은 힘의 잠재적인 표현¹⁰⁶⁾

80년대에 접어들며 청년문화는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대안문화로써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386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이 문화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문화였고 80년대 대학진학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고려해볼 때 제한적인 세대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최성민의 지적에 의하면 청년은 동일 연령대의 농촌 젊은이가 아니라 대학생만을 수식할 수 있는 표현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청년은 특정 세대가 하나의 정치, 문화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계급적 개념까지 덧씌워지게 되었다.¹⁰⁷⁾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의 대표성을 누가 가져가게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청년, 대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1년의 정원식 총리 달걀 세례 사건과 소련의 붕괴, 1996년의 연세대 사태,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청년, 대학생의 자체 의제 설정과 그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0년대의 청년은 기성세대들에 의해 신세대로 호명된다.¹⁰⁸⁾ 이들은 자체 문화의 생산, 향유자라기보다 소비문화의 주체로 조명되었다. 그러나 최성민의 말을 빌리자면 “소비의 주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표현일 뿐이다. ‘소비자’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

105) 위의 책, 217-218.

106) 김병익, “오늘날의 「젊은이상」들,” 『동아일보』 (1974.03.29).

107) 최성민,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화이론연구』 50(2012), 238-239.

108)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에서 ‘신세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세대는 89년까지 사용빈도가 100회가 안되던 단어였으나 1990년 247건의 기사, 1991년 252건의 기사, 1992년 550건의 기사, 1993년 1,658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는 90년대들어 신세대라는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면, 상품을 구입하게 만들 ‘객체’일 뿐이다.¹⁰⁹⁾

이후 소비의 주체로 있던 청년은 소비에서조차 밀려나 ‘88만 원 세대’(2007년)로 명명된다. 이후 ‘20대 개새끼론’을 비롯하여 청년담론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신춘문화정치연구그룹의 김선기는 2008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10년간 신문 지면에 등장한 세대의 명칭 30건을 조사하였고 보수 매체에서는 청년세대가 가진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강조하고 예찬하는 명명을 하고 구성하는 데 반해 진보 매체에서는 청년세대의 탈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과 청년세대의 정치 및 투표 참여에 대한 요구의 빈도가 각각 높다는 진단을 내놓았다.¹¹⁰⁾

일련의 흐름 가운데 청년 담론과 청년을 일컫는 세대 명칭이 자기명명에서 호명의 시기로 넘어가며 청년은 주체적이고 선언적 존재라기보단 필요에 따라 소환되는 이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볼 때 청년이란 균일한 집단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을 ‘청년’이라 뭉뚱그려 호출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고 기만적이며 필요에 따른 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2.2. 청년 노동자

나는 인부 1이에요

소금밭, 공사장, 길거리 어디에든 쉽게 있어요 사라져도 모를 일이지요

유하 - 인부 1

2016년 5월 28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수리 중이던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 모 씨(당시 19세)였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같은 뉴스를 이미 접한 적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외주 정비업체 직원 조 모 씨(29), 2013년 1월 29일 2호선 성수역, 외주 정비업체 직원 심 모 씨(37)……. 이 외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다. 구의역 김 모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던 유사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11일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 씨(24)였다.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비판하

109) 위의 글, 239-241.

110) 김선기, 『청년팔이 사회』(파주: 오월의 봄, 2019), 2장. 세대론 흥수: 신세대부터 N포세대까지, <http://digital.kyobobook.co.kr>.

기 시작했고,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뉴스타파의 강혜인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산재 사망 원인 1위는 배달 노동이었다. 2016년 21명, 2017년 13명, 2018년 30명, 2019년도 상반기까지 8명의 청년 산재 사망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44%인 32명이 배달 노동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¹¹⁾ 유성규 노무사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일단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업장들의 요구가 있겠죠. 또 이러한 업장들의 요구를 받은 이제 어플 업체들. 이런 어플 업체들의 압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원인은 노동자들이 한 건 배달하면 3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1시간 안에 느긋하게 하면 한 2건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럼 현행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1시간에 ...중략... 그러면 두 건을 한다 그러면 6000원. 사실 그런데 6000원도 다 온전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값, 기름값,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제의를 하고 나면 사실은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노동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노동자가 이제 최저시급이라도 챙기려면 위험한 운전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¹¹²⁾

한편 이런 배달노동자의 처우는 기술에 의해 이전보다 좋아지기보다 다소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1위 배달 전문 기업인 배달의 민족과 배민라이더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AI배차를 확대 실시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자동으로 배달이 배정되고 AI가 산출한 경로를 따라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도로 환경이나 지형을 반영하지 않은 직선거리로 주문이 배정되고 이에 따른 배달 권장 시간이 산출된다. 배달노동자들은 이 시간에 맞춰 급하게 운행해야 한다. 다른 배송업체인 쿠팡 이츠의 경우에는 배달의 신속 정도에 따라 평점이 매겨지는데 평점이 낮을수록 배차받기 어려운 구조이다.¹¹³⁾ 이들 배달 노동자의 상당수는 플랫폼 노동자이다. 이들은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청년(15-29세) 노동자가 67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청년 노동자의 약 18.4%를

111) CBS 시사자키 제작진, “19살 사장님들의 죽음, 청년 산재사망 1위는 ‘배달,’” 『노컷뉴스』 (2020.02.03).

112) 위의 기사

113) 송락규, ““건물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위험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 『KBS』 (2020.10.01).

차지했다고 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5,972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노동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했고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시간 외 수당 수혜율은 26.5%, 17.7%로 매우 낮았다.¹¹⁴⁾ 이처럼 청년노동은 불안정과 고위험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청년”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심을 놓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여성과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불안정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그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불안정 - 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들은 고용허가제¹¹⁵⁾로 인해 사업장 변경의 횟수가 3년 동안 3회로 제한되고, 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관리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몹시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 ,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한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달의 기업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산재 사망자 기록을 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산재 사망 노동자는 총 591명으로 월 평균 6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¹¹⁶⁾ 이는 우리의 노동현실이 ‘죽음정치적 노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알려준다. 이진경은 생명권력(생체-권력)과 노동의 개념을 죽음과 그 가능성에 연결한 것으로 재개념화 하며 죽음정치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죽음에 이르도록 연결지워진” 사람들로부터의 노동의 착취(추출)이며, 그로 인해 이미 죽음이나 생명의 처분가능성이 전제된 삶의 “부양”은, 국가나 제국의 노동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선에서 제한된다.”¹¹⁷⁾는 것이다. 즉 이러한 현실 안에서 노동자는 “노동이 수행된 때나 그 후에 내던져지고, 대체되고, (축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살해”¹¹⁸⁾당한다. 이 가운데 ‘청년’ 노동, ‘청년’ 노동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종의 필요에 따른 재현되고 소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3. 청년 전태일 정신

114) 이영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68만명…평균 시급 겨우 5천972원,” 『연합뉴스』 (2019.02.15).

115)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언급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적받는 대표적 문제들로는 “① 사업장 변경 권리를 박탈하여 최장 9년 8개월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 직장 이동이 불가능 ②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③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기숙사 월세를 올려 사실상 최저임금제 무력화 ④ 직장 이동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실근로자’라는 미명하에 재입국 취업 기회 제공 ⑤ 이주노동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 구직활동 시 알선장 미지급 ⑥ 사업장 변경 기간 3개월 제한으로 미등록자 대량 발생 ⑦ 농축산업 내 산업재해 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피해 속출 ⑧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 ⑨ 입국 전 인권교육 부재 등”이 있다. 우삼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 『충북지역인권포럼』 (2017), 7.

116)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김용균 죽었던 사업장에서 또... 9월, 65명이 집에 못갔다-정부 대책 현장과 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통과, 2020년 10월 13일 등록, 2020년 10월 28일 접속, <http://laborhealth.or.kr/39124>

117)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나병철 역(서울: 소명출판, 2015), 40.

118) 위의 책, 10.

전태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청년 노동자’, ‘아름다운 청년’과 ‘전태일 정신’일 것이다. 이 장에선 ‘청년 전태일’과 ‘전태일 정신’을 검토해보고 이 개념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쓰이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3.1. 청년 전태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켜왔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노래를 찾는 사람들 - 그 날이 오면

하지만 전태일의 글에서 청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사용되는 청년의 인식 및 용례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태일의 글 가운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글이 많지는 않다. 그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 때 전태일이 사용하는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연령과 세대의 구분이 아닌 현실을 자각하고 변혁하려는 주체로서의 지점이 보인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양, 종업원들에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써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써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전태일, 1969, 12, 19, 박정희에게 보내려던 편지 중, 강조는 필자)¹¹⁹⁾

중략……. 제가 생각하는 형님이 보시는 서울은 진실을 토는 도덕을 금력이나 권력으로 도금되어서 그 본질이 아주 깊이 깊이 인간의 뇌의 내면으로 퇴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좁은 소견에서 노출된 미려한 독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문체에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것 같으더군요. 형의 허식없는 그런 친필을 곰곰히 은미할 때 역시 깊은 좌절감에 빠질수 있는 것이 청년이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도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119) 조영래, 『전태일 평전』 (파주: 돌베개, 2006), 217-218.

는 금년 23세되는 시내 청계천 5가 평화시장의 재단사였습니다. 키는 1.61m 정도이고 성격은 명랑합니다. 혈액형은 0형입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대구시내입니다. 어머니 한분과 2남 2녀의 장남입니다. 교육은 대구에서 받았으며 서울도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명함을 우이동에 놓고 온날은 70. 3. 16입니다. 명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보잘 것 없는 바보 회의 회장 얼마나 우수한 현실 입니까? (전태일, 1970, 6, 30, 이상혁에게 보낸 편지 중, 강조는 필자)¹²⁰⁾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 전태일에게 있어 청년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상이자 또 현실을 변혁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간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전태일이 자기 자신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쓴 ‘청년’이라는 호칭은 사후 전태일을 수식하는 어휘로 고착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람들은 전태일을 생각할 때 실존인물 전태일보다는 이미 몇 가지 범주로 해석된 - 혹은 선언, 선포된 - 전태일의 상이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1995년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문화사회연구소의 최혁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자이자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전태일이라는 실존인물의 생애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아직도 누군가가 전태일을 호명하면 홍경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게 나만의 사정은 아닌 것 같다. ……중략…… 전태일 동상을 자주 봤고, 심지어 미디어를 통해 전태일의 얼굴을 종종 접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영화 포스터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나만 그럴까? 영화로 전태일의 존재를 접한 세대에게 전태일의 얼굴은 아마도 ‘아름다운 청년’ 홍경인일 것이다.¹²¹⁾

미디어 속 재현은 언제나 취사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때론 계획적이기도, 때론 무의식적이기도 하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전태일을 재현한 미디어 가운데 전태일을 상당 부분 삭제하고 그 가운데 전태일을 찾아 전기를 쓰는 작업을 하는 김영수로 대표되는 지식인의 고해성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있었다.¹²²⁾ 또한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청년 전태일’은 또 새롭게 형성되는 청년, 청년담론과도 만나게 된다. 2020년에도 청년 노동자는 쉽게 오늘날의 청년 전태일로 호출되는데 이는 사안을 알리는데 용이하게 작동할지 모르나 각각의 사안을 뭉뚱그리고 납작한 것으로 만들 우려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다.

120) 전태일, “상혁형에게,” 2016년 2월 17일 등록, 2020년 10월 28일 접속<http://chuntaeil.org/?c=30/31&cat=%EC%9D%BC%EA%B8%B0%EC%99%80+%EB%82%A8%EA%B8%B4+%EA%B8%80%EB%93%A4&where=subject%7Ctag&uid=389>

121) 최혁규, “전태일이라는 표상을 둘러싼 문제들,” 『진보평론』 85(2020), 129.

122) 정현백, “우리 안의 전태일, 그리고 기억의 정치,” 『시민과세계』 18(2010), 228.

3.2. 전태일 정신

전태일 정신이란 무엇일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전태일의 모습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르겠지만 2020년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출범한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의 실행위원장인 한석호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전태일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태일 하면 분신만 생각하는데, 1980년대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50주기를 맞아 말하려는 시대정신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실천과 조직 정신이다. 전태일은 바보회·삼동회를 만들어 대자보를 만들고 청원도 하다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집회하다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두 번째가 전태일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로 바로 ‘풀빵 정신’이다. 점심을 못 먹는 어린 ‘시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km를 걸어서 퇴근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극심한 불평등 사회에서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울 것이다. 세 번째는 모범 기업 정신이다. 전태일은 마지막으로 ‘태일피복’이라는 직원이 인간답게 일하며 수익을 내는 이상적 기업을 만들려 했다. 바로 이것이 전태일의 3대 정신이고, 이번 행사는 모두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¹²³⁾ (강조는 필자)

그런가 하면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은 전태일의 사상적 변화를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966년 18세의 나이로 미싱사와 재단사 보조를 할 때는 온정주의 인식 단계이고, 1969년은 합법적 틀 안에서 ‘청원과 진정’하는 실천단계, 1970년은 결사 투쟁의 단계”라며 “전태일 정신을 ‘풀빵’이나 ‘모범기업’으로 삼는 것은 당시 전태일이 아직 미숙하거나 방황하는 시기를 전태일 삶의 절정으로 보는 것으로 열사에 대한 능욕”이고, 전태일 정신은 분투하는 불꽃정신이라고 전태일50주기행사위에서 제안한 전태일 정신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¹²⁴⁾

이러한 논쟁은 전태일 그리고 전태일 정신의 해석이 그 준거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간경향 인터뷰에 따르면 한석호 위원장이 전태일 정신으로 풀빵을 지목한 배경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의 상징이 필요했음을 읽을 수 있다.¹²⁵⁾ 반면 문재훈 소장의 비판은 전태일이란 기표가 체제 내적 운동의 논리로 복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¹²⁶⁾ 이 밖에도 전태일 정신을 다

123) 원희복, “[원희복의 인물탐구]전태일50주기행사위 실행위원장 한석호 “전태일 정신은 풀빵(나눔)이다”, 『주간경향』1377 (2020.05.18).

124) 정대희, “전태일 정신은 ‘풀빵’이 아니라 ‘불꽃’”, 『오마이뉴스』 (2020.07.17).

125) 원희복, 위의 기사.

126) 문재훈, “풀빵정신? 모범기업정신? 불꽃정신!”, 『가자! 노동해방』 (2020.08.28).

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무수히 많으며 그것들은 나름의 이유와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3.3. 소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년이 자기명명하는 행동하는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축소되고 결국 객체화되어 자기언어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전태일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후 자리 잡힌 주류 전태일 담론은 재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획일화시킨다.¹²⁷⁾ 전태일을 다룬 미디어는 늘어나지만, 재현의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오히려 전태일의 일기, 수기, 편지를 모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오래전 절판되어 더 인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태일은 그의 일생 후반기에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소설 초안을 구상했다. 이정안은 전태일이 소설의 집필을 마음먹은 이유를 당시 국가 주도의 교양주의 담론이 널리 퍼지며 읽어야 할 책의 중심에 문학이, 문학의 중심에 소설이 위치했다는 사실을 짚는다. 그리고 그를 소설 쓰기로 인도한 결정적 이유는 문학청년으로서의 열정이 아닌 노동현장의 참상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¹²⁸⁾ 전태일에게 소설 집필은 자기언어의 표출이자 자기증언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전태일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청년 ‘전태일’ 정신’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중지 혹은 청년 전태일, 전태일 정신이라는 개념에 대한 희년선언이 아닐까?

4. 나가며

청년과 청년노동자, 그리고 전태일은 2020년 모두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기언어를 상실한 존재들은 아닐까? 객체화되고 타자화되고 탈역사화되어 스스로 내는 소리는 제거당한 채 담론이 내는 목소리의 가면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그리고 이 글 역시 그들의 얼굴을 빌려 이야기하려는 욕심의 발현은 아닐까?

127) 김성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진정성 담론의 역설,” 『기억과 전망』 37(2017), 125.

128) 이정안, “전태일의 글쓰기 변화과정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72(2018), 280-282.

전태일의 마음으로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심힐링센터, 소장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던 1987년 봄, 대학 새내기였던 나는 시위에 나가지 않았다. 비운동권 선배들도 모두 시청 앞으로 나가던 때였지만 나는 기도했고, 캠퍼스에서 전도에 힘썼다. 선배가 되어서는 복음동아리에 서 후배들을 양육했으며, 4학년 여름방학 때는 아프리카로 단기선교여행을 다녀왔다. 내 꿈은 평신도 선교사였다. 졸업하면서는 당시 한창 수요가 늘고 있던 전산을 전공했기에 대기업에도 갈 수 있었지만 기독교기업이라는 이유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랜드에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후 3년만인 1993년, 스물여섯의 나이로 이랜드노조 초대 부위원장이 되었다. 데모 한번 나가지 않고, 노조의 노자도 몰랐던 내가 노조 부위원장이라니~!! 어찌 보면 삶이 방향이 완전히 바뀐 듯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진정한 평신도 선교사의 길이었다.

내가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꼈던 곳은 바로 전태일의 후예들이 만든 청계피복노조였다. (지금은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열떨결에 부위원장이 된 뒤 처음 참석한 노조 간부수련회가 청계천 어느 허름한 아파트형 공장 안에 있던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이였다. 그곳에서 여러 의류 사업장의 선배 노조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전태일 정신이 그곳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일까? 뒷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하고 가슴이 쿵쥔거리면서 비로소 내가 노동자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리고 여지껏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날의 경험으로 나는 해고될 때까지, 아니 해고된 후까지 17년간 노조 간부의 길을 걸었다. 이랜드는 “성경에 노조는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했기에 노조는 항상 어려웠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위원장, 사무국장, 홍보실장 등 이런저런 간부를 맡아서 3번의 장기파업, 용역깡패의 폭행, ‘사탄의 무리’라는 지탄, 해고와 복직, 다시 재해고, 손배 가압류, 구속 등을 겪으며 어느새 노동운동의 최일선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평신도 선교사의 삶이 바로 노동조합 활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

을 했다.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 신장을 위해 뭉쳐서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복음과도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일하는 영등포산업선교회 초대 총무이신 조지송 목사님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교회다”고 하셨다는데,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다.

노조 활동을 하던 중 2007~2008년에,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되었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파업투쟁을 하게 되었다. 2007년 당시 이랜드가 인수한 까르푸(홈에버)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도 연 1,500만원, 비정규직은 연 1,000만원 정도였다. 당시 최저임금이 3,480원이었으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하루종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려고 서서 일해서 하지정맥류와 방광염에 시달리고, 고객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조건을 생각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인상이 아니었다. 이 임금으로라도 자르지 말고 계속 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법은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 때문에 오히려 잘린다니, 너무나 억울했기에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냈던 것이 510일이나 이어지는 파업투쟁이었다. 그 선봉에 서 있던 나는 투쟁이 고착상태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왜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내 한 몸 불살라서 투쟁이 승리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절박한 마음, 하루하루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전태일과 비슷한 마음을 품었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는 전태일의 역사적 항거 후 37년이 지났을 때지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용역강패들의 폭력은 용인되었으며, 나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최형묵 박사의 지적대로 노동자들의 정의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전태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현재를 대표하는 몇가지 어려움을 살펴보겠다.

먼저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자성의 상실은 어쩌면 전태일 시대보다 더 후퇴했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대표되는데,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종속화되는 경향을 띤다. 이와 연결되는 특징 중 하나가 노동의 개별화, 파편화인데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아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형묵 박사가 발제문에서 여러번 언급한 노동유연화 즉, 정리해고, 비정규직, 외주화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고, 대통령이 일부 문제에 대한 해결 선언까지 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자 투쟁의 구심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이 적지 않은데, “노조는 집단이기적이고 지나치

게 과격하다”, “귀족 노조가 경제를 망친다” 등의 편파적 인식으로 노조를 폄하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보인다. 최근에는 더욱 교묘하고도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하는 신종 노조탄압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에 대한 관대함도 여전하다.

이렇게 보면 상황은 비관적이다. 최형묵 박사가 지적한 대로 아직 노동배제체제가 노동포용체제로 전환되지 못했고, 노동자의 인간선언도 실현되지 못했다. 전태일을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부르짖었고, 전태일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의 자각과 저항(투쟁)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헌신에 비해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전태일 50년’,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의 죽음은 5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오세요 목사의 주장은 참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전태일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이는 손승호 박사가 제기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전태일의 인간적이고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보면서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50년간 전태일에게 덧씌우고 있던 열사로서의 무거움과 소명의식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지 않을까? 이를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전태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곁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피땀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명 한 명이 바로 전태일이고 전태일의 친구다. 바로 옆 전태일의 이야기를 전태일의 마음을 가지고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그 전태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투쟁의 실천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 청년 전태일을 가장 깊게 기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전태일과 기독교청년: 전태일을 살아낸다는 것

하성웅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근래 들어 가장 힘든 글쓰기였다. A4 두 장, 기껏해야 10분 정도 분량인데, 뭐가 그리 힘들었을까. 전달받은 주제는 단순했다. 전태일의 정신과 오늘의 기독교청년. 전태일의 정신을 기독교청년의 자리에서 반영해보는 일이다. 전태일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여겼다. 글쓰기 구상도 제법 잘 되었다. 인용할만한 몇몇 사상가들도 떠올랐고, 글을 풍성하게 해줄 신학담론도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이 사라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글을 쓰기 위해, 좀 더 세세히 전태일의 삶을 들여 볼수록, 그에 대한 연구들을 접할수록 글쓰기는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두 가지 지점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먼저는 그의 삶이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온전히 가닿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전태일의 삶과 죽음, 그의 역사의식을 소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단순히 그의 삶의 궤적과 내용이 버거웠던 것은 아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느꼈을 절망감과 비장함, 그리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타인을 향한 전적인 삶이 마음을 짓눌러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또 다른 한 가지 어려움은 전태일의 정신을 서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다. 발제자 손승호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전태일을 “선언적인 의미로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거로” 이용하게 되기에,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도리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태일의 정신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필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태일을 말해야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궤적과 세상을 향한 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전태일은 자신의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시대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시대의 권력자들이 시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태일은 시대의 화려함을 폐해와 모순으로 이해했다. 시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 성취를 결함으로 이해

했다. 그리하여, 그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시대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반시대적인 사람이었으나, 그 단절로 인해 누구보다도 시대를 더 잘 직시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전태일로부터 마음의 울림을 받은 사람들, 그리하여 전태일 살아내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시대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역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역사 바깥에 짙은 어둠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향해야 한다. 조르조 아감벤의 짧은 에세이 「동시대인이란 무엇인가?」에 짙은 어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짙은 어둠이 그것과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우주에 무한한 수의 성운과 빛나는 별이 있는 이상, 하늘에 존재하는 짙은 어둠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짙은 암흑의 존재는 무엇일까? 팽창하는 우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성운과 별은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따라서 짙은 어둠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빛이라 할 수 있다. 전 속력으로 우리를 향해 여행하지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 빛이 짙은 어둠인 것이다.”

우리에게 도달하려고 애써보지만 그럴 수 없는 빛, 짙은 어둠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리는 빛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잊혀져버린 생명이다. 승리자들이 주조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박탈당한 존재들, 짙은 어둠인체로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드러내는 슬픈 생명들, 이 생명들을 끌어안는 일이야말로,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일이며 전태일을 살아내는 일이다. 전태일은 눈을 감았다. 역설적이게도 그리하여 짙은 어둠으로 존재하는 이들 보았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웠다.

자신의 이름에 기독교신앙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이들은 전태일의 삶과 정신 앞에서 숙연해져야 한다. 전태일을 살아내는 일에, 기독교신앙인의 소명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신앙인이 스스로를 하늘의 속한 사람이라 여긴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짙은 어둠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늘에 속한 기독교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시대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화려함에 가려진채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이들의 생명에 불을 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전태일이 필요하다. 전태일의 정신을 아로새겨, 시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대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눈을 감을 사람, 자기를 비워 짙은 어둠인체로 존재하는 이들을 품어 안을 ‘전태일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은 열악하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은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다. 노동현장에서 인간다움은 사치로 여겨진다. 전태일의 외침이, 오늘 외쳐진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은 만큼, 우리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발제자 최형묵 목사의 말처럼, 한국사회는 노동자의 인간선언 요구를 아직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의 현실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섣
뜩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개인구원과 기복신앙, 자기성취에 지나치게 몰두해온 한국교회와 그러한 신앙교육
을 길들여진 기독교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노동문제는 둘째 치고 교회의 공적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
은 일이다. 교회마저도 자본의 수레바퀴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시대의 화려함과 성공을 좇으려는 상황
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보다는 기독교신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재고(再考)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헤아리는 작업이 유의미한 길을 제공해줄 거라 생각한
다.